

2007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 목 차 ||

I. 자유 과제

1.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환경권 7
김민정 : 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2. “민족경제론”의 민족, 대중 그리고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35
김 원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3.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 91
오승용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4. 학생운동 연구방법론과 연구과제 확장을 위한 제언 139
이창언 : 역사학연구소 연구원/한신대학교 외래교수
5. 5월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그 계기 및 의식성 177
임종명 : 전남대학교 사학과
6. 5·18민중항쟁관련 노래수집 및 악보화와 해제 203
정유하 : 전남대학교 민주·인권·평화센터 객원교수
7. 5·18민중항쟁과 의료 공간 그리고 의료인 대응 275
정호기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외 2명

II. 지정 과제

1. 5·18민중항쟁과 헌법개정 309
민병로 : 전남대학교 법학과
2. 광주시민미술학교의 개설과 5·18항쟁의 대항기억형성 339
배종민 : 동신대학교 감사

2
0
0
7

1. 자유과제

1.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환경권

김민정 | 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2. “민족경제론”의 민족, 대중 그리고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김원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3.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

오승용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4. 학생운동 연구방법론과 연구과제 확장을 위한 제언

이창언 | 역사학연구소 연구원/한신대학교 외래교수

5. 5월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그 계기 및 의식성

임종명 | 전남대학교 사학과

6. 5·18민중항쟁관련 노래수집 및 악보화와 해제

정유하 | 전남대학교 민주·인권·평화센터 객원교수

7. 5·18민중항쟁과 의료 공간 그리고 의료인 대응

정호기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외 2명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환경권

김민정(성공회대 박사과정)

I. 서론

대다수의 광양 지역주민들은 광양제철소 건설 당시를 회상하면서 제철소가 지역 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주도했다며 다음과 같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만약 1980년에 광양 지역이 제철소 입지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광양 지역은 순천시의 근교 농업지역으로 기능하면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양제철소가 금호도에 건설됨에 따라 광양 지역은 ‘상전벽해’가 되었고 광양제철소는 1980년대 이후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단일 공장 규모로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는 광양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 국제화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지역 변화를 주도해 왔다. 광양제철소의 준공으로 광양 지역의 인구는 9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산업 구조가 공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의 경관 또한 변화되었는데 작은 포구였던 금호 지구와 농촌지역이었던 광영동, 중마동 지구는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이정록 2000, 52).” 광양제철소가 건설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농·어업 중심이던 지역이 산업중심 지구로 전환되는 동안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역시 크게 변화했을 것이다.

2007년 9월 6일,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와 세계적인 자산관리사인 스위스 샘(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이 전 세계 2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포스코를 철강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평가에 의하면 포스코는 경제·환경·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과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친환경 설비인 파이낸스 상용화, 우수한 환경관리시스템과 기후 변화 대응능력 등 환경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는 ‘환경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일괄제철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많은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비롯한 여러 오염물질과 부산물을 배출한다(포스코 2007, 6)"라는 점을 기업은 일정정도 인정한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인 제철산업들에게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은 향후 이들의 성장에 핵심 과제다. 하지만 포스코는 제철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애써 무시한다.

주류언론은 '녹색 제철소'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주간 조선》은 2006년 광양제철소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철지역의 환경을 일면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다.

산뜻하게 정돈된 격자형 아스팔트 도로에 가끔씩 차량이 다닌다. 길 양편으로는 무성한 숲과 가지런히 심어진 가로수들이 단풍으로 변한 이파리를 하나 둘씩 떨어뜨리고 서 있다. 도로 안쪽으로는 4층짜리 빌라형 공동주택이 군데군데 서있다. 조용하고 아늑한 풍경이다. 주택단지 중간 중간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축구장, 테니스코트, 족구장 등이 보인다. 고층 아파트 20여개 동이 서있는 구역을 지나자 이내 시원한 바다가 보이고 바다를 따라 해안도로가 끝없이 펼쳐진다. 해안도로변 인도에는 작은 배낭을 멘 운동복 차림을 한 주민이 2~3명씩 짝을 지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이어진다. 우거진 숲길을 따라 들어가자 학교단지가 나타난다. 탁 트인 공간에 초·중·고등학교가 울타리 없이 사이좋게 어울려 서 있다. 녹지와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대학 캠퍼스에 여러 건물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 속에서 본 이국적인 분위기다. 이 단지는 본래 있던 숲과 녹지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렸고 인공 조경에도 힘을 기울여 단지 내 어디를 둘러봐도 건물과 푸른색이 조화를 이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해안도로는 주민들의 아침 운동에 안성맞춤이다(《주간 조선》 2006년 11월 5일, 강조는 필자).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녹색 제철소의 뒷면에 가려진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는 생각하는 것 보다 심각하다. 제철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의 목소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경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가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환경권의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사원 주택단지와 인근 마을사이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1) 환경권의 의미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 권리다. 전 지구적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오늘날, 기본 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05년 카트리나로 미국 민중이 고통을 받을 당시 그린피스는 환경권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환경권은 인권의 범주를 생명과 건강, 인종 동등성 차원까지 확대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법과 정책, 환경재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구제활동 영역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환경권의 대표적인 법학자인 석인선(2007, 161~162 참조)은 학자마다 차이가 나는 다양한 환경권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권영성은 “협회의 환경권이라 함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광의의 환경권은 협회의 환경권은 물론이고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비단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의 예방 또는 배제라고 하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구연창은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허영은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김철수는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이며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즉 생명과 건강에의 침해를 받지 않을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이며 넓은 의미로 환경권을 이해할 때에는 이 밖에도 문화적 유산이라든가, 도로·공원·교육·의료 등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좋은 환경 속에서 살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철수는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도 넓게 이해하여 자연환경 속에서 살 권리, 즉 자연적인 청정한 대기에 관한 권리, 깨끗한 물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회적 환경에서 살 권리, 즉 교육권, 의료권, 도로·공원이용권 등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 계희열은 “헌법 제 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깨끗하고 좋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에서 살 권리”라고 한다.

환경권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로서 그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목적에 맞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맑은 공기·흙·일광과 같은 자연적 환경, 학교·공원·도로·교량·가스·상하수도 등과 같은 인간 생활을 위한 인공적 환경, 역사적·문화적·교육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즉 소극적 침해배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공적·사회적 환경까지 조성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헌법적 시각이다(정사언 2002, 314).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인간을 주제로 하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이며 인공적인 주위 환경에 대한 권리를 종합한다.

2) 주요 개념

환경의 개념은 각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주체로 한 “인간 환경은 자연을 통하여 진화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요소와 문화를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요소의 모체(matrix)(Caldwell 1973, 11)”이다. 환경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적 개념이다. 정대연(2002, 20~21)의 지적처럼 자연의 오염·파괴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의 의미가 인간의 삶의 존재양식과 결부될 때 자연의 오염·파괴가 비로소 환경문제가 된다. 객체들이 인간의 삶의 존재양식에 영향을 줄 때 비로소 환경으로서 의미가 있다.

환경을 크게 세 개의 범주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인간환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분했을 때 이 두 환경 범주는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환경은 관계적 맥락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생활환경의 범주가 필요하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합목적적인 의식 행위와 무관한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된 자연의 구성물이다. 미생물을 포함한 생명이 있는 동·식물 일체를 포함한 생물적인 것과 공기, 물, 토양, 지질, 지형 등을 포함한 무기적인 것이 여기에 속한다. 생활환경은 인간의 합목적적인 의식 행위에 의해 자연환경의 변형된 형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미하

1)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 평가항목을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 분야로 구분한다.

<표 1> 한국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 범주

범주	항목
자연환경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
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는 생활은 개인적 활동부터 집단적 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환경은 인간의 합목적적인 의식 행위로 변형된 자연환경이 제도, 규범 등으로 고착화되어 인간사회의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환경문제는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환경권, 즉 자연적인 청정한 대기에 관한 권리, 깨끗한 물에 관한 권리와 관련이 있다. 사회환경문제는 더 좋은 사회적 환경에서 살 권리, 즉 의료권, 도로·공원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본 논문에서는 생활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생활환경은 포스코에 의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대기오염, 수질오염, 인체피해로 구분한다. 대기오염은 청정한 대기에 관한 권리, 수질오염은 깨끗한 물에 관한 권리, 인체피해는 사회적 환경권(건강권)과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2. 연구 방법

연구대상 기간은 광양제철소의 입지가 확정된 시점을 고려하여 1980년대부터 2007년 현재이다. 이 연구가 주로 채택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이다. 우선, 제철소와 관련한 각종 문헌과 인터넷 자료, 보도 자료를 활용하고 이들 자료를 기초로 광양시청 공무원, 광양제철소 노동자, 하청 노동자,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한다. 도시과정은 관련 문헌과 각종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광양시 전체적인 인구수 변화를 기반으로 항목에 따라 표본지역인 태인동과 금호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태인동과 금호동 지역은 제철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환경조성 시설과 관련한 환경권적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도시계획관련 문헌과 통계연보, 시정 백서 그리고 광양시청 도시과 공무원들과 그 밖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분석한다.

2007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3차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1차 현지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광양시청 환경담당과(수질, 대기, 전기 관련 담당자)공무원, 보건담당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 전반에 걸친 환경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다. 금속노동조합 광양지회 담당자,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 담당자, 포스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만나서 이들이 작업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당성과 애환을 들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의장 및 실무자를 통해 지역 NGO 단체들의 활동 내용 및 포스코 환경문제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들었다. 태인동 주민들과 금호동 주민들을 만나 이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환경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환경질화에 대해 그들의 호소를 전해 들었다. 포항제철소에 위치한 포스코 홍보

센터에 방문해서 포스코의 전반적인 역사 및 경영 방식을 알 수 있었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현장 견학을 통해 철이 생산되는 과정을 일부이긴 하지만 몸소 체험했다.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2차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태인동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활자화된 설문조사 자체가 물리적으로 한계였다. 또한 금호동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포스코 직원들이다. 포스코 직원이라는 현실적 제약조건 때문에 설문지 조사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순수한 연구조사의 목적을 강조해도 이들을 쉽게 납득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지인을 통해 관계를 맺은 한정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과 설문지 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한정된 지역주민들의 의견 조사가 객관성과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문헌자료와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했다. 1차 조사 때 만나지 못했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담당자의 심층 면접을 통해 포스코 측의 환경 관리 및 지역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들었다.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를 만나서 지역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포스코의 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해 들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차 조사를 실시했다. 포스코 일대의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전 조사에서 미흡하거나 빠진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포스코 주택단지와 태인동 일대의 지역을 방문해 위치적·구조적 특성을 조사했다.

Ⅲ.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근 지역개괄

1.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 현황

광양제철소는 포항제철소에 이어서 세워진 곳으로, 1982년 광양만 갯벌에 공사를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450여만 평의 제철소가 들어섰다. 광양제철소는 원래 13개의 크고 작은 섬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중 11개는 폭파해 공사에 사용됐고 현재는 제철소 구내에 2개의 섬이 작은 언덕으로 자취만 남아 있다. 광양제철소는 일반적인 수요가 많은 컨테이너나 강관을 만드는 열연제품과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냉연제품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이곳은 17,453천 톤(2006년 말 기준)의 조강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00년 현재 광양제철소 및 협력업체에 고용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광양제철소 인근지역에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협력 및 연관단지에 비해 광양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표 2> 광양제철소 및 관련업체 고용현황(2000년 말)

구분	광양제철소	협력회사	연관단지	계
회사 수	1	27	43	71
고용인원	7,433	6,284	3,523	17,240
지역 내 거주비율	0.944	0.508		0.696
광양시 거주인원	7,016	4,982		11,998

주) 협력회사의 고용인원은 계약상인원을 기준으로 삼았음. 협력회사와의 연관단지업체 종사자의 지역 내 거주비율은 54개회사 4,8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임.

출처: 유성종 2000, 68

2007년 현재, 광양제철소 내 10개 회사의 고용인원수가 6,993명(이중 6,430명이 광양제철소 직원)인데 비해 태인동 연관단지 및 이외의 회사 수는 63개, 총 고용인원 3,484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연관단지와 연관단지 이외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의 기업임을 알 수 있다.

광양은 1989년 1월 1일 제철소와 연관단지가 입지한 태금면(태인도와 금호도)과 신이주단지인 골약면 광영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동광양시로 승격됨으로써 나머지 기존 읍·면 지역인 광양군과 분리됐다가 1995년 1월 1일 재통합하여 현재는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로 1읍 6면 5동으로 구성됐다. 공업화되기 이전의 광양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농업에 종사했고 구 동광양시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가구는 반농반어적인 농가경제를 영위하였던 순천시의 주변지역이었다. 그러나 태인도(현재 연관단지 입지)와 금호도(현재 광양제철소 입지)지역은 천혜의 어장에서 김과 백합 등의 수산 양식업으로 비교적 높은 수산물 소득을 올렸다(유성종, 2000)²⁾.

행정구역상 숫자가 많은 광양읍과 중마동, 금호동 중심으로 주택지구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동광양 지역³⁾의 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1981년에는 광양읍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했지만 1991년부터는 동광양 지역의 인구분포가 가장 많아 광양 지역의 인구중심이 광양읍에서 동광양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동광양 지역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양읍의 가구 수는 1981년 4,882세대에서 1991년 11,295세대, 2001년 13,004세대로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다. 동광양 지역은 1991년 17,223세대에서 2001년 22,428세대로 증가했다. 면지역은 1981년 10,035세대에서 1991년 7,946세대, 2001년 7,744세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구수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동광양 지역에 전체의 54.1%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이정록, 2004).

2) 1981년 전라남도 도정백서에 따르면 금호도와 태인도는 김과 백합을 비롯한 양식업과 농업 위주로 생업구조를 보였다. 1975년까지 전라남도 호당 평균 소득에 밀렸으나 1976년부터는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1980년도 전남호당평균소득은 308만원인 반면, 태인도는 350만원, 금호도는 330만원이었다.

3) 동광양 지역은 광양시 행정구역 상, 골약동과 중마동, 광양동, 태인동, 금호동 등을 포함하는 동부지역을 의미한다.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를 보면 1980년에 전무했던 공장용지가 13,711km²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도로 용지와 대지가 각각 6.7km², 5.2km² 증가한 반면 농경지와 임야, 하천부지는 크게 감소하여 도시적 토지용도 지역이 크게 증대했다.

2005년 현재 광양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75,354km²이다. 이중 주거지역 17,321km²(9.9%)이고 상업지역 1,804km²(1.0%), 공업지역 46,423km²(26.5%), 녹지 지역 84,808km²(48.4%), 그 외 미지정지 24,998km²(14.3%)이다. 이는 2000년도(75,982km²(57.2%))에 비해 녹지지역이 절대적으로는 늘었으나 상대적으로는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공업지역은 2000년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지정지가 2005년 새로운 통계 항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미지정지를 미래적인 공업지역으로 본다면 2000년도의 공업지역의 비율인, 32.4%에 비해 40.8%로 늘어날 것이다.

<표 3>은 읍·동별 토지이용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광양은 광양읍지역에 비해 공업지역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동광양 지역에서도 태인동과 금호동지역에 공장지대들이 밀집해서 위치하고 있다. 반면 광양읍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경지 및 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2007년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², %)

구분	총면적	경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기타
		계	전	답				
합계	449,286	71,919	19,488	52,431	303,457	11,048	15,021	47,841
광양읍	52,313	15,955	3,097	12,858	25,264	2,829	366	7,899
봉강면	55,550	5,708	1,657	4,051	46,022	449	4	3,367
옥룡면	66,321	9,245	2,444	6,801	53,097	685	-	3,294
옥곡면	40,264	6,511	1,452	5,057	29,685	599	106	3,363
진상면	65,518	8,491	2,251	6,240	50,669	670	16	5,672
진월면	37,135	10,643	3,593	7,050	19,284	724	118	6,366
다압면	63,620	6,254	1,533	4,721	50,712	441	15	6,198
골약동	31,673	5,458	1,779	3,679	20,541	420	19	5,235
중마동	9,699	1,024	384	640	4,432	2,054	-	2,189
광영동	3,233	189	125	64	1,959	525	1	559
태인동	6,084	2,433	1,165	1,268	946	260	1,366	1,079
금호동	17,876	8	8	-	846	1,392	13,010	2,620

<자료: 광양시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site/Home/introduce/situation/statistics/>>

2. 제철소 환경문제의 특성

광양제철소는 일괄제철소다. 일괄제철소란 철광석을 이용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모든 공정 즉, 제선, 제강, 연주, 압연공정을 갖춘 곳이다. 제선 공정은 원료인 철광석을 녹여 쇳물(용선)을 만드는 공정이다. 철광석과 원료탄(유연탄)을 각각 소결공장과 코크스 공장으로 보내 소결광, 코크스를 만든 후 고로에 넣고 1,200도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놓으면 코크스가 타면서 그 열로 소결광이 녹아 쇳물이 만들어 진다. 제강 공정은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강철로 만드는 공정이다. 제선 공정을 거쳐 생산된 쇳물에는 탄소와 불순물이 있어 가공이 어렵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쇳물을 전로에 넣고 30~40분 정도 순수한 산소를 불어넣는다. 이 과정을 통해 탄소 일부와 불순물을 걸러내면 쇳물을 깨끗한 용강이 된다. 연속 주조 공정은 액체 상태의 용강이 고체가 되는 공정이다. 용강을 주형에 넣고 연속 주조기를 통과시키면 식으면서 응고되어 슬래브나 블룸, 빌릿 등의 반제품이 만들어 진다. 반제품들은 열연과 냉연, 후판, 선재 제품의 소재로 쓰인다. 압연공정은 반제품을 강판이나 선재로 만드는 공정이다. 슬래브, 블룸, 빌릿을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연속적인 힘을 가하면 원하는 두께의 강판이 만들어 진다. 압연 공정은 반제품을 1,100~1,300도로 뜨겁게 달궈 가공하는 열간 압연과 상온에서 가공하는 냉간 압연으로 나뉜다.

각 단위 공정별 혹은 공정별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이나 작업은 먼저, 제선분야의 원료공정에서 분광의 수송과 하화(下貨)과정 및 파쇄, 선별작업 과정이나 저장 시설을 들 수 있다. 이 공정에서는 기상 악화로 연료 야적장에서 먼지가 비산할 때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소결 공정에서의 오염배출시설로는 소결기 및 소결광의 정립, 수송 시설관, 분코크스의 파쇄, 선별, 수송시설 그리고 배열 보일러 등을 들 수 있다.

고로공정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로는 주원료 및 부원료 저장 시설을 들 수 있는데, 이 공정에서는 주상에서 출선 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석회소성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원료를 수입하는 저장, 선별, 분쇄, 이송시설 및 소성로, 분쇄기 등의 석회제조시설이다. 코크스 공정 중 원료탄고 코크스 저장, 파쇄, 수송하는 석탄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석탄의 야적장 저장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석탄과 코크스 수송과정의 낙하지점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다. 그리고 석탄을 건류, 제조하는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는 생산설비 자체의 열화가 오염의 발생원이 될 수 있고 코크스 인출시설, 조화탑, 분해시설 등이 오염 발생 시설이다. 또 화성 공정에서는 코크스가 공해발생원으로써 석탄가스를 발생시킨다.

제강분야는 제강공정과 연주공정으로 나뉘지는데 제강공정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전로, 탈황시설, 연화절단시설, 조괴시설 등이다. 연주공정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은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인 머신 스크레이퍼(Machine Scraper)와 턴디시 수리장 시설 등이 있다. 열연 분야의 열연 공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은 연마시설(사

상압여기) 열처리 시설(가열로)이 있다. 냉연분야의 공정은 냉연공장과 도금공정으로 나뉘는데 냉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는 압연시설, 교정기, 용접기, 스케일 브레이커(Scale Breaker), 금속표면처리시설 그리고 탈사시설 등이 있다. 도금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도금처리 시설, 약품저장시설, 도금시설, 스케일 브레이커(Scale Breaker), 금속표면처리시설, 압연시설, 도유기, 소둔로 등이다(이 철, 1998).

백도명(2004, 5~11)은 제철소 지역에서 제기 가능한 건강문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철소는 철광석과 코크스를 사용하여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탄 연소물질과 금속의 연기 및 반응물질들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된다. 대기오염과 관련된 호흡기계 질환들은 경미한 폐질환, 감염성 폐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미한 폐질환으로는 인후통, 코막힘이나 콧물, 기침, 눈 자극 증상 등으로 나타나는 감기가 대표적이며 감염성 폐질환으로는 크룹, 기관지염, 폐렴 등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대기오염물질들로 인한 특정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알려졌다. 첫째, 일반적인 산화연소물질로 인한 자극성 질환과 호흡기 질환이다. 1989년에 포프(Pope)는 미국의 유타(Utah) 계곡에서 자연적인 실험을 관찰했다. 1986~1987년 겨울동안, 대기분진의 가장 큰 오염원이던 제철공장이 파업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때 미세분진의 평균 대기농도는 $51\mu\text{g}/\text{m}^3$ 이고 최대 대기농도는 $113\mu\text{g}/\text{m}^3$ 이었는데 그 전년도 평균 대기농도는 $90\mu\text{g}/\text{m}^3$ 이었고 최대 대기농도는 $365\mu\text{g}/\text{m}^3$ 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소아의 병원 입원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50% 이상 감소했다. 회귀분석으로 추산해 본 결과, 미세분진이 $10\mu\text{g}/\text{m}^3$ 감소할 때 마다 어린이들이 천식과 기관지염으로 병원 입원하는 비율이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중금속 노출이다. 폴란드 철강업체인 Huta im.T. Sendzimir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니켈, 크롬, 아연 등이 포함된 산업 먼지들은 주요한 알려지의 원인이 된다는 상관성을 밝혔다. 건서(Gunther)는 제철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구리, 납, 망간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입증했다.

셋째, 석탄 및 연료 사용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물질로 인한 발암원의 노출과 암 발생이다. 포프(Pope)는 미국의 유타 계곡에서 흡연, 날씨, 계절, 사회경제적 질병에 대한 요인보다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스페인 바스크 제철 지역에서 자연적인 암 발생보다 높은 수치의 암 발생율이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했다.

IV. 지역 환경문제와 환경인식

1. 지역 환경문제

1) 대기오염

전남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그리고 경남의 하동군과 남해군 등은 남해안의 광양만에 접해있는 지역으로 이를 보통 광양만권이라 부른다. <표 4>에서도 보여주듯이, 광양만권의 주요한 오염원인 부유먼지의 84%, 미세먼지의 84%, 이산화황의 67%, 질소산화물의 60%가 광양에서 나온다. 이는 광양 지역이 특히 심각한 오염원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4> 광양만권 점오염원⁴⁾ 배출량

(단위: 톤/년)

항목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부유먼지	미세먼지	비고
산업 전체	42,114	5,738	41,464	6,002	5,162	
광양	28,177	48	24,675	5,048	4,341	
발전	7,639	1,413	19,560	388	279	여수, 호남, 하동

자료: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보고서, 2004

지난 2002년 발표된 환경부 《대기오염연보》에 따르면 광양은 전국 29개 도시 중 산성비 농도가 pH4.6으로 전국 1위이다. 또한 서울시의 오존오염도 0.014ppm의 2배 수준인 0.028ppm의 높은 오존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은 27,324톤으로 광양시 전체 30,173톤의 90.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4,067톤으로 광양시전체 27,797톤의 86.6%를 차지한다.

제철소 코크스 공정에서 배출되는 코크스오븐 배출물질들은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이다. 코크스 오븐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에는 비교적 휘발성이 강한 벤젠이나 톨루엔과 같은 가스들을 비롯하여 비교적 휘발성이 낮은 콜타르 성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들 중에는 다핵방향족 화합물은 이전부터 발암성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고리 2개 이상의 화합물질로 구성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PHA : polyaromatic hydrocarbon)는 화석연료나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 PHAs는 암 유발물질이다. 이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1-hydroxypyrene으로 대사되어 요중으로 배출된다. 백도명(2004)은 태인동지역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 증가에 따라서 요중 1-hydroxypyrene가 태인동 지역에서 높게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 주로 바람이 남풍이 부는 시기에는 제철산

4) 점오염원은 화력발전소, 연소시설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인 대기 배출입소를 통칭한다.

업단지가 태인동의 전체 호흡성 미세 먼지에 반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거대입자의 비산과 광양제철소의 원료탄과 철광석 야적장에서의 입자들의 비산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10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일 년에 두 차례 각각 전남도청과 경북도청에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기본부과금 납부 자료와 국립환경연구원의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비교 조사했다. 그 결과 포스코가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본부과금을 60억 원 이상 상습적으로 축소해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⁵⁾.

1998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대기배출시설에서의 사전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최적방지시설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포스코가 환경친화적 기술개발(COREX, 연속주조공정)에 경주해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COREX나 연속주조공정에 대한 투자는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것이라기 보단 생산비용 저감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며 1997년 포스코에서 납부한 기본부과금이 약 21억 원인데 반해 탈황공정 1기 설치비용이 수백 억 원임을 감안하면 SOx 저감 노력의 필요성은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시민의 신문》 2004년 10월 8일자).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환경오염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가진 광양시청은 대기질 자동 측정망을 4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거지역 2개소(중동, 광양읍)와 농촌취락지역(진상면), 공업지역(태인동)에 각각 1개소가 있다. 측정망이 정작 중요한 포스코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시의 측정 자료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 오염원이 있는 포스코 단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스코의 방침이다. 포스코에서 제시하는 배출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 환경행정 관리 체계다.

대기 문제에 관해서 광양시는 측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측정 자료가 주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수준을 측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산업체 등과 같은 점오염원이 밀집된 공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실제 대기오염도는 주거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농도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광양시 2006, 46).” 대기오염 측정 항목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산성비 등이다.

5)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2000~2003년간 총 4,460톤으로 전남도청에 신고하고 2억 4천 5백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립환경연구원(현재 국립환경과학원로 명칭이 바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같은 기간 57,235톤의 황산화물을 배출했다. 포스코는 이같이 축소신고하고 원래 납부해야 할 부과금 31억 3천 7백만 원 중 28억 9천 2백만 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먼저배출량도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결과는 총 8,571톤이지만 포스코는 총 1,670톤으로 신고해 7억 7천 5백만 원을 탈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법 기준 30%이내의 오염물질 배출은 환경오염 부과금 대상이 아닌데 이를 포함시켜 조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 기준을 준수했다하더라도 포스코의 측정량과 국가기관의 측정량이 무려 8~1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대한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꼭 측정해야 할 항목은 없다. 중금속인 납과 벤젠, 톨루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할 측정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광양시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 수질오염

하·폐수처리의 경우6),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2,500톤과 태인 지역 폐수종말처리장(환경사업소)에서는 1일 1,700톤, 1일 24천 톤의 처리용량의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20,961톤, 중앙하수종말처리장(1일 25천 톤 용량)에서 1일 6,443톤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제철단지내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는 1일 95,917톤을 처리하고 있다(광양시, 2006). 태인동 지역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을 생활폐수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곳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총 양(31,604톤)은 제철 산업에서 나오는 폐수의 양보다 3배정도가 적다. 1999년 국회 환경노동위 강종희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광양공단폐수처리장은 상반기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 방류수의 총 질소 농도가 허용기준인 60ppm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2~6월 사이에 광양제철소는 청산(시안)을 포함한 불법폐수 11만 톤을 광양만에 방류했다. 환경부와 검찰의 2003년 4/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독극물 시안(CYAN: CN)을 비롯한 기준치 이상의 부유물질, 용해성 철 등이 포함된 폐수를 하루 평균 927톤 불법 배출했다. 적어도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11,240톤의 폐수를 공공수역인 광양만에 무단방류했다. 이 기간 동안 독극물 시안은 최고 7.5ppm(mg/L)에서 평균 3.01ppm에 달하는 고농도(폐수배출기준 1.0ppm)상태로 85kg이나 불법 방류된 것이다. 폐놀의 경우도 최고 2.863ppm(평균 1.365ppm)으로 배출허용기준 3ppm에 근접하는 고농도로 검출되어 4개월간 무려 37kg에 달하는 양이 광양만으로 방류된 것으로 밝혀졌다7).

더욱이 광양제철소는 이미 2000년부터 불법배출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2000년 5월 24일 광양제철소가 자체 측정한 수치로도 pH가 5.75로 이미 배출기준(허용기준 5.8~8.6)을 넘어섰다. 광양제철소는 불법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3년 동안이나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무단 배출된 폐수량은 최소한 1백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광양제철소는 1997년부터 고로공정의 원가절감과 수명 연장을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저감대책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6) 하수는 도시에서 하수도를 통하여 모인 오수를 말하여 각종 액상폐기물과 빗물이 포함된 것이다. 오수는 액상과 고체물질이 섞인 배출물을 말하여 주로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물이다. 폐수는 소비 생활과 산업 활동의 부산물로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것이다.

7) 2003년 2월 19일, 검찰합동단속 시 고로공정과 제강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해 무단 방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2003년 11월 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양제철소의 불법배출은 독극물인 시안에 대한 초과부과금만 7억 5천만 원에 달하여 부유물질 초과부과금 1억 6천만 원과 과징금 6천만 원 등을 합치면 무려 10억 원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무단 방류이다. 이 사실이 2004년 2월에 언론에 보도됐으나 폐수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과징금부과 및 위반내역만이 공개되었을 뿐 그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을 변화시켜왔다. 광양제철소는 이로 인해 독극물인 시안을 비롯한 부유물질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용해성 철 등 오염물질 함량의 지속적 증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지난 2003년 2월 단속이 후에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2004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기업감시팀 기자회견 내용 참조).

2004년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영산강환경관리청 국정감사 중, 광양만 수질오염의 책임을 추궁하기위해 당시 포스코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광양제철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⁸⁾.

8) < 포스코 정준양 광양제철소장 증인신문 요지(환경운동연합, 2004년 10월 15일)>

■ 김영주 의원

- 질의 : 광양제철소가 시안과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대기와 바다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 인정함.

- 질의 : 맹독성 청산가리(시안)를 의도적으로 배출한 것 아닌가? 답변 : 무해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관리함.

- 질의 : 향후 대책과 책임질 계획은? 답변 : 최솟게 생각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정두언 의원

- 질의 : 서울대의 주민건강조사 연구용역 발표회 하루 전에 반박자로 나간 것이 유례가 없는데 자료입수 과정이 궁금하며 제철 반박문에 오류가 있는데? 답변 : 1주일 전 기사가 나갔으며 서둘러 반박한 것은 잘못되었음.

- 질의 : 연구내용을 반박할 것이 아니라 수렴하고 받아 들여야 됨, 반박 일변도는 신뢰 잃음. 답변 : 잘 알겠음.

■ 우원식 의원

- 질의 : 광양제철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황산화물과 먼지 등 배출총량이 늘어났고 산성비의 오존오염이 심각한데 무슨 저감노력을 했는지? 답변 : 죄송함.

- 질의 : 광양제철의 오염물질 배출이 건강을 해치고 오존주의보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데? 답변 : 앞으로 2007년까지 총량규제를 대비한 1,500억 원 등 2,000억 원을 투자해서 개선하겠음.

- 보충질의 : 실제로 협의는 하지 않고 대화하지고 말만 하는 광양제철소의 태도를 잘 알겠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함. 답변 : 알겠음.

- 제안 : 시민환경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당국이 관심 갖고 협의했으면 함.

■ 단병호 의원

- 질의 : 불법배출 폐수에 시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있었나? 답변 : 알고 있었음.

- 질의 : 독극물 시안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 잘못 되었음.

- 질의 : 2000년 5월 24일 최초 발견 후 3년 되었는데 인정하는가? 답변 : 폐수처리장 50,000 톤과 섞어서 30분의 1로 희석되어 문제없다고 생각함.

- 질의 : 법 기준치 넘어서면 심각한 문제이며 그 이하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답변 : 그 이하는 문제없다고 생각함.

- 질의 : 광양제철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 환경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참여하겠음. 피동적 입장에서 의원님들 가르침으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전향적이고 미래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겠음.

■ 배일도 의원

- 질의 : 증인이 제철소에서 30년 근무했는데 환경시설을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 그렇게 생각함.

- 질의 : 그러면 이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오염이 심각하고 마구 배출한 것 아닌가? 답변 : ... (없음)

■ 김형주 의원

- 질의 : 광양 지역에 타지역 오염물질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있다고 판단함. 미세먼지가 태인도에 영향을 미치면 제철소 외 여수 신단에서 같이 올 수 있음.

■ 제종길 의원

- 제안 : 광양제철소의 신뢰회복과 신뢰회복 노력무족으로 생각함. 광양제철소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청, 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 바랍.

3) 인체피해

현장 조사에서 만난 태인동과 금호동에 거주한 이들은 모두 포스코로 인한 환경적 고통을 호소했다. 태인동에 위치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화순에서 근무하다가 이곳으로 1년 6개월 전에 이사했다고 한다. 약사는 화순에 있을 때보다 한 번 감기가 걸리면 오래가고 낫지 않는다고 전했다. 태인동 공해방지주민대책위원회 상근하는 20대 초반 여성은 1년 남짓 태인동 2구에 위치한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얼굴에 피부병이 생기고 몸이 안 좋아져서 태인동을 벗어나 중마동에 살 계획에 있다고 했다. 포스코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주부는 “이 지역에 10년 살았는데 봄, 가을 비염이 심하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걸레가 검게 된다. 하루 2번 청소해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을 비염과 아토피로 고생한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포스코 단지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비염이 있는 학생을 조사했는데 35명중 과반수였고 전했다. 본인도 지르텍 비염 약을 항상 끼고 산다며 이곳의 환경질환이 심각하다고 했다.

광양제철소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3000여명의 주민들 중 350여명이 희귀한 피부병에 걸려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태인동 1구 노인정에는 한결같이 가려움증과 온 몸이 붓는 것을 견디지 못해 등 전체에 파스를 붙이거나 눈 시리움증을 호소하는 하는 이들이 많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빨갛게 물집 같은 것이 자그마하게 생겼는데 가렵기도 하고 따가워서 파스를 바르니깐 시원해졌다. 피부과에서 주사를 맞기도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빨간 반점 같은 것이 생겨 따갑고 긁으면 상처가 생겨서 흉터가 남는다. 밖에서 일하고 나면 더 심해진다.” “하루에 몇 번씩 노인정 바닥을 닦고 집 방바닥을 닦아도 바닥이 시커멓다. 어쩔 수 없이 닦기도 하지만 빨래를 널어놓으면 온통 먼지로 시커멓게 변해서 방에 빨래를 널어두는 경우가 많다(《오마이뉴스》 2006년 9월 15일).”

태인동에 위치한 태금중학교는 광양제철소의 매연으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을 거의 없다. 1년 동안 학교 공기 오염을 체크했던 태금중학교 공상길 과학교사는 “매년 6-8월 사이에 오염이 심각하고 특히 아황산가스 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태인동 진료보건소는 정확한 분석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주민들이 봄과 여름철에는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고 피부질환을 가을로 접어들어서는 천식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순천 KBS》, 2006년 9월 20일)”고 설명했다.

순천 KBS는 태인동 마당의 물통에 쌓인 침전물의 성분 분석을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실험실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보통 흙이나 먼지에 1% 미만의 철분이 섞여 있지만 태인동의 경우에는 철 성분이 무려 6배가 넘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서울대 보건대학원팀이 1년 4개월에 걸쳐 광양시 태인동의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조사했다. 최종보고서인 『공단지역(태인동) 주민건강실태조사 및 환경위해 요인평가 학술용역』은 제철소 인근 지역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밝히고 있다. 백도명(2004)은 태인동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리했다. 첫째, 먼지로 인한 문제들이다. 주택 청소를 하게 되면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인다. 빨래를 하게 되면 시꺼멓게 먼지가 쌓이면서 더러워진다. 둘째, 악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이다. 한밤중에 악취가 전체 마을을 뒤덮는 경우가 많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악취가 심해진다. 매우 자극적인 냄새가 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점막이 자극된다. 셋째, 최근 7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태인동 주민 건강조사 결과, 연령대비 및 성별에 따른 태인동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만성호흡기질환 유병률 중에서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⁹⁾(전국 천명 당 11.26, 광양 천명 당 55.8)이 높게 나타났다. 천식¹⁰⁾(전국 천명 당 14.41, 광양 천명 당 18.44)과 축농증(전국 천명 당 9, 광양 천명 당 10.46)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은 20~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10~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천식의 경우에는 40~55세 미만에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고 축농증은 5~19세 이상과 45~65세 사이에서 전국보다 큰 수치를 보였다. 알리지성 비염의 경우 45~49세는 전국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 별 유병률의 경우, 만성기관지염에서 35~39세, 40~44세 연령군에서는 0~5년 거주한 사람들이 더 오래 거주한 사람들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45~49세 경우에는 11~15년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50~54세는 21년 이상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다.

광양시와 태인동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전국과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보다 호흡기 점막과 안구 점막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천식, 비염, 결막염의 증세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흡기나 안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질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2007년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¹¹⁾(광양, 1차년도)』에서도 건강검진 결과, 청소년과 어린이 노출군은 비교군에 비해 호흡기계통과 알리지성 증상의 호소율이 높았다. 청소년의 경우, ‘지금까지 알리지성 비염의 진단 경험’에서 노출군은 52명(26.5%), 비교군은 3명(7.9%)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 노출과 비교군간 호소증상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지금까지의 알리지성 비염의 진단 경험’에서 노출군은 39명(37.9%), 비교군은 3명(9.7%), ‘지금까지 알리지성 비염의 치료 경험’에서

9)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기침, 가래, 숨이 참 등을 특징으로 하며 폐기종(폐포 내벽 및 탄성력이 손상되는 만성 질환)이나 만성기관지염(기관지 내벽 세포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감염 및 기도의 폐쇄 위험이 높아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흡연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이 그 발생과 악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백도명 2004, 168).

10) 천식은 소아 및 성인의 만성 폐질환 중 하나로 숨이 참, 기침, 천명음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운동, 감염, 오염원, 알러지, 스트레스, 스모그 등의 비알러지성 오염물질에 대한 민감성에 의해서 급성 악화를 보일 수 있다(백도명 2004, 168).

11) 이 조사에서 노출지역은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여 환경오염물질에 폭로될 위험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선정된 금호동, 중앙동 지역을 선정했다. 비교지역은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이의 지역에 위치하여 환경오염물질의 폭로와 관련이 적을 것으로 추측되는 옥룡면, 봉강면 지역을 선정했다.

노출군은 37명(35.6%), 비교군은 3명(9.7%), '눈 가려움증'에서 노출군은 32명(31.4%), 비교군은 1명(3.2%), '지금까지 알리지 눈병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서 노출군은 36명(35.6%), 비교군은 2명(6.5%), '지금까지 알리지 눈병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서 노출군은 22명(21.8%), 비교군은 0명, '음식 알리지 증상'에 노출군은 21명(20.4%), 비교군은 1명(3.2%)으로 노출군이 비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노출군이 비교군에 비해 피부발진, 알리지성 비염, 알리지성 눈병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성인의 경우, 피부습진관련 증상은 '피부발진'에서 노출군은 63명(17%), 비교군은 22명(10.6%)으로 노출군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알리지 눈병관련 증상 즉, '지금까지 알리지 눈병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출군은 123명(33.2%), 비교군은 40명(19.2%)과 '지금까지 알리지 눈병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출군은 59명(16%), 비교군은 18명(8.7%)으로 노출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순천향대학교, 2007).

2. 지역 주민들의 환경인식

1) 전반적인 지역주민들의 환경인식

제철소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은 그 동안의 과학적 조사와 주민들의 고통호소에 의해 판단한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생활환경의 열악함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에서도 드러난다.

광양 지역이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 열악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설문항목¹²⁾에서 총 1893명의 응답자의 24.9%(456명)가 환경오염을 지적했다(이정록의 1999). 지역의 최우선 현안 문제를 묻는 질문¹³⁾에 총 973명의 응답자 중 27.2%(265)명이 환경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광양 지역의 환경문

12) 이 조사는 1999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포스코로부터 「광양제철소의 지역협력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표 5> 타지역 비교 열위 생활환경

구분	교통불편	교육문화	휴식공간	오염공해	의료시설	배타인심	물기취업	지역격차	기타	합계
사례수	247	276	141	456	188	72	169	217	66	1832
(%)	(13.5)	(15.1)	(7.7)	(24.9)	(10.3)	(3.9)	(9.2)	(11.8)	(3.6)	(100)

출처: 이정록의 1999, 170

13)

<표 6> 지역의 최우선 현안 문제

구분	교통	교육	복지	고용	환경	여가	기반	격차	기타	합계
사례수	131	103	148	187	265	39	21	55	24	973
비율(%)	13.5	10.6	15.2	19.2	27.2	4.0	2.2	5.7	2.5	100

출처: 이정록의 1999, 170

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철건설의 역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3.5%가 환경오염을 지적한 점을 보더라도 제철지역의 환경오염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99년 조사 시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은 포스코가 공해 방지노력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다. 또한 포스코의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환경공해방지사업에 대해 33%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정록(2006)은 동광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조사했다¹⁴⁾.

<표 7> 광양제철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특징

(단위: %)

구분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당)동
크게 기여함	53.2	68.6	70.6	70.2	48.4	89.5
반반이다	17.5	15.4	16.9	16.9	20.6	1.4
대체로 부정적	19.5	9.7	6.6	6.0	24.3	4.2
기타	9.8	3.2	6.3	6.9	6.7	4.9

출처: 이정록 2006, 293

주목할 만한 것은 태인동 주민들은 광양제철소가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금호동 주민들보다 6배 정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한 측면에 대해서 금호동 주민들은 태인동 주민들보다 2배 정도 긍정적이다. 이는 태인동 주민들은 광양제철소에 직접 고용되기 보다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제선·제강공정 인근에 위치해 공해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태인동 주민들이 포스코의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반면, 금호동 주민들은 대부분이 광양제철소 직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2/3 정도가 했다고 보여진다.

연구 지역인 태인동과 금호동의 생활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표 8>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매우 좋다'는 응답에 대해 태인동은 19.8%를 보인 반면, 금호동은 타지역보다 높은 비율인, 31.4%를 나타냈다. '불편하다'라는 의견에는 두 지역은 유사한 응답률을 보인다. 태인동은 양극단의 응답보다는 중간 응답인 '보통이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금호동은 양 극단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14) 설문조사는 1992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했다. 표본 집단은 100명의 지도층과 일반 시민들 중 동광양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1,100명으로 청장년층(30~49세)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표 8> 동광양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에 나타난 거주지(동)별 특징

(단위: %)

구분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당)동
매우 좋다	24.3	16.8	25.2	28.2	19.8	31.4
보통이다	47.4	49.2	42.5	44.8	41.2	28.7
불편하다	27.2	31.2	29.4	25.8	28.9	29.4
기타	1.1	2.8	1.9	1.2	0.1	0.5

출처: 이정록 2006, 289

포스코의 계획에 의해 조성된 금호동 주민들은 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는 반면, 태인동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표 9> 쓰레기 및 분뇨처리 문제에 대한 거주지별 특징

(단위: %)

구분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당)동
별로 문제없다	28.4	34.9	31.3	28.7	14.6	53.1
심각하다	46.7	42.9	45.1	39.3	44.9	38.5
매우 심각하다	24.7	22.2	23.6	32.5	40.4	8.5

출처: 이정록 2006, 298

태인동의 응답자들은 과적 차량에 의한 교통 무질서에 대하여 '별로 문제가 없다' 12.6%, '심각하다' 36.5%, '매우 심각하다' 50.9%로 전체의 약 88%가 산업단지 지역 내의 화물차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표 10> 환경오염에 대한 거주지별 특징

(단위: %)

구분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당)동
심각하다	44.4	42.2	39.8	44.0	50.0	22.9
보통이다	24.7	25.9	29.1	31.6	26.6	34.1
심각하지 않다	3.09	31.7	31.1	24.4	23.4	43.0

출처: 이정록 2006, 303

<표 10>에 따르면 금호동 주민들의 43%가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태인동 주민의 과반수는 심각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차이는 금호동 주민들의 대부분이 광양제철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설문조사시점이 199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 현재 금호동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 느낄 것이다. 현장조사에서 만난 금호동 주민들은 10년 이상 거주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한 달 가계 생활비 100만원 중 10~20만 원 정도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질환은 심각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다면 금호동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할 것이다.

인접한 금호동과 태인동 주민들이 느끼는 이러한 환경권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 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금호동과 태인동의 환경인식 차이

태인동은 광양제철소 입지이전부터 존재하던 마을인 반면, 금호동은 광양제철소 입지와 함께 새로 생긴 마을이다. 2005년 현재 금호동엔 약 2만 명에 가까운 제철소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태인동 거주자들은 대부분 제철소와 연관된 하청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경우, 태인동엔 79세대(146명)인데 비해 금호동은 6세대(10명)이다. 금호동 가구수가 태인동에 비해 약 5배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태인동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태인동이 금호동에 비해 저소득층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표 11> 태인동과 금호동 지역의 가구 수 및 주민 수

연도	태인동		금호동	
	가구 수	주민 수	가구 수	주민 수
1995	1239	4293	2545	8430
1996	1297	4318	2494	8635
1997	1336	4379	2474	8906
1998	1302	4161	5886	20775
1999	1250	3968	5704	20524
2000	1197	3740	5589	20296
2001	1127	3477	5455	19861
2002	1108	3342	5401	19636
2003	1115	3192	5311	19092
2004	1145	3175	5354	18809
2005	1197	3216	5272	18148

자료: <http://www.gwangyang.go.kr/site/Home/introduce/situation/statistics/>

1997년 8월 26일에 4기 냉연공장 준공과 1999년 3월 31일에 5고로 준공으로 건설노

동자 및 연관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1997~1999년 사이에 금호동 주민 수는 2.3배 증가했고 태인동 주민 수는 300백 명 정도 줄어들었다.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 정규직 직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태인동의 경우, 공장 건설시에 인구가 늘었지만 준공된 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 이후 금호동 인구는 줄어든 반면 태인동 인구는 변동 폭이 적다(<표 11> 참조). 금호동에 인구가 줄어든 원인중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예를 들면, 더 넓은 평수를 희망하거나 좀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순천과 중마동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주택 단지는 주로 18평~24평이 기본평수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넓은 집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식구들의 아토피질환과 호흡기 질환 때문에 이사를 갔다. 태인동과 인접해 있는 중마동은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대부분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 전남지역의 인구 추이를 감안할 때 특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 12월 말 35,927명(11,238세대)이던 인구가 2006년 6월 37,428명(11,924세대)으로 늘어났다.

태인동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는 반면, 금호동은 2.1%이다. 이는 태인동이 금호동보다 노령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30이상~50세 미만의 인구는 태인동은 30.8%, 금호동은 40.6%로 금호동이 중장년층의 인구가 많다. 14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태인동은 16.1%인데 반해 금호동은 28.4%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태인동의 경우는 고령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는 그에 비해 낮다. 2005년 현재 태인동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11개가 있고 이용인원은 337명이다. 반면 금호동의 경우, 2개 시설을 총 133명이 이용하고 있다. 태인동의 주택 보급율은 92%(1197세대, 주택 1097채)이고 대부분 단독과 아파트이고 일부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다. 금호동의 주택 보급율은 102%(5272세대, 주택 5387채)로 대부분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태인동엔 의원 1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가 있다. 반면, 금호동엔 의원 2개소, 치과 1개소, 한의원 1개소, 부설의원 1개소로 총 5개의 의료기관이 있다. 태인동엔 학생들이 공부할 마땅한 도서관이 없다. 하지만 포스코는 금호동에 도서관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태인동 인근엔 생활체육공원 1개와 소공원 1개가 있다. 금호동의 경우, 사택 조정 자체를 포스코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금호동 동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금호동은 포스코의 사적 소유지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으며 포스코가 조경업체를 선정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포스코 사원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포항제철 건설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다. “포항제철 주택단지에 사는 것은 마치 지상낙원에서 사는 것과 같다(이호 1999, 311).” 1991년 7월, 김수경 추기경이 포항공장과 사원주택단지에 들어서 한 말이다. 이는 포항제철의 시설들은 ‘전원 속의 제철소’라 불리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포스코는 창립초기부터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법적으로 비용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복지후생 이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주택제도, 급식제도, 통근지원제도, 교육장학제도, 보건위생관리제도, 문화 및

취미지원, 공제금융제도, 보험, 재산 형성지원, 생활편의 및 기타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했다.

광양제철소 주택단지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예술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넓은 축구 경기장과 테니스장, 각종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형 상가와 레크리에이션, 헬스클럽 및 식료품점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원을 받아 제철소 단지 내에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택단지는 공원, 나무, 정원 등 녹지로 뒤덮여 있다. 광양제철소는 1982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359억 원을 투자하여 1230㎡에 약 157만 그루의 수목을 심어 289만㎡(23.5%)을 녹화했다. 주택지역에는 101만 그루의 수목을 심어 63.5%를 녹지기반을 조성했다(<표 12> 참조). 공장지역에는 공정 특성에 맞는 경관 및 차폐 녹지를 조성하고 학원단지에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을, 그리고 주택지역에는 주거공간을 유지하기위한 조경 사업을 실시했다.

<표 12> 녹화사업 실적

구분		광양	
		조성량	조성비(%)
공장지역	수목(천주)	1,579	23.5
	잔디(천㎡)	2,324	
주택지역	수목(천주)	1,014	63.5
	잔디(천㎡)	775	
투자비(억 원)		359	

자료: 포스코 2004,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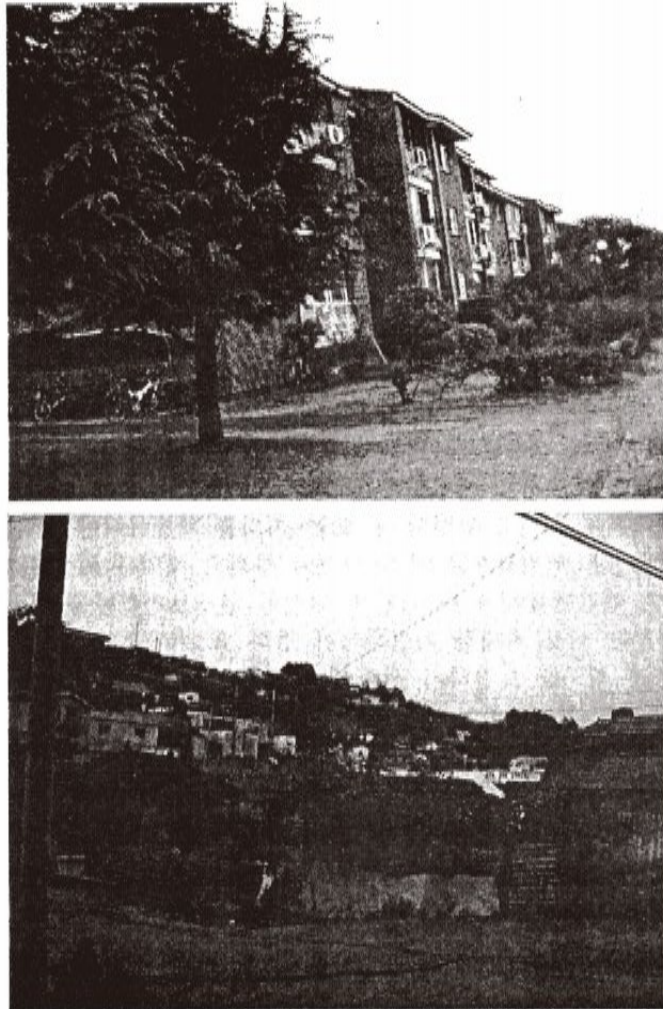
광양제철 단지 안에 사는 중학생이 단지 밖의 친구를 사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제철소 밖의 지역사회와의 일정정도 단절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양제철은 UFO같아. 어느 날 갑자기 제철소라는 거대한 비행접시가 내려앉고 비행접시 주변에 넓게 철조망을 치고 자기들의 주거지역을 만든 거야”라는 금호동에 입주한 주민의 증언은 광양제철소를 사이에 두고 금호동과 그 밖의 지역과의 단절된 지역사회 모습을 일정정도 보여준다.

섬진강 건너편에 위치한 태인동은 제철산업 공정 중에서 제일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금호동은 완제품이 나오는 공장 옆에 위치하고 더욱이 산림으로 우거진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태인동의 경우에는 멀리서 보더라도 무성한 녹지 공간이 제대로 없는 민둥산이 지역이다(<그림 1>참조). 제철산업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인 태인동과 금호동은 궁극적으로는 환경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다.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수단마저도 힘든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과 광양제철 주택단지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및 형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주인, 포스코가 원래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4년부터 태인동의 환경문제를 사회문제

로 쟁점화 시킨 환경운동연합의 전 사무국장은 “태인동이 금호동처럼 아늑한 전원주택 단지였다면 환경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금호동의 1/10만이라도 태인동의 환경조성사업에 투자했다라도 포스코를 대상으로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시작할 염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며 태인동의 열악한 환경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포스코의 불평등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인해 정작 제철지역의 환경권을 함께 요구해야 할 주민들이 환경권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호동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한 채 태인동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포스코에 의한 환경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무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철산업으로 동일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불평등한 환경 조성사업은 이들의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림1> 금호동과 태인동의 주택가 모습



자료: 2007년 2차 현장 조사시 촬영

V. 결론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20여년 넘게 환경권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환경권은 심각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침해받고 있다.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들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더 좋은 사회적 환경에서 살 권리까지도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 주택단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태인동 주민들의 사회기반시설들은 이곳 주민들의 환경권을 더욱더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양시의 환경 선언 및 환경보전 기본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양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온 시민의 의지로 선언한다.

1. 우리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우리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이 최소화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우리는 이제 물질적으로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5. 시 정부는 환경오염을 개발계획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개발계획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업은 환경오염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민간단체와 언론 기관은 건전한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시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8. 지구촌의 일원인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우리는 환경보전이 생활화되고 개개인의 윤리규범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광양시, 2006. 밀줄과 강조는 필자).

현실에서 나타난 “광양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는 평등하지 않다. 이들의 환경권을 일정정도 제약하는 기여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다. 환경보전의 의무가 많은 부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이 선언은 공정하지 않다. 광양시의 환경보전 기본원칙 9가지 중 우리들의 공동 책임항목은 5가지이다. 나머지 4가

지 항목에서 각각 지방정부와 기업, 민간단체와 언론기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양시는 지역주민들의 의무와 포스코의 의무를 동일하게 요구할 수 없다. 포스코가 일정정도 주민의 환경권을 박탈한다면 포스코는 환경에 대한 의무를 주민들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광양시는 모든 홍보문구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임을 항상 강조한다. 그러나 환경백서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기업의 환경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다. 2005년, 포스코의 지방세 납부세액 총 1,493억 원 중 광양시에 납부한 금액은 306억 원으로 시 전체 세수 중 51.5%를 차지한다. 광양시의 입장에서 볼 때 포스코는 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자금원이다. 강력한 자금원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확보 활동에 대해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광양시지부의 관계자는 포스코와 광양시의 관계는 좋게 말하면 상생과 협력의 관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포스코가 시를 좌지우지하는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빗대어 표현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광양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정록, 2006)에서 시당국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42%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2년 동안 태인동에 10억여 원 정도를 지원했고 자체 보건진료 지원팀 박사급 의사 2명을 투입해 오지 주민들 순회 진료를 해왔다. 2006년 4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나눔의 토요일’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태인동 체육공원에 해송 200주를 식재하는 등의 조림활동을 펼쳐 푸른 태인동 만들기를 제안했다. 2004년부터 ‘나눔의 집’을 광영동과 태인동에 개설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급식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협력 활동은 20년 넘게 박탈당한 환경권에 대한 ‘일정정도’의 보상이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포스코의 환경 경영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지역의건 수렴한 환경정책’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요구한 태인동 주민들의 환경권은 포스코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 포스코 홍보관에는 다음과 같은 홍보문구가 걸려 있다.

clean-포스코

“공해 없는 깨끗한 세상 포스코가 이끌어 갑니다.” 포스코는 공원 속의 제철소를 목표로 설비 투자비의 9.1%에 달하는 2조 550억 원을 투자하여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 폐기물처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공업용수의 98% 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나머지 2%로 법이 정하는 기준치보다 4~5배 깨끗하게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 또 1990년 국내 최초로 환경자동 감시 설비를 통해 인근 지역의 대기, 수질, 소음 등의 오염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하여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환경감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 가동에만

매일 5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철소 인근 지역에 약 300만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철강 산업이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포스코의 뒷면에 가려진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박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으로 기본권인 깨끗한 생활환경이 파괴되는 공간에서 정당한 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포스코의 화려하고 깨끗한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 포스코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육박하고 국제철강협회 회장으로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선임되어 세계 속의 포스코 성장의 앞면은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희생이라는 뒷면이 함께 존재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용광로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이상, 포스코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은 계속해서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이 희생되는 기반에서 포스코의 성장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모순된 상황이다.

기업이 동일한 생산규모를 유지하는 그 자체도 기업 간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더 빨리 뛰어야하는 생산의 바퀴에 따라 행동한다. 페달을 밟지 않는 자전거는 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듯이 성장을 멈춘 회사는 도산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환경비용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것은 비도덕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경쟁에서 더 많은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운영방식에서 기업의 활동 폭이 결정되는 것이다. 금호동과 태인동의 불평등한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포스코 관계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이상 지역주민들의 모든 환경적 편의를 제공할 수만은 없다면서 기업의 본심을 드러냈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 폭을 결정하는 운영방식을 제약하지 않는 이상,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요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환경권 보장을 포스코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주민들도 2005년부터 그들의 환경권을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에 일괄제철소를 지을 예정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문헌>

- 공성용·이신철. 1998. 『대기배출시설에서의 사전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최적방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백도명. 2004. 『공단지역(태인동) 주민건강실태조사 및 환경위해요인평가 학술용역』. 광양시.
- 석인선. 2007.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순천향대학교. 2007.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광양, 1차년도)』. 국립환경과학원.
- 이정록의. 1999. 『POSCO 지역협력방안 연구용역(광양)』.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이정록. 2000. 『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전남 동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비평』. 푸른길.
- _____. 2006. 『광양만권 잠재력과 비전』. 한울.
- 이호 위음. 1999. 『신들인 사람들의 합장-포항제철 30년 이야기』. 한송.
- 정대연. 2002. 『환경사회학』. 아카넷.
- Caldwell(서남동·김영운 역). 1973. 『환경』. 현대사상사.
- 유성중. “광양제철소의 입지와 지역경제의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00년 제3권 제 2호
- 이 철. “광양제철 및 인근 산단의 환경친화화 방안”. 『학생생활연구』. 1998년 제 10호
- 이정록. “광양제철소의 입지와 지역의 인구변화: 1980~2001”.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04년 제7권 제1호
- 정사언.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재량통제”. 『인제대학논총』. 2002년 Vol.5
- 광양시. 2006. 『환경백서 2005』. 광양시.
- _____. 2004.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보고서』. 광양시.
- 포스코. 2004. 『포스코 35년사』.
- _____. 2007. 『2006 지속가능성 보고서』.
- 순천 kbs. 《특집다큐멘터리 “씻가루 마을, 태인도 20년”》. 2006년 9월 20일 방영.
- 환경운동연합. 《기업감시팀 기자회견》. 20004년 4월 24일.
- _____.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포스코 광양제철소 증인신문에 관한 성명서》. 2004년 10월 15일.
- 광양시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site/Home/introduce/situation/statistics/>
- 《시민의 신문》 2004년 10월 8일.
- 《오마이뉴스》 2006년 9월 15일.
- 《주간 조선》 2006년 11월 5일.
- 《포스코 신문》 2007년 9월 13일.

“민족경제론”의 민족, 대중 그리고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박헌채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무덜, 믿으씨요. 우리가 바래는 시상이 꼭 옮겨싱게, 고것얼 믿고
용감허게 싸웁시다. 그러다가 죽으면 아까울 것이 머시가 있소. 우리
뒤에는 또 우리 뜻얼 따라 싸우는 동지덜이…” (소설 『태백산맥』가
운데)

김 원(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I. 서론 : 문제제기와 기존 연구 검토

“민족경제론”. 1978년 출간된 박헌채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 용어는 박헌채가 사망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적이다.¹⁾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전면화되면서 과거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다각도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제위기는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의 유산이라는 평가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라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자유주의 이후 시장중심주의의 전면화와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대량실업과 고용 불안 등에서 드러나듯이, 1960~70년대 한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붕괴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60~7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대안적 흐름으로 존재했던 『민족경제론』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다(안현호 2007; 정건화 2007; 조석곤 2007).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민족경제론이 다시 독해되고, 적극적인 대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경제와 자립경제에 근거한 흐름은 1960~70년대 당대에도, 그리고

1) 이론적 입론으로서 민족경제론이 형성된 기초적인 계기는 1967년 박헌채가 펴낸 작은 논문인 「중소기업의 지역적 불균형 발전의 요인」(『한국경제문제연구회』)이었다.

현재에도 실현 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박현채는 일반이론내지 완성된 틀로 민족경제를 사고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2회 단재상 시상식 수상 소감(87년 3월 13일)에서, "... 민족경제론이라는 이론 체계도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닌, 다양한 현상의 사회적 실천상의 요구에 따른 정확한 인식을 위한 계속적 노력의 입안으로 제기 ..."했다고 사회적 현실에 대한 지속적 실천으로 민족경제론을 언급하고, 동시에 "... 민족경제론은 정치경제학적인 경제이론의 식민지·반식민지에 대한 식민지 종속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단계의 적용, 이들 국가에 있어서 경제이론과 현실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불과, 새로운 일반 이론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그렇지만 당시 박현채의 글을 실제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읽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민족경제론" 그리고 박현채는 저항의 코드였지만, 그의 문체와 언어는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의 문체와 단어가 가지는 '노예의 언어'로서 성격은 자신의 과거로 인한 '절제'의 산물이었다. 그의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은 그가 정상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 탓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숨겨야 했던 탓이기도 했다(이대근 2006, 196). 백기완은 한 회고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 박 교수! 〈민족경제론〉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점은 짚어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직 준비가 덜돼 못 하신 것 같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글을 써달라는 잡지사 편집취지의 한계와 군사독재의 탄압과 억압 때문에 뜻의 활자화에 제약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참 '민족경제론'에서도 박 교수의 기술적 절제도 있었을 것이란 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백기완 2006).

본 연구는 1960~70년대 제기된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형성 과정을 해방 정국에서 1979년 박정희 시기까지 한정해서 검토할 것이다. 특히 박현채 연구에서 누락되어 온 해방 직후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²⁾ 이 시기 박현채의 민족경제론(혹은 변형된 대중경제론)은 몇 가지 공통적인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식민지 시기 봉건파에서 이어받은 - 혹은 일본 경제사학자 오오츠카의 국민경제론을 변용시킨 - 식민지 경제구조의 재생산에 따른 남한 자본주의의 이식성·종속성에 대한 강조, 두 번째, 종속적·이식형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자적인 자기재생산 구조로서 자립·민족경제의 제기, 세 번째, 경제적·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달성, 끝으로 약화되어 가는 민족자본과 연합, 매관·외국자본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등이 그 내용이었다.

그간 1960~70년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기본적인 인식 - 시기 구분론자들은 형성기, 전기, 제1기라고 지칭하는 - 은 1960년 4.19 직후의 집단적 체험과 인식으로 부

2)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맥락에서 제기된 민족경제론은 본 연구와 다른 맥락과 내용을 지니므로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이다.

여되곤 했다. 하지만 민족경제론의 기본적 구상의 기원으로 식민지의 연속선상에 존재했던 '해방 정국의 체험'이 새롭게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민중 중심의 자족적인 공동체, 경제적 생활권 구상, 외국자본과 외세로부터 자율적인 자립적인 경제·사회체제 그리고 생산대중과 민족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변혁의 가능성 모색 등은 이미 식민지·해방 공간에서 그 맹아적 형태를 보였으며, 박헌채의 인생과 그의 민족경제론 전체의 기본적 골격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누락된 영역으로 박헌채 민족경제 형성의 출발을 해방 공간 시기로 상정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1960~70년대 민족경제 학파 전체 혹은 민족경제론을 공유하던 지식인 분과 전체를 다루기보다, 박헌채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³⁾ 기존 연구들은 민족경제론을 하나의 '학파'로, 사회변혁적 사회집단·세대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타당한 지점도 존재하지만, 좀 더 미시적으로 볼 때 박헌채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급진적 지식인 집단과 다소 '거리감'이 존재한다. 박헌채는 『대중경제론』 등을 통해 민족지식인 혹은 민족자본과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이는 김대중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시화되었다. 또한 인혁당이나 남민전 등 당대 변혁적 지식인 그룹과도 일정 정도 상황, 전술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종속·이식형 자본주의론', '한반도 차원의 자립경제론', '민족자본의 진보성' 등 유사점이 존재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박헌채의 입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안에서의 내자에 기반한 내포적 공업화라는 민족경제의 대안을 70년대까지 현실적으로 유효한 전술적 입장이라고 - 물론 근본적인 지향은 아니었지만 - 유지한 것이라고 보인다. 바로 박헌채 개인을 통해 이런 종별성과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한 내용이다.

민족경제론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민족경제론의 지식사회학적 접근, 이론내적인 정합성에 대한 검토, 민족경제론의 변화와 시기 구분, 민족경제론의 현재성 등을 둘러싼 것이었다. 기존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족경제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지식사회학적·지성사적 연구들이 있다(류동민 2001; 김 원 2004). 류동민(2001)은 민족경제론을 1960년 4.19 이후 진보적 민족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면서, 그 출발을 4.19 직후 전개되었던 전후 급진민족주

3) 물론 "민족경제론"은 박헌채가 저술한 일련의 이론체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민족경제론은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박헌채의 『민족경제론』이란 저서를 중심으로 한 이론 체계, 민중적 민족주의, 급진적 민족주의 등을 지향했던 1960~70년대 일군의 학자들의 활동 그리고 1960년대 외자 의존형 산업화 과정에서 대두했던 자립경제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인 인식론 등이 그것이다. 물론 민족경제론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박헌채 개인이지만, 이는 그의 개인적 창작물이라기보다 4.19 이후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공유한 인식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는 1960년대 후반을 즈음해서 범람했던 '후진국 경제론' 가운데 제3세계 공업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공통분모로 여겼던 내포적 공업화론, 균형성장론, 내자동원에 의한 민족자본 육성 등의 내용에서 그 뿌리를 가진다(조석근 2001, 21). 특히 군부정권에 의해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외항적 경제개발 정책이 자리 잡히게 되는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농촌 해체, 임노동관계의 확대에 따른 계급 간 불평등과 지역 간 불균등 발전 등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민족경제·자립경제라는 지향은 경제적 대외의존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분석을 이루어 냈다.

의 운동과 그 분파인 민민청과 통민청으로 부터 찾고 있다. 김원(2004)도 지성사적 입장에서 민족경제론을 식민지에서 기인한 이식적·파행적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론, 분단체제 극복의 대안적 사회상이란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 계보는 4.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민족주의·변혁적 청년운동에서 으로부터 찾았다.

두 번째, 민족경제론의 이론 내적인 정합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정성진(1986)은 민족경제론의 '발전적 지양(止揚)'이란 관점에서 민족경제론이 지닌 한계를 초역사적·주관적 경제발전관, 경제주의적 민족자본론, 유기적 통일체로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이중구조론 등으로 비판하며, 민족경제론 내부의 한계를 논리적인 측면에서 비판·정리했다. 또한 양우진(1994)도 민족경제론을 1960년대 형성된 민족민주세대(National democracy generation, 통칭 ND세대)의 시대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자립경제의 좌절 그리고 그 대안으로 민족경제의 제기 과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르주아적 의미에서 자립경제의 강화 과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민족경제론의 변화와 시기 구분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우선 이병천(2001)은 전기와 후기 민족경제론의 특징을 일별하면서, 1960~70년대 초기 민족경제론의 본래적인 측면인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발전의 정치경제학이 복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조석곤(2001)도 민족경제의 이론화 시점을 1963년과 1964년 사이로 상정하면서, 이전 시기와 연관성 속에서 민족경제론은 1960년대에 대안적인 사회적 전망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순성·김관(2001)역시 1960년대 학계의 자립화 논의를 기점으로 민족경제론이 형성되었으며, 민족경제론을 크게 3시기(1기: 65년~79년, 2기: 85년~89년; 3기, 이후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경제론은 박헌재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자립경제를 중시하는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흐름을 총칭하는 '학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민족경제론의 현재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우선 김일영(2006)은 민족경제론(혹은 대중경제론)과 조국근대화론이 내포적 공업화론, 자립경제론, 국가주도성, 중공업 주도성이란 공통의 기반을 지니지만, 자립경제의 '실현 방식'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민족경제론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시적 현실화는 비현실적이었으며, 오히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권위주의 발전국가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사이에 '선택적 친화성'이 있음을, 즉 민족경제론은 당대에도, 현재에도 '비현실적인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조석곤(2001)과 류동민(2001) 등은 민족경제론이 지닌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지만, 민족경제론이 비현실적 대안이거나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 발전국가와는 유사한 구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민족경제론은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했던 당대 지배적 경제발전 구상과 전략에 대한 유효한 비판의 무기였으며, 민족경제론의 현재적 의미는 권위주의 발전국가와 상이한 민주적인 동원 메커니즘 구상을 위한 인식론적 기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민족경제론의 형성과 전개, 시기에 따른 이론적 쟁점과 변화, 민족경제론의 내적 논리의 한계, 당대 지배적 경제발전 전략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규명, 신자유주의 시대 민족경제론의 의미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시켰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 몇 가지 보완·극복되어야 할 연구사적인 한계역시 존재한다.

첫 번째, 기존 연구들은 민족경제론과 그 구성 요소들의 형성에서 박헌채의 해방 전 후 시기 경험과 인식론들이 거의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연구들은 1960년 4.19 이후 급진적 민족주의 혹은 새로운 민족민주운동 세대의 탄생을 민족경제론의 형성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헌채의 민족경제론은 그 기원을 1960년대 이전의 경험과 인식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해방 공간에서 박헌채의 특유한 개인적 경험과 함께, 해방 이후 국가형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기되어 오다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본격화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족경제론의 지적 기원을 식민지·해방 전후 시기로 상정하고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두 번째, 기존 연구들은 1960년대 이후 민족경제론이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민족경제론은 외자중심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에 반하는 비주류경제학의 ‘수렵’이지만, 박헌채의 경우 같은 시기 민족경제, 자립경제론자들의 민족, 민주주의, 실천 전략 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헌채는 1970년 대통령선거에서 『대중경제론』이란 형태로 현실에 개입하고자 했고, 이는 같은 시기 변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전체적인 민족경제론이라는 인식의 공유를 전제하지만, 박헌채 개인의 특수한 시각의 형성과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끝으로, 기존 연구들 가운데 대다수는 민족경제론의 논리적 정합성을 각자의 시각에서 비판·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들이 가지는 장점도 있겠으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박정희 시기 민족경제론의 경우, 약간의 변주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적인 입장은 일관적이었다. 이 점에서 앞으로 박헌채의 민족경제론 연구에서 좀 더 천착해야 할 점은 논리적·내재적인 정합성과 현실성에 대한 검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방 공간, 한국전쟁 이후, 4.19 직후 그리고 제1차 인혁당 사건 이후 박헌채 개인의 어떤 고민과 경험 속에서 민족경제론이 제기되고, 그 적용 범주가 확장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족경제라는 흐름이 활동가 그리고 대중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이를 수용한 대중들은 민족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변용해서 운동 담론으로 선택하고자 했는지 이다. 바로 민족경제론이 해방 공간과 4.19 이후 현실의 반영이라면 이를 박헌채라는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다루어 보려는 것이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내용을 순서대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박헌채의 민족경제론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들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1980년대와 구별되는

이전 시기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지니는 이론, 경험적 분석, 사회운동적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할 것이다. 두 번째, 2장에서는 해방 정국에서 박현채의 경험과 현실 인식을 재구성할 것이다. 최근 발간된 『박현채 전집』에 수록된 해방 정국 시기 회고록과 조정래 『태백산맥』에서 묘사된 박현채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회고와 증언 등을 재구성해서, 어떻게 소년 박현채가 민족, 자립, 민주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사유를 형성했는지 지적 기원을 살펴볼 것이다.⁴⁾ 세 번째, 3장에서는 4.19 이후 1960년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형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4.19와 그 직후 변혁운동의 경험 그리고 군사 정권 등장 이후 박현채의 상황 인식과 평가를 그의 다양한 논문, 논설 등을 통해 '징후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네 번째, 4장에서는 1970년대 초반 『대중경제론』 집필과 야당과 재야와의 연합 전선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했던 박현채의 행보를 살피고자 한다. 『대중경제론』에서 제출된 변형된 민족경제의 내용 그리고 왜 박현채는 김대중과 연대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어떤 대중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시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자료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박현채가 직접 집필한 것으로 간주되는 『박현채 전집』 1~7권과 『대중경제론』, 『후진국경제론』 등 관련 저작들이다. 다만 1960~70년대 권위주의 발전국가 아래에서 그의 저작들은 검열과 박현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 상당수 보이므로 맥락에 따른 '징후적인 독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박현채의 '회고록', 생전의 인터뷰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박현채를 묘사한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문학 작품, 추모 문집 그리고 관련 시청각 자료 등이다. 이들 자료들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어떤 개인사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료들이다. 세 번째, 관련자들의 인터뷰·증언·구술 자료이다. 박현채 본인이 개인사에 대한 많은 자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1960~70년대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상황 인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인터뷰와 구술자료는 생존해있는 주변 인물들과 당시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해방 정국, 4.19 직후 1960년대 그리고 유신을 전후로 한 시기 박현채 개인의 행보, 인식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의 『민족경제론』과 그 구성 요소인 민족, 대중, 민주주의 등에 대한 사고가 식민지와 해방 정국 시기 변혁운동의 인식과 맥이 닿아 있음을 정리할 것이다.

4) 이하에서 특별한 지시 사항 없이 "~권"으로 표시된 것은 모두 『박현채 전집』의 권수를, "회고록"으로 표시한 것은 인터넷 저널 『코리아포커스』에서 2005년 10월 19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한 <박현채 회고록> 박현채의 '미간행 육필 회고록'을 뜻한다.

II. 해방 정국 시기 박현채의 현실 인식: 민족경제론의 지적 기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박현채는 광주서중때부터 좌익 학생 조직의 핵심 오르그였고, 전쟁기 입산, 정치소조 활동을 담당했으며, 실제 노동당에 입당했던 인물이다. 박현채는 좌우대립과 우파 정치세력과 국가권력에 의한 좌익 세력의 괴멸, 해방 직후 좌익의 난맥상 - 한 글에서 박현채 본인이 급조된 분파조직이라고 혹평했던 - 과 무장투쟁의 결정적 실패 등을 모두 경험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회의 가능한 변혁 가능성을 대부분 '소년기인 10대'에 체험했던 것이다. 무질서하고 분파적인 좌익조직과 당, 공포의 거대한 국가권력, 민중들의 이중성, 도시계급과 무장투쟁의 결정적 실패는 '추체험'은 박현채의 60평생을 지배하는 '원초적 경험'이었다. 이 점에서 민족경제론과 박현채 사상을 4.19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그는 다른 인물들과 달랐다. 이는 민중에 대한 박현채의 판단에서도 드러난다. 4.19 직후 상황에 대해 "4·19혁명의 경제적 의의"(1978)에서 그는 정치조직의 부재, 민중의식의 취약성, 소시민성/보수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 ... 민중 구성원 가운데 능동적인 것은 지적 수준이 낮은 3차 산업에 있어서 저소득 취업자 및 실업자군과 소수 지식인층에게 기대 ... 새로운 각성에 계기로 될 경제 불황과 원조 삭감에 대한 위기 의식은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자기 요구를 내재적인 것으로 갖게 하는 것 ... 민중의 정치조직 부재, 민중의식의 민중 구성에서 오는 낮은 조건 속에서 지적인 각성자인 지식인의 민중 지도력은 지극히 한정적 ... 4.19가 정치권력의 교체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보수적 민주당에게 정치권력을 이양하는 한정적인 것 이상이 될 수 없음. 여기에 4.19 변혁은 4.19에 의해 시작된 것 ..."

그는 민중의 가능성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갈파했다. 민중은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자기 요구가 존재했지만, 민중구성과 전쟁 체험, 사회적 생산력의 저차성 등은 이들의 이중성과 보수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바로 1960년대 원조와 1960년대 차관경제 아래에서 민족경제의 기반인 민족자본(=중소자본)의 맹아가 괴멸되는 과정은 사회변혁 주체의 제등장을 지체시키는 토대적 요인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바로 그는 민중이 쉽게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 그 근거는 해방 직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박현채의 전체 생애를 지배한 해방 직후 '원초적 체험'을 따라가 보자.

소년 사회주의자 박현채의 일상

박현채는 평생 ‘빨치산’임을 잊지 않았지만, 그 세 글자만큼 그의 생애를 규정했던 굴레 또한 없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늘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 해라”고 당부하곤 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워낙 불안하기에 했던 이야기였다(7권 438). 그가 한국전쟁 시기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것은 1964년경, 제1차 인혁당 사건 직후 주변에 알려졌다. 박현채에게 유년시절과 빨치산 경험은 그의 전 생애를 규정지었다. 죽기 전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그는 빨치산 전사들에 대한 회한을 이기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 일췌였다. 그는 “집권조차 못하고 죽어간 빨치산은 순결하다”면서, 술자리에서 자주 “나는 라이플을 든 빨치였다”고 자신이 마지막 빨치산임을 강조했다(송정석 2006, 168). 또한 1964년 인혁당 사건 당시 같이 투옥되었던 김정남(85)은 박현채는 빨치산 경험에 대한 ‘경건성’을 지녔다고 회고하며, “하루하루가 생명을 건 나날이었던 소년 시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김금수 역시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문화부 중대장 시절 품었던 그의 이상과 목표는 희석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채, 오히려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산에서 함께 지내다 총 맞아 죽어간 ‘전사’들을 생각하면서 자주 눈물을 떨구기도 했고, 격변하는 세대 속에서 변혁운동의 올바른 전략목표 수립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그를 기억한다(김금수 2006). 이처럼 그에게 빨치산과 산 경험은 유년기 시절 스쳐지나간 경험이 아닌, 인생 전체를 관통했던 자긍심이자 경건성을 지닌 것이었다. 80년대 지리산 기행을 하면서 박현채는, “산이란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세상을 빠꾸려는 적극적인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의 벗 김경추는(김경추 2005);

“... 현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 ‘어떻게 의롭게 죽을까, 어떻게 조국을 위해 죽을까’를 항상 고민한 친구였는데..., 천명을 거역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야. 자기 몸 상태를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뒀어. 내가 술 먹는 거라도 막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아. 현채가 늘 했던 말이 있어. “진작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었으니, 것처럼 대답하게 살았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갔으니까 한은 없을 거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못 보고 죽어서 그렇지 ...”

소설 『태백산맥』을 쓰며 그와 오랜 시간 대화를 했던 조정래역시 그는 “활달하면서도 멋있고, 지혜로우면서도 따뜻한 사회주의자”가 되고 싶어했다. 그런 박현채에게 빨치산 경험은 그의 일생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원체힘’과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해방 직후 박현채가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고, 소년 빨치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해방 직후 좌우대립이라는 사회적 상황 때문이었을까? 이 문제는 그의 출생과 유년기를 추적하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좌익 친척들과 해방 맞이

박현채는 1934년 11월3일, 전남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297번지에서 광주 서중을 졸업하고 면서기로 근무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만주와 동남아로 갈 꿈을 버리고 세무서에 취직을 하여 곡성세무서에 부임하게 되어 박현채가 네 살 때 곡성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44년 아버지가 전근을 하게되어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회고록 3). 그의 친구들은 박현채의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 박현채의 집안은 풍족했다. 박현채의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자, 소작인들이 갖다 바치는 명석이 수백 장 쌓일 정도로 부유한 지주였다. 전라남도 연식 정구 대표선수기도 했던 박현채 아버지의 사회주의 연관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이 조금씩 엇갈린다. 박중기는 전혀 무관하다고 한 반면, 소설가 조정래는 박현채의 사회주의적 신념이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 말했다. ‘태백산맥’에서 박현채 아버지를 조선노동당 비밀당원으로 기록한 것도 박현채의 증언을 따랐다는 것이다. 김경추의 말은 또 달랐다. 박현채가 아버지의 조선노동당 입당 원서를 대신 써주는 걸 봤다고 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다. 어쨌거나 박현채의 이념적 신념을 가족이 인정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

이미 초등학교 시절, 박현채는 급변하는 민족의 운명 속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45년 당시 자신의 고민을 박현채는, “격동의 역사적 시기에 당하여 이 시기를 어떻게 역사와 자기에게 부끄럼 없는 삶으로 영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의 고민이었다. 나는 민족적인 참여의 시기에 건결히 현실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으나, 어느 쪽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문제였다”고 회고하고 있다(회고록 3). 이처럼 박현채는 어릴 적부터 ‘어른 아이’, 즉 아이 때가 없이 일찍 깨운 아이라고 불렸다(7권 430). 이미 박현채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달랐다. 독서회 활동을 했고, 동맹휴학을 주도했으며, 에드거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을 탐독했다. 이처럼 당시 좌익 서적의 남독(濫讀)이 그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했는데, 박현채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회고록 3).

“ ... 나는 좌경적인 책들을 읽기 시작했으며 주순 삼촌이나 재욱 매부의 이동문고로 가서 마르크스주의 글읽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런 선택은 국민학교에서의 독서회 활동으로 연결됐다. 우리 국민학교에도 진보적 활동 조직은 있었다. 사로계(사회로동당 계열: 인용자주)였지만 최충근 선생은 학교 안에서 독서회 씨름을 지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무등산 언저리에 모여 독서회 활동을 했다. 내가 에드거 스노의 『붉은 중국』을 접하게 된 것도 이 모임에서였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관련서적에 대한 남독(濫讀)으로 되면서 나의 정치적 경향이 정해지게 되었다...”

중학생에 들어가서 그는 본격적으로 『자본론』 등 마르크스 저술을 섭렵했다. 이는 해방 직후 학생들이 즐길 오락도 부재했거니와, 패전으로 일본인들이 귀국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일본 서적이 범람했기 때문이기도 했다(7권 522). 당시 소년들은 민애청(민주애국청년동맹)에 다수 참여했는데, 이는 일종의 비밀 집조적으로, 전단이나 삐라를 붙이고 살포하는 활동이 주된 것이었다(7권 442). 같이 활동을 했던 김경추는 당시 박현채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김경추 2005):

“나와 현채는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멤버였다. 중학생인 우리가 하는 일은 삐라 살포, 대자보 부착, 어두침침한 밤에 모여 기습적으로 소리치르고 경찰 오기 전에 도망가기, 뭐 그런 거였지. 현채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주의 공부를 많이 했어. 항상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고, 눈물도 많았지. 한마디로 의혈소년이었어. 가슴에 조국애가 충만한”.

특히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해방 직후 유명했던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당시 집회가 있으면 화순탄광 노동자들은 화순에서부터 광주까지 도보로 행진을 하며 오곤 했다. 긴 도보 행군에 지치고 피곤해 보였지만, 허리춤에 주먹밥을 매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노동자들을 보며 박현채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들을 보며 박현채는 민족의 운명은 노쇠한 정객들이 아닌, ‘젊은 생산계급’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야한다고 결심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 선상에서 박현채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공업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다. 이는 다소 ‘극좌적 시각’이었다. 비록 적녹색맹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고 진학은 좌절되었지만, 박현채는 자신의 일생을 ‘생산적 작업’에 바치고자 했고, 그 첫 번째 선택이 공고 진학을 통해 미래의 노동자계급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박현채의 선택에 영향을 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가족’이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현채의 부친은 남로당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 이외에 그의 주변 가족들은 대부분 좌익 활동을 하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잠시 해방 해방 직후 박현채 가족들에 대해 살펴보자. 회고록에 실린 당시 박현채의 회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회고록 3):

“... 해방은 박경민 당숙의 5구 라디오 앞에서 조주순, 박석민, 박경민, 아버지, 나 등은 가족이 함께 맞이했다. 당시 조주순 삼촌은 그간에 우리 집을 박현영 동지와의 접선을 위해 수시로 밤에만 드나들다가

8·15 이틀 전에는 화순을 떠나 아예 우리 집에 기식하고 있었다. 해방을 맞이하는 날 주순 삼촌은 방송 처음 부분을 듣고 일본의 패전을 걸론짓고 일어서 나갔고, 우리는 다 듣고 나서 술 파티를 같이 가졌다. 온 동네가 시끄럽게 밤새 떠들어댔다. 해방을 같이 맞이한 분들의 정치적 성향은 모두 좌익 쪽이었으나 소속한 당은 저마다 달랐다. 주순 삼촌은 공산당의 전남공청위원장을 맡았다고 들었고, 나머지 분들과 경민이 당속은 여운형 선생의 인민당원이 되었다. 주순 삼촌은 박헌영 선생과 함께 서울로 갔다가 며칠 후에 돌아왔고, 우리들은 각기 생활하랴 정치운동하랴 모두 바쁘기만 했다 ... 우리는 1946년경에 남동에 집을 사서 이사 갔고, 얼마 안 있어 우리 사회에는 노동당이 결성되고, 아버지는 목포로 전근 가지게 되어 우리는 남동 집에서 자취하게 되었다 ...”

이처럼 소년 박헌체가 매일 보았던 친지들의 활동과 그 주변 지인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맑스주의 서적들. 이 모든 것들을 스폰지처럼 박헌체는 빨아 들었다. 특히 무엇보다 사회주의자 박헌체를 빨치산 입산에서 검거 이후 생존에 이르기까지 보호해준 것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광주서중 시기 대표적인 활동가가 된 박헌체는 광주에 남아있으면 우익들에 의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형편이었다. 이 때 그의 입산 길을 열어준 것은 다른 활동가가 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물론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의 입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요, 어머니는 외가쪽 친척들을 통해 입산 루트를 알려주었다(회고록 2). 또 어머니는 빨치산 활동 과정에서 검거된 아들을 살리려고 박헌체가 입산해 있는 동안 쌀 20가마 돈을 모아서, 뒷돈을 써서 아들을 살렸고, 타향인 전주로 전학시키기도 했다(7권 380). 그의 아버지역시 늘 그의 행보에 대해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박헌체가 검거된 뒤를 미리 대비, 많은 재산을 준비해 두었다. 『태백산맥』 10권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 알겠다. 그 담 일부담언 이 애비가 알아서 하겠다.” 아버지가 허리를 뺐다. “비용이 많이 들겠는디요.” “일웁다. 니가 입산헌 담부담 이 애비가 헌 투쟁이 먼지 아냐. 요런 날에 대비해서 정신웁이 돈 모룬 일이었다.” 아버지는 승자처럼 환하게 웃었다. “부탁이 한 가지 있는디요.” “무신?” “지 혼자 짹힌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구만요.” “알겠다. 당연히 항꾼에 허야제.” 조원제는 아버지가 커다란 산으로 느껴졌다 ...”

그는 박헌체가 검거된 직후 구명탄원서를 돌리고, 경찰들에게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아들을 살려내고자 했다. 당시 상황을 같이 검거되었던 친구인 장기형과 김경추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집안 전체가 총동원됐고, 결국 구명에 성공

했다. ‘꼭 살아 돌아올’ 아들을 생각하며 틈틈이 쌀을 비축해둔 어머니의 선견지명 탓이 컸다. 당시 부패한 이승만 정권은 쌀 삼십에서 오십가마니만 내면 체포된 빨치산들을 풀어줬다.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타락이 박현채를 살린,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김정추도 구명됐다. 논밭을 다 판 그의 집안은 하지만 “쫓딱 망했다 ...”(김정추 2005)

“ ... 현채가 나 안 따라왔으면 산 속에서 죽었제. 가족들이 공작해서 잡혔지만, 또 그 때문에 살아남은 거여. 현채 아버지가 현채를 빼내려고 고생 많았어. 화순 경찰서장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나도 현채 아버지가 도와서 나갈 수 있었고 ...”(장기형 2005)

프롤레타리아트를 꿈꾸던 학내 지도자

다음으로 해방 직후부터 입산 직전까지 박현채가 몸담고 있던 광주서중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광주서중은 이념대립의 각축장이었다. 당시 좌우익 교내 테러는 흔한 일이었다. 양측은 1947년까지 지상에서 갈등했지만, 1948년부터는 좌익조직의 비합법화, 구체적으로 여순반란 사건이후 좌익학생을 학생연맹(이하 학련)에 잡아다가 테러하는 경우가 잦았다. 반탁학생의 전위대인 학련에 가입한 학생들은 좌익 학생들을 끌고가 가족장갑을 낀 주먹이나 목총으로 구타하기도 했다(7권 525, 최장학 2006, 344). 이런 정세 아래에서 박현채는 서중 1학년 때부터 반군정, 반미 시위, 봉화투쟁 등을 주도했다. 같은 서중 친구인 김정추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 등교 첫날이라고 학교에 갔더니, 목조 교실이 완전히 타버려 김이 모락모락나는 거야. 찬탁 학생들을 잡기 위한 우익의 방화라는 말이 떠돌았어. 축구 부장하던 사람이 좌파 학생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직속 선배였어. 그 선배 통해서 현채랑 가까워졌어...”(김정추 2005). 이처럼 좌익 학생들은 공부보다 조직 활동에 더 전념했다. 한마디로 학생이라기 보다 운동가로서 삶을 유년기부터 경험했던 것이다. 박현채는 당시 자신을 “ ... 그 당시 내 생활은 조직활동(조직의 관리활동)이 중심이었고 학업은 부차적이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안 해도 현상 정도는 유지할 수는 있었다. 이후로 조직이 와해되면서 부담은 더욱 많아졌다 ...”(회고록 4).

그 이외에도 그는 독서회, 비합법 활동, 학생위원회 조직 등을 맡았고, 광주서중 ‘좌파그룹의 리더’였다. 당시 활동을 박현채는, “ ... 학년마다 약간씩 역할의 차이가 있었으나 나는 주로 조직을 담당했다. 우리가 민애청 조직원으로서 한 주요한 투쟁은 일상적인 것 외에도 큰 것으로는 인민공화국 수립투쟁이었다. 우리들은 선거참여를 위한 연판장 투쟁부터 참여해서 시위, 봉화투쟁, 국기 게양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한 투쟁은 빼라투쟁이었다. 한 집단의 빼라투쟁은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박현채는 1947년 처음으로 검거가 된다. 그 이유는 파업에 참여한 아버지로 인해 경찰에 의해 가택 수색을 당했는데, 그 와중

에 박현채가 보던 좌익서적과 그가 노트에 휘갈겨 놓은 “이승만, 김구의 초상과 매국노”라는 구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친구인 김정추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 ... 오르그(조직)가 현채를 리더로 지명했어. 위낙 활동이 두드러지니까. 6·25가 난 후 현채는 학교 재건에 앞장섰어. 청년동맹 활성화를 주도했고, 퇴학당한 사람, 결석하는 사람 찾아내서 등교도 시키고 ... ”
(김정추 2005)

이런 와중에 박현채는 6.25를 맞게 된다. 전쟁 발발 당시 상황을 박현채는, “ ... 6·25는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했다. 6·25 당일은 어찌할 수 없었다. 우리는 병사국 앞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등 그들에 추종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면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나는 동지들을 모아놓고 조국해방전쟁의 발발을 알리고 학교를 떠나 자기를 보존하면서 해방의 날에 대비할 것을 전했다. 나는 6월26일로 학교를 그만둘 것을 선언하고 그날 오후에 학교를 떠났다...”(회고록 4). 민족해방전쟁으로 한국전쟁을 사고했던 그는 당시를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초기 좌익과 보도연맹 관계자에 대한 테러를 피하기 위해 피신했던 박현채는 8월 1일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내 학생위원회를 재건한다. 그러던 와중에 그의 주도로 학내 교위의 전원 ‘의용군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시 분위기였을 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박현채의 입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빨치산이 되다

박현채는 9.28 수복 과정에서 15세에 입산하게 된다. 회고록에서 박현채는 50년 9월 28일 철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 ... 1950년 9월29일 아침. 23명의 동료학생들이 노령산맥 언저리의 도로가에 모였다. 그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각종 증명서와 서류들을 한 데 모으고 거기에 국기 등 깃발을 모았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국가가 불려졌다. 노래는 점점 커지면서 오열로 변해 갔다. 1950년 9월28일. 인민군의 전면철수와 함께 우리들은 학교단위로 1개 소대를 편성, 철수를 준비했다. 우리는 학교를 떠나 광주사범학교로 집결하여 최후 비상선에 대해 논의하였고 약간씩 자금이 배분되었다. 최후비상선은 춘천이었고 노령산맥을 통해 정읍으로 철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다. 임시편제이기는 하지만 편성은 소대편제로 하였다. 여름 반소매에 반바지를 입은 우리들의 철수준비는 9월말이라는 가을 날씨에 비추어 그다지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회고록 1).

하지만 입산 과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9.28 수복 후 광주서중 출신 20명 정도는 인민군의 인솔하에 전북 쌍치면 부근까지 가다가 유엔군의 인천상륙 등으로 인해

인민군이 많은 인술 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해산하고 만다. 그 가운데 일부는 귀환하고, 일부는 입산을 하게 된 것이다(7권 445). 당시 상황을 박현채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 ... 우리는 모여서 소지품을 처리한 후에 상급생인 5, 6학년은 적진을 뚫고 월북할 것을 결의하였다. 어린 4학년과 조직의 신규 참여자 등 나머지는 집으로 귀환하도록 결의되었다. 하지만 나는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소 안이한 낭만적인 생각이지만, 곡성에 있는 도립사로 가서 중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다시 담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무리의 인민군과 민간인 철수 집단을 만났다. 이들 중에는 세 사람의 민간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수창국민학교의 선생님이었고, 그를 따라가는 의용군 모습의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나의 수창국민학교 여학생 동기 ... 동기인 여자 의용군은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남자새끼들이 총소리 몇 방에 떨어 북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일단 가기로 마음먹었으면 모든 시련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직원의 당연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것은 투항의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격한 감정을 자극시켜 그들과 함께 북을 향한 철수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대포소리와 소총소리가 뒤섞여나는 가운데 무장한 몇 명의 인민군들이 길에서 사라지더니 무기들을 버리고 다시 나타났다...”(회고록 1).

한편으로 입산은 박현채가 지난 시기 가지고 있던 사고의 분출인 동시에, 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금수는 박현채의 이야기를 빌어, “ ... ‘입산’하기 전인 중학교 시절부터 착취와 억압이 없는 인간해방 세상 실현을 위해 학습하고 실천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백했다. 그가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침해화된 이념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의 입산이 그의 어머니 손에 끌려 외가 쪽 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생각해보면 기구한 일...”이라고 회고하고 있다(김금수 2006). 또한 김경추(2005) 역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빨치산 투쟁을 하라는 지령이 내려왔어. 시골에 내려가 있던 난 담양에서 입산했고, 현채는 광주 아니면 화순에서 입산했을 거야. 현채 부모도 말리기 힘들었을 테지. 올라가도 죽고, 안 올라가도 죽으니까”라고 당시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년 문화중대장

입산후 박현채는 15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다. 초기에

박현채는 보고서 전달 업무를 담당했다. 박현채는 초기 자신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회고록 2).

“... 야사의 부대는 지구당의 정보과 분트(공산주의자 동맹)였다 ... 적과의 접합지역에 주둔하면서 적이나 인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었다. 나의 임무는 정보보고를 수시로 사령부에 올리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야사에서 540지구부대 사령부에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었다. 주둔지에서 보고서를 갖고 가서 사령부에 전하고 점심을 먹고 원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부대재편 직후 부대에 돌격중대라는 소년보위 중대가 조직되었다. 20세 미만의 소년들을 기간으로 조직된 이 부대는 이미 조직되어 있었던 파발·강철·폭탄중대와 함께 540지구 부대 기동대의 한 구성이 되었다.⁵⁾ 박현채는 이때 돌격중대 문화중대장이 되었다. 문화부 중대장이란 전술 지휘관 위에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직책이었다(7권 371). 특히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중대원들의 문맹퇴치를 통해 자주적으로 정치의식을 획득하도록 했다. 소년기 박현채는 얼굴이 하얗고 풍채가 좋았으며 하얀 장갑을 끼고 권총을 차고 다녔는데, 이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박현채는 늘 ‘공부는 끝까지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는 경제문제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얻어야 한다’ 등을 강조했다(장두석 2006, 282). 또한 정치소조 등을 운영, 활동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태식과 광주서중 스승인 출판부장 박준옥의 입회 아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게 된다. 박현채 입산에 대한 두 친구들의 기억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현채가 열다섯에 입산했어. 나이가 어렸어도 워낙 영리하고 이론이 정연하니깐, 그 나이에 정치지도원 하곤서 대원들하고 당간부들거껴 정 정신교육, 사상교육 시켰어. 현채가 나보고도 소양교육 받으라고 해서, 난 “이 놈아, 여기까지 와서 뭘 배우라고 허냐”면서 교육 안 받고 도망가붙고 그랬제. 현채가 음성이 참 좋았어. 또랑또랑하고, 워낙 영리하니깐 총대장도 총애했고, 특히나 여성 동무들이 지독하니 따랐어. 현채 얼굴이 잘 생겼거든 ...”(장기형 2005)

“... 현채는 산에서도 인정을 받았어. 18살 나이에 문화부 중대장까지 했으니깐. 1951년 3월쯤이었을 거야. 아직 추웠지만 장티푸스가 창궐했었지. 경찰이 백야산 총사령부 포위작전을 펼쳤어. 난 연락병이었는데, 총사에 전할 문서를 가져 가다가 백야산 바로 밑 북면이란 곳에서 포위당하고 말았어. 난 무장도 안 한 상태였어” 현채 부대는 ‘540부대’였는

5) 부대대원들은 약 30명을 약간 넘었고, 일부 서울 출신 의용군 출신을 제외하고는 대원들은 순진한 농민 출신이었다(회고록 2).

데, '가계부대'라고 불렀어. 적을 만나면 항상 뒷걸음질한다고. 문화부쪽 이니까 강한 부대는 아니었을 거 아냐 ... "(김경추 2005).

머슴 출신 이태식과 교장 출신 박준옥

산 생활에서 박현채의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은 2명이다. 한 명은 머슴 출신 이태식 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광주서중 교장이었던 박준옥 출판부장이었다. 먼저 박준옥 출판부장은 박현채의 사상 형성과 경제학 연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제2회 단재상 시상식 수상 소감(87년 3월 13일)에서 "... 48년 어느 선배로부터 들은 말: 역사에 충실한 삶이란 오늘에 있어 보상받지 아니하고, 오늘에 있어 보상받길 원하지 않는 삶 ... 지금까지 이것이 생활 신조"라고 밝힌 바 있다(7권 336; 447). 좀 더 구체적으로 박현채(1992)는 『민족경제론과 박준옥 교장 선생님』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박준옥 선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 나에게 경제학의 길과 학문하는 원칙을 가르쳐준 분은 중학시절 은사였다. 격동하는 역사적 시기에 민족의 장래와 역사가 전진하는 길을 알고 싶어했던 소년에게 그분은 역사의 발전법칙을 경제사에서 가르쳐 주셨다 ... 민족경제론은 나의 고난에 찬 시절의 은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제 는 그것이 제시하는 범위를 넘어서 민족, 민중적 소망을 우리 역사에 실현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회고하고 있다.

박준옥은 큐슈대학 출신으로 졸업후 화신백화점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해방 직후 본격적으로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다. 한때는 정읍을 중심으로 지방조직을 추스르다가, 전쟁이후 빨치산 조직의 출판과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산에서 주로 사회발전사를 강의했는데, 오랜 교단경험을 바탕으로 배움이 없는 기본출(기본계급 출신: 인용주)들에게 이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서 기본출들은 거의 대부분 출판과장을 존경했다. 그리고 이는 존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부쟁을 나간 대원들은 꿀, 조청, 약 같은 것을 출판과장에게 따로 선물하기도 했다(이종범 2006, 204~5). 뿐만 아니라, 문화중대장 시기 박준옥은 문맹퇴치 등 교양활동의 지원을 위해 박현채에게 많은 교재를 주고 시간이 있으면 강의를 직접 해주는 등 교양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부대의 정치적 수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대원들의 높은 정치의식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으로 부대를 장악하는 것이 가능했다(회고록 2).

다른 한편 빨치산 생활에서 이태식과의 만남은 박현채에게 '행운'이었다. 이태식은 머슴 출신 구 빨치산으로 '강철'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싸움에 능했고, 통솔력이 뛰어났다. '강철부대'로 불리는 그의 부대는 백야산지구의 최강부대였다. 박현채의 벗 장기형은 이태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 현채랑 한 날 한 시에 붙잡혔어.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든 말이야. 난 그동안 여러 차례 화순을 드나들면서 정보를 수집해오곤 했다고. 내가 화순출신인데다가, 입산 전에 농사짓는 엄마 아버지 따라 댕기면서 그 근방 지리를 잘 알았거든. 그때까지는 이태식 대장하고 같이 댕겼어. 이태

식 별명이 ‘강철’ 또는 ‘백아산 호랑이’였제. 얼굴이 진짜 호랑이여. 나도 그 얼굴 처음 봤을 때 질려버렸다니께. 나보다 한 살 많았는디, 머슴 출신 구빨치야. 일자무식이었는 데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 현채를 아주 애졌제 ...”(장기형 2005). 그러나 첫 만남은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원칙을 강조하는 박현채와 강철 부대장의 첫 만남이었다. 당시를 박현채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회고록 2).

“ ... 빨치산인 이태식 동지와 의 관계이다. 어느 날 사령부에 가서 기동대가 모여 있는 곳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M1소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나와 크게 다투었다. 그런 좋은 총은 자기들에게 와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 자기들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기동대 부대장이라고 했다. 나는 내 것이므로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만약 이 총이 필요하다면 정식절차를 밟아 참모부를 통해 요구하라고 하면서 우리 트(분트)로 와버렸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의 이와 같은 행위가 그에게는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태식이 박현채에게 신뢰를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칙’에 입각해서 물러서지 않고, 상급자인 자신과 맞섰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처음에 이태식은 박현채가 기본출이 아닌 이유로 무시했다. 여기서 이른바 ‘기본출’ 문제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9.28 수복 이후 인민군의 지역정책에서는 좌편향이 상당수 발견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본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다. 이는 기본계급과 지식계급간의 연대를 어렵게 하고, 이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초기 이태식의 박현채에 대한 태도도 이런 배경에서 기인했다. 실제로 50년 9월, 입산 직전 박현채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동북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과정에서 유행하던 극좌적 경향을 발견한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 ... 동북에는 사촌형과 외삼촌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9.28 이후에는 주도권이 극좌적인 분자들에게로 이행되어 지식인들은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양조업자였던 사촌형은 민청(조선민주청년동맹)위원장으로 있었지만 경성제국대학 중퇴자라는 이유로 지식분자로 몰려 소외되었다 ... 큰 외삼촌은 유격대에 있었으나 초기 6.25후에 동북지서를 무장해제한 작은 외삼촌의 성분 때문에 극좌분자들로부터 아무런 임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회고록).

하지만 원칙을 둘러싼 싸움 속에서 신뢰가 생겼고, 박현채가 문화중대장이 된 것은 이태식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는, “ ... 이태식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는 있었으나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그의 내심이 어떠한건 그 표현은 거칠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지난 시절의 빨치산 지식인들처럼 도중에 탈락하느니 일찌감치 나갈 것을 권고했으며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를 분노케 했다. 나는 이 기동대장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삶이 비록 기본출은 아닐지라도 그간의 싸움에서 자기 위치를 굳힌 두

사라는 것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규정은 우리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문제로 나와 그는 항상 의견을 달리하면서 서로 싸웠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두 사람이 보다 친선을 돈독히 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회고록 5). 그렇다면 도대체 박현채가 내세운 원칙이란 무엇이었을까?

박현채는 산 생활에서 원칙주의자이자 대꼬챙이로 불렸다. 일상생활, 전투 준비, 입당 등에서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 1970~80년대에 그는 산을 오르면서도 당시를 회고하면서, “산은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다 ... 사격의 대상이 되기에 항상 7, 8부 능선으로 다녀야 한다”고 당시 원칙을 이야기하곤 했다(7권 384).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태식의 ‘또 다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현실주의를 동시에 학습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두 명의 증언을 들어보자:

“... 그는 자신에게 붙여진 ‘대꼬챙이’란 별명을 영광스럽게 알았으면 알았지 조금도 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연대장 이태식마저도 단들이 있게 되면, “아이고, 자네넌 다 존디 그눔에 원칙 너무 허덜 말고 행펜 바감스로 살살 허, 살살” 하고 충고했다. “허먼, 나 보고 수정주의자가 되라 그것이지요?” 조원제의 정색을 한 대꾸에 이태식은 그만 쥐어박는 시늉을 했던 것이다” 연락병으로 씩기엔 박현채의 능력을 아까워한 당이 열여덟 나이의 그를 입당시키려 하자, 스무살이 돼야 입당할 수 있다는 당규를 들이대며 박현채는 주위 사람들을 무안하게 한다.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 반면 자기보다 어린 빨치산들을 먹이기 위해 규칙을 깨고 소를 잡았다가 견책을 받는 등, 인간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조정래 2006)

“... 머슴 출신 연대장(이태식을 지칭-인용자)과 벌었다는 ‘원칙’에 관한 논쟁이다. 현채 형은 그때만 해도 원칙론자여서, “밤에 능선을 타서는 안 되고 상대편의 시야 안에서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는 등 빨치산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의 연대장은 “대원들 배 굶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고 여유 있게 반론을 제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과연 어느 쪽이 옳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 현채 형의 슬회였다 ... 현채 형은 내놓고 그런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문화부 중대장’이란 그의 직책에 대해 내심 긍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정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 말고도 문화부가 정치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았다 ...”(김금수 2006).

원칙주의와 헌신적인 활동 그리고 이태식, 박준옥의 도움으로 박현채는 16세의 나이에 ‘정치지도원’으로 선출된다. 당시 상황을 박현채는, “... 연대결성 의례에 참여하고

돌아온 대원들의 나에 대한 축복은 대단했다. 1세대 정치지도원 겸 연대 부정치위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문화부 중대장으로서 했던 역할이 높이 평가된 것이다. 당시 나의 행위는 별 것이 아니었으나 창립기의 빨치산 부대에서는 상당히 뜻있는 활동으로 높이 평가 받았던 듯하다. 경험자들이 20세를 넘는 당원들이었고 정치부의 현역지도원으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만큼 나의 임명은 의외였다 ... 10명 가까운 정치부 지도원 중에서 내가 수석으로 뽑힌 것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회고록 6)

당시 재귀열 예방 위생투쟁에서 중대원 중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은 혁혁한 과업을 성취해 『도당 신문』은 박현채를 ‘백야산지구의 위대한 전사’로 칭송하며 보도했다(조정래 2006). 하지만 이것은 박현채뿐만이 아니라, 1950년을 전후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칭호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동계 토벌로 빨치산들은 유격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력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전쟁 발발 직전 북한 지도부는 유격투쟁에 대한 과장된 선전과 유격대 지도자를 ‘영웅’으로 칭송하면서 인민과 유격대의 ‘결합’을 강조하곤 했다. 박현채의 경우에도 개전 직후 기대했던 지역에서 인민봉기의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민과 빨치산간의 연대를 고무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선아 2003, 18~21). 이제 1950년 후반부터 1952년까지 박현채가 경험했던 빨치산으로서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삶과 죽음 사이에서 : 빨치산의 일상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입산한 빨치산들은 매우 다양했다. 전쟁후 인민군 점령기관중정권, 사회단체 참가자가 대다수였고, 그 외에도 낙오 인민군, 보도연맹가입자, 우익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 입산한 사람 등도 있었다. 또한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모두 무장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산후 생활은 기본적으로 ‘조직속’에서 영위되었다. 하루의 시작은 ‘인민의례’에서 시작되었고, 당 학습회, 독보회, 전원회합, 문화 씨클, 환자 방문 등 일상적 활동이 당위원회와 세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이선아 2003, 44; 49). 그러나 실제 산 생활은 소년 박현채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태백산맥』 9권을 보면 당시 박현채의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의 하얗던 얼굴은 겨울 산 생활을 거치면서 흑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포동포동하게 울랐던 살도 다 빠져버려 양쪽 살이 패일 정도였다”.

빨치산 생활은 음식, 연료, 무기 등 모든 보급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에 지천에 깔린 것이 나뭇가지였지만, 적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종류의 나무만을 뺄 수가 있었다. 그 나무 가지는 ‘싸리나무’가지였다. 그는 하얗게 말라죽은 싸리나무를 보면, “저게 빨치산들한테는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고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잘라서 말린 싸리나무와는 달리 제절로 하얗게 말라 죽은 싸리나무는 태워도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빨치산들이 밥 짓는 데는 그만큼 소중한 연료가 없다는 것이었다(송기숙 2006).

또한 산 생활은 삶과 죽음이 일순간에 교차하는 시공간이었다. 빨치산은 일상적으로 보급과 유격전을 전개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했기에, 일상의 여유는커녕 '긴장감'이 짊어질 않았다. 특히 빨치산들은 오늘 같이 생활을 하던 동지들이 다음 날 전투에서 '사라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박현채도 아군의 실수로 인한 집단 사망 사건이후 '짚 타는 냄새'만으로도 죽음을 연상시키곤 했다고 하는데, "... 1951년 초기에 우리의 활동영역은 백아산 주변이었는데, 후기에는 영역이 칼두 8·8고지 부근으로부터 무등산 주변으로까지 확장되었다. 1951년초, 수리 이동에서 우리 중대는 많은 타격을 입었다. 수리 사건의 결과 나는 짚 타는 냄새를 기피하게 되고 이를 죽음과 연관짓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죽은 동지들을 수리 동네의 뒷산에 묻고 나머지는 병원에 옮겨 인도한 뒤, 우리는 그 다음날로 다시 백아산 쪽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적과의 전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과오 때문에 많은 동지를 희생시킨 사건이었기에 무거운 고뇌를 안겨주는 일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한 것에 있었다..."(회고록 7).⁶⁾

이처럼 빨치산들에게 죽음은 공포인 동시에,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일상 속에서 빨치산들이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척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박현채가 경험했던 죽기 하루 전 여성 빨치산의 신음 소리도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 경찰의 백아산 토벌작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포위망이 바짝 좁혀올 때였다고 한다. 그때 여자 빨치산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한겨울이라 모두 몸을 바짝 맞대고 잤고, 그 처녀는 나이가 가장 어린 박현채씨 옆자리에 누웠다. 당연히 색정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어 박현채씨도 눈을 망뚱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한참 동안 잠이 들지 않아 몸뚱이만 뒹고 있는데, 처녀 입에서 '아아~' 하는 한숨소리가 길게 꼬리를 끌더라는 것이다. 그 처녀는 다음날 전투에서 죽었다는데, 그 긴 한숨소리가 오래오래 남아 있더라고 기억했다. 그 무쇠 같은 박현채씨도 그 말을 할 때는 알웃은 표정이었다. 그 말을 들던 우리들도 그 긴 한숨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아 한참 말을 잊지 못했다..."(송기숙 2006).

하지만 빨치산의 일상이 항상 죽음과 연결된 것만은 아니었다. 유격조직인 빨치산은 전황에 의해 조직 체계와 대원의 임무가 변화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미래'를 위한 배

6) 박현채가 기억하는 또 다른 죽음을 피한 이야기는 어머니가 준 돈 때문에 총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다. 그는 한번 관동상을 달았는데, "총알이 호주머니에 넣어둔 지폐 봉투에 맞았던 거야. 한걸 쫓는 두께가 이 정도였는데 실탄이 돈을 뚫고 나가다가 마지막 장에 멈춰 있더라구. 탄두가 신통하게도 마지막 장에 멈춰있는거야 ... 비상금으로 간수하고 다녔던 거지. 집을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였어"라고 회고하고 있다(7권 493, 송기숙 2006, 157).

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51년 1월 다시 서울이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오자, 빨치산들의 분위기는 '죽음'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변화했다.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던 빨치산들에게 '해방에 대한 대비'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다. 박현채는 당시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회고록 7):

“ ...백아산으로 되돌아온 후 우리는 1월 중에 곡성군 경면으로 보급 투쟁을 갔다. 그리고 거기서 서울 해방의 소식을 듣는다. 우리는 기쁨에 들뜨면서 솔직히 너무 빠른 해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소를 몇 마리 보급해다가 잡고 평지에서 대규모의 오락회를 가졌다. 오락회는 대규모로 해방을 축하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술을 많이 먹었다. 오락회에 참여한 전 대원들과 한 잔씩 교환하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교환했다 ... 이 시기 우리는 부대 재편의 방향을 내무서 부대의 조직을 정규군을 위한 기간 핵심부대의 창출이라는 형태로 진행한다. 나는 심사를 받았고 해방 후의 업무를 김일성대학 경제학과에의 진학이라는 형태로 배정받는다. 나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곧 중학교 4학년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일성대학에 가면 개별적으로 지도원이 배속되어 나를 지도함으로써 학력의 격차에서 오는 어려움은 당 지도의 차원에서 극복될 수 있고, 대학 과정은 충실하게 이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해방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

어려운 시절: 밀리는 전선, 증가하는 이탈자

그러나 해방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던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51년 중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휴전 회담이 재개되자 기존에 제기되지 않던 남한 유격투쟁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이선아 2003, 34). 바로 전쟁과정에서 기대했던 남한 인민의 봉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빨치산은 무수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했던 것은 물자, 의약품, 무기,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빨치산들의 고립과 이탈 그리고 당 조직의 이완이었다.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환자들에게 치료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요법이나 자연치유력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또한 재귀열 집단 발병 등 시시때때로 찾아드는 전염병으로 인한 또 다른 죽음의 공포에 대해 빨치산들은 무력하기 그지 없었다. 박현채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일어나서 배를 보니 좌측 갈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나는 이태식 동지에게 부상을 보고했다. 이태식 동지는 자기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했다고 말하면서 빨리 안전지대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다 ... 나는 병원 입원에서 김용길 사령관 동지의 특별명령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환자트에 가지 말고 병원 직원트에서 직접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것이다. 나는 보름재의 환자트에서 환자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로서의 생활은 회비가 엇갈리는 것이었다. 환자트에 처음 와서 나는 신고 있던 신발을 잃어 맨발이 되었다. 통신문 등 신발 사정이 좋지 않은 요원들에 의한 소행이었다 할지라도 활동에서 불가결한 신발을 잃는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또한 빨치산들이 지켜오던 해방구는 계속 위협을 받았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유격투쟁의 도덕적인 명분도 점차 아래지고 있었다. 대원들의 심리적·정신적 동요가 갈수록 심해져 갔으며, 대원들의 이탈과 자수가 가속화되었다. 박현채가 속한 부대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박현채는 과도기적이고 해방구 사수조차 ‘어려운 시절’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이 시기는 모든 면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으므로 대원들의 행동 또한 과도기적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동료들의 태도는 비위에 어긋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분격케 했다. 해만 떨어지면 많은 동지들이 서로를 피해 산 구석에 앉아 눈물을 쏟으며 훌쩍이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나는 그런 것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리를 만나면 서로 자리를 피해 주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으로 되었다. 나는 그런 행위가 죽음을 회피하거나 운명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적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를 지적해서 논의를 제기했었다. 조국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다가 죽음에 직면한다면 그것 앞에 서슴없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었다. 그와 같은 태도는 그들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조국을 위해 싸우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시기 나는 많은 동료들의 고뇌 속에서 나 자신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은 동료들의 죽음과 변신 속에서 해결되어 갔다...”(회고록 7)

“ ...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해방구는 경찰로부터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었다. 남원에 경찰토벌대가 조직되어 백아산 본산 마당바위에 주둔하면서 학천경찰서를 두었으며, 원리 앞 선세제 위에 지서를 토치카로 만들어 놓고 우리 방위부대와 일상적으로 대치, 전투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연대는 편성되었으나 편제를 완전히 조직하지 못한 채 전투를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었다 ... 해방구를 일정하게 유지는 하고 있었으나 백아산 정상을 빼앗기는 바람에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외곽지대를 지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열의 동요는 심했다.

많은 대원들이 이 시기에 대열을 이탈하거나 자수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빨치산 투쟁에서 이 시기에 대열 이탈자가 가장 많았다. 어떤 녀석은 그날 저녁에 자수하려고 하면서 낮에 잡자는 나를 굳이 깨워 이발을 해주고는 밤에 대열을 이탈, 자수하였다 ...”(회고록 6)

대오의 이탈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는 산재해 있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이 ‘보급투쟁’이었다. 전선의 교착으로 북한에서 제공되던 물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자, 유격대는 자체적으로 보급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전쟁 이후 빨치산 활동의 상당 부분은 보급투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초기에는 현물세나 애국성출미 등을 통한 자발적인 인민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점차 인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초한 식량 확보는 어렵게 되었고, 보급투쟁은 점차 인민에 대한 ‘약탈’의 형태를 띄게 된다(이선아 2003, 52). 반복되는 전투와 매일 이어지는 보급투쟁 속에서 빨치산은 인민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실해 갔다. 1951년 즈음의 박현채의 기억은 보급투쟁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어 준다(회고록 8);

“ ... 1951년은 전체적으로 유격투쟁을 위한 상황이 안 좋았다. 서유에서 우리들의 겨울 대비는 식량을 비롯한 먹을 수 있는 재화의 비축에서 주어졌다. 이 시기에 재화의 비축이 생감의 수집과 비축으로 이루어진 것도 식량의 겨울 비축을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운동은 나중에 상호경쟁을 낳아 감나무 등의 벌채에 의한 감의 확보경쟁으로 된다. 한 해의 겨울을 보내기 위한 산 나무의 희생은 지나치게 낭비적인 것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비축경쟁은 뒤에 바로 수정되었지만 많은 감나무들이 베어진 것은 큰 자원의 낭비였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나빠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또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이었다. 1950년 겨울에는 산간에 있는 인민들의 가옥에 의존하는 것이었으나 1951년 겨울은 길가의 산야에 무작정 잠자리를 마련하거나 산골짜기의 트에서 불을 피면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1952년이 되면서 고정트에서의 생활로 정착화된다. 1951년 겨울 우리는 적의 동기 공세 속에서 노변에서 잠을 많이 잤다. 한 번은 무등산 뒤 도로가를 이동하다가 우리는 길가 소나무 밑 황무지에서 숙영을 했다. 담요를 한 장씩 소지하고 있었을 때였기에 몇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한 장을 깔고 몇 장을 같이 덮고 잤다. 눈이 올 때이므로 밤에 자다 일어나 보면 모두가 눈에 잠겨 있고 서있는 것은 나무 밑에서 있는 보초뿐이었다. 이런 잠자리에서는 중간에 깨어 다시 잠이 드는 일이 지극히 고난스러운 것이었다. 이 고통을 못 이기고 몇 사람이 투항을 했으니 그 상황은 지금의 나도 이해할 만 하다 ... 게다가 비생산적인 전투 일정이 중첩됨으로서 보급투쟁은 연속적인 활동이 되어 버렸다. 날마다 계속해야 하는 보급투쟁에 성원들은 자기 힘이 더 따라주지 못함을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른다 ...”

이제 남로당이 지도하는 유격대 투쟁은 마지막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박현채는 남로당 그리고 유격대 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53년 8월 26일, 『제5지구당 결정서』를 통해 조선노동당은 빨치산의 불합리한 운영, 경남빨치산의 전멸 등의 책임을 물어 유격투쟁을 실제로 책임졌던 남로당의 박현영과 이승엽을 숙청했다(이선아 2003, 40). 하지만 이와 달리 박현채는 기본적으로 남로당과 국내파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했다. 어찌면 박현채에게는 남로당 이외에 지령을 내릴 당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좌·우편향의 이상주의를 경계했지만, 현대사에서 국내파에 ‘정통성’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예가 남로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던 이호철의 소설 『남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그의 분노나,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 남로당의 평가를 둘러싸고 김남식과의 대립이었다(이미숙 2006, 199).

그렇지만 박현채가 빨치산 활동 시기 남로당에 대해 찬양 일변도였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관료주의, 전위정당에 걸맞지 않은 당원의 대규모 양산, 비정상적인 당운영 방식 등을 목도했다. 화순 투쟁 과정에서 전투과정에서 세포위원장 이 권한으로 ‘입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회고록 8);

“ ... 이 시기 투쟁 중에서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화순 덩병제에서의 싸움이다 ... 보급투쟁에서 돌아온 부대가 배낭을 풀고 아침을 준비하는 사이 적이 기습해왔다. 사격의 신호탄이 울렸을 때 우리는 배낭을 벗고 아침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사격 개시!” 소리를 듣고 뒤를 되돌아봤을 때 바로 옆에 일직선으로 탄흔을 남기면서 사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군사지휘관은 없었고, 광주시당 부위원장과 몸이 안 좋은 중대장 한 명만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일꾼으로서 나는 군사지휘권을 인계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지휘관으로서 나는 탈출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무등산으로 가는 길은 막혔고, 거기가 막힌 상황에서 밀으로 가는 모든 길 역시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은 동면과 화순 쪽에서 오는 길과 마주치는 삼거리가 있으나, 거기에서는 적과의 전투가 예상됨에 따라 당 세포회의를 소집하여 결사대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당세포 회의를 소집하여 한 명의 당원(조○○ 동무)에게 척후로서 앞설 것을 명하고, 대원 가운데서 입당을 원하고 있었던 이○○ 동지의 입당을 허가하고, 조 동무와의 동행을 명하면서 삼거리로 접근했다. 덩병제에서의 싸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나에게서 최초로 화선당 회의 운용이라는 중요한 경험을 주는 것이었다. 화선당 회의는 부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 일꾼이 긴급한 상황에서 조선노동당의 이름으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세포위원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이 시기 당일꾼에 의한 당운영을 당이 사후적으로 추인하도록 되어 있는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시기의 당운영 방식이다.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당 운영 방식으로서 주어진 것이 세포위원장에 의한 입당 허용권이

다. 화선당 회의에서 세포위원장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

결국 박헌채 역시 부대를 떠나 ‘오·일오 결정’ 수행과 ‘판·사 투쟁’을 위한 물건을 조달하려다가 체포된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체포 역시 거점책이 이중첩자였기 때문이었다. 박헌채의 벗, 장기향의 회고를 보면(장기향 2005);

“ ... ‘판·사 투쟁’은 판월 오일에 실시될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교란 및 저지 투쟁이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시작해보지 못하고 침투하자마자 잡히고 만 것이다. 그 거점책이 이중첩자라는 것을 선요원도 몰랐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한편으로, 그 동안 자신들의 조직이 그런 식으로 물이 새고 있었다는 것을 조원제는 실감해야 했다...”

이렇게 박헌채는 이렇게 이중첩자에 의해 검거되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40여년을 ‘노예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되돌아보면, 박헌채가 민족경제론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남한 자본주의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에 빠져서 새로운 시스템이 생길 것에 대한 믿음일지도 모른다(7권 392). 평생 ‘마지막 파르티잔 제너레이션’이자 ‘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을 생각했던 그는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가 올 것이라는 데 의심을 품지 않았다(7권 375). 하지만 박헌채의 ‘파국론적 사고’와 달리 파국은 박헌채가 걸어가야 할 사회주의에서 일어났다.

결국 유년기 『중국의 붉은 별』을 읽고, 화순 탄좌 노동자들의 주먹밥에 감동하며,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고 산으로, 문화중대장으로 투신했던 박헌채에게 ‘사회주의’라는 신념이자 높은 도덕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마치 종교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라는 ‘배교행위’를 권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박헌채는 광주서중과 빨치산 경험을 통해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다. 마치 에릭 홉스바움(2005)이 자서전인 『미완의 시대』에서 “나는 베를린 생활을 통해 일평생 공산주의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술회했듯이, 박헌채에게 이른 10대 시절 정치활동 경험과 생사를 넘나드는 내전 경험은 그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⁷⁾ 그가 50~60년대 생사를 넘나드며 민족경제라는 이론적 실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 시기 부모, 좌익 친척들, 서중 시기 활동 그리고 산 생활 시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에서 박헌채와 빨치산들의 선택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비록 노예의 언어였지만 『민족경제론』이라는 박정희 시기 대항이데올로기의 한

7) 이론보다 현실을 우위에 두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던 박헌채에게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타고난 건강체질인 박헌채가 갑자기 기운을 잃어버린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조점래는 자신이 본 박헌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불행해 보였을 때는 소련이 붕괴했을 때라고 언급하면서, 말년의 박헌채가 “사회주의가 몰락하지 않으면 다당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양당제는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프레시안 2006/08/08). 생전에 그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현실로 받아들여기를 거부했다. 사회주의의 문제는 호루시호프, 고르바초프 등 간신배 탓이며, 권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 등이 간간히 전해질 따름이다(황건 2006, 386).

획을 그은 그리고 평생 빨치산이라는 자신이 세상에 큰 소리로 떠들고 싶은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박현채를 4.19의 세례를 받은 개인내지 1960년대와 70년대의 저항적 지식인으로만 가두어 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생존을 위해 박현채가 써대던 수다한 원고들의 한 권에는 그가 휘젓고 다니던 백야산의 풍경과 비트의 모습들, 그리고 함께 웃고 생사를 같이 했던 많은 얼굴의 빨치산들이 그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박현채가 살아있다면, 삭제된 글이 하드디스크 어디엔가 남아서 전문가의 손으로 복구되기를 여전히 바라듯이, 빨치산 투쟁과 민족해방의 꿈은 아직도 그의 뇌리,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III. 『민족경제론』의 형성: 4.19 경험과 1960년대

흔히 박현채와 4.19이후 새로운 운동 세대의 '동질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서 해방 직후 박현채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 유격투쟁과 '이른 정치 활동' 경험을 지닌 박현채와 동년배들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와 '변주'들도 존재했었다. 단적으로 도시봉기와 정치투쟁에 대한 생각과 비합법적 조직이나 활동에 대한 태도, 민족경제의 대중담론화 가능성의 모색 그리고 국가 주도 산업화에 대한 태도 등이 그것이다. III장에서는 박현채와 4.19 이후 변혁운동 세대의 수렴 지점과 차이를 역사적 맥락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4.19 직후 형성된 변혁적 지식 그룹이 형성된 배경, 이들의 조직과 지향 그리고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4.19 이후 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인층의 지향은 크게 "민족민주혁명(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이하 NDR)"이었다.⁸⁾ 당시 민족민주주의는 제2차대전 이후 발전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던 민족민주혁명 과제를 한국적 상황에서 제기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정치경제적 요구는, "이정권 퇴진-민주적 정부 수립, 부정축재환수-악질제벌 타도" 등 특혜와 독점을 배제한 매관독점자본 척결과 중소자본과 민족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민족자본 회복,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업자유주의 실현,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 개선 등이었다. 이는 1950년대 갈등구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체제적 성격을 둘러싼 것이라기보다, 자본주의 발전의 '방법'을 둘러싼 것이었다. 바로 초기적 민족·자립경제의 맹아는 50년대 '농업희생적 자본축적'이란 현실에서 태동했다. 이 시기 각종 농민수탈과 농업정체화를 통해 농업부문의 잉여가치가 도시부문으로 유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50년대 농업정체화의 근거는 농업생산성 정체와 적자영농, 이농현상이었다(조석근 2001, 18). 이처럼 원조물자, 관료자본, 잠재적 실업자로 특징지워지는 관료독점제 하의 50년대 사회에 대해 비판적 지식인들은, 50년대 사회경

8) NDR이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던 일차적으로 후진성을 탈피, 자립적 생산력 발전을 도모하는 경향이다.

제적 현실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민족·자립경제를 사고했다. 바로 경제적 자립과 외세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운동세력 내부에서 맹아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50년대 후반기 무상원조의 급격한 감소와 절대빈곤의 심화는 산업화를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로 받아들이게 했다.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에 대한 대중적 동의에 기반해서, '민족자립경제'라는 제3세계적 사회발전이란 방향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인식은 당시 대중의 생활상 요구를 프티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수용했지만, 대중의 생존권적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당시 민중의 상황은 『사상계』에 실린 당시 대구 지역의 현황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사회 경제 정치의 어느 면치고 健全한 곳은 없었다. 사회 각층의 생활은 나날이 꺾의 도를 가하여 양식있는 안정세력을 이물 中産層은 극도로 위축된, 반면 免稅의 대상이 될 적빈자는 과반수이상에 말하는 기아선상 인구도 1할4분에 달하였다 ..."(탁희준, 이정재 1961).

물론, 당시 사회적 조건 아래서 4.19 이후 전개된 사회운동은 1950년대에 비해, 민족 문제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진보성'을 지녔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당시대적 민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격은 아니었다. 앞서 대구지역의 민생고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생존권 문제가 1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주체들은 아직 이 과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역량을 지니지 못했다. 단적으로 4.19 이후 5.16에 이르기까지 운동주체들이 "빈곤의 원인이 분단"에 있다는 인식은 민중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물론 4.19는 민족문제를 남한 정치사회질서에 복구시킨 중요한 계기였지만, 항쟁을 일방적으로 '민중주의'로, 5.16 및 그 이후를 '반동과 반민중적인 것'으로 이분화시켜 파악하는 것은 한국 사회와 그 기저의 자본주의 발전을 '반민중성'과 '외부적 종속성'으로부터의 탈피'란 잣대만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민민청과 통민청: 봉건성, 매판성, 대외의존성

한편 4.19 직후 비판적 지식인 그룹 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통일론의 가시화와 자립경제론이 대두된 점이었다. 4.19 이전에도 전후 복구를 둘러싸고 민주당 신파 계열과 『사상계』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형 경제개발론', 초기 군사정권의 내포적 공업화론의 이론을 제공했던 '국가주도형 경제개발론' 그리고 자립경제론이라고도 불리는 '사회민주주의형 경제개발론' 등이 전개되었다(박태균 2001).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피기에 앞서, 4.19라는 정치적 개방 공간 하에서 혁신 정당들과 민간 학생·청년운동 진영이 내세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흔히 4.19 직후 벌어진 1960년 7.29 총선을 보수와 혁신 사이의 대결이라고 인식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7.29 총선은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했으

며 정치사회의 대립선은 보수와 혁신 세력 사이의 대립이라기보다, 민주당 구파 대신과 사이의 대립, 다시 말해서 보수정당내부 파벌 갈등이 신구파 간의 공천 갈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극단적으로 민주당의 경우, 신구파는 각각 민주당 공천자보다, 자파 공천 탈락자를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등으로 분립해서 선거에 참여했던 혁신정치세력은 명확한 자기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른바 민주당 등 제도정치세력의 '잔여 세력'으로서 의미가 강했다. 혁신이란 당시대적 의미도 모호해서 인물 중심의 투표가 지배적이었던 분위기 아래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또, 혁신정당의 구성 역시 '혁신' 혹은 '진보'에 걸맞는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인물/간부정당의 성격이 강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통민청에 관계했던 김낙중은, " ... 이 시기 진보정당은 대중적 기초가 부재했지 ... 특히, 인텔리들이 중심인 진보정당인 경우 통합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지. 그러니까 '1인1당'의 성향이 강했 ..."라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사대당과 이후 사회당에 참여한 유한종 선생의 구술 증언은 당시 활동가 내부에 진보당계열에 대한 불신이 존재했고, 7.29 총선에서 사대당에 대한 이들의 지지가 반단정 세력의 결집이라기보다, 암묵적인 지지의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유한종 구술 1990);

" ... 사회대중당을 조직하는데 진보당계하고 뜻이 잘 안맞아 ... 4.19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인 7.29 총선이 끝나고 사대당은 좋지 않은 작태를 보이고 영망이 됐어요 ... [사대당; 필자주] 조직을 해가는 과정에서 진보계와 비진보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윤길중, 김달호 등의 진보계는 개인플레이가 극심해서 정당을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더군요 ..."

이러한 조직적 분립에도 불구하고, 7.29 총선에 대해 혁신정치세력은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4.19(혹은 3, 4월 항쟁)를 "진정한 민주복지사회국가를 이룩하려는 일반대중의 의식적 발로에서 비롯된 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의회진출을 통한 보혁구도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사대당의 경우, 150~200여 개의 선거구에서 입후보, '최저' 60~70명의 당선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는 7.29 총선 이후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의 4당 체제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고, 이는 당시 활동가들 사이에 '뭔가 한번 해보자'는 고무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에서 혁신정치세력은 지구당 운영에서 선거 자금을 이르기까지 대부분 열세였으며, 일부에서는 "내가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 뽑아 달라"는 식의 감상적 선거운동도 난무했다. 이는 혁신정치세력이 여전히 진보라고 칭하기에는 비현실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정책에서 주목받은 것은 경제정책이었는데, 민주당은 혁신정치세력이 내세운 상당수의 정책을 자신의 정책으로 흡수하는 '개량화' 흐름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수와 혁신사이의 분별점을 약화시켰고, 심지어 자유당조차 '합리주의 계획 경제'를 주장한 현실에서도 드러났다. 이런 쟁점의 희석화 이외에도, 혁신정당이 공유한 국유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과 '식민지 경제구조 탈피'라는 목표는 이승만 시기 경제피폐에 대한 반성과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국가주도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바로 민주당이 제기한 '경제제일주의'와 비교,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과 4.19 직후 결성된 운동조직인 민민청과 통민청 그리고 민자통 등 학생·청년운동 단체들은 달랐다. 1950년대 이후 만들어진 진보적인 씨클로는 신진회, 신조회, 협진회, 부산의 암장, 청년 조직으로서 성민학회(醒民學會), 통일청년회 등이 존재했다. 이중 성민학회, 통일청년회 그리고 일부 신진회 성원이 합류해서 만들어진 것이 통일민주청년동맹(이하 통민청)이었다.⁹⁾ 통민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고, 주요 활동가들은 우홍선, 양춘우, 김영광, 김낙중, 이재문 등이었다. 통민청이 초기 조직 과정에서 사회당과는 아무런 관련은 없었지만, 이후 사회당의 실제적인 조직가인 최백근이 청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는 젊은이들이 그를 한번 만나면 속 빠질 정도로 박식하고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인물이었다. 통민청의 특징은 계급적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민족해방의 가치를 내세웠다는 점과 상당수 구좌익 인사들이 공개, 비공개 조직원으로 포함한 점이 특징이었다.

다른 한편 민민청(민주민족청년동맹)의 경우, 부산대 이종률 교수의 영향력 하에서 조직화되었다. 1956년 그 전신인 "민족문화협회"를 결성으로 출발한 민민청의 주요 활동가들은 김상찬, 김금수, 하상연 등이었다. 민민청은 1960년 6월 12일 결성 이후 대구로 조직화 확산을 꾀하여, '에스페란토 학회'를 매개로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등 활동가들을 조직했다. 당시 이종률이 주장한 서민성 민주자본주의 노선(혹은 민족건양노선)은 올바른 의미의 민족당, 즉 인민성과 과학성을 지닌, 민족당을 지향했으며 반봉건, 반외세, 반민족 매관자본, 즉 삼반(三反)의 터전에서 기계공업적이며 서민적이고 사유 재산적인 인민민족자본주의 사회의 건설을 지향했다(김동춘·박태순 1991, 116). 그를 둘러싼 평가와 관련, 당시 통민청 성원이던 김낙중 선생과 민민청 중앙 간사장이던 김금수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 과거 신진회 등 진보적 씨클을 했거나, 내심 박헌영이나 여운형을 추종하던 진보적 개인의 일부가 민자통 청년 운동에 참여한 것이죠 ... 내가 당시 두 조직[민민청과 통민청; 필자주]의 통합 작업을 맡겨 있었어요 ..."(김낙중).

9) 신진회 회원이던 윤식의 증언에 따르면, 신진회는 영국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에서 착안해 결성되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자본주의와 공산진영에서 표방하는 전형적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하는 성격의 모임이었다(윤식 2001, 165).

" ... 4.19 당시 이종률 선생은 한마디로 민족주의자야. 그 밑에 이상 찬씨 등이 있었고, 민민청을 조직하는 등 실천적으로 뛰어난 분이었고 ... 그런데 이 민민청 강령이란게 비과학적인 용어가 많았어. 그래서 당시 도예종 선생이 소련교과서에 나온 민족민주혁명으로 용어를 다 수정하고 갔지. 그리고 이종률 선생 자체의 민민청내 영향력을 제어해 나아가고 ... 이 양반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파적 중도계열이었고, 일제 시기 청년운동을 한 양반이라 그런지 남로계에 대해서는 약간 불신이 있었어 ... 단적으로 김구에 대해서 도예종 선생같은 경우 테러단 오야봉 정도로 평가하는데 비해, 이종률 선생은 당시 지리 멀멀하던 한독당을 인수하자, 지금은 민족혁명을 할 시기다, 이런 정도지 ... "(김금수)

양 그룹 내에는 이종률의 "서민성 자본민주주의혁명" 이론과 관련, 혁명을 수행할 계급적 토대의 결여 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정강의 증언에 따르면, 제1차 인혁당을 주도한 도예종은 이종률을 같이 조직을 할 수 없는 인물로 보았고, 심하게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 내지 강단 맑스주의자로 규정했다고 한다(김정강 2001, 49). 하지만, 민민청의 활동이 점차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특히 대구에서 서도원, 도예종 등 체계적인 이론을 체득한 활동가들이 민민청에 가입하면서 노선상의 차이가 점차 불식되기에 이른다. 구체적인 논쟁의 내용은 민족·계급모순의 파악 문제였다. 사회당의 유병목 등은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론에 근접한 주장을 한 반면, 민민청은 반외세적 민족민주혁명론에 입각하여, 전반적 사회 구조에서 계급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사회를 식민지로 분석했다. 격론 끝에 나온 결론은 민족·계급모순이 병존하는 식민지 억압 사회 속에서 반제민족혁명의 민족모순이 상위권의 전략적 과제이며, 양자는 분리-불가능한 동맹자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점은 1961년 영남일보에 실린 민민청의 도예종의 글에도 확인된다:

" ...민족혁명의 완수는 통일이며 과제는 세 가지 ... 첫째는 봉건적 잔재의 일소와 둘째로는 소위 매판소자본가의 배격, 셋째로는 외세의존에서부터 민족자주성의 확립 등 ..."(『노동운동과 통일문제』, 『영남일보』 1961)

또한 도예종은 「경제적으로 본 통일의 필연성 ③」에서 자립경제의 지향을 분단체제의 극복이란 점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강조는 인용자).

" ... 생산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한경제제건의 목표와 성격을 식민경제적 생산체계를 국민경제적 생산체계로 재전환시키는 것인데 남북한의 분립은 이 경제제건의 지상명령인 식민경제적 생산체계를 국민경제적 생산체계로 재전환시키는 위업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 ... "(『영남일보』, 1961년 1월 24일).

또한 유사한 시기 영남일보에 기고한 김영춘도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을 위한 세 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서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전제로 하고 남북간에 생산력의 배치와 자원의 분포에 적응한 분업을 조직한다”라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영남일보』, 1961년 3월 5일자 :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인식은 60년대 중·후반 박헌채의 인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립경제의 지향(指向)은 박헌채에 의해 6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맹아적으로 이론화되었다. 박헌채는 당시 안재구(경북대 교수, 후일 남민전 참여)와 더불어 이론가로서 양대 산맥을 이루었으며, 김정강은 박헌채의 입장을 핵심적 좌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김정강 2001, 115). 특히 국가주도형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체계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 계기는 60년대 후반 외자(外資)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일본 차관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어떻게 내자(內資)를 동원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60년대 중반 지식인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청맥』에서는 65년 5월호와 6월호, 양호에 걸쳐 ‘매관자본’ 특집이 연재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초기 민족경제론의 기반은 외형·외자의존적 경제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자립경제에 대한 ‘지향’이었다. 특히 70년대까지 민족경제론은 맑스, 미르달, 리스트 그리고 오오츠카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런 입장에 입각해서 전개된 이론 체계로서 민족경제론이 주장한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초기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 사회(및 경제)의 종속성 및 계층간의 부조화 원인을 한국국민경제의 ‘식민지 이식형 특수성’이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찾고 있다. 전근대적 생산관계의 온존과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이지만 그 발전이 민족자본의 소멸로 지체되는 민족경제의 위축에서 찾았다(박헌채 1982). 그는 식민지 종속 하에서 형성된 파행적 경제구조,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지배 등 식민지 유산의 전승으로부터 국민경제 재생산의 자기 근거를 도출했다(같은 글, 304). 이처럼 한국 자본주의는 전근대성, 매관성, 민족자본의 소멸 등으로 특징 지워졌다. 다시 말해서 해방 이후 자본축적은 원조물자의 도입과 관련, 정치권력의 시너로서 관료와 결탁, 재정, 금융, 외환, 원조의 특혜와 기식(寄食)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기구를 매개로 한 무환의 소득이전과 외국독점자본과의 매관적 결합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민족경제론은 한편으로는 제3세계적 특수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의 ‘정상적 자본주의’와의 대조를 통해 제3세계로서 한국 자본주의의 기형성, 비정상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비유를 박헌채(1982, 303)의 1969년의 초기 저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전개가 ... 통일된 경제권으로서의 국민경제를 형성하고 국민적 산업과 중소기업, 농업과 공업의 유기적 관계위에 이른바 내포적 공업화를 이룩하는 과정 ... 식민지 종속국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전개는 낡은 봉건적재생산

관계를 청산하는 대신 낡은 전근대적 관계를 온존한 채 그 위에 종주국의 식민지적 수탈관계를 접합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처럼 민족경제에 있어서 저항의 논리적인 근거는 한국 자본주의의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성격이었다. 6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이 표방했던 민족민주적 성격을 탈각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외자주도형 경제개발정책으로 나아가자 박현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속·외자의존의 지속적 심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립경제 건설을 대안으로 삼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해방 후 자본주의화 과정을 자율적이고 내생적인 국민경제의 발전 과정이 아닌, 전전 식민지 시기 경제의 기본 특성의 '확장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화 과정은 종속국 민중의 자생적 기초에 근거한 자율적 사회발전 과정이 아닌, 오히려 민족경제 내부에 생산되었던 사회적 생산력 발전의 약간의 가능성마저 외래 자본에 의해 소멸당하는 민족경제의 파괴·몰락 과정이다(박현채 1978). 한마디로 외자에 의한 민족경제와 국민경제의 피리의 재생산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견 박현채의 민족경제/자립경제는 상대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체계의 실현, 국제분업체계에의 편입을 부인하는 '일종의 아우타르키'처럼 들린다. 하지만,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는 외자의 '최소화'와 무역관계가 '부차화'되는 수준으로 정리되는 듯 싶다. 이 점에서 박현채에게 1차적인 전술적 과제는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투쟁', 즉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을까? 60년대 박현채의 글은 민족경제의 원형을 담고는 있었지만, 투박하고 단순했다. 단적인 예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저개발국가에서 양적 성장은 경제자립의 길이 아니다. 2) 이는 식민지 초과 이윤의 수단으로 식민지 지배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자본주의 전개와 역사적 단초를 갖기 때문이다(이식형 식민지 경제의 기원, "국민경제의 외적 규정성"), 3) 도/농간의 균형 있는 사회적 분업이 아닌 '이중구조' 고착화("국민경제 이중구조의 고착화"), 4) 계층간 부조화의 경제적 조건은 식민지 이식형 자본주의의 "특수성"에 기초한 국민경제의 자율적 재생산 구조의 결여, 종속성, 5) 식민지 이식형 자본주의의 변형으로 전근대성과 매판성을 자기 속성으로 하는 '관료자본'의 형성(원조, 차관, 외자), 6) 대안으로서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변혁적 극복, 상대적 자급자족 체제의 구축, 공업소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촌락이 이룩하는 국지적 시장권(오오츠카의 '국민경제론'의 변형, 즉 국지적 시장권에 기초한 촌락 공동체)

박현채는 1967년 『공업의 지역적 편제와 불균형발전의 요인분석』과 1969년 『계층조화의 조건』을 통해 민족경제론의 구상을 시작했지만, 완결된 체계를 지향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작 박현채 자신은 민족경제론을 완결된 이론적 체계라기보다 하나의 수단,

도구로 봤다. 그는 스스로 “민족경제론은 완결된 체계를 가질 수 없다”고 고백했다. 박현재는 자신의 이론을 ‘정치경제적 모순을 돌파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이라 규정했다. 많은 연구에서 오해하고 있던 것이 민족경제론은 원래 주류담론이라는 점이다. 즉 70년대에 이르러 이것이 주류담론으로 형성되었다는 건 오해이다. 일부 관료의 정책을 제외하고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공리처럼 생각하던 것은 민족경제론적 지향이었다. 당시 자립화에 대한 지향은 허상이 아닌 실현가능하다고 믿어진 ‘현실’의 문제였다(7권 462).

이와 같이 60년대 박현재의 글들은 현실 자본주의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 - 부르주아적 의미의 자립경제 - 을 부정하고, 저발전의 결과로 민중의 빈곤과 모순이 배태된다는 주장이 주된 것이었다. 이른바 식민지적 기원을 갖는 한국 자본주의는 기형성, 외삽성, 비정상성, 생산력의 저차성 등 ‘이탈현상’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50년대와 60년대 중반까지 박현재의 현실 인식이자, 민족경제론의 초기적 내용이며, 이는 앞서 도예종 등 민민청과 통민청의 반봉건, 반매관, 반식민지성 그리고 사회적 생산력의 증진 등 내용과 유사한 것이었다. 즉 박현재나 이들의 주장에 종속/이식형, 타율성 등의 주장이 등장하지만 이는 ‘일국적 시각’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기원은 반복적으로 ‘식민지’로부터 추론되고 있다. 즉 식민지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50~60년대 한국 자본주의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인식론은 당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식사회의 인식이 봉건성, 매관성 그리고 외세의존성 등이 주된 것인 동시에 자립경제의 지향이 ‘통일’에 있었음을 드러내어 준다.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민통련을 중심으로 했던 학생운동에까지 확산되었는데, 1960년 11월 서울대 부터 결성된 민통련은 발기문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자와 독재자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인 소라껍질 속의 안일을 과감히 내던지고 영원한 민족의 광장에서 만난 민족의 마지막 보루 ... 노예의 사슬을 절단한 마지막 사수파”라고 선언했다. 학생들은 7.29 선거 이후 역시 국민계몽이나 생활운동 같은 방향으로서는 안되며, 민족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61년에는 신학기의 초점은 통일운동으로, 본격적 운동을 위한 준비를 전개했다. 민통련 구성원이던 윤식은, 당시 학생운동 내부 통일론의 흐름에 대해, “... 자유당에서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평화통일을 모색해보자. 단 통일문제를 연구하되 통일문제에만 국한시키지 말자 ... 사회의 경제발전이나 정치적인 개혁도 해야 하고 문화적인 것도 연구하면서 학생조직다운 것을 만들어 보자...”고 증언했다(윤식 2001, 179). 당시 민통련에서 작성한 4.19 1주년 선언문에서는 3.4월 항쟁의 실패 원인을 “... 혁명의 피 묻은 전리품을 반혁명적 보수야당에게 횡령당하고, 혁명을 중도에서 정지시킨 데 있다”고 진단하고, 당면 변혁운동을 반봉건, 반외압세력, 반매관자본, 이른바 “3반운동”을 일으켜 민족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고독한 것은 대중

이 아니다 ...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최종의 타격으로서 통일의 쟁취를 완결시키는 그것이다 ... 싸워서 쟁취할 건강한 조국의 얼굴을 전근대성과 식민성과 예측성과 군사기지성을 깨끗이 청산한 자주, 민주, 평화, 번영의 조국 ... 형제여 다 같이 행군하자! 북쪽의 형제들과 더불어 광휘로운 조국의 내일을 토론하기 위해 남북 학생회담의 광장으로 나아가자! 역사는 이 순간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서울대 학생회 명의로 발표되었던 4.19 제2선언문에도 한국 사회의 매관, 반봉건, 예측성을 강조하며, "3, 4월 항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 반매관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라고 선언했다(『민족일보』 1961/04/20).

혁신, 청년운동의 연합체였던 민자통 역시 5월13일 서울운동장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민족통일촉진결의대회' 개최했고, 집회후 마이크차를 선두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땅이 누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배고파서 못살겠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등을 외쳤고, 이날 대회는 앞선 3월22일 대회보다 3배 이상이 모인, 3, 4월 항쟁이후 서울에서 가진 최대규모 집회였다. 당시 집회 분위기에 대해 민민청의 김금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 그날 기억이 남는 것이 2시가 집회 시작인데, 12시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거야. 다들 식사도 안하고 온거지. 근데 그날 연사들이 다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야. 뭐 사회당 유병목 선생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참 대조적인 것이 5.16 이후 1961년말 쿠데타에 반대하는 집회가, 뭐 함석헌이, 장준하 등등 주로 연설하고 열렸는데, 그 집회에 앉은 사람들은 다 식사하고 온 사람들에다 모두 벡터이징이들이었어. 그런데 5월13일 우리 집회는 그게 아냐. 다 산동네 사람들이었어..."

이러한 민자통 운동의 지향과 관련해서,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는 구호에서 보여지듯이 민자통 운동이 민중생존권과 통일문제의 결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중을 둘러싼 실업, 절량, 빈곤, 범죄 등의 50년대의 구조적 유산이 '분단'과 '통일'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 운동은 한반도 차원의 민족자립경제라는 틀 안에서 대안을 제기했고, 이는 당시 민중의 요구를 통일운동, 자립경제 건설이란 방식으로 대안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시 활동가들 내부에서 당시 한국사회의 상황 진단과 민중의 결합에서의 문제 등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제외에 지지성명을 냈지만 사회당 내부에서는 그 전부터 운동진행의 관념적 급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 최백근 선생은 조직과 투쟁이 서로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감을 피력 ..." (김세원 1991)

“한국 민중이 8.15에서 6.25 사이에 너무나 던 상태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주입되고, 그러다 보니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근처[운동; 필자주]에 안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겠지...” (김낙중 구술)

실제로 통일론을 중심으로 했던 한국 사회 인식에서도 초기 민통련 주도 세력과 이후 민통련 및 기타 운동 조직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민민청·통민청 성원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전자의 경우 신생활운동, 국산품애용운동 등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소비위주의 ‘대외의존적 구조’로 되어있는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61년 한미 경제협정에 대해서는 민족적 치욕 혹은 주권유린 등의 다소 감상적인 생각을 가졌다. 윤식의 증언을 빌면(윤식 2001, 181);

“ ... 한국경제의 약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강요한 이 편무적 불평등 조약, 구세기의 침략적 제조건이나 을사보호조약보다도 일층 가혹한 이 조약으로 미국은 경제적 예측과 내정간섭을 공공연히 강요하고 무제한의 조차지를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을 철저히 미국의 시장화합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침해하여 민족적 치욕을 가한다 ...”

반면 후자인 민민청과 통민청 성원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반보수, 반매관, 반의압 등 보다 명징한 반제국주의적 구호를 통해, 남북교류에 기반한 자립경제론을 전면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앞선 그룹의 민족주의적 감수성과 구별되는 보다 체계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에서 50년대 북진통일로 통합되었던 ‘통일’이라는 잠재된 의제를 불러온 이들의 선도적인 투쟁은 전쟁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가장 깊은 균열을 불러내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이승만 독재를 비롯하여 당시 모든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난국은 외세가 가져온 분단의 ‘부산물’로 인식, 민족통일을 마치 파도에 휩쓸려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해주는 구세주와 같이 인식하는 한계를 지녔지만, 전쟁이후 남한 사회의 사회적 통합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준 계기였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등장한 변혁적 운동 중에 ‘한지류’를 형성했다. 다시 말해서, 3.4월 항쟁 이후는 해방 직후 남로당계 등 잔존 좌익파는 구분되는 운동인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후 공안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60~70년대 변혁운동의 핵심인자들이 된다. 그렇다면 박헌채가 이들과 다른 지점 그리고 차이를 보이는 맥락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1950년대부터 이 시기까지 박헌채는 두드러진 자기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다만 4.19 이후 제한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점차 민민청과 통민청내 활동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박헌채는 1960년 4.19를 원조경제하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의 파괴가 낳은 정치적 변혁으로 규정하고, 이 내부에는 강한 경제적

민족주의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61년 5.16은 4.19의 역사적 수렴과정이자, 동일한 사회경제적 기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에 민족주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바로 정치적으로 4.19 시기 제시된 민족적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반동'으로 4.19를 파악하는 시각과 이미 분명한 선을 박헌채가 긋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농공병진으로의 환상』(1970)이란 글에서 드러난다. 민족주의자들이 '박정희=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과 구분되게, 그는 5.16 군사정변의 담당주체를 그 출신에서 농민, 사회적 성향에서 중간층적 성향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에서 '중농정책의 계기'가 드러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정치 실천과 조직 문제에 대한 박헌채의 생각을 살펴보자. 박정희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과 운동 세대는 특히 유신 등장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봉기에 의한 민주적 정부,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헌채는 궁극적 지향에선 동일했는지 몰라도, 방법에서는 현실적이었고 철저했다. 실제로 1979년 박헌채는 임동규 간첩 사건 때문에 기소되었는데, 재소자 신분 카드 「범죄개요」란을 내용을 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7권 122):

“ ... 72년 일자불상부터 78년 2월 일자 불상 사이에 마포구 상수동 144-1소재 본인(박헌채-인용자) 서재에서 조선에 농업기구, 독일농민전쟁, 농민분해론 등을 후배인 임동규한테 빌려줌. 78년 2월 미상일에 도 시게릴라 가능성을 물었을 때 '안돼, 쓸데없는 소리하지마라'고 말했다 ... ”

박헌채는 본인의 한국전쟁 경험으로 미루어 한국 사회에서 도시봉기에 이은 사회변혁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매우 모험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유신 하에서 봉기론적 사고와 대중적 기초가 없는 정치조직의 구축은 운동의 최소한의 핵심분자마저 소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경략연구회' 멤버들과 박헌채가 다른 점이었다. 유신 이후 이수병과 견해차를 박중기의 회고를 통해 들여보자(박중기 2005):

“ ... 두 사람(박헌채와 이수병-인용자)이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한 건 70년부터다. 72년 7·4 공동성명 후엔 상당히 자주 만나 조직문제, 현실 대응문제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둘은 서로를 존경했다. 다만 유신 이후엔 두 사람이 의견을 조금 달리하기도 했다. 이수병은 조직을 갖춰 당장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박헌채는 당시 상황에서 내용 없이 조직부터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물고올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좀더 느슨한 형태로 가자는 게 박헌채의 생각이었다.” “객관적 조건이나 변혁 주체의 능력을 냉철하게 평가하지 않고 모험주의나 극좌적

편향으로 치닫는 것은 운동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는 박현채가 어린시절부터 체득한 나름의 깨달음이었다 ...”

이처럼 국민경제와 민족경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민주적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있는 듯 없는 듯한 무정형의 조직조차 매우 위험했던 조건 하에서 선불리 조직대중을 거리로 동원하는 것에 대해 그는 반대했다. 아마도 그는 경락회, 민청학련 그리고 남민전 등의 움직임에 대해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실제 동참 제의가 들어왔을 것이다. 남민전에 참가했던 임현영은, “... 박현채-이재문 둘 다 인혁당 관련자들이라 나보다 더 잘 아는 처지였다. 나는 고향 의성 출신 이야길 하는 척 하면서 박 선생에게 이재문 선생의 안부를 묻는 척 화두를 잡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거론했다. 그때 내 탐색전에 의하면, 박 선생은 인혁당의 수난 이후 어떤 작은 탄압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철저성이었다. 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짐과 동시에 냉철한 한계성도 지적할 만큼 박 선생은 현실인식에 투철했다. 지나고 보니 아마 선생은 내가 뒤로 어떤 일을 하는 걸 짐새로 알았던 듯 하다 ...”라고 회고하고 있다(임현영 2006). 그러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다만 지켜볼 뿐이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과 불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문제는 4.19이후 새롭게 형성된 변혁세대와 박현채 간의 미묘한 차이에서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민청/통민청 세대가 박현채와 실질적인 조우를 하는 시점은 제1차 인혁 사건이 전개된 전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에서는 박현채가 우동읍 등과 통민청/사회당의 비밀조직원(혹은 조직화에서 주도적 역할)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공개적인 운동을 그 시기에 전개하지 않았고, 단지 농업문제연구회의 멤버로 연구를 중심으로 움직였다(기세문 2006, 25).¹⁰⁾ 박현채가 이들과 안식을 갖게된 것은 61년 쿠데타 이후, 더 길게는 제1차 인혁당 사건 이후였다. 김금수는 자신과 박현채의 최초 인연을 61년 말로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김금수 2006):

“... 현채 형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와 처음으로 만난 것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말 이었다. 나는 당시 수배를 받고 있던 처지였는데, 한 선배의 자취방에서 여럿이 만나 이후의 정세변화와 민족민주운동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현채 형이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몇 년 선배쯤으로만 알았지, ‘엄청난’ 경력을 지닌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도 그의 인상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범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눈빛이 그러했고, 그가 퍼는 논리가 그러했다 ...”

10) 농업문제연구회는 1960년대 한국 농업의 특징을 가족경영, 영세경영, 분산경영, 낮은 농업생산성, 낮은 가격체제라고 보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중간결론으로 개별영농을 협업경영으로 조직개편하는 구조개선안을 제기했다(7권 406).

이들과 박현채의 만남은 김낙중의 회고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박현채는 제1차 인혁당 사건 관계자 가운데 '유일한 호남출신'이었다. 그는 김낙중을 매개로 당시 청년들과 인면을 익히고 사회문제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비공식적인 참여'였다(김낙중 2006, 38~41). 그 이유를 50년대 대학시절 경험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당시에 그는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서울대에 들어간 해 고향 후배와 대학 내에서 맞닥뜨린 박현채는 당황해서 다짜고짜 후배의 떡살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기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겁에 질린 후배는 빌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으니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다. 이처럼 박현채는 졸업하기까지 내내 빨치산 이력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지냈다(문순태 2006, 125). 따라서 그는 60년대 중반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1963년 그는 경제학과 후진경제연구회의 후견인으로만 존재했으며, 당시 안병직, 정윤희 등과 함께 철대빈곤하의 한국 농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집중했다.

이처럼 4.19세대는 박현채와 연배와 생각은 비슷했지만,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시 무장 투쟁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박현채는 분명히 달랐다. 50년대 후반 한 친구의 책 뒷면에 써준 메모에서 드러나듯이, '중용'이란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박현채는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움직이기 힘든 형편이었다. 그는 친구인 김석운이 경주호 해상 월북 미수사건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자,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저돌적·극단적인 사고를 경계하라는 의미로 책 한권을 선물했다(이춘형 2006, 224). 김경추에게 『채근담』을 선물로 주며 쓴 메모는 다음과 같다.

중용: 새 단계의 싸움에 주는 격문!

인생은 투쟁이며 젊음의 상징은 기대이다.
 투쟁은 조직화되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이율배반적 사상의 예술적 통일!
 그를 위해 나는 너에게 동양적 중용, 이를 제시한다.
 편중하지 말라.
 그러나 전투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투쟁에 있기에!

서기 1957. 2. 26.

민봉(民奉) 서.

하지만 1971년 즈음까지 박현채는 한반도에서 '유격전'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했다고 한다. 박현채는 68년 김신조 사건 등을 계기로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

략의 등장 가능성을 점쳤으며, 심지어 70~71년 사이에 유격전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신뢰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김낙중에 따르면, 박헌채는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등 대중 조직에 대해 불신이 강했으며, 그런 어용노조와 무엇을 하느니 차라리 산악 게릴라전에 대비해서 등산을 하며 체력을 키우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김낙중 2006, 42~44). 이는 1978년 임동규에게 말했던 “도시게릴라 불가론”과는 사뭇 상반되는 이야기이다.¹¹⁾ 아마도 이는 월남전의 종식과 중국과 미국간의 국교수립으로 게릴라전이 아닌 다른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는 박헌채의 사고 변화라고 이해해야 할까? 80년대 이후에도 박헌채는 광주항쟁조차 당이라고 표현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한국적 조건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도 발각날 수 밖에 없으며, 조직을 만들고 싶으면 철저하게 무조직의 조직을 만들어야 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남민전 등 사건에 대해서도 모험주의적인 것으로 비판적인 평가로 일관했다(7권 393). 이런 비판적인 사고는 70년대 이후 그의 집필과 실천 활동의 양상 속에서 드러난다.

IV. 『대중경제론』과 민주주의론: 민족경제론의 운동담론화

비록 60년대 박헌채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에게 민족·민중모순 등 한국 사회의 주요한 모순 구조가 인식되었지만, 이것이 대중들의 경험과 결합되거나, 대중화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진행된 근대화 프로젝트에 지식인과 대중들의 참여가 확대되거나, 여전히 소박한 반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나 기생·매판세력에 대한 반대에 근거한 ‘소박한 운동 담론’이 여전했다. IV장에서는 민족경제론의 이론 자체가 아닌, 이론이 대중들 그리고 운동 주체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상의 사회학적 의미’를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5.16 직후 학생들과 『사상계』 가운데 일부 지식인층은 박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상당부분 동참했다. 특히 5.16 직후 “4.19와 5.16은 동일한 목표”라는 지지 성명을 내는가 하면, 과거 신진회나 신조회 등 이념 씨름이나 민통련에 관계했던 그룹 주변에서 “5.16은 민족주의 군사혁명이다 ... 5.16을 지지하여 일터를 확보하자. 민족주의 운동의 틀을 마련하자”고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향토개척단은 노골적으로 “굶주린 1,000만 농민을 두고 어떻게 정치적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11) 70년대 들어서 박헌채는 다양한 색조의 잡지에 글을 발표하는 동시에, 다양한 성격의 단체에서 강연을 담당했다. 당시 반유신 운동에 참여했던 이해찬의 증언을 보면, “... 유신체제의 ‘교회’ 노력이 실패한 살아있는 표본답게 출옥 후에도 종교5가 기독교회관에서 매주 열린 인권기도회 등 좀 ‘비약한’ 곳을 잘 찾아다녔는데, 덕분에 박헌채 선생님을 뵈을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활동의 폭이 유연해졌다.

란 메시지를 통해 쿠데타 세력의 논리를 반복하기도 했다(김동춘·박태순 1991, 159~169). 1963년에 들어 각 대학에 향토개발연구회, 농촌문제연구회, 농어촌문제연구회, 총학생회, 농촌봉사부, 4H연구회, 자진근로반 등이 조직되어, 농촌진흥청과 농림부 후원 하에서 관제 민주주의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모습은 4.19 이후 시위의 연속이다 보니 점차 권태감을 느끼고, 학생들 사이에 운동의 간조(干潮)가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었다(김정강 2001, 47).

이처럼 근대화 프로젝트가 부분적이건 전면적이건 동의를 획득할 수 있던 원인은 무엇인가? 당시 도시·농촌 민중의 상황을 보면, 임금수준에 비춘 음식물 소비비율, 즉 앵겔지수로 불리는 비율이 50%이상에 달했던 최악의 상태였다. 60년대 민중의 생활에서 절실한 했던 것은 근로기준법이라기 보다, 실업대책, 다시 말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였다. 특히 다수를 차지했던 잠재적 농촌과잉 인구층은 기회만 되면 농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농인구중 도시에서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인구는 극소수였고, 그 결과 도시에는 불완전 취업자와 도시영세민으로 들끓었다. 이런 상황은 민중들을 임금 자체보다 고용을 둘러싼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몰아넣었고, 저임금에 불구하고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의식 상태를 만들어 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현채는 “해방 후 한국노동쟁의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1971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취업노동자는 미취업자들에 대하여 상대적인 유리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취업에서 주어지는 안정감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인구압력 때문에 진취적인 자기요구보다는 불만족한 상태라도 상대적인 유리성에 의해 현실에 안주하려는 상태를 지니게 된다. 이런 조건이 우리 나라 취업 노동자들로 하여금 무산자이면서도 사실상 소시민적 보수성을 지니게 하는 요인이 된다 ...”

한마디로 대다수 민중들, 특히 농민들에게 있어서 정권의 반민주, 반민족성을 정확히 인식할 겨를이 없었고, 이들의 일상을 짓누르던 절망적 빈곤의 상황은 여전히 재생산되었다. 바로 이념보다는 일자리의 확보 가능성에 더 기대를 걸던 시기였고, 그만큼 근대화 담론이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발휘할 만한 물질적인 근거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쿠데타 직후 지식인들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5.16의 성격을 둘러싼 지식인 그룹 내부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일부는 박정희를 낫세르나 수카르노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이 시기 지식인 내부 분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중앙정보부, 자문위원회, 재건국민운동본부 등에 대규모로 학자 및 지식인이 동원된 사실이었다. 일찍이 미국 콜론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효율적인 근대화 집단인 군부와 전문성, 기능성을 지닌 지식인 집단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는 근대화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근대화라는 패러다임에 기능적이고 순응적인 지식인 집단이 동원되는, 새로운 지식인의 분할 과정이었다. 실제로 5.16 쿠데타 직후 운동진영 내부에서 박정희의 좌익 경력 등으로 기대 섞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박현채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동지를 잡아 준 덕택으로 살은 자(여순항쟁 당시 박정희의 밀고를 지칭-인용자주)를 어찌 믿겠느냐, 일단 몸을 숨기고 한달 뒤에 모이자”는 식으로 의견을 냈고, 이 때 피신한 운동가들이 대부분 제1차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었다(김낙중 2005).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한일국교정상화를 결정적인 계기로 자립·민족경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초기적인 인식이 이루어졌다. 1963년을 기점으로 박정희 정권이 앞서 내세웠던 민족적 민주주의,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수정하자, 군사정권에 대해 기대를 걸었던 대학생들은 박 정권을 반민족적인 정권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박정권이 내세운 근대화 산업 혁명, 주체혁명, 재건혁명 등의 기치와 “국가를 바로 세우고 세대교체를 이룩한다, 자립경제를 달성한다” 등의 정책이 모두 민족적 민주주의로 집약되었기에 이를 고리로 정권의 반민족성을 비판했다(김동춘·박태순 1991, 186~9).

단적인 예로 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의 초기에는 “시수하자 평화선, 일본 제국주의 말살” 등의 구호가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고교생도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정세가 고조되자, 주된 슬로건은 변해갔다. 일본 독점자본의 국내 침투 및 5월 쿠데타는 4.19의 배신, 4월 혁명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압세력, 반매관, 반봉건에 있다는 주장이 그 핵심이었다. 특히, 5월 군부 쿠데타를 노골적인 대중탄압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5월부터는 군사정권의 하야를 주장하기까지 이른다. 바야말로 ‘민족적 민주주의’의 허상이 학생들에 의해 찢겨 나가는 순간이었다. 당시 선언문 가운데 일부를 인용해보면, “... 4월 혁명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압세력, 반매관,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민주의 참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 ... 우리는 외세의존의 모든 사상과 제도의 근본적 개혁없이는 외세의존과 그 주구 매관자본을 지지하는 정치질서의 폐기 없이는, 민족자립으로 가는 어떤 길도 폐색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은 박정권의 반민족적·반민주적 속성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보다 ‘반제 의식 없는 소박한 민족주의 감성’, 혹은 ‘민족감정’에 머물러 있었다. 1970년 5월 장장 20여 쪽에 걸쳐 제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그리고 장·차관을 질타한 김지하의 당시 『오적』도 이런 현실의 반영인지도 모른다(김동춘·박태순 1991, 189; 196).

하지만 유신 체제 성립 직전인 1970년과 1971년을 즈음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모순이 폭발과 더불어 농촌의 파탄과 농민층의 하강 분해로 인한 대규모 탈농과 이농 현상은, 도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빈민층 혹은 완전실업자 또는 룰렛 프롤레타리아트를 형성했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를 울부짖었던 1971년 8월 10일 광주(廣州)대단지 사건이었다(김원 2007). 한편, 이 시기는 상당수 지식인의 시각교정과 굴절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비농업부문인 도시에서 42%에 달하는 실업으로 실업자가 여전히 넘쳤고, 중앙정보

부 요원을 뽑는다는 구직광고에 대졸출신자들이 대거 응모하여, 공채 창립멤버가 되어 어제의 친구를 붙잡아다 가혹행위를 하는 풍경도 눈에 띄었다. 한편, 71년 1학기 들어서면서 대학에 대해 박정권은 대학 교련 교육을 강화했고, 집체교육까지 강요하며 교관도 전원 현역으로 교체하는 등 대학과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과 검열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외형적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 민족경제론이 대중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학생, 운동주체 그리고 ‘대중경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념싸움의 등장과 ‘민족주체성’의 강조

유신 직전인 1971년 말부터 1년 반 정도의 시기 동안 학내 학생운동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교련 반대와 위수령 등 때문에 다수 간부의 제적되어 학생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인 경우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후배들의 양성이 상당 정도 진행되어 1973년 2학기에 서울대 상대의 경우, 전체 학생 196명중 150명 정도가 서울대향 체육대회에 참석할 정도였다. 정윤광(민청학련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기는 서울대 내부에 한국사회연구회, 농업경제연구회 등 씨클이 형성기된 시기였으나, ‘이념 씨클’이라고 하는 것이 5개 정도였다. 서울대 내에 법대, 상대, 문리대 3군데, 고대와 연대에 하나씩.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만 해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씨클은 명백히 취약했다. 하지만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고려대 한맥 주최로 5개 씨클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토론 및 행사를 개최했던 덕에 전국 대학 이념 씨클 구성원 사이에 친분이 존재했다. 이들 씨클 안에서는 세미나 형식으로 민족문제, 한국 자본주의 그리고 민중 등 사회문제를 학습, 토론하고, 농촌참여활동, 청계천이나 성남 일대 빈민촌의 실태 조사, 개별적으로 마찌꼬바 같은 소규모 공장에 취업해서 노동하는 등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정윤광 2005). 그렇다면, 당시 이들 씨클들에서는 어떤 책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추구했는가?

당시는 사회과학 서적이 귀한 때였지만, 동대문 청계천 등지의 헌 책방을 뒤지면, 해방 직후 남로당에서 발간한 잡지나 서적들이 심심치 않게 널려있어, 이것을 보물단지를 구한 듯이 사다가 읽었다. 서울대 한국사회연구회(이하 한사연)처럼 민족 문제나 후진국 문제에 치중하는 경우에는, 최문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이나 황성모, <현대사회사상>이 주요한 1학년 커리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전남대의 경우, 김남주 시인의 회고에 따르면, 문학계간지인 <창작과 비평>과 급서로 취급되던 영문서적들, 예를 들면 <들어라, 양키들아>, <스페인 내전>, <레닌의 생애>, <붉은 10월>, 레오 휴버만의 <인간의 세속재산> 등이 널리 읽혀졌다. 또한 70년대 초반 지하신문 <함성>의 작성을 위해 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지하신문, 러시아혁명기 지하신문의 배포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유인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인 가리방, 철판, 목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머니 돈을 털고 책을 팔기도 했다.¹²⁾ 그 외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되, 철저한 민족주의 민주주의 노선, 예를 들면 갑오농민전쟁에서 출발해서 4.19혁명에 이르는 민족주체성을 강조했다.

민청학련: 매관성, 신식민지주의

이러한 이념 씨름들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한국 사회를 둘러싼 인식이 심화되면서 전국적인 대중투쟁 조직으로 결성된 민청학련은 당시 한국 사회를 매관성, 신식민지성 등 '개념'을 통해 이해했다. 민청학련과 관련, 배포된 유인물은 <삼민선언>, <민중의 소리>,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 3종류였다. 이는 구체적인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 대중이여 쫓기하라! 압박받는 민중이여 쫓기하라!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이여 쫓기하라!", "굶어 죽을 자유 말고 먹고 살 권리 찾자/배고파서 못살겠다 기아임금 인상하라/유신이란 간판 걸고 국민자유 박탈 말라/남북통일 사탕발림 영구집권 최후수단/제벌 위한 경제성장 정권 위한 국민총화/왜놈 위한 공업화에 민중들만 죽어 난다" 등 이었다. 당시 "민중민족 민주 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바야흐로 민중승리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 공포와 착취, 절핍과 빈곤에서
허덕이던 민중은 이제 절망과 압제의 사슬을 끊고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
절대권력과 폭압 정치를 밀천으로 삼고 ... 족벌 사유화를 획책 ... 민족의 영
구분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남북대화는 영구집권을 위한 장식물 ... 폭력정치
와 민중수탈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할 때,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보라!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상태를 강요하는 저들 깡패 집단을!
보라! 호화방탕을 일삼으며 민중의 살과 뼈를 삼켜 살찐 저 도둑무리들을!
보라! 이 땅을 신식민지주의자들에게 제물로 바친 저 매국노 놈들을!

이러한 신식민지성과 자본주의의 매관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비록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경제의 '용어'들이 변주된 것이었다. 특히 긴급조치 이후 일부 대학에서 지하 씨름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좌익서적을 학습하게 되고, 학생운동에는 맑스-레닌 원전에 대한 학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12) 『함성』의 내용은 유신 체제에 사형을 내린다는 의미에서 녀사 자 대신 죽을사(死)로 유신을 비판했고, 유신에 동조하는 직태를 모두 죽음의 행렬, 노예의 길로 묘사했다.

러나 대부분은 '구전'이나 이전 시기 민족경제의 용어들이 조직화의 맥락에서 선택되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학생운동 출신자들의 사회경력이란 면에서 현장론적인 이념적 기반 위에서 기층 민중운동에 투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당시 대학의 분위기를 이수일(당시 민투 관계자, 경북대학교)의 말에 따르자면;

...경북대 서도원 선생계열 씨클에서 활동을 했어요. 60년대 학생운동 씨클이라는게 한번 투쟁해서 깨지면 이름 바꿔서 다시 만들고 뭐 그런 형태였거든요. 경북대 당시 씨클로는 000(보리고개의 한자)에서 출발, 6.3때 政思會, 3선 개헌때 政進會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는 색깔을 덜 드러내기 위해 언어연구회 등의 형태로 계속되었죠. 사실 민청학련 이전 학생대중은 대부분 선배들로부터 듣는 구전(口傳),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준이었어요. 대부분 운동의 역사와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공유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민청 이후에야 비합 학습씨클들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 상당한 학습을 했죠. 하지만 이게 숫적으로는 소수였어요. 뭐 주로 학습한 건 일어난 경제학, 영문 원전, 역사 갑오농민전쟁이나 쿠바혁명, 제3세계혁명사 같은 걸했죠. 이런 부분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기여를 했었죠 .. 오히려 민청 이후에 들어서 현장론이 대두되었어요. 실제로 저 자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이 시기에 들어서면 민중운동의 대중적인 기초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게 되었죠 ..."

남민전: 반외세민족통일

다른 한편 간과해서는 안될 지점은 민족경제론의 지향이 경제적 자립에 국한된 것이 아닌, 분단체제를 극복을 지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속적인 자본주의와 한국 사회의 이식형 성격,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유산 등을 극복하는 최종적인 길은 분단체제의 극복이었다. 이런 인식은 박헌채의 민족경제에서 이론의 형태로 존재했을 뿐 아니라, 70년대 후반 남민전 등 운동조직 등의 지향으로 확장되었다. 박헌채(1989)는 민족경제와 분단 극복에 대해, "... 남북간의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경제교류를 점차 확대하고 이것을 구조화하면서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켜 남북경제의 민족공동체 안에서의 수렴으로 한반도 범위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확립을 추구해야 한다 ..." (강조는 인용자주)고 강조했다.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민족경제론의 궁극적인 지향은 분단된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한반도 차원의 국민경제 재생산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형성된 남민전의 경우에도 베트남민족해방 전선의 경험을 참고해서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남민전에 참여했던 김남주 선생도 한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김남주 1994);

" ... 남민전 지도부는 60년대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실천과 이론에서

모델로 삼아 조직사업을 구상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당시 베트남민족 해방전선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면 우리와 같이 민족이 분단된 현실에서 특히 북베트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

구체적인 남민전의 한국 사회 인식은 신식민지론, 매관자본 그리고 반제통일전선이었다. 남민전이 표방했던 구체적인 한국 사회 성격 및 투쟁 방향은 먼저, 유신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로 규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으로, “ ... 현대 세계에는 네 가지 모순이 존재해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모순, 자본주의 상호간의 모순, 제국주의와 식민지간의 모순 그리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모순이다. 이 안에서 한국이 직면한 모순은 제국주의와 신식민지간의 모순이다 ... 여기에서 해방이란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탈출하고 비자본주의적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가리킨다 ... ” 이러한 인식의 기반인 사회 성격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공유되고 있는 듯하다.

- (1) 한국자본주의는 소수 독점재벌과 외국독점자본이 지배하는 반민중적 지배구조, (2) 한국 자본주의는 매관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이 농후, (3) 농촌에서 반봉건적 관계가 지배적, (4) 이런 반봉건성이 농후한 대외 의존적 재벌독점 경제구조는 민족자주적인 자립경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들이었다. 매관성, 반봉건성, 종속성 등 용어와 이의 대안으로서 자립경제는 이전 시기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매관·종속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반제투쟁은 곧바로 좌경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반제투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반파쇼 투쟁을 1차적 과제로 설정했다. 이런 측면에서 남민전의 기본적인 정치적 노선은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전면에 대두시킨 노선상의 문제의식은, 남민전과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과 그 차이와 유사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이르러 민족해방투쟁의 성과가 나왔던 때였다. 대표적인 예가 75년 4월 베트남 혁명, 79년 2월 산디스티나 민족해방전선, 79년 이란 샤의 몰락이었다. 이러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급격한 고양은 활동가들로 하여금 투쟁의 대상이 단지 독재가 아니라, 반통일, 반민주, 반외세라고 볼 수 있도록 강제했다. 당시 이러한 인식에 대해 익명의 한 관계자는;

“ ... 이젠 당시 야당인사나 종교인사의 눈으로 보는 단순한 운동 모순인식이 아니지. 사실 이들(재야)의 반외세문제는 태생적 한계인거라. 한마디로 당시 민족해방 운동 노선을 처음으로 띄어 올린 셈이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민전 당시 운동정서는 NLPDR이지. 내 생각엔 민족, 계급 문제를 인식한 이런 인식이 남민전의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싶어

...

“ ... 결국 이렇게 볼 때 신식민지 사회에서의 민족해방이란 제국주의로부터의 고리를 끊어내고 최종적인 변혁을 이룰 때까지 민족모순의 과정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를 경과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김남주 1994)

이는 남민전이 판단한 당시 정세인식에서도 확인가능하다, “ ... 남한은 미일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화했고 그 주구인 매관자본가와 그와 결탁한 군사파쇼집단은 민중을 억압 착취 ... 민족자본과 중소기업은 특권층과 야합한 매관자본에 의하여 몰락 상태 .. 이런 정세 하에서 노동자, 농민, 소시민, 민족자본가, 양심기업인이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민중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연합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으로, 1) 각계각층의 산발적인 투쟁을 체계화하기 위해 통일적인 단일조직이 필요, 2) 그물처럼 얽어 놓은 악법의 굴레 때문에 합법투쟁의 한계가 극히 좁아졌고, 공개투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민전이 사용했던 민족경제론의 용어와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한 외세문제와 자립경제의 구축을 지향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박헌채와 눈에 띄는 차이가 드러났다. 교회, 재야 그리고 야당으로 구성된 세력의 외세문제의 불철저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해서 전선체 형식의 정치조직 결성과 대중투쟁에 기초한 민주적 정부의 수립, 합법적인 투쟁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사고 등은 박헌채의 눈에는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헌채는 남민전 구성원들과 거리를 두며 지켜볼 뿐이었다.

『대중경제론』 : 노예의 언어와 대중의 언어

그렇다면 박헌채에게 ‘정치적 실천’이란 무엇이었을까?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지만 조직에 속하지도, 쉽게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도 불가능했던, 그래서 경제평론자를 자임했던 그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실천의 계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박정희에게 정치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박정희에게 철차성, 선거, 정당 간 경쟁 등 서구 절차적 민주주의의 보편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박헌채는 어찌했을까? 일단 박헌채가 공식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맑스주의자인 그가 설사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그것은 해당 시기 한국에 적합하다고 사고하지도 않았다. 다만 70년대 ‘예외적인 정치적 개입’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970년 대선에서 김내중과 『대중경제론』 집필 작업을 공동으로 한 것이었다. 박헌채는 급기야 노예의 용어인 민족경제를 ‘대중경제’로 번역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선 왜 박헌채가 이런 생

각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의 생각을 쫓아가 보자.

이미 언급했지만 박헌체에 중요했던 것은 1) 기형적/이식적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적 생산력의 정체 해소("정상적인 국민경제"의 회복), 2) 국민적 재분배 메커니즘의 확보를 통한 민족구성원의 생존권 확보, 3) 1)을 위해 민중의 의지(=생산력 향상 의지)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가의지로 구체화시키는 것, 즉 '민주적 동원 메커니즘'의 창출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1981년 "자립경제의 실현을 위한 모색"에서 그는(강조는 인용자);

" ... 자립경제 확립은 민중의 힘과 창의력이 총동원되는 문제, 민중의지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가의지로 구체화시키는 문제 ... 자립경제가 민족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생활을 위한 소망과 합치하는 것이라면, 자립경제의 길은 한 나라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시작 ... 그런 의미에서 경제자립화의 노력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전제..."

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서 박헌체는 박정희의 외자의존 국가주도형 산업화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었지만, 국가 계획과 그 '성과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민족경제론에서 국민경제의 운영 방식으로 경제계획, 국영기업 등 국가자본주의적 경제영역의 확대 그리고 민중적 참여에 기반한 계획경제를 강조했다. 또한 " ... 경제계획이 자유방임이 갖는 사회적 생산력 발전에의 한계를 경제외적인 국가의지의 개입으로 극복 ...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갖는 역사적 진보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자유방임 상태에서 당위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제적 자유의 생존권 또는 생활권으로의 전화를 국가개입으로 실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박헌체 1978). 이처럼 박헌체는 국민경제의 자립은 그 재생산의 조건을 민족자본이 장악하는 것이라고 논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된 잉여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자 및 매관자본 영역의 전제를 막기 위해 국가자본주의 부문의 창설과 경제계획의 불가피성을 논했다(박헌체 1982).¹³⁾

그는 1970년 농공병진에 대한 글("농공병진에로의 환상과 농업문제의 핵심")에서, " ... 경제계획은 자립적 국민경제의 성립과정으로 사후적으로 인간의 계획된 의지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며, 후진국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갖는 중립적, 전 사회적 구성원의 이해의 집약자로서 역할에서 농업혁명(=사회적 생산력의 확대)의 가능성을 발견 ... 국가의 경제에의 변혁적 참여와 이를 기초지우는 것은 민족자본과 근로자 계층의

13) 그는 이와 관련하여, " ... 국가는 민족경제의 자립을 위한 주체적 담당자인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자립이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의 논리와 힘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자본의 영역을 ... 확대해야 한다 ... 국영기업을 수단으로 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은 민족자본과의 연합에 의해 국내 매관적 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 ..."이라고 논한다(박헌체 1982). 이 점과 관련하여 박순성(2001, 94)은 민족경제론이 박정희의 국가주도형 수출 전략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공유했던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 경제계획의 중요성 강조, 중공업우선 발전전략 그리고 민족주의의 강조는 식민지배를 벗어난 제3세계에서 가능한 발전전략의 기본 성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논한다.

적극적 정치참여"라고 규정한다. 또한 1981년 자립경제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글("자립경제의 실현을 위한 모색")에서는;

" ... 자립경제 확립은 민중의 힘과 창의력이 총동원되는 문제, 민중의지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가의지로 구체화시키는 문제 ... 자립경제가 민족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생활을 위한 소망과 합치하는 것이라면, 자립경제의 길은 한 나라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시작 ... 그런 의미에서 경제자립화의 노력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전제 ..."

이런 대목들은 경제계획에 의한 국가자본주의의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하는 동시에, 국가 -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아닌 - 의 민주적/변혁적 기능은 민중부문의 민주적 절차에 기초한 정치참여라고 정리하고 있다. 결국 밑으로부터 민중의 자발적인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발적 결사의 활성화와 이들을 기초로 한 민주적인 정치질서의 구축을 강조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민중의 자립적인 재생산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의지'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언급이다. 이는 박헌체가 국가주도형 동원체제를 적극적으로 사조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일부에서는 '민중주의적 동원 시스템' 등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1970년대에 이르러 오오츠카류의 자급자족적 공동체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의자/무역 비중의 최소화라는 사회적 생산력이란 의제 설정을 변용했다(정민 1986).¹⁴⁾ 그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안되었다는 대목에서 박정희의 경제성장을 인정하고, 독재는 문제가 있지만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7권 376).

앞서 본바와 같이 70년대 초반 박헌체의 인식 - 60년대 인식이기도 한 - 은 사회적 생산력의 향상, 민족구성원의 창조적 힘에 기초한 자력갱생(고립적/자립적 재생산구조), 외자와의 단절, 중립적 국가(자본)에 의한 생산력 증진에 기초한 합리적 경제잉여의 분배 그리고 이러한 목적(사회적 생산력의 증진)을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반매관 집단-통일전선) 등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70년대 후반 논문을 보면, 박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외자주도, 경제민족주의 결핍, 대외의존성 심화 등으로 비판하지만, '국가 계획에 의한 사회적 생산력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진보'라고 평가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민족의 잠재력 과시,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의 토착화, 국가의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 강령의 제시, 경제적 잉여의 자본화를 위한 제도적 기구로 경제계획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는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민주적 동원'을 긍정했고,

14) 좀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박헌체는 국민경제의 자율적 재생산의 기반을 국내시장에 기반한 내포적 공업화, 다시 말해서 무역의존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외자에 기초한 무역이 국민경제 재생산의 기반이 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을 지향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 좌담에서도 박헌체는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에 대해 비현실적이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정민 1986).

다만 다수 민중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에 기초한 것, 이른바 '민주적 동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생산력/재분배 구조의 구조적 변혁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그는 민중구성원 내부에서 노동자의 주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외연을 넓게 잡고 '통일전선'을 통한 민주적인 정치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개입 방식의 하나로 '민족자본 분과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부문과의 연합' 가능성은 타진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대상은 야당의 김대중이었다. 이미 김대중은 71년 대선 이전부터 '대중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를 발전시켜왔다. 그는 1966년 민중당에서 "대중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주창하며, 외자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돌아선 공화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와 공화당을 '반대중, 반사회적이며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이는 대공업 개발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중산층, 중소기업, 농공병진 그리고 내포적 공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경제를 주창했다(정상호 2007).¹⁵⁾

6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대 초반 정세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내포적 공업화를 주장했던 김대중은 박현채가 판단하기에 충분히 '연대할 필요'가 있던 대상이었다. 더군다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보수야당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고였으며, 이는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바로 광범위한 계급 계층을 포함하는 연대를 통해 민족자본 세력을 매개로 한 정권 장악을 통해, 민중의 정치참여에 근거한 민주적 국가동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 조건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 박현채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박현채는 『대중경제론』의 일부분을 집필했고, 다양한 인맥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했다. 당시 대중경제론은 각 분야 14명 정도의 논문을 취합, 박현채, 정윤희, 김경광 등이 온양 온천장 여관에서 2주 작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박현채는 자신의 논리를 사회나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매개체로 대중경제론을 집필했다(7권/512~3; 임동규 2006).

물론 박현채가 당시 보수야당인 신민당의 한계에 대해 모를 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의 대중경제론 집필 참여를 '보수야당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70년대 조건에서, 특히 60년대 제1차 인혁당 사건 이후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 졌다. 여전히 그는 4.19 이후 등장한 사회변혁 운동 세대 - 주로 통민청과 민민청 출신 - 와 비공식적인 교류를 했지만, 그들과 운동의 전략·술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중 시대의 문을 열자'는 슬로건과 더불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배포된 『대중경제 100문 100답』은 10만부가 발간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선거 당시에 누렸고, 이를 통해 박현채는 변형된 모습이지만 '대중경제론'을 통해 외자주도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대한 '희미한 대안적 모델'을 대중들 앞에 내밀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현채 그리고 국가주도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

15) 1966년 논쟁을 계기로 1967년 조선일보의 기획기사로 '중산층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69년 11월 『신동아』에 "대중 경제론을 주창한다"를,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내외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상호 2007).

안적 이론으로서 민족경제는 70년대에도 '대중의 언어'는 아니었다. 또 여전히 사회적 대립구도는 서민이나 중산층대 기생·매판집단이라는 소박한 인식이 강했다. 더군다나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 그리고 초헌법적인 유신 체제 하에서 민족경제는 '금기의 언어' 혹은 자기 언어를 우회적으로 감추어야 하는 '노예의 언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신체와 언어의 감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박현채는 자신의 글과 언어를 통해 대중들과 '공통의 화제'를 만들지 못했다. 그는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 차원에서 민족경제론을 다루었고, 이는 대중들의 언어로 번역되기 매우 어려웠다. 즉, 이를 반영하듯이 "민족생존권의 확보와 발전이라는 민족주의적 요구에 의해 국민경제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민족경제의 주체적 발전과 그것에 따르는 외국자원, 외환자본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 혹은 "정치경제학적인 경제이론의 식민지·반식민지에 대한 식민지 종속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단계의 적용, 이들 국가에 있어서 경제이론과 현실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불과하며, 새로운 일반 이론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민족경제론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전집 7권).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추상성과 모호함은 7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과 계급구조의 안착으로 사회적 균열이 증폭되자 다른 효과를 낳게 된다. 비록 체계적이지도 않고, 매우 과편적이었지만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 불공정한 정부의 행태, 기본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조금씩 확산된다. 그리고 대중들 그리고 그들을 조직화하려고 했던 학생운동가나 활동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 산업화 이외의 '다른 길'도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 몇 가지 예가 대학내 이념서클, 민청학련, 남민전 그리고 대중경제론 등이었다.

비록 '가슴은 뜨거웠지만 어떤 조직에도 속할 수 없던 스스로 혁명적 실천을 포기해야 했던박현채'는 비록 노예의 언어지만 각종 집필과 대중강연 등을 통해 민족경제라는 다른 정치경제 모델의 '포교자'가 되었다. 비록 그의 언어는 대중들에게 직접 번역될 수는 없었지만, 대학가와 운동 진영내 그의 명성은 '민족경제'는 각각 다른 맥락에서 대중들이 자신의 언어로 '변형'해서 해석하게 만들었다. 대학생들은 비록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읽히지는 않지만, 난삽한 그의 민족경제를 통해 반식민, 반매판, 반봉건 등의 용어를 학습하도록 자극받았다. 그리고 민중이 대중과 중산층으로, 변혁이 개혁으로 '변용'되었지만 대중들은 선거유세장에서 뿌려진 『대중경제 100문 100답』을 통해 '다른 사회질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을 '김대중의 대중경제'를 통해 상상하기도 했다. 물론 이 점에서 박현채 그리고 민족경제와 대중간의 간극 그리고 그 이론이 지닌 한계는 분명했다. 하지만 노예의 언어로 인해 나타난 그 불투명성과 난해함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대중과 민족경제에 어렴풋이 다가간 사람들에게 '다른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제공해준 '이데올로기적 원료'였다.

V. 결 론 : 박헌채 『민족경제론』의 역사적 연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박헌채는 해방 직후 전남 지역에서 빨치산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그에게 사회주의는 하나의 도덕이자 윤리적인 성격이었다. 바로 10대에 경험했던 ‘이른 정치활동 경험’은 그의 평생을 규정했으며, 동시에 민중, 민족 그리고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민족경제의 주제 테마를 구성하는 ‘원초적 모태’였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정서적으로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자가 되었기에, 빨치산 투쟁과 해방의 희망과 맺줄처럼 얽혀진 삶을 살았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4.19를 전후로 형성된 운동세대와 박헌채 간의 ‘차이’를 구성하는 ‘역사적 경험’일 것이다. 두 번째로, 박헌채는 4.19 운동세대들과 정치실천과 조직 문제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조급한 조직 결성이나 대중투쟁 등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다. 이를 반영하듯이 그는 4.19이후 운동세대와 교류하되, 같이 조직이나 실천을 도모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대중경제론』 집필 참여 등의 다른 길을 모색했다. 이는 앞선 시기 그의 ‘원체험’과 더불어 현실에서 그가 언어와 신체의 노예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던 자기절제 때문이었다. 끝으로, 박헌채의 민족경제론은 당대 직접적으로 대중의 언어나 대중들의 공통의 화제로 전파되지는 못했다. 이는 개념이자 이론으로서 민족경제의 추상성과 모호함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한계는 대중과 운동집단에게 박정권의 국가주도 자본주의화 전략과 다른 정치경제적 모델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원료로 작동하기도 했다.¹⁶⁾

이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민족경제 맹아적 형성에서 해방 직후 박헌채의 경험의 ‘독특성’을 밝혔고, 다음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민족경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박헌채 개인의 미시적인 삶의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4.19 운동세대와 박헌채와의 유사성과 종별성을 밝힌 점이다. 끝으로, 그간 민족경제를 논리적·이론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간과되었던 대중 경험에 민족경제와 그 흐름이 미친 영향을 ‘시론적’으로 다룸으로써, 향후 민족경제와 박정희 시기 대중과 민중간의 ‘소통’이란 연구 과제를 도출한 점이다.

본 연구는 민족경제라고 불린 한국 산업화 시기 ‘실패한 류의 주장’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모순 - 민중, 민족모순, 분단 등 - 에 대한 통찰을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시기는 한편으로 정치적 억압에 의해 ‘조용한 시기’처럼 인식되거나 야당이나 재야 인사들의 ‘민주회복’ 투쟁만으로 채색되곤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학생들의 씨름, 모험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 혁명적 조직운동 그리고 박헌채 등으로 대표되는 대중과 대중운동에 직·간접적으

16) 다만 본 연구의 IV장에서 다룬 민족경제론이 대중경험에 미친 영향과 이것이 어떻게 대중들에 의해 변용되고 선택되었느냐는 좀 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학생활동가나 조직운동가 이외에 대중경제론을 받아들인 일반 대중 -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 등 - 의 경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과제가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로 영향을 미친 지적인 탐구와 정치적 선전이 성장하고 교차했던 시기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사 그리고 현대사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이제는 시대착오적으로 한계가 많은, 심지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민족경제라는 언어와 이를 변용하고 해석하고자 했던 주체를 복원시키고자 했다. 박헌채 그리고 민족경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쩌면 역사 속에서 잊혀진 '폐배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민족경제를 당대나 현재에 실패한 이론이란 학설이나, 혹은 박헌채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가 생존했다면 FTA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식의 속류적 해석에 맞선다는 생각으로 민족경제의 형성, 박헌채의 삶과 경험 그리고 민족경제와 대중의 경험을 다루었다. 바로 박정희 시기 대중들은 불투명하지만 민족경제의 언어를 통해 개발주의가 주어진 불가피한 '자연법칙의 산물'이 아님을 그들이 변용한 '언어'를 통해 점차 이해하게 되었으며, 조국근대화라고 불린 프로젝트가 모든 인간을 노예나 위선자 혹은 범죄자로 만드는 체제임을 회미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박현채 개인 저작

- 박현채(1977), 『民衆과 經濟』, 正宇社
박현채(1978), 『민족경제론』, 한길사
박현채(1981a), 『資本主義發達史研究序說』, 한길사.
박현채(1981a), 『韓國農業의 構想』, 한길사.
박현채(1982), 『한국경제의 구조와 논리』, 풀빛
박현채(1984a), 『한국 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박현채(1984a), 『韓國資本主義와 民族運動』, 한길사.
박현채(1985),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Ⅰ)」, 『창작과 비평』 57호
박현채(1986), 『한국경제구조론』, 일월서각
박현채(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돌베개
박현채, 조희연 편(1989), 『한국사회구성체논쟁(Ⅰ)』, 죽산
박현채 전집 발간위원회(2006), 『박현채 전집』 1~7권, 해밀.

2) 연구 논문

- 강수택(2001), 「박정희 정권 시기의 지식인론 연구」, 『사회와 역사』, 제59집.
권윤혁(1962), 「민족민주주의」, 『사상계』, 5월호.
기세문(2006), “박현채 선생을 추모하며,” 『아! 박현채』, 해밀.
김경추(2005), “새 단계의 싸움에 추는 격문,” 『코리아포커스』 10월 5일자.
김금수(1995), 「그 사람이 수상 될 거야」, 박현채선생회갑기념논문집 『민족경제론과 한국 경제』, 창작과 비평사
김금수(2006), “문화부 중대장의 이상과 실천,” 『아! 박현채』, 해밀.
김낙중(2006), “박현채와의 인연,” 『아! 박현채』, 해밀.
김남주(1994), 『김남주의 삶과 문학 (1)~(2)』, 시와 사회.
김대중(1971), 『대중경제론 100문 100답』, 대중경제연구소.
김봉춘(1961), “통일문제에 관한 몇 가지 소견,” 『영남일보』 1월 28일.
김세원(1991), 「4월혁명 이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 사회당·인혁당·남민전」, 『역사비평』 제간 15호, 역사비평사
김세원(1991), 『비트』, 말과 놀이.
김영섭(1962), 「한국경제발전은 불균형성장을 택해야 한다」, 『사상계』, 5월호
김원(2004), “민족경제론의 지성사,” 한국정치연구회 비판정치학대회, 2004.10.
김원(2007),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연구 - 8.10의 기억.” 200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최 종학술발표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8월.
김원일(2005), 『푸른 혼 : 김원일 연작 소설집』, 이룸.
김일영(2006),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 『

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 선인

- 김정강·윤식 구술(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 김진현(1963), 『지게발국과 한국』, 『사상계』 9월호
- 김질락(1991). 『어느 지식인의 죽음』, 행림출판사.
- 류동민(2001), 민족경제론의 형성과정,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문순태(2006), “백아산 시절을 이야기하다,” 『아! 박현채』, 해밀.
- 박동양(1961), 『농촌 잠재실업과 이농』, 『사상계』, 2월호
- 박병일(1961), 『경제자립과 외자』, 『사상계』 7월호
- 박석률(1989).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녹두
- 박순성·김균(2001), 『정치경제학자 박현채와 민족경제론—한국경제학사의 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48호, 박영률 출판사.
- 박중기(2005), “지금 우리는 민족·지주·평화를 잃고 있다,” 『코리아 포커스』 10월 8일.
- 박태순·김동춘(1991),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 박현채(2002), “위기시대의 그리운 사람 : 민족경제론과 박준옥 교장선생님.” 『월간 사회평론』 92권 8호
- 박희범(1961), 『후진국에 있어서의 경제계획』, 『사상계』 3월호
- 백기완(2006), “아, 박현채 교수,” 『아! 박현채』, 해밀.
- 송기숙(2006), “만년 야인 박현채,” 『아! 박현채』, 해밀.
- 송정석(2006), “그리운 친구여 아! 박현채,” 『아! 박현채』, 해밀.
- 신영복(1992). “대담: 신영복 교수,” 『이론』 겨울호
- 안병직(1995), 『서문』, 박현채선생회갑기념논문집 『한국경제 : 쟁점과 전망』, 지식산업사
- 안병직(2002), 『한국 현대사의 진보와 보수』, 『월간조선』, 2002년 5월호
- 안현효(2007), “민족경제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경제학.”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민족과 영토성 다시 읽기』,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2007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
- 양우진(1994), 『현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 연구 : 국가자본주의 국면의 형성과 해체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 에릭 홉스바움 이희재 역(2005), 『미완의 시대』, 민음사.
- 유한종 구술, “혁신계 변혁-통일운동의 맥,” 『역사비평』 1990년
- 이대근(2006), “박현채 선생과의 만남,” 『아! 박현채』, 해밀.
- 이미숙(1995), 『병상에 누운 민족경제론—한국 정치경제학의 개척자 박현채』, 박현채선생회갑기념논문집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사.
- 이미숙(2006), “박현채 선생과 함께 한 10년,” 『아! 박현채』, 해밀.
- 이병천(2001), 『다시 민족경제론을 생각한다—국민경제와 민주주의의 정치경제학』, 『동향과 전망』 48호, 박영률출판사
- 이제오(1984),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 이종범(2006), “인연과 기억,” 『아! 박현채』, 해밀.

- 이춘형(2006), “유달리 정이 많았던 친구여,” 『아! 박헌재』, 해밀.
- 임동규(2006), “아! 박헌재,” 『아! 박헌재』, 해밀.
- 임현영(2006), “박헌재 선생에 대하여,” 『아! 박헌재』, 해밀.
- 장기형(2005), “나헌터 현채는 구세주였제-태백산맥 선요원 장기형 인터뷰,” 『코리아포커스』 10월 18일자.
- 장두석(2006), “박헌재 형을 기리며,” 『아! 박헌재』, 해밀.
- 장상환(2001), 「맑스주의자 박헌재를 말한다 -박헌재 민족경제론에 대한 최근의 주장들과 그 비판-」, 『이론과 실천 2001년 8월호』.
- 장준하(1964), 「권두언: 유산된 혁명 3년」, 『사상계』 5월호.
- 정건화(1989),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 발전과 민족경제론”, 박헌재, 조희연 편, 『한국사 회구성체논쟁(I)』, 죽산.
- 정건화(2002), 「민족경제론의 재검토: 민족경제론의 형성, 발전과 한국 민족주의」, 『동향과 전망』, 겨울호.
- 정건화(2007), “민족경제론의 계승과 극복을 위한 시론적 연구- 내재적 비판의 의의와 과제를 중심으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민족과 영토성 다시 읽기』,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2007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
- 정민(1986), “대담 : 민족경제론—민족민주운동의 경제적 기초를 해명한다”, 『현단계』 제1집, 한울.
- 정상호(2007), “대중경제론의 형성과정과 정치적 의의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용역 최종발표회, 2007년 8월 20일(미발간 원고).
- 정윤광(2005), 『저항의 삶』, 백산서당.
- 정윤형(1995), 「민족경제론의 역사적 전개」, 박헌재선생회갑기념논문집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사.
- 조동필(1963), 「민생고의 정치경제학: 저성장의 한국경제」, 『사상계』 7월호.
- 조석근(2001), 「민족경제론 형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이론화 과정」, 『동향과 전망』 48호, 박영물출판사.
- 조석근(2007), “민족경제론의 식민지시대 역사인식 재조명.”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민족과 영토성 다시 읽기』,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2007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
- 조용범(1973), 『후진국경제론』, 박영사.
- 조정래(1988), 『태백산맥』, 한길사.
- 조정래(2006), “아직도 떠나지 않은 선생님,” 『아! 박헌재』, 해밀.
- 주동욱 편저(2005), 『이수병 평전 : 인혁당재건위 변혁운동지도자』, 민족문제연구소.
- 최장학(2006), “이 고로 저 고로 박고로여,” 『아! 박헌재』, 해밀.
- 타끼자와 히데끼(1985), 김용관 옮김, 『현대한국민족주의론』, 미래사.
- 타끼자와 히데끼(1995), 「한 일본인이 본 민족경제론」, 박헌재선생회갑기념논문집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사.

탁희준, 이정재(1961), "大邱社會의 動態," 『사상계』 1961년 5월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2001), 『4·19와 남북관계』, 민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4a), 『내가 겪은 건국과 갈등』, 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4b),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 선인
 홍석률(1997),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황용주 구술(1998). "비판적 지식인에서 현실 참여자로" 『격동기 지식인의 세가지 삶의 모
 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 신문자료

『민족일보』, 『영남일보』

4) 영상자료

푸른영상(2000), 『4월 9일』

한국방송공사 미디어(2004), 『민중을 위한 경제, 박헌재』

5) 인터뷰 및 구술 자료

김금수(前민민청 간사장)

김낙중(前통민청)

이수일(前 남민전)

황건(前 민통련 간부)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

- 전남지역의 조직결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

오 승 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4·19혁명 직후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출범과정에서 등장했다가 5·16 쿠데타의 발발(勃發)과 함께 사라졌던 혁신세력의 정치조직결성과 그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전남지역이다. 여기서 전남지역은 현재의 광주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적 범주다. 혁신세력의 등장과 소멸은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성격은 물론 그 등장과 실패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현대정치사 서술에서 혁신정치세력의 비중이 크지 않은 이유는 혁신세력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낙인의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언제나 그렇지만 낙인은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의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미 제2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고(고성국 1990; 정기영 1990; 김동춘 1990; 김동춘 1991), 제2공화국 민주주의가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최장집 1996; 김수진 1996; 이갑윤 1996; 손호철·정해구 1996). 그러나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김광식 1990; 정창현 1991). 이는 혁신세력이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등장과 실패의 과정에서 제도정치권 내부의 지배적 행위자가 아니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념지형의 우편향 불구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겠지만, 혁신세력 하면 분열과 공허한 낭만주의로만 기억하는 우리의 치우친 기억도 혁신세력의 정치적 조직화와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더구나 중앙 단위의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이라면 몰라도 각각의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진 혁신세력의 정치적 조직화와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는, 몇몇 인터뷰를 제외하면, 부족한 정도를 넘어 거의 부재하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최근 들어 인민혁명당 재건단체 사건, 민족일보 사건, 진보당 사건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과거사' 정리를 통해 이들 사건의 주체이자 피해 당사자였던 혁신세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폭되었다. 아직은 사건조사보고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세력이 관련된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의 차원을 넘어 사회운동사의 관점에서 이들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학문적·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전까지 혁신세력을 단순히 억압적 국가권력(특히 박정희정권)의 피해자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때로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고 때로는 집권을 위해 정치적 경쟁을 벌였던 이들의 '과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이후의 사회운동에 집중되었던 연구가 정부차원의 과거사 정리라는 정치적 흐름과 맞물려 박정희정권 하의 사회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시대 사회운동의 기저에 흐르고 있던 '4·19혁명공간의 복원'이라는 사회운동의 한 가지 목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4·19 혁명공간에서 활동했던 혁신정당 및 혁신정치세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를 1960년대의 재조명 경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나 혁신정치세력의 조직화와 정치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한 1960년대 사회운동의 재조명은 엄격히 말하면 '재조명(refocusing)'의 성격보다는 '발견적(heuristic)' 성격이 더 강하다. '혁신세력'으로 지칭되던 정치세력들은 한국현대 정치사의 소수자이자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재조명에 앞서 이들의 역사적 흔적에 대한 발굴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이 연구를 포함하여 1960년대 사회운동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혁신세력에 대한 연구가 직면한 몇 가지 어려움 중 첫 번째 어려움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단위의 정치조직과 활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무관심과 연구결과에 대한 학문적 외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60년대 당시에도 정치활동의 중앙 집중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단위에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당을 비롯한 정치단체들 역시 서울에서 '중앙조직' 결성에 주력했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중앙으로부터 다소 소외된 정치공간에서 활동했던 잊혀진 정치세력의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절대 부족과 사례의 부족 외에도 대중의 망각과 외면이라는 사중고(四重苦)를 견딜 것을 요구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한국현대정치사는 물론 사회운동사에서 중요한 모멘텀이었던 4·19혁명 직후 혁신세력의 정치조직결성과 활동을 전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되었던 4·19혁명 직후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출범과 관련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혁신세력의 활동을 어떻게 규정했으며, 4·19혁명 직후 혁신세력의 정치기획은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균열구조와 정치제도(선거제도)가 혁신정당에 미친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혁신정치세력의 7·29총선 당시의 성과

에 대한 평가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 III장에서는 전남지역의 혁신정치세력의 조직결성과 정치활동을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사회당 등 혁신정당 결성과 정당들의 활동, 통일민주청년동맹 전남도맹, 민족통일연맹 등 청년운동단체의 조직결성과 주요 활동,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전라남도협의회 등 통일운동단체의 결성과 활동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4·19혁명 직후 전남지역의 혁신운동을 조직결성과 정치활동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보고, 이러한 측면들이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혁신세력의 정치

1. 혁신세력의 기원과 등장

원래 혁신세력이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에도 속하지 않았고 한국민주당에도 속하지 않았던 세력, 말하자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인민당 세력 또는 근로인민당 같은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한다(송남헌·정태영·서중석 1995, 71). 이러한 이유로 혁신세력은 좌파인 조선공산당계열로부터는 협상파로, 우파인 한국민주당계열로부터는 중간파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다가 단정 수립과 한국전쟁 이후에는 합법적인 활동이 허용되지 않아 활동을 중단하거나 지하화를 강요받았다.

혁신세력이라는 명칭이 다시등장하게 된 것은 1956년의 정·부통령선거였다. 조봉암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을 무렵 혁신세력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혁신정당인 진보당을 통해 조직적 결집을 이뤄낸다. 예속자본가와 지주계급에 기반을 둔 보수정당에 충격을 주며 등장한 진보당운동은 당시 민중들의 사회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한국전쟁 후 한국사회에 내재해있던 피해의식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에서 벗어나 보수세력과는 계급적 기반이 상이한 비판적 대안세력에 의해 추진된 애국적 정당운동의 한 형태였다.¹⁾

혁신세력이라는 명칭은 역사적 성격이 강한데, 그 의미와 대상이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했기 때문이다. 단정 수립이전에는 여운형과 김규식계열의 협상파 혹은 중간파를 지칭하는 명칭이었다면 단정수립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이 탄압을 받자 혁신세력의 외연은 여운형과 김규식계열은 물론 남로당을 포함한 구(舊)좌익 활동가들까지 모두 포괄하게 되며, 다시 4·19혁명을 거치면서 혁신세력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하며 이전의 4·19혁명 이전의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에 동조·동참했던 정치세력(특히 청년운동세력)으로까지 확대되는데, 거칠게 표현하면

1) 진보당에 대해서는 권대복(1985), 정태영(2006)을 참조하라.

“반(反)이승만(자유당)·비(非)민주당” 정치세력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명칭이 바로 혁신세력이었을 정도였다.²⁾

혁신정치세력들은 4·19혁명과 함께 합법적 공간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혁신세력의 르네상스’를 구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4·19혁명과 함께 찾아온 혁신세력의 짧기만 했던 르네상스는 5·16 쿠데타의 발발과 함께 종말을 고했고, 짧은 부흥의 기간 동안 단결되고 통일된 정치활동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후 혁신세력은 1964년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나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및 인혁당 재건 단체 사건, 그리고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극(荊棘)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과 고초의 상징이 되었다(송남헌·정태영·서중석 1995, 99~100).

따라서 우리가 혁신세력의 기원과 등장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생론적 측면’만이 아니라 ‘형성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광식(1988; 1990)을 들 수 있다. 김광식은 4·19 이후 혁신세력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김광식 1988, 132~138; 김광식 1990, 184~191), 분단체제의 형성과정, 한국전쟁의 영향과 이승만정권의 통치, 그리고 4·19혁명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먼저, 분단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단정의 수립과 함께 단정을 지지하던 세력이 이승만정권의 지배세력으로 편입되었다면, 김구·김규식을 비롯한 이른바 비(非)단정세력과 좌익세력들은 분단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승만을 비롯한 단정세력의 대항세력으로서 혁신세력의 기초를 이루었다. 여기에 한국전쟁이라는 전국적인 차원의 열전(熱戰) 경험은 구(舊)좌익의 이념적 공간과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완전히 증발시켜버렸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간의 편협화는 혁신세력이 비록 좌익은 아니었지만 혁신세력의 이념적 지향을 극도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혁신세력에게 미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좌파와 혁신세력의 힘을 약화시켜 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비록 대외적으로는 UN감시 하의 남북한 인구비례 자유총선거의 실시를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주창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의 수복, 즉 북진통일론을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혁신세력이 평화통일론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분단이 이승만정권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다면, 통일은 이들 단정세력의 지배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여기에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대비되는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론의 제기야말로 이승만정권에 대항하는 혁신세력이 제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대안이었다.

2) 그런 의미에서 혁신세력 혹은 혁신세력이라는 개념은 지시대상(referent)이 명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사건에 따라 개념의 외연과 범주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깔때기류(funnel-like)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2.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

제2공화국 민주주의는 4·19혁명으로부터 5·16 군사쿠데타까지의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다.³⁾ 복잡한 이론적 설명에 대한 생략이 허락된다면, 제2공화국 민주주의는 제1공화국에 비해 훨씬 열린 이념공간을 제공했다. 4·19혁명은 단정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우편향 불구화된 이념공간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직접적 수혜자는 혁신정치세력이었다. 제1공화국 하에서 지하화(地下化)를 강요당했던 혁신세력이 합법적 정치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7·29총선이라는 보다 열린 정치공간에서 “보다 폭넓은 정치행위자들이 열린 정치적 이슈를 갖고 정치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최장집 1996, 32). 이 점은 4·19혁명이 혁신세력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였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형성된 제2공화국 민주주의가 혁신세력에게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만을 가져다 주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정적 효과,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에 제약을 가했던 측면도 있었다.

우선 4·19혁명으로 형성된 새로운 시민사회의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4·19혁명은 전통적인 한국의 국가-시민사회관계를 역전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이전의 ‘강한 국가-약한 시민사회’의 관계는 4·19혁명을 계기로 ‘약한 국가-강한 시민사회’로 역관계가 역전되면서 시민사회의 폭발현상을 가져왔다(최장집 1993, 379~386). 4·19혁명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학생, 교수, 문필가, 언론인 등으로 상징되는 도시중산층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은 근대적인 보통교육제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이식한 1세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었다.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은 제1공화국 당시의 어용성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혁명의 주도세력이 될 수 없었다.

최장집에 따르면(최장집 1996, 34), 한국전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모순적인 이중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반공보수주의의 강화이고(부정적 효과),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 전체에 걸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고 그 가치가 전사회에 넘쳐흐르도록 했다(긍정적 효과). 4·19혁명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순적 이중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승만류의 편협한 반공보수주의가 정치적으로 퇴진했지만, 그렇다고 반공보수주의가 시민사회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며, 권위주의에 대항했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롭게 변용되었다. 새로운 시민사회의 주도세력들은 분단(국가)상태의 극복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지만, 혁신세력이 주창했던 사

3) 물론 허정 과도정부의 존재와 7·29총선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공화국 정부의 출범이라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2공화국 민주주의는 1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 존속했을 뿐이다. 다만, 제1공화국의 붕괴와 5·16 쿠데타 직전까지의 시기라는 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때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전체 과정을 보다 정밀한 초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여기서는 4·19혁명 직후부터 5·16 군사쿠데타까지의 시기를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시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회주의나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통일국가의 이념으로서 수용하지는 않았다. 혁신세력이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혁신세력은 4·19혁명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시민사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이슈들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새로운 시민사회의 성격과 함께 제2공화국 민주주의에서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을 규정했던 또 하나의 제약조건은 정치제도의 편파성이다. 제도는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 제도를 만든 과정에 참여했던 행위자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혁신세력은 4·19혁명의 주체세력도 아니었으며, 시민사회 내부의 주도세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기획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제2공화국 민주주의는 4·19혁명을 통해 퇴진이 예정되어 있던 자유당과 집권이 예정되어 있던 민주당(구파와 신파)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최장집 1996; 김수진 1996; 이갑운 1996). 퇴진하는 구세력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집권하는 신세력의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시도의 절충점이 제2공화국 헌법이었고, 7·19 총선의 게임물이었던 선거법이었다.⁴⁾

당시 제정된 선거법은 임기 4년의 민의원 233명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임기 6년의 참의원 58명을 대선거구 소수대표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7·29총선 당시 범혁신세력의 통합정당이었던 사회대중당이 5.96%의 득표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면 혁신세력의 정치적 실패는 더 줄어들었거나 최소한 서울·경기도, 호남, 영남 지역에서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⁵⁾ 다만 이갑운이 정확하게 분석한 것처럼(이갑운 1996, 201), 7·29총선에서 혁신정당에 대한 지지가 해방 이전의 민중운동이나 해방정국에서 좌익 세력의 조직화 정도가 높았던 지역에서 더 높았을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낫다. 오히려 그런 지역일수록 한국전쟁과정에서 '학살의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혁신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일종의 '여촌야도'). 당시 민주당은 혁신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혁신정당 후보를 용공이나 친공후보로 공격했으며, 이러한 선거전술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제약조건은 제2공화국 민주주의가 제공한 엘리트 경쟁의 기본구도가 민주당 중심의 경쟁구도였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4·19혁명으로 기존의 지배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지배질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제도정치권내의 대안세력이었다. 민주당은 제1공화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4) 차기벽은 이러한 타협이 "4·19라는 정치혁명이 타도 이승만의 선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차기벽 1993, 164).

5) 김수진은 7·29총선 결과를 혁신세력의 실패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며, 7·29총선은 혁신세력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으며, 만약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최소한 14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김수진 1996, 174). 필자 역시 온갖 불리한 조건에서 치러졌던 7·29총선의 결과가 혁신세력에게 실패였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대실패라고 규정하기에는 지나친 점이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떤 근거에서 혁신세력이 14석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는 납득하기 곤란하다.

기간 동안 자유당에 맞서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구도를 유지해온 유일한 정치세력이기도 했다. 따라서 4·19혁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이 퇴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대변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는 민주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민주당이 신평파와 구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 분열이 결국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등장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사회의 대안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혁신세력은 제2공화국 민주주의시기에 스스로 제도정치권 내의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부정적 영향과 4·19혁명과정에서의 부재(不在)로 인해 시민사회 내에서도 대안정치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제약요건에 덧붙여, 혁신세력들의 주체역량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맥과 노선에 따른 혁신세력의 분열이 그것이다. 혁신세력은 7·29총선 전에는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으로 분열된 가운데 선거에 참여했으며,⁶⁾ 선거후에는 다시 급진적 통일운동노선을 견지할 것을 주창하는 세력과 절차주의적 기치를 토대로 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주창하는 세력 간의 대립으로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으로 4분되었다.

이러한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제약요건들로 인해 혁신세력은 7·29총선뿐만 아니라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존립기간 내내 보수-진보의 대결구도를 명확히 확립하지 못한 채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일관된 정치기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제2공화국 민주주의가 혁신세력에게 축복이었다는 평가는 단편적이고 오히려 제약이 되었던 측면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화국 민주주의 시기 동안 혁신세력의 정치조직과 활동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특히 4·19혁명을 통해 열린 이념공간에서 혁신세력이 제기했던 정치기획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혁신세력의 정세인식과 정치노선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퇴진을 가져왔지만, 불행하게도 4·19혁명의 주도세력이었던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만 있었을 뿐 이를 위한 정치기획과 조직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학생들이 혁명을 시작했지만 일단 혁명이 시작되자 혁명을 이끌고 갈 주체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승만이 퇴진하자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했고, 혁명의 주도권은 허정 과도정부와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 당시 혁신세력들은 4·19혁명을 민주혁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4·19혁명을 계기로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상일, 김달호, 윤길중, 박기출 등 지명도 높은 대부분의 혁신세력 지도자들은 전부 사회대중당으로 참여했고, 실제 한국사회당이 혁신세력 내에서조차 진정한 혁신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동지총연맹이 존재하긴 했지만, 사회대중당이 7·29총선을 대비한 범혁신세력의 통합정당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정권 하에서 억눌려 있던 저항세력들을 결집시켜 집단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4·19혁명 이후 형성된 혁신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자, 양심적 지식인, 독립운동가, 구 좌익인사들에 반자유당, 비민주당계의 보수파 인사들까지 포괄하고 있었는데, 거칠게 단순화하면 '반자유당·비민주당'을 지향하는 대다수 반대세력들이 혁신세력의 우산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때부터 혁신세력이라는 명칭은 초기의 조선공산당에도 속하지 않았고 한국민주당에도 속하지 않았던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세력에 반대하는(진보적인) 정치세력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확장되었다. 반보수주의 세력에게 혁신세력이라는 명칭은 마치 칼때기와 같은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정세인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이들이 지향했던 다종다양한 정치노선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9혁명 직후 혁신세력들은 대체로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치노선은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혁신세력 자체가 우파의 김구계열로부터 좌파의 남로당계열에 이르기까지 워낙 광범위한 정치지향을 가진 집단을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노선의 차이는 불가피했다. 혁신세력의 4·19혁명에 대한 인식은 1960년 6월 27일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회에서 보고된 문건인 <경과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한국사사료연구소 1986, 329~330).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자유당 전제정권 하에서는 반공이라는 미명 하에 혁신이라는 깃이 트기만 하면 관제공산당으로 허위 궤조하여 짓밟아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4·19민주혁명 과정에서 혁신세력이 아무런 주체적 역할도 담당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불법화된 당시의 정치정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4·19민주혁명은 빼앗긴 이 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탈환하고 관료매관자본의 농락으로부터 초래된 빈곤을 벗어나 진정한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대중들의 의식적 발로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억눌린 잠재적 또는 현재적 혁신세력이 집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문건을 볼 때, 4·19혁명 이후 혁신세력은 단순히 이승만정권의 퇴진이라는 혁명의 결과만을 강조한 채 혁신세력의 집단화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이들의 정세인식과 정치노선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의 정세인식이 안일했고, 정치노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권의 퇴진이라는 4·19혁명의 국내정치적 의미 이외에 기존 지배체제의 유지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의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으며, 자신들의 등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이로 인한 국내 정치세력간의 힘관계의 구체적인 전개방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어 무능함을 드러냈다(김

광식 1988, 139).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은 4·19혁명 이후 정세와 5·16 쿠데타의 발발이라는 우연적이지만 긴 호흡의 역사에서 볼 때 필연적이었던 정치환경의 변화에 혁신세력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혁신세력의 정치노선 역시 구체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일반적으로 혁신세력들은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로서 자신들의 이념적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세력을 보수주의적 정치세력과 구분해주는 구체적인 정치노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대답은 없는 듯하다. 대체로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공식화되고 한국전쟁으로 확정된 분단체제에 반대하고, 이의 안티테제로서 민족의 지주적인 통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형성하고 있을 뿐, 혁신세력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관계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 역시 단순화해서 정리할 수 없다. 다만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사회당 등의 강령이나 창당선언문 등에서 공통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고, 좌우의 전체주의에 대해 모두 경계하는 입장이라는 점은 이들의 정치노선이 기본적으로 통치형태 수준에서 전체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읽을 수 있는 정도다(권회경 1989, 49~97).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세력들은 집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제2공화국 시기를 통틀어 혁신세력의 집단화는 다음의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4·19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합법적인 대중정당(혁신정당)의 결성 흐름, 청년운동가들의 정치적 조직화 흐름, 대중적인 통일운동조직의 건설이 그것이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결성된 합법적인 대중정당은 사회대중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등의 정당이 있고, 이와 연계된 청년운동은 통일민주청년동맹(동민청)과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각 대학에서 결성된 민족통일연맹(민통련) 등이 있었다. 혁신세력 정치활동의 중심은 통일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7·29총선 실패 이후 혁신정당들은 정치투쟁과 통일운동의 결합을 시도했고, 그 결과가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와 중립화통일총연맹(중통련) 등 대중적 통일운동조직의 건설로 나타났다. 민자통의 결성은 지역 혁신세력의 역량이 총집결된 조직 재통합운동이자 연대운동이었지만, 결성과정에서 혁신정치세력의 분열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재현했는데, 민자통 결성과정에서 통일사회당 세력 등이 이탈하여 중통련을 건설한 것이 그 예이다.

Ⅲ. 전남지역 혁신세력의 조직결성과 정치활동

1. 혁신정당의 조직화와 활동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4·19혁명 이후 결성된 혁신정당의 분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신정당의 분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4·19혁명 직후 혁신정당의 조

직화와 활동에 대한 설명이 편리해진다.

<표 1> 혁신정당의 분화과정 요약

4·19혁명 이전	4·19혁명 당시	5·16 군사쿠데타 직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준(여운형)→인민당→사로당→근로인민당(5당 캄파계⁷⁾) ■민족자주연맹(김규식)→진보당(조봉암) 	<p>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당(5당 캄파계, 최근우) ■혁신당(진보당계 일부, 장건상) ■사회대중당(진보당계 일부, 김달호) ■통사당(진보당계 일부, 민주혁신당, 한국사회당, 민족자주연맹, 민사당, 사회혁신당)
<p>한국전쟁 이후 지하화 진보당 해산 (조봉암 법살)</p>	<p>7·29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정당 결성</p>	<p>이남계보에 따른 분화와 대중운동과의 결합 시도</p>
<p>혁신세력 침체·잠복기</p>	<p>범혁신세력 통합기</p>	<p>분열과 재통합 모색기</p>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정당은 4·19혁명을 기준으로 침체·잠복기를 거쳐 범혁신세력 통합모색기, 분열과 재통합 모색기를 거쳤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는 것은 4·19혁명 이후부터 5·16 군사쿠데타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전남지역에서 결성되었던 혁신정당들이다.

1) 사회대중당

1960년 5월 12일 발기한 사회대중당은 이승만정권이 퇴진한 후 4월 혁명의 열기가 고조되던 시점에서 결성준비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정당이다.⁸⁾ 사회대중당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순으로 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각 지역에서 도당창당준비위 결성대회를 마치자 1960년 6월 17일 삼일당(구 진명여고 강당)에서 범혁신세력의 집결체인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 결성대회가 치러졌다.

사회대중당은 창당선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자주의 확립은 국토통일의 성취와 자립경제의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촉진 달성하여 자립경제와 국토통일의 성취를 촉진함과 동시에 광범한 국민 대

7) 5당 캄파계란 여운형이 근로인민당을 결성하던 당시 근로인민당을 중심으로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5개 정당이 1946년 6월 20일 ‘5당 공동컴류니케’를 발표하여 중도좌파 정당들의 단합을 꾀했는데, 이를 5개 정당을 ‘5당 캄파세력’이라 지칭했으며 이들은 이후 지속적인 행동통일을 모색했다.

8) 사회대중당 발기인으로는 최근우(근민당), 김달호(진보당), 김성숙(근민당, 민혁당), 유병목(근민당), 유한중(한독당, 근민당), 이동화(민혁당), 이훈구(민족주의민주사회당), 박기출(진보당), 서상일(민혁당), 윤길중(진보당), 윤희현(부산혁신세력총집결) 등이다(정태영 1995, 539).

중에게 자유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줄 참다운 민주적 복지사회 건설의 경제적 토대를 든든히 구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정태영 1995, 546).

또한 사회대중당 정강 전문에는 "사회대중당의 사상적 기초 내지 이론적 지도 원리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 즉 민주적 사회주의이다.···우리 사회대중당이 부하하고 있는 역사적 대과업은 소비에트적 독재 및 확장주의를 조속히 균형화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일, 자주독립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일, 만인공약의 참다운 민주적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일 등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정태영 1995, 546~547).

사회대중당은 정강 전문에 당의 사상적 기초 내지 이론적 지도 원리로서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로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인민당, 진보당의 이념적 지도 원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사회대중당은 소비에트적 독재 및 확장주의를 거부 배제하는 일을 역사적 과업 중의 하나로 설정하는 등 이념적 지향에 있어 비(非)자본주의·비(非)사회주의 노선, 다시 말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결합된 한국화된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대중당의 노선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데, 사회대중당의 이념과 정책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정당의 존립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사회대중당은 제5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우 1달여 앞둔 6월 14일 결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혁신세력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결집한 정당으로서 내부구성원들의 이념과 계보, 정치적 목표 등에 있어 이질성이 컸다. 7·29총선에서 실패한 이후 4당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총선 이전의 범혁신세력의 통합이라는 조직의 위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으며, 당이 분리된 후에도 좌파적 성향이 강했던 사회당과 상대적으로 우파적 성향이 강했던 통일사회당 사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대중당이 혁신 4당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대중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지도부 중 다수가 사법 처리되면서 조직이 와해되어버렸다. 사회대중당을 비롯해 4·19 혁명 이후 등장했던 혁신정당의 이념과 정책, 노선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들의 이념과 정책, 노선에 대한 평가는 해방 이후 이들의 활동경력, 단정수립 이후 행보,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활동, 4·19공간에서의 활동, 5·16 쿠데타 이후의 분화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대중당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록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회대중당의 실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대중당은 7·29총선을 계기로 총선 전의 사회대중당과 총선 후의 사회대중당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총선 전의 사회대중당이 선거에 대비한 범혁신세력의 통합을 모색한 정당이었다면 총선 후의 사회대중당은 조직의 활동력을 거의 상실한 채 혁신세력 내에서도 소

수정당으로 전락해버린다. 7·29총선 전의 사회대중당의 주요 활동이 총선에 입후보할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지원(제정·인력)하는 것이었다면, 7·29총선 이후의 사회대중당의 활동은 민자통을 매개로 이달한 사회당, 통일사회당 세력과의 재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재통합의 모색은 '2대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의 결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회대중당 전남도당 역시 중앙 사회대중당의 결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결성이 이루어졌다.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의 결성에 참여한 인사들은 크게 보면 진보당계와 비진보당계로 나눌 수 있다. 진보당계열로는 임춘호, 조중환, 박세원 등이 참여했고, 비진보당계열로는 조선공산당 간부로 이정윤계인 강석봉, 한길상, 조극한, 이기홍 등 반 박헌영계 인사들, 건국준비위원회 전남도 부위원장을 지낸 국기열, 김철 등 28명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대중당 전남도당결성준비위가 구성되었다(김세원 1993a, 328). 전남도당 결성준비위를 통해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의 지도부가 선출되었는데, 도당위원장 국기열, 총무부장 조중환, 조직부장 박세원, 선전부장 임춘호였으며, 그밖에 강석봉, 한길상, 이기홍, 서동열, 김철중, 정균형, 김주섭, 임무창 등이 임원으로 참여했다. 7·29총선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심사는 박세원, 조중환, 임춘호가 주로 담당했다고 한다(김세원 1993a, 330).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1960년 7·29선거에서의 성공 여부, 다른 하나는 혁신 4당으로 분열된 이후의 활동이다. 우선, 제5대 민의원선거에서의 성공 여부를 살펴보자.

제5대 민의원 선거에서 사회대중당은 전남지역 32개 선거구 중 22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자를 공천했다.⁹⁾ 제5대 민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를 보면 전남지역 32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은 29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무소속 후보가 2개 선거구에서, 통일당 후보가 1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사회대중당은 22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했지만 단 1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도 민주당이나 자유당, 통일당에 뒤졌다.

전남지역 32개 선거구 중에서 비(非)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제22선거구(영암)에서 통일당의 김준연후보가 민주당의 무소속 박종오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경우와 제15선거구(고흥)에서 무소속 서민호후보가 역시 무소속인 지영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는데, 이 지역은 전남 32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공천을 하지 않았던 선거구였다. 또한 제20선거구(해남)에서는 무소속 홍광표후보가 자유당 김병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이들 비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3인의 당선자 중 통일당의 김준연은 1928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재직 시 '제3차공산당사건(ML당사건)'에 관련되어 7년간의 옥고를 치른

9) 7·29총선 당시 전남지역의 각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의 득표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index.html>)을 참조하라.

경력이 있지만, 해방 이후 한민당에 입당하여 제3대와 제4대 민의원을 역임하는 등 통상적인 혁신계 정치인들과 계파는 물론 정치행적 자체가 너무도 달랐다. 서민호 역시 1967년 대중당 소속으로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는 등 혁신세력과 일정한 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경한 반공주의자였고, 보수적인 이념을 포지했던 인사였다.¹⁰⁾ 해남에서 당선된 무소속 홍광표 당선자는 혁신세력과는 무관한 정치인이었다.

결국 전남지역 32개 선거구에서 범혁신세력의 통합정당인 사회대중당은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으며, 득표율 역시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합계와 비교할 때 뒤진다. 7·29총선에서 사회대중당은 전국적으로 541,021표를 득표해 5.96%를 득표했고, 이는 민주당의 41.71%, 무소속 합계 46.80% 보다 크게 낮고,¹¹⁾ 전남지역만 보더라도 민주당 46.01%, 무소속 합계 40.82% 보다 낮은 8.16%의 득표율에 그치고 있다. 22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의 득표율치고는 낮은 득표율이다.

7·29총선 당시 전남지역 선거구에서 각 정당별 득표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정당별 득표현황

	합계	민주당	자유당	사대당	한사당	통일당	한독당	기타	무소속
전국 (득표율)	9,077,835	3,786,401 (41.71%)	249,960 (2.75%)	541,021 (5.96%)	57,965 (0.63%)	17,293 (0.19%)	26,649 (0.29%)	149,366 (1.65%)	4,249,180 (46.81%)
전남 (득표율)	1,271,405	585,030 (46.01%)	41,109 (3.23%)	103,731 (8.16%)		14,878 (1.17%)		7,630 (0.60%)	519,027 [*] (40.8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sinfo/index.html>)

이처럼 7·29총선에서 사회대중당의 실패는 다음 수순으로 당의 분열을 예고했다. 7·29총선을 앞두고 범혁신세력이 선거참여를 위해 급조한 성격이 강했던 사회대중당은 선거 실패로 당을 유지·결속시킬 구심점을 사실상 상실했고, 이에 덧붙여 사회대중당으로의 범혁신세력 결집 및 통합의 과정에서 잠복해 있던 당 지도부의 이념 및 노선의 상이성, 계파간의 갈등이 총선 실패를 계기로 노골화되면서 당은 결국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사회대중당 중앙의 분열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의 분열 역시 그 출

10) 월파(月坡) 서민호는 전남 고흥(高興) 출생으로 1922년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 웨슬리언대학을 거쳐 1926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부를 수료했다. 3·1운동 당시 '반도목탁지사건(半島木鐸紙事件)'으로 6개월,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朝鮮語學會事件)'으로 1년을 목역했다. 해방 이후 1946년 광주시장에 이어 1947년 전남도지사, 1949년 조선전업(朝鮮電業·현 한국전력) 사장을 지냈다. 1950년 2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 거창양민학살사건 국회조사단장으로 활약했다. 1960년 5대 민의원의원에 당선, 민의원부의장에 피선되었다. 1963년 6대 국회의원에 당선, 1965년 민중당 최고위원, 1966년 민주사회당을 창당, 대표최고위원이 되고, 1967년 민주사회당을 대중당으로 개편, 6대 대통령에 입후보했다가 야당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다.

11) 7·29총선이 4·19 직후 치러진 관계로 상당수 자유당 출신 내지 자유당 성향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사회대중당은 자유당의 득표율보다 낮았을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발점은 구 진보당 계열의 이탈로부터 시작된다. 총무부장 조중환, 조직부장 박세원, 선전부장 임춘호, 전남도당 준비위원이었던 노용상, 이명하 등 구 진보당 계열의 인사들이 사회대중당으로부터 이탈했는데, 이들은 후에 통일사회당 전남도당을 결성한다.¹²⁾ 구 진보당계열이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에서 이탈하자 도당위원장 국기열을 중심으로 김철, 강석봉, 조극환, 이기홍, 서동열, 이호면, 임무창, 김규남, 홍정희, 조규선, 엄동호, 임우택, 김철중 등이 향후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의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김세원 1993a, 337). 결국 김철중 등 김달호 계열의 인사들을 제외하고 이들 중 다수는 사회당 전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로 합류한다.

끝까지 사회대중당을 지켰던 김철중은 1960년 5월 20일 사회대중당 전남준비위원회를 조직한 후 총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회대중당 결성과 함께 중앙위원에 피선되었다. 7·29총선 당시 사회대중당 공천으로 전라남도 제25선거구(무안군)에 출마했으나 2,225표에 그쳐 낙선한 뒤 사회대중당의 분열과정에서 통일사회당이나 사회당으로 합류하지 않고 끝까지 사회대중당에 남아서 활동한다. 특히 장면정부가 정권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기 위해 2대 법안을 발의하자 '2대악법반대 전남공동투쟁위원회'의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전라남도사회대중당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다(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 1962b, 783~791).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의 결당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사회대중당은 4·19혁명 직후야 정치활동을 개시한 혁신세력이 제5대 민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결성한 선거정당이었다. 사회대중당을 선거정당으로 규정할 경우 사회대중당의 성과와 한계는 보다 분명해진다. 결당준비위 출범에서 총선까지 1달여의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혁신세력 최초의 통합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948년 단정 수립 이후 지하화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남로당, 빨치산 참여 인사들과 진보당사건으로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았던 김규식과 조봉암계열의 민족주의적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범혁신세력이 4·19혁명이라는 특수정세에서 합법적으로 결성한 정당으로서 제도정치권 내부의 권력경쟁에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다만 이념적 지향이 강했던 사회대중당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한 구(舊)자유당 계열의 후보자들이나 민주당 후보 및 정책과의 차별성 제시에 실패했고, 특히 민주당의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찍기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등 급조된 선거정당으로서 지도력의 한계도 그대로 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한계들은 결국 7·29총선에서 사회대중당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특히 선거 실패 이후 당 내부의 리더십 갈등이 재현되고, 내부 파벌들 간의 이념적·정책적 차이와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초의 통합정당이 최후의 통합정당이 되어버린 점은 사회대중당의 역사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2) 김세원에 따르면(1993a, 337), 당시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의 분열은 선거실매 외에도 당 공천기탁금의 착복 시비도 한 몫 했었다고 한다.

2) 통일사회당

통일사회당의 결당은 7·29총선 실패 이후 내부 파벌갈등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7·29총선 실패 직후 사회대중당 내 진보당계의 김달호와 민혁당계의 서상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진보당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1960년 9월 15일 비진보당계 전 간부진이 사회대중당창당준비위와 결별하게 되는데, 결별을 선언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정태영 1995, 552).

통제위원장 최근우	총무위원 이훈구, 정화암, 김성숙
선거대책위원장 조현식	기획위원장 이동화
선전위원장 유병목	당무위원장 송남헌
재정위원장 구익균	인권옹호위원장 장홍엽
국토통일위원장 박노수	상무위원 홍형의 외 30인
통제위원 장백산 외 7인	

진보당계 내부에서도 김달호계와 윤길중·김기철계가 반목하면서 김달호가 윤길중과 김기철을 제명해버려 사회대중당은 김달호계열만 남게 되었다. 장건상은 1960년 12월 10일 혁신당을 창당했으며, 윤길중 등 반김달호계는 사회대중당을 이탈하여 1961년 1월 21일 통일사회당을 발기하게 된다. 이들이 발기한 통일사회당 창당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민하 1998, 472~473).

우리 혁신동지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 대과업을 능히 담당·완수할 수 있는 그리고 민족적 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적 사회주의노선을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대혁신정당을 결성하여야 하는 것이다.…국가경제의 조속한 건설을 약속하고, 대중을 빈궁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실현시킴으로써 우리 조국을 통일·자주·독립의 훌륭한 민주적 복지국가로 발전시키(고)…우리 통일사회당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전제로 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원칙으로 한다.

통일사회당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민주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통일사회당은 분열된 혁신정당의 재통합 요구에 따라 '2·8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위원회'와 '2대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초기 민자통 결성준비위에 참여했으나 다시 내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자통과 결별을 선언한 후 중통련을 결성 중립화 통일을 주창하던 중 5·16 군사쿠데타 발발 후 활동이 중단되었다. 통일사회당이 활동을 했던 기간은 4개월도 채 안되었다.

당시 <민국일보>가 통일사회당 결성에 대해 “다소 우파사회주의의 냄새를 풍기는 온건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대중당·사회당·혁신당은 사회주의적 색채에 있어서는 강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쓰고 있듯이(민국일보 1961. 1. 22), 통일사회당은 혁신정당 중에서도 가장 온건하고 우파적 성격이 강한 정당이었다.

통일사회당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정태영 1995, 559).

정치위원회 위 원 장 이동화
 위 원 서상일, 정화암, 金成璠, 金星淑, 이훈구, 박기출, 윤길중, 정상구
 당무위원회 위 원 장 송남헌, 부위원장 이명하, 총무국장 신창균
 조직국장 박권희, 선전국장 고정훈, 기획국장 현익재
 국제국장 김 철, 의회국장 황 빈
 특별위원회 재정위원회 구익균, 통일촉진위원회 김기철, 정책심의위원회 정상구, 국민대중운동위원회 이강훈, 국회대책위원회 조현식, 중앙상임통제위원회 성낙훈

통일사회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961년 2월 18일 결당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각 도당 조직책을 선출했는데, 서울 구익균, 경기 김성숙(金星淑), 충북 송남헌, 충남 이훈구, 전북 정화암, 전남 이명하, 경북 서상일, 경남 박기출, 강원 윤길중, 제주 김성숙(金成璠)이 그들이다(정태영 1995, 560). 전남도당은 당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하가 통일사회당 전남도당 결성을 위한 조직책 역할을 맡으며 통일사회당 전남도당 결성을 추진했다. 구진보당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통일사회당 전남도당은 다른 혁신정당에 비해 재정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지만 수적으로는 열세였다.

1961년 3월 24일 19시경 광주시 남동에 위치한 통사당 전남도당 인권옹호위원장인 박세원의 집에서 통사당 당무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통사당 전남지역 입시 조직책 이명하의 주도로 최운기, 정해룡, 조중환, 임춘호, 박세원, 노용상, 정길문 등 통일사회당 전남도당 결성준비위원 18명이 회동하여 전남도당 결성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모임에서는 우선 통사당 전남도당 준비위원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부서를 결정했다. 통일사회당 전남도당결당준비위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전남도당 위 원 장 최운기
 부위원장 정해룡(정치위원 겸임)
 조중환
 조직국장 노용상
 당무위원장 임춘호
 인권옹호위원장 박세원
 이하 미상

통일사회당 전남도당의 활동은 크게 2대악법반대투쟁과 관련한 정치강연회의 개최와 중립화 통일 전남도연맹 결성과 관련되어 있다.¹³⁾ 1961년 3월 24일 개최한 통사당 전남도당 준비위원회 모임은 중앙당의 지방유세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의 성격도 동시에 띠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3월 25일 14시에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 통사당 주최의 정치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정치 강연회 행사준비와 관련해서는 지역 조직책임자가 행사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행사개최를 위한 도당준비위의 임무를 분담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¹⁴⁾

이날 모임에서는 이명하가 전달한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미소양국의 세력전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군사적 완충지대, 즉 영세중립화통일조국을 수립하는 중립화만이 통일독립을 가능케 한다”는 취지의 영세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발기선언문 100여부를 참가자들이 분배·회합한 후 동시에 영세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전남도맹 결성을 합의하여 최운기를 전남도맹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명하가 전달한 유인물은 정해룡을 통해 같은 해 4월과 5월경 통사당원인 정길문과 손성훈 등을 통해 보성군 지역에 배포하는 것을 비롯하여 결당준비위원들이 동 유인물을 배포하여 한국 영세중립화 통일론의 확산을 시도했다.

1961년 3월 25일 14시경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 개최된 통사당의 정치 강연회에서는 통사당(중앙당) 정치위원장인 이동화가 연사로 나서 「민주사회주의 노선의 역사적 임무」 제하의 연설을 하고, 통사당 특별위원회인 통일촉진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철이 「중립화 통일에 대하여」 제하의 연설을 했으며, 통사당 조직국장이자 민의원인 박권희가 「2대법(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반대한다」 제하의 연설을, 선전국장 고정훈이 「국내의 정세보고」 제하의 연설을, 전남 조직책임자 당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하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제하의 연설을 각각 실시했다.

통사당 주최의 이 정치강연회에는 10,000여명의 군중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행사 참석자들에게 영세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발기선언문을 배포했으며, 이 정치강연회에서 연설한 연사들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장면정권의 비민주성, 2대악법이 혁신정당을 탄압하고 보수정책의 도구화하려는 시도라는 점, 한국의 영세중립화 통일안이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과 국내정세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진정하고 유일한 통일방안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통사당 전남도당은 통민청이 주최한 4·19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참여했는데, 통사당 부위원장인 조중환은 1961년 4월 18일 13시경 통일사회당 전남도당 당사에서 통일민주청년동맹 전남도맹 위원장 김시현 등과 만나 통민청 주최로 4·19혁명 1

13) 통일사회당 전남도당의 활동내용은 정해룡의 3남 정길상이 제공한 통일사회당 사건 재판기록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밑에 밝히는다. 인용을 허락해준 정길상씨에게 감사드린다.

14) 통사당 전남도당준비위는 3월 25일 광주공원에서 개최예정이던 정치 강연회 행사를 위해 일체의 준비를 분담했는데 정해룡은 사회를 담당하기로 결정됐고, 박세철은 행사장의 설비책임, 조중환은 자동차와 마이크 준비 책임을 각각 분담했다.

주년 기념행사시에 별도로 「소위 2대약법 반대 성토대회」 및 시위를 진행할 계획을 전달받고 김시현 등에게 행사 준비에 사용하게끔 통사당 전남도당 사무실을 대여하는 동시에 도당 사무실에서 4·19혁명 1주년 기념행사에 사용할 피켓(구호판) 및 플래카드 등에 “학원의 자유를 달라, 데모가 이적이냐 악법이 이적이냐”, “배고픈 백성에게 악법보다 빵을 달라”는 등의 구호 등을 기재한 후 다음날인 4월 19일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 거행된 소위 2대약법 반대 성토대회 및 시가행진에 동참했다.

통사당 전남도당준비위는 준비위 단계에서 활동하다 5·16 군사쿠데타로 도당준비위 임원들이 구속되면서 조직이 와해되었는데, 5·16 군사쿠데타 직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된 통사당 간부들은 정해룡, 조중환, 임춘호, 박세원, 노용상 등 5명이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혁명검찰부의 기소내용과 같이 정치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고, 김기철이 중립화 통일에 대한 연설을 한 것도 사실이나 그 내용이 1954년 제네바 유엔총회 때 한국대표 변영태가 제안했던 14개 조항을 기초로 한 유엔 감시 하 인구비례제의 총선거와 미국 상원의원 맨스필드의 의견이 한국중립화 통일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국민의 여론에 묻고자 한다는 요지의 연설로서 국헌에 위배된 바 없었으며 더구나 괴뢰집단에 하등의 동조나 찬양의 내용이나 언질이 없었으며 그 외 수인의 연설도 반국가적인 언사는커녕 반정부적인 언사도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정치강연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의 수속을 필하여 행하여진 당연한 정당 활동을 강조했으나 혁명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당 전남도당준비위원회는 사회대중당에서 이탈한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지만, 참여인사들의 과거 진보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이념적으로는 혁신정당 중 가장 우파적이고 온건한 노선의 정당이었다. 이들은 사회당 전남도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적 열세에 있었는데, 이들이 전남지역에서 지지기반 등의 한계로 조직을 확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통사당 전남도당준비위 참여자들은 재정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통사당 전남도당준비위는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통일청 등 청년운동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투쟁 및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김시현 구술, 2007. 7. 19; 이문교 구술, 2007. 10. 16). 전남지역에서 전개되었던 2대약법반대 공동투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일운동에 있어서는 통사당(중앙당)이 민자통에서 이탈 중동련을 결성하며 독자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했던 관계로 민자통 전라남도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행사에도 민자통 전남협의회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행사를 모색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당

4·19혁명은 한국전쟁으로 최종 봉합된(sutured) 불구화된 이념지형에 부분적인 파열(破裂)을 만들어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수주의가 독점하던 정치공간에 중도세력과 좌익세력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사회당의 창당 시도야말로 이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당 창당 준비위원회의 핵심간부는 주로 조선공산당, 남로당, 근로인민당계 인사들이었다고 한다. 전남지역에서 사회당 창당준비위에 참여한 인사로는 김철(70세, 3·1운동 주도, 45년 인민당 전남도당위원장, 건준 전라남도 부위원장), 강석봉(1926년 제3차 조선공산당 전남도당책, 45년 건준 전라남도 부위원장), 한길상(3·1운동 참가 투옥, 제3차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45년 건준 전라남도 산업부장), 이기홍(1929년 광주학생운동 참가 제적, 1934년 적색 농민운동사건 투옥, 45년 건준 광주시 노동부장, 조공 남로당원, 49년 남북로동당 합당시 탈루), 성시백(특수공작선 멤버, 53년 구국투쟁동맹 '노장환'사건 투옥), 서동열(만주 공청에서 항일운동, 45년 남로당, 53년 구국투쟁동맹), 최백근(항일운동, 1932년 투옥, 45년 근로인민당, 1948년 해주에서 개최된 남북협상회의에 근로당 대표로 참가, 1949년 4월 월북, 근민당 재북 당무부장에 취임하여 체류하다가 6·25 당시 조국통일민족전선 정치공작원으로 남하, 9·28 월북, 1952년 9월 대남공작원으로 남파, 1952년 12월 피검 투옥, 1955년 만기출옥), 국기열(동아일보 정치부장, 45년 건준 전남부위원장), 이호면(구국투쟁동맹사건으로 투옥), 그리고 김세원 등이었다고 한다(김세원 1993a, 338~339).

사회당의 강령은 민주사회주의에 입각한 새 역사의 창조, 독재세력을 타도하여 자유를 수호, 계획적 경제체제와 현대적인 복지국가 건설, 인간의 지능과 창조력을 배양 개발, 우방 제국과의 긴밀한 제휴로서 민주적 조국통일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의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권희경 1989, 93),¹⁵⁾ 정치운영(4개조)·경제정책(13개조)·사회문제(5개조)·국방정책(2개조)·현대화(6개조) 등 각 부문별 정책을 제시했다(권희경 1989, 93~97).

사회당의 강령채택과 관련하여 사회당 내부에서 조직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했다고 한다. 즉 선거를 의식한 공개적인 대중정당으로 위상을 설정하자는 입장과 선거참여를 사회당 활동의 보조적인 계기로만 파악하고 기층민중의 조직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고 한다(김동춘 1991, 125). 그러나 각각의 노선에 대한 충분한 적용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해 버렸다.¹⁶⁾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사회당의 활동이 2대악법반대 공

15) 김세원에 따르면(김세원 1993a, 339~340), 사회당 결성 당시 당원 기초소위원으로 최백근, 유병목, 김진한, 김세원 등이, 당 강령 규약은 최백근, 김진한, 김세원이, 선언문은 유병목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인된 주장은 아니다. 실제 김세원의 비트(1993a)에 언급된 사회당의 강령내용은 자료로 전해지는 사회당의 강령내용과 많이 다르다.

16) 사회당에 참여했던 혁신계 인사들은 다른 혁신정당 참여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들이 혁검을 통해 협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는 사회당이 당시 공산주의 정당으로 인식될 정도로 다수의 구 좌익 인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동춘 1991, 125).

동투쟁과 통일운동 등 대중운동에 주안점을 두면서 대중들을 의식화하고 이를 조직화로 연결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사회당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려 볼 수도 있다.¹⁷⁾

결성준비위 출범과 함께 취임한 사회당의 임원 및 간부는 아래와 같다.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근우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정규, 부위원장 최백근
선전위원장 유병목, 당무위원장 문희중, 재정위원장 서동열, 부녀
부장 이현경(이계덕)

사회당은 법적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1960년 11월 27일 사회당 결당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부서를 결정하고, 그 직책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다수의 당원을 가입시키는 등 조직화를 완비했으며, 대외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완전한 정치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정당'으로 보는데 큰 무리는 없다. 사회당은 1960년 말 결당준비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2·8한미경제협정체결반대 투쟁위원회 출범, 3월 15일에는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 등 소위 2대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9월초에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결성을 주도했다.

통일운동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통일운동의 방향과 노선을 둘러싼 투쟁 등에 주력한다. 특히 통일문제는 혁신정당에게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당시 혁신세력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분단체제에서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일운동전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은 곧 혁신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과 같았다. 민자통이 사회당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통사당 등이 민자통에서 이탈하여 중흥련을 결성한 것도 혁신정당 간의 헤게모니 경쟁과 무관하지 않았다. 혁신세력이 내세우고 있던 민족자주세력의 정통성은 곧 통일운동의 헤게모니 장악을 통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당 전남도당 결성준비위원회의 임원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기열, 당무위원장 이호면, 조직위원장 서동열(실질적인 조직위원장은 이기홍), 선전위원장 김세원(청년학생 지도책), 도당 부위원장 겸 재정위원장 강석봉, 부위원장 한길상, 도당 고문 김철, 선거대책위원장 임무창, 총무부장 이영복, 부녀부장 김주 등이었다. 사회당 전남도당은 독립운동과 소위 공산주의 운동의 원로들로 구성되었는데, 이기홍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맡아 조직화를 담당했고, 이기홍이 지역적 연구가 없는 지역 혹은 빨치산활동 경력자와의 연계가 없던 지역이었던 화순군과 장흥군, 보성군의 경우에는 김세원이 조직을 담당했다(김세원 1993a, 344).

중앙 사회당과 마찬가지로 결성준비위원회 출범 직후 사회당 전남도당은 크게 세

17) 김세원 역시 "7·29 선거의 경험은 선거혁명론이 이 땅에선 환상적 관념론임을 검증했다. 전체 민중이 각성하고 의식화되기 전에는 통일운동의 결정적 시기는 도래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김세원 1993a, 343).

가지 투쟁에 주력한다. 하나는 2·8 한미경제협정체결반대공동투쟁위원회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2대약법 반대공동투쟁위원회 참여, 마지막으로 민자통 결성이다. 물론 사회당 전남도당이 이러한 투쟁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갔던 것은 아니다. 사회당의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민청 전남도맹과 긴밀히 연계하여 조직화와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사회당 전남도당 역시 다른 정당에 비해 수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대중투쟁을 독자적으로 주도해 나갈 정도로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대중투쟁의 중심은 사회당을 비롯한 혁신정당이었다기보다는 학생운동 혹은 청년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당의 역할은 실제 대중투쟁을 기획하며 대중시위를 주도하기보다는 의제를 설정하고 청년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민청에 대해서는 사회당의 원로급 인사들이 직접 지도를 담당했다.

당시 사회당 전남도당이 주도했던 대표적인 정치활동은 2·8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이었다. 통민청 출범 직후 첫 번째 정치활동도 광주공원에서 개최한 2·8한미경제협정 반대성토대회였다. 당시 성토대회는 전남지역의 혁신계 정당들이 분열된 후 처음으로 '2·8한미경제협정반대 전라남도공동투쟁위'를 결성하여 연대를 모색했던 첫 행사였다. 그러나 당시 전남지역의 혁신정당들, 특히 사회당은 내적으로 조직역량이 뛰어났지만 외부행사를 개최할 여력까지는 없었으며,¹⁸⁾ 통민청이 앞장서 일을 추진하면 사회당이 나 통사당, 사회대중당이 뒤에서 원조하는 형태로 거의 모든 행사나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고 한다. 또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려면 힘드니까 한번 행사를 개최하면 (한미)경제협정문제부터 통일문제까지 여러 문제들을 결합해서 맹렬하게 투쟁하는” 형태였다고 한다(김시현 구술, 2007. 11. 3).

당시 전남지역의 혁신정당들과 통민청 사이에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혁신정당들은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을 전담하고 통민청은 전면에 나서 행사를 주관했다고 한다. 통민청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단체는 사회당과 민자통이었고, 이들 중 상당 수 인사들은 공안기관의 감시로 공개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통민청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김시현 구술, 2007. 11. 3). 결국 사회당 전남도당결선준비위는 통민청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당면한 이슈에 대응했는데, 2대약법반대반대투쟁도 마찬가지였다.¹⁹⁾

사회당은 4·19 이후 나타났던 혁신정당들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정당이다. 사회당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과거 조선공산당, 남로당, 근로인민당계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전남지방은 사회당 참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²⁰⁾ 한국전쟁 당시 입산자, 즉 빨치산 참가자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대구와는 달리

18) 특히 사회대중당 전남도당은 김철중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기는 했지만, 간판만 있지 당원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19) 이 부분은 아래 통민청 활동을 기술하면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0) 일제 때 광주학생운동을 비롯하여 무수한 저항운동이 발생했던 지역이며,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박헌영이 일제 경찰의 검거를 피해 해방되던 시점까지 광주 백운동의 한 벽돌공장에서 은거하면서

인민군의 완전 점령 지역이었던 관계로 좌익운동 관계자들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인민군과 국군의 점령이 거듭되면서 과거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인사들이나 좌익운동 관계자들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억압당했다. 4·19혁명은 이들에게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사회대중당은 이들이 최초로 활동을 개시한 정당이었고, 7·29총선 실패 이후 대중운동을 통한 조직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당이 결성되었고 이들 세력이 결집한 사회당이 다른 혁신정당에 비해 이념적으로나 정책방향에 있어 가장 급진적인 것은 당연했다.

또한 사회당은 통민청과의 연계를 통해 당의 활동능력을 배가시켰다. 다른 혁신정당들이 선언문이나 성명서 발표 수준에서 활동을 전개할 때 사회당은 통민청이라는 청년운동단체에 대한 지도와 민자통이라는 대중적 통일운동조직의 건설을 통해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회당의 활동이 미처 정상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사회당의 모든 활동은 정지당하고 말았으며 사회당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옥고(獄苦)를 치러야만 했다.

2. 청년운동: 통일민주청년동맹 전남도맹²¹⁾과 전남대 민통련

1) 통일민주청년동맹 전남도맹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은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에 비해 결성 시점도 늦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강령, 통일방안, 변혁노선, 조직원 등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통민청은 민민청과 함께 청년운동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조직으로서 이후 학생운동은 물론 진보운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통민청 전남도맹은 1961년 2월 14일 결성회의가 개최된다. 2월 14일은 여러 가지 정치적 행사가 개최되었던 날이다. 서울에서는 사회대중당 당사에서 2·8한미경제협정반대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되던 날이었고, 전남에서는 민자통 전남도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회의가 최종적으로 개최되었다. 통민청 전남도맹의 결성은 전남대학교 김시현이 주도했는데, 최초 결성 모임에 참석한 인원은 9명이다.²²⁾ 통민청 전남도맹 결성을 지원했던 중앙통민청 전남조직책 박익수, 김시현, 이문교, 김수영, 박복규, 박명서, 최준섭과 사회당의 김세원, 그리고 한길상 등 총 9명이 결성회의에 참석했다. 이들 중 최준섭은 당시 학생이 아니었고, 나머지 5명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학생들이었다.²³⁾

인근 화순탄광 등을 거점으로 비밀리에 조직화를 전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8·15 해방 직후에도 미군청과 민중들과의 대립이 매우 치열했던 지역 중의 하나이며, 그 과정에서 곳곳에서 양민들이 학살당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21) 이하의 기술은 통민청 전남도맹 위원장 서리 김시현과 선전국장 이문교와의 구술내용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는 통민청 전남도맹 관련 자료나 연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22) 재판자료나 다른 논문 등에는 10여명으로 나온다.

23) 김시현은 “큰데 조직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 대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회당 의원 한길상씨 댁에서 우리가 통민청을 조직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김시현 구술, 2007. 7. 19).

이들이 통민청을 결성하게 된 1차적 계기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개 4·19혁명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던 학생들이었다. 당시에도 서울을 제외하고 운동역량과 조직이 가장 강력했던 지역 중의 하나였고, 특히나 남포당 출신과 구 빨치산 경력자들이 많이 생존해 있던 전남지역에서 민민청이 조직되지 않았던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다. 전남지역의 학생운동 및 청년운동 세력들은 7·29총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혁신세력의 분열에서 찾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운동만은 지역에서 비슷한 성격의 조직들을 만들어 투쟁역량을 분열시킬 필요가 없고, 그래야만 통일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시현 구술, 2007. 7. 19; 이문교 구술, 2007. 10. 16).²⁴⁾

통민청의 조직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통일세력의 결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정치세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운동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집권세력의 구축이었다. 이들은 기존 정당과 기존 정치세력들을 전부 배제하고 청년학생들이 앞장을 서서 새로운 통일세력과 집권세력을 구축하자는 결성취지문에 찬동했기 때문에 통민청에 가입했고 이러한 조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통민청을 단순히 사회당의 하부조직만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김동춘 1991, 123), 통민청의 조직목표나 활동수준을 볼 때 사회당과 긴밀히 연계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당의 하부조직이나 사회당이 조직한 청년운동조직이라는 평가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민청의 역할이 자체의 조직화와 학생운동 지원, 민자통의 운영을 담당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의 정치세력을 대체하는 대안세력의 중심, 새로운 정치조직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민청(민민청도 마찬가지)은 혁신 정당 외부에서 혁신정당을 ‘체찍질하며’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통민청과 통민청 전남도맹과의 연계는 중앙통민청의 박익수, 박현채와 통민청 전남도맹의 김시현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시현의 증언에 따르면(김시현 구술, 2007. 7. 19), “박현채는 가끔 한 번씩 들르면 전화통화, 서신 일체 안 해. 실제 만나서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가 했던 것, 유인물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또 거기서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형태로 전남통민청과 중앙통민청과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했다고 한다.

통민청 전남도맹의 조직구성을 보면, 위원장 서리 겸 동원국장에 김시현, 사무국장에 김수영, 선전국장에 이문교, 교양국장 박복규, 투쟁국장에 박명서 그 외에 최준섭, 박동희, 오택명, 김상태, 안태순, 나기주 등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운영에 중추적으로 참여했다. 통민청 전남도맹은 중앙통민청의 조직화방식과 마찬가지로 군

24) 이문교는 “우리가 수차례 모임을 거듭하고 전남에서 청년학생조직의 중심세력으로 모든 역할을 여기에 집결 통일 시키기로 하고 전남 통민청을 결성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남에서는 통민청 외의 다른 청년조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전남에서 청년학생들은 전부 통민청으로 하나의 조직 속에 묶어서 집결시키자는 그런 취지의 우리 결의가 여기 있었(디)”고 증언한다(이문교 구술, 2007. 10. 16).

단위 지방조직의 결성을 시도했다. 비록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면서 전체 군 단위로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이문교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고향인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계몽활동 당시 교류하던 청년학생들을 접촉한 후 통민청의 취지와 유인물 등을 전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완도읍의 정기탁을 책임자로 정해 인근 해남군과 강진군을 하나로 묶는 조직결성을 추진했었다고 한다(이문교 구술, 2007. 10. 16).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직후 이문교가 통민청 활동을 이유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통민청 전남도맹의 군 단위 조직화가 무산되었다.

통민청은 원래 서울과 전남 중심의 조직이었는데, 이는 사회당의 세력권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통민청 전남도맹의 회원은 증언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문교는 “내 기억으로는 140~150명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5·16이 터지자 (회원명부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김시현이가 그걸 보관했어요. 아마 김시현이가 가장 잘 알거예요”라고 증언하고 있고, 김시현은 “꽤 많았어. 대략 내가 명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백여 명이 넘었으니까. 민통련은 사실 별로 얼마 안됐어...통민청은 (구속이 된 사람만) 80~90명 가까이 됐으니까...150명은 넘고, 전체 규모라면...한 160~170명쯤 될 것 같아”(김시현 구술, 2007. 7. 9).

회원구성을 보면, 전남대학교 학생을 주축으로 조선대학교, 광주사범학교(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여고, 전대사대부고, 청년부의 기세문, 안태순, 오택명과 박동환 등 종연방직(현 전남방직) 노조원까지 통민청 전남도맹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기세문 구술, 2007. 10. 19; 박동환 구술, 2007. 10. 19).

기세문의 증언에 따르면, 사회당 선전부장이자 청년부 조직책임이었던 김세원이 자신에게 통민청 위원장을 권유했지만, 자신은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르고 비전향으로 출소한 상태에다가 병역기피문제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측면에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다.²⁵⁾ 이 부분은 김세원의 수기 『비트』에서도 확인된다(김세원 1993a).²⁶⁾

통민청은 회원가입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통민청 전남도맹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했고, 전형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 한다.

(처음에) 광주 와서 박익수(통민청 중앙위원, 중앙대학교 대학원)가 일차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통민청 강령을) 전부다 들었어. 박익수가 해놓고 얼마 안돼서 (박)현체가 왔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물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별도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추천이 들어오

25) 이 부분은 기세문의 미간행원고인 『과도기의 논리, 우리 민족의 실길』의 160쪽을 인용했다.

26) 김세원은 “학생들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한 청년이 정확하게 (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나는 이 청년을 통민청 책임자로 하든지 사회당 청년책으로 할 것을 달에게 제의하려고 신원을 확인해 보았다...광주 사범 출신의 기세문 동지였다. 그는 내 생각을 듣고 징역 전과 외에 병역기피 문제 때문에 책임을 맡지 않고 뒤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쓰고 있다(김세원 1993a, 346).

면 심사를 해야 돼. 청년단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당처럼(남로당을 지칭) 엄격하고 까다롭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심사를 했어. 그래서 최소 2명 이상의 추천이 있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명단은 그렇게 해서 서명한 사람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때 (5·16) 터지고 나서 싹 없애 버렸어(김시현 구술, 2007. 7. 9).

당시 통민청은 통민청발기인이자 중앙위원이었던 이규영이 통민청의 기관지격인 『신세대』라는 잡지를 발간했는데, 이규영이 직접 가지고 내려온 적도 있고(이문교의 증언), 박익수나 박현채를 통해 전달되기도 했다고 한다(김시현 구술, 2007. 11. 3; 이문교 구술, 2007. 10. 16).²⁷⁾

통민청 전남도맹은 주로 민자통과 사회당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정치이념은 사회당 소속의 강석봉, 이기흥, 김세원, 김철, 기세문 등의 지도를 받았고, 민자통의 한길상, 문태곤 등으로부터는 통일노선 및 정책과 관련한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지도의 형태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상학습의 형태와 유사한데, 주로 비밀리에 이들의 집에 모여 당면 정세를 토론하거나 교양하는 형태의 지도였다고 한다.

통민청 전남도맹의 활동은 크게 민자통 결성대회 참가와 2대약법 반대투쟁, 남북학생회담촉진 전남학생대회 개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²⁸⁾ 통민청 전남도맹 위원장 서리 김시현은 1961년 2월 19일 광주시 금남로 2가 YMCA회관에서 개최된 민자통 전남협의회 결성대회에 통민청 전남도맹 대표로 참가하여 민족자주적인 평화통일과 남북경제문화교류, 서신왕래 등을 주장했던 민자통 전남협의회에 가입한 후 학생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시현은 또한 2월 25일 서울 천도교대강당에서 개최된 중앙민자통 결성대회에 통민청 전남도맹 대표로 박복규, 유광원 등과 함께 참석하여 남북한 민주민족 주체세력의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과 완충지대에 우체국설치, 남북한의 경제·문화·인사 등의 교류 등의 투쟁목표 채택을 결의했다.

3월 4일에는 광주시 불로동 한길상의 집에서 통민청 전남도맹 간부회의가 소집되어 김시현이 참석자들에게 민자통의 취지를 역설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동을 받고 중앙의 혁신단체 연사를 초청하여 조국통일촉진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남도민들에게 평화통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선전할 것을 결의한다. 통민청은 3월 12일 광주공원 광장에서 청중 약 6,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조국통일촉진강연회를 개최했는데, 전남도맹 교양국장 박복규의 사회로 시작하여 중앙 민자통조직국장 김배영, 중앙 통민청 교양국장 박익수, 집행위원 김영광, 혁신당 선전위원장 유병묵, 민족일보사사장 조용수 등이 참석하여 중립화통일, 남북협상, 남북평화통일 등과 함께 장면정권을 비판하는 취지의 강연을 실시했다. 3월 28일에는 민자통 전남협의회 주최로 전남 광산군 송정읍 공회당에서 개최한 조국통일촉진강연회에 통민청 전남도맹 간부인 박명서 및 안태순

27) 기관지 『신세대』는 후에 『신시대』로 제호를 변경하고 월간지 형태로 발간했다.

28) 통민청 전남도맹의 활동내용은 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1992b, 1117~1127)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했다.

등이 통민청 대표로 참석해 청중 약 500여명 앞에서 “평화통일을 민족의 지상목표로 남북한의 협상과 교류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기도 했다.

1961년 3월 22일경 김시현, 김수영, 박복규, 박명서 등 통민청간부 10여명은 광주시 양림동 김시현의 집에 모여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 등 2대특별법안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혁신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악법으로서 이를 2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이 결의에 따라 통민청 전남도맹은 2대악법반대 전라남도 공동투쟁위원회 명의로 4월 1일 광주공원에서 청중 약 6,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2대법반대시민결기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김시현은 전라남도 공투위의 연락위원 겸 기획위원으로 참가하여 2대악법제정반대격문을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에 배포했고, 통민청 전남도맹 회원이었던 최준섭은 2대법반대시민결기대회 석상에서 사회를 담당하고, 박명서는 성명서를 낭독했고, 김시현은 “2대법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통일을 방해하려는 악법이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는 결기대회에 참석했던 시민들과 함께 소위 「반민주공장송데모」라는 명목으로 상여를 선두에 세우고 “장정권 물러서라, 배고픈 사람에게 악법보다 빵을 달라”, “데모가 이적이냐 악법이 이적이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주공원에서 남광주역에 이르는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4월 14일에는 김시현의 집에서 통민청 전남도맹 간부회의가 다시 개최되었는데, 이날 간부회의는 다가오는 4·19 1주년 기념일에 광주공원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규합하여 「4월혁명완수축진성토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모임이었다. 이날 모임에서 통민청 전남도맹은 관변단체에서 주최하는 4·19 1주년 기념식을 거부하고, 「4월혁명완수축진성토대회」를 민자동과 공동개최하기로 결의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2대법반대학생성토대회 및 시위행렬도 같이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시내 각 고등학교에 연락하여 플래카드 등을 작성 지참하고 대회에 참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4월 19일 광주공원 광장에서 광주시내 각 대학 및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약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4월혁명완수축진성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문교의 개회사에 이어 식순에 따라 2대법제정반대성토대회를 마치고 오후 3시경부터 광주시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학생들과 더불어 “학원의 자유를 달라, 악법을 철폐하고 실업자를 구하라, 통일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데모가 이적이냐 악법이 이적이냐”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내에서 가두행진을 전개한다.²⁹⁾

통민청 전남도맹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4·19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년조직이었다.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다음 세대의 중추세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진행했다. 통민청은 기존

29) 이문교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통민청이 내가 내 이름으로 집회 시위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 가보니가 시위하는 길(충장로)은 통사당이 누구 다른 사람이름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시위 장소는 통사당 사람들이 경찰들의 압력에 굴복 했던가, 타협을 했던가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충창로를 못 지나고 지금 말하면 금남로로 지났었죠. 그때만 해도 금남로는 험간이었니까”(이문교 구술, 2007. 10. 16).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부정부패하고 반민주, 보수수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대안적 세력을 자임하기도 했다. 통민청의 역사적 의미는 김시현의 아래의 진술에서 보다 명확해 진다.

통민청 기본 노선은 통일을 제1차적 목표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초월하자 민족문제를 반드시 개입을 시켰거든. 그래서 그런 목적사업이 확정이 됐다면 이 운동을 확대시키려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 활동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와해돼버리고 얼마 안 가서 깨져버리고 해서 좀 아쉽고. 지금 생각해도 통민청처럼 훌륭한 청년단체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김시현 구술, 2007. 11. 3).

통민청 전남도맹은 4·19혁명 이후 5·16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전남지역 청년운동은 물론 혁신세력 정치활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당시 활동한 인사들이 '일사회'를 조직해서 이홍길, 김동원, 홍갑기, 박석무로 이어지는 1960년대 중후반 전남대 학생운동의 지도세력이 되었으며(김시현의 구술, 2007. 7. 19), 이들이 성장하여 1970년대 전남대는 물론 광주지역 학생운동의 지도세력을 육성하게 된다. 통민청 전남도맹의 결성은 전남지역에서 사회운동 주체역량의 선순환적 재생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전남대 민통련

통민청 전남도맹은 전남대 민통련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통민청 위원장 서리였던 김시현이 전남대 민통련 대의원회 의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통련에서 주장했던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에도 통민청이 참여했다. 비록 민통련이 전남대에서 결성되었지만, 민통련 회원 대부분이 통민청 전남도맹 회원이었기 때문이다.

1961년 5월 14일 통민청 전남도맹 위원장 서리 김시현이 주도하여 광주시 금남로 2가 YMCA회관에서 광주시내 각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약 300여명의 참석하여 '남북학생회담촉진 전남학생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전남대 민통련의 결성식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대 민통련 간부 김철의 사회 하에 광주여고생 김혜란이 "남북학생회담을 회구한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낭독했고, 전남대 민통련 위원장 유인학, 전남대 민통련 간부 정종협, 김만우, 김명자 등이 "다음날 판문점학생회담에 우리 모두 참석하자"는 요지의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남대 민통련은 전남지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민통련은 학교단위로 조직되었고, 회원도 대학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통민청은 시·도 행정단위로 조직화되었고,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과 학생(고교생, 대학생)이 모두 가입·참여할 수 있었다. 조직화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통민청과 민통련은 비교가 되지 않았

다. 또한 민통련은 조선대학교에서는 결성되지 못함으로써 활동의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조선대학교는 4·19혁명에 참여했던 핵심운동역량이 박철용총장 퇴진투쟁으로 퇴학조치를 당하면서 학내의 운동역량이 대부분 소실되고 말았다.

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결성된 전남대 민통련도 5·16 군사쿠데타 이틀 전인 1961년 5월 14일에야 결성된 관계로 실질적인 활동을 전혀 전개할 수도 없었다. 전남대 민통련의 유일한 공식활동이 전남대 민통련 결성식날 개최한 '남북학생회담축전 전남학생대회'였다.

더욱이 전남대 민통련 회원 상당수가 이미 통민청에 가입해서 활동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민통련만의 독자적인 사업대상과 활동영역을 구축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민통련은 당시 전남지역의 청년운동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역으로 통민청 전남도맹이 4·19 이후 전남지역 청년운동에 있어 얼마나 독자적이고 중요한 조직인가를 반증해주기도 한다.

3. 통일운동: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전남협의회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는 1960년 9월 30일 한국전쟁 이전에 활동했던 진보적인 인사들이 민족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을 표방한 민족자주통일축진회를 발기하여 조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1960년 9월말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로 개칭되었다. 여기에 진보적인 정당·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1961년 1월 15일에는 민자통중앙협의회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61년 2월 25일, 21개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민자통중앙협의회 결성대회를 갖고,³⁰⁾ 외세에 의존한 사대노예들의 난무를 일체 배격하고 민족통일역량을 총집결하여 통일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민족일보, 1961. 2. 26). 민자통은 "정당·사회단체 및 개인으로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여 3·1의 독립정신에 입각한 민족자주통일달성을 선언"했다.³¹⁾

이 과정에서 통일사회당, 혁신당, 삼민당, 광복동지회, 천도교, 대종교는 1961년 2월 21일 민자통중앙협의회와 결별을 선언하고,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발기준비위원회(중통련)'를 구성했다(민족일보, 1961. 2. 22). 이들은 결별성명서에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통일방안은 구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영세중립국으로 통일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민자통은 이들의 결별성명에 대해 '상습적 분열주의자들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자통이 결코 중립을 배격 혹은 부정하지 않았고, 다만 통일문

30) 민자통 결성 당시 참여한 정당·사회단체로는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일부, 동학당 일부, 삼민당, 광복동지회 일부, 구국동지회, 민족건양회, 민민청, 통민청 준비위, 천도교 일부, 천도교 부녀회, 유도회 일부, 4월학생혁신연맹, 피학살자유족회, 교원노조 일부, 출판노조 일부, 교수협의회 일부, 사회문제연구회, 학사회, 사회과학연구회 등이다(민족일보, 1961. 2. 26). 일부에서는 혁신당, 삼민당, 광복동지회, 천도교, 대종교 등 중통련으로 합류한 5개 단체를 제외한 16개 정당·사회단체로 기술하고 있으나(정기영 1990, 140), 당시 민족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면 이들 단체 회원 모두가 불참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당원 및 회원들은 여전히 소속 단체의 이름으로 민자통 결성식에 참여했다.

31) 당시 민자통이 발표한 결의문 전문은 민족일보(1961. 2. 26)를 참조하라.

제를 다루는데 있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사당 등 중통련 세력은 민자통이 “통일방안에 대한 기본태도의 결정을 기피하고 결성대회만을 서둘러 무원칙한 국민운동으로 일부간부들이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결별이 갖는 의미는 혁신세력의 통일정책단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통일정책과 관련한 본격적인 좌우논쟁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민족일보, 1961. 2. 22; 민족일보, 1961. 2. 26).

민자통은 각 지방에 민자통 지역협의회 결성을 서두르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조직화를 실현해 나갔다. 민자통중앙협의회가 결성되기 전까지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의 4개 지방조직이 결성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충남지역은 민자통중앙협의회가 결성된 이후에 조직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17개 군 지역에 각각 군협의회준비위가 구성되어 있었고,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지부의 결성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한다(민족일보, 1961. 3. 8). 민자통의 지방조직은 중앙협의회를 포함하여 도·군·면 단위는 협의체 조직이며, 동·리는 단일조직으로 구성되었다.

민자통은 조직에 가입한 회원의 수가 경북 2만여 명, 경남 2만여 명, 전북 5백여 명, 전남 1천여 명, 경기 2백여 명, 서울 5백여 명, 충북 5백여 명, 충남 5백여 명 등이며, 여기에 정당관계자 1만여 명, 사회단체관계자 4만여 명을 합산하여 전체 회원이 약 1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민족일보, 1961. 2. 26).

민자통의 지방협의회 조직은 대개 사회당과 민민청·통민청 등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구성이 가능한 단체가 바로 이들 정당·사회단체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조직의 주요 구성원들은 대개 해방 이후부터 중간과 혹은 좌파계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혁신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많았다.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 2대약법반대운동, 남북학생회담지지운동 등의 대중운동을 각 지역의 정당·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이끌면서 민자통의 전국적 세력화와 조직화가 용이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민자통 전남협의회 결성

민자통 전남협의회는 1961년 2월 14일 결성준비회의에서 조직결성의 윤곽이 그려진다. 당시 결성회의에 참석했던 김세원에 따르면(김세원 1993a, 352), 이날 민자통 전남협의회 준비회를 광주 불로동 소재 박석진의 집에서 개최했는데 오지호, 김창선씨 등을 비롯해서 임금택, 서동열, 노응상, 김세원 등의 인사들이 참여했고, 이날 회의는 철야로 진행되어 다음날 설날 떡국을 먹고 난 후 10시에 회의를 끝냈다고 한다(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 1962c, 137). 이날 모임에서 구성된 민자통 전남협의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표 3> 민자통 전남협의회 주요 간부의 직책 및 주요 경력

성명	직책	주요 경력
김창선	상임의장 (선전위원장 겸임)	구례출신, 공무원, 족청 참여, 47년 호남신문사 편집국장, 전라남도의회회장, 남도일보이사장
오지호	의장 (도대표, 총무위원장 겸임)	전남 화순, 조선대 미술과 교수, 한국전쟁 당시 농민위원회 위원, 화순 백아산 입산, 빨치산 전남지구 총사령부 출판위원
길 문	조직부장	남로당 전남도당 장흥 유치면 당책
박석진	재정부장	
임금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무안, 48년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사장, 민자통 전남협의회 준비위원
김시현	학생부장	전남대 상대 재학, 전남대 민통련 대의원회의장단, 통민청 전남도맹 위원장 서리

* 출처 : 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1962c, 137).

2월 14일 준비회의에 따라 2월 19일 민자통 전남협의회 결성식이 거행된다. 결성식은 광주시 금남로 2가 YMCA 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결성식은 사회대중당 전남도당, 사회당 전남도당, 통민청 등의 단체가 주요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했는데, 200여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결성식에서 김창선과 오지호가 의장단에 피선되고, 김창선은 연사로, 오지호는 의장단 도대표로, 임금택은 회의록작성서기로 임명되었는데, 김창선은 남북평화통일, 남북협상, 문화교류, 민자통 조직 강화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수행했고, 김태홍은 “우리는 외원(外援)에 의존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경제자립이 없는 곳에 국가의 독립이 있을 수 없다. 민족세력 결집하여 외세의존 배격하자” 및 “통일만이 살길이다. 우리는 조국도 하나이며 민족도 하나다”라는 내용의 통일선언문을 낭독했다(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 1962c, 137).

2) 민자통 전남협의회 활동: 대중적 통일운동조직의 건설과 2대약법 반대투쟁

1961년 3월 8일 장면정부는 「집회와시위운동에관한법률(안)」을 각의에 상정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으며, 내무·법무장관이 「반공을위한특별법」을 별도로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장면정부의 소위 2대법안 구상에 대해 <민족일보>는 사실을 통해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장 내각의 폭거”라고 비판했고(민족일보 1961. 3. 12), <영남일보>는 “우리 사회를 일대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영남일보 1961. 3. 12), 중도적 성격의 <한국일보>도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만들어내는 법률”이라며 비판했다(한국일보 1961. 3. 9). 장면정부의 2대법안 구상에 대해 혁신정당과 장면정부에 반대했던 재야단체와 학생운동세력들은 소위 2대약법

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들은 이러한 반대를 장면 정부에 대한 대정부투쟁과 대중적 조직화라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충족시킬 목적으로 2대악법반대 공동투쟁을 전개했다(손병선 1990, 138~141).

전국적인 2대악법반대투쟁에 대해 강경진입으로 일관했던 장면정부는 1961년 4월 9일 “금회기의 국회통과를 포기하고 다음 회기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킬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반공특별법과 대모규제법의 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2대악법 반대궐기대회가 금방 중지되지는 않았다. 악법반대궐기대회와 성토대회를 지속시키면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발기위원회’와 ‘악법반대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는 진명여고의 강당인 삼일당에서 “악법은 통일금지법, 단결로써 민권을 지키자”는 현수막을 걸고 통일추진, 악법반대강연회를 개최하여 2대악법반대투쟁을 통해 축적된 투쟁역량을 통일운동으로 전환시키면서 2대악법반대투쟁은 마무리된다(손병선 1990, 140).

민자통 전남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2대악법반대투쟁은 1961년 3월 중순 광주시 충장로 서동열의 집에서 김창선, 오지호, 임금택 등 민자통의 주요 간부와 사회대중당 전남도당 대표 김철중 등 10여명이 회의를 개최하여 「집회와시위운동에관한법률(안)」과 「반공을위한특별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2대악법반대 전남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창선을 지도위원으로, 임금택을 총무위원으로 선출하는 한편, 민자통 결성 사실과 반외세 민족자주통일을 천명하기 위해 3월 28일 전남 광산군 송정읍 공회당에서 조국통일추진강연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3월 28일에는 민자통 전남협의회 주최로 개최한 통일추진강연회에서는 통민청 전남도맹의 박명서 및 안태순 등이 통민청 대표로 참석해 “평화통일을 민족의 지상목표로 남북한의 협상과 교류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4월 1일 민자통 전남협의회는 광주공원에서 ‘2대악법반대 전라남도 공동투쟁위원회’ 명의로 2대법반대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궐기대회에서 김창선은 “2대악법은 혁신계인 야당을 탄압하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蹂躪)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장면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은폐하려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통민청 전남도맹 위원장 서리이자 민자통 학생부장인 김시현은 “2대법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통일을 방해하려는 악법이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낭독했고, 결의문 낭독이 끝나자 ‘반민주공구’를 상여에 장치하고 김철중을 비롯한 7~8명이 상여를 메고 광주공원광장을 출발하여 남광주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2대법은 공산당을 잡는다”라는 구호 아래 야당과 혁신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민자통 주도의 시위대는 남광주역 광장에 이르자 역 광장에 운집한 청중들 앞에서 선전위원장 김창선이 “조국통일만세” 삼창을 선창하고 반민주공구상여를 불태웠다(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 1962c, 137).

민자통 전남협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임금택은 1961년 4월 19일 통민청 주최로

광주공원에서 열린 4·19 1주년 기념식인 「4월혁명완수촉진성토대회」 겸 「2대악법반대 성토대회」에 참석해 2대악법이 국민기본권을 박탈하고 혁신세력탄압을 목적으로 입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후 이 행사에 동참한 민자통 회원들과 함께 “통일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데모가 이적이냐 악법이 이적이냐”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광주공원을 출발해 금남로로 이어지는 시위행진을 벌이기도 했다(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 1962c, 138).³²⁾

민자통 전남협의회 결성의 의미는 한국전쟁 이후 지방에서 결성된 최초의 민족자주화운동을 지도하는 대중운동의 집결체라는 점이다. 민자통은 통일운동을 위한 협의체로 출발했으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통일전선체의 성격을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조직이었다. 또한 민자통은 혁신세력 재통합 논의의 산물이다. 비록 민자통의 결성과정에서 통사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중동련을 결성함으로써 혁신정치세력의 재통합 시도는 실패했지만, 통일운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분열되었던 혁신세력의 재통합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대중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 결과 민자통은 1961년의 3대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2·8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2대악법반대투쟁, 남북학생회담 지지투쟁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특히 2대악법반대투쟁은 장면정권이 국회상정을 결국 포기했을 정도로 민자통이 주도했던 투쟁 중 가장 성공적인 투쟁이었다. 2대악법투쟁을 통해 민자통을 비롯한 혁신세력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으로,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4. 5·16 군사쿠데타와 혁신세력의 몰락

1) 5·16 군사쿠데타와 혁명재판소

5·16 쿠데타의 발발은 4·19혁명 이후 활동을 재개했던 혁신세력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일부 혁신세력들은 박정희의 과거 경력을 볼 때 군사쿠데타가 오히려 부패하고 무능한 장면정권을 대체하여 새로운 민족민주혁명의 과업의 수행을 대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기대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는 혁명공약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³³⁾ 과거 좌익과 연계가 있었던 박정희에게 있어 혁신세력은 박정희 자신의 약점이자 감추고 싶은 과거를 속죄해줄 수 있는 희생양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의 과거와의 단절을 보다 분명하고 철저히 표현하기 위해 법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자를 만들어 처벌하고자 했다. 그 구체적인 조치가 바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 1961. 6. 22, 법률 제644호)」이었다.

32) 박동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종언방직 노조원들을 대거 참가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전개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 2천여 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그중에 종언방직 여성노조원들이 3백여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진술하고 있다(박동환 구술, 2007. 10. 19).

33) 혁명공약 제1조는 “반공을 국시의 제1외로 삼고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이다.

특별법 제6조는 특수반국가행위에 대해 “정당·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더욱이 이 법은 위헌적인 성격이 강한 소급법(遡及法)으로서 동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이승만 정권하의 부정선거에서부터 4·19 이후 혁신세력의 모든 활동이 동법에 의해 단죄되었다. 특별법 적용자들의 처리를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가 설치되었는데, 설치의 법적근거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였다.³⁴⁾

이와 관련, 당시 혁명재판소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우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저촉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가 그 단체의 간부직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소정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동조에 의거 문의처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반국가행위자로 처벌을 받은 후에 동 심판에서 누락된 동종의 다른 반국가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후에 발견한 반국가행위는 전에 심판한 동종의 반국가행위와 포괄일죄(包括一罪)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따로 심판할 수 없도록 했다(한국혁명재판사 편집위원회 1962a, 44).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정당과 혁신계 단체들이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로 사회대중당 창준위 사건, 혁신당 사건, 사회대중당 사건, 통일사회당 사건, 사회당 사건 등 혁신정당 관련 사건만 14건이고, 동민청 사건, 민민청 사건, 민통련 사건 등 청년학생운동 관련 사건이 5건,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민자통 사건이 8건, 사회단체 피학살자유족회사건 8건, 2대학법반대공동투쟁 위사건 2건, 기타 민족일보 사건, 교원노조사건 11건 등 총 48건이 혁신세력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이들에게는 3년에서 15년형이 선고되었고,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회당 최백근 등에게는 사형이, 송지영, 안신규 등은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뒤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민통련사건 관련 학생들에게는 6년에서 15년 형이 선고되었으며, 동민청과 민민청 관련 청년운동 관련자들에게도 5년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다(한국혁명재판사 편집위원회 1962b; 한국혁명재판사 편집위원회 1962c).

전남지역 혁신정당과 혁신세력들이 연루된 사건만을 살펴보면, 7·29총선 당시 제11 선거구(광양군)에 혁신동지총연맹 공천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최백근이, 사회대중당 사건으로 김철중이,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정해룡, 조중환, 임춘호, 박세원, 노용상이, 민자통사건으로 오지호, 김창선, 임금택이, 동민청 사건으로 김시현이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³⁵⁾

34)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는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 행위 또는 반혁명적 해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혁명재판사 편집위원회 1962a, 2).

4·19혁명 이후 혁신정당 활동과 청년운동,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혁신계 인사들이 대거 혁명집찰부에 구속되면서 혁신정당과 혁신운동단체들은 즉각적으로 활동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와해되었고, 검거를 피한 조직원들이 도피함으로써 다시금 4·19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군사정권 하에서 혁신세력들은 활동을 포기하고 제도권 정당·사회단체로 편입하든지, 아니면 지하화해서 활동을 계속하던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1963년 1월 1일을 기해 정치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혁신세력 내의 명망가 그룹들은 세 가지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 하나는 ‘합법적인’ 혁신정당을 재건하자는 그룹으로서 김철, 안필수, 이봉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통일사회당을 재건하여 제6대 민의원 선거에 참여했지만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당도 곧바로 해체되고 만다. 두 번째 그룹은 혁신운동을 포기하고 기성정당에 편입된 그룹으로서 이동화, 박기출, 임갑수, 이명하, 조현식, 한왕균, 김성숙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수야당인 신한당에 합류한다. 마지막 그룹은 합법적인 혁신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우선은 복역 중인 혁신계 인사들의 석방운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그룹으로서 조규택, 정태영, 안준표, 황빈 등이 대표적이다(정태영 1992, 46~47). 그러나 이들 역시 석방된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5공화국에서 민정당에 입당하거나 기성보수야당에 편입됨으로써 실제로 혁신정당 활동의 맥을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2) 혁신세력의 지하화와 4·19혁명공간의 복원투쟁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제도권 편입이나 지하화냐의 갈림길에서 지하화를 선택한 그룹이다. 많은 혁신정당 출신 인사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한 반면 특히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지하화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른바 통민청, 민민청, 민통련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인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지하활동이 최초로 사건화되었던 사례가 바로 1964년 발생한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이었다.³⁵⁾

이들이 지하활동을 전개한 기저(基底)에는 4·19혁명공간의 복원이라는 사회운동의 목표가 전제되어 있다. 즉 한국전쟁 이후 최종 통합된 기형적인 보수 독점적 이데올로기 지형이 4·19혁명을 통해 일정 부분 과열되면서 확립화된 보수정치에 반대하는 혁신정치세력들이 합법적으로 등장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정치공간이 열렸다. 이를 4·19혁명이 창출한 정치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4·19혁명공간은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면서 다시 폐쇄되고 말았다. 다시금 반공을 국시로 하는 보수주의 정

35) 이들 사건 중 정해룡, 조중환, 임춘호, 박세원, 노봉상 등이 연루된 통일사회당 전남도당 사건은 한국혁명재판사편 집위원회 발행 『한국혁명재판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통일사회당 전남도당 사건이 혁명재판부에서 심판된 것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심판되었기 때문이다.

36) 1964년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유통발전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2005.12.7)』을 참조하라.

치세력들의 독점적 정치구조가 복원되었다. 5·16 군사쿠데타가 반공에 기초한 보수주의 독점적 정치구조의 복원을 위한 쿠데타였다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하화된 혁신세력 내지 청년운동가들의 목표는 5·16 군사쿠데타로 폐쇄된 4·19혁명공간의 복원이었다.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제1차 인민혁명당 역시 이러한 사회운동의 목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군사독제를 극복하고 민주적 사회주의 건설, 대외 의존적 종속경제가 아닌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그리고 분단 상태의 극복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제1차 인혁당의 강령이 사회당의 강령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후 통일혁명당이나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재건단체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은 모두 4·19혁명공간에서 활동했던 혁신정당 참여자나 통일청, 민민청, 민통련 등에서 활동하던 청년 운동가들이 중심세력을 형성했다. 이 사실 역시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70년대 말까지(광주민중항쟁 이전) 사회운동의 큰 테마 중의 하나가 4·19혁명공간의 복원투쟁이었음을 보여준다.

4·19혁명공간의 복원이라는 사회운동의 큰 맥락은 전남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시현의 증언을 보자.

그때 4.19로 해서 5.16쿠데타로 해서 형을 받고 나와서 흩어진 통일청 조직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미 내가 노출이 돼 버리니까 서로 나를 꺼려하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공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것이...돌아가신 이기홍 선생님, 이문교, 나, 기세문 넷이서 비밀리에 만났어. 주 1회, 만남 장소는 밤 6시 기세문씨 자취방이 있었거든. 거기서 만났어. 그래 가지고 각각 임무를 부여받았어. 기세문씨는 저쪽 북한방송 듣고 전략전술 문제라든지 국제정세라든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요해 발표를 해. (북한)방송 필기해가지고...이문교가 조대책임이고, 학생동원이라든지 (학생운동)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 전남대학교는 내가 담당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이기홍선생이야. 그분은 그런 문제로서는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한 10여년 가까이 계속 했었어. 그러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나름대로 아주 최선을 다했어(김시현 구술. 2007. 7. 19).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사회당, 통사당, 사회대중당 등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일부는 검거를 피해 도피했고, 일부는 구속되었지만 혁명재판소가 아닌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았다. 출소 이후 이들은 혁신정당 활동을 중단하거나 제도권 야당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사회당 참여자 일부와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은 4·19혁명공간

에서의 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새로운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 중의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비밀모임이다. 사회당 전남도당의 조직화를 책임졌던 이기흥과 사회당 청년부에서 활동했으며 통일청 활동을 배후에서 지도했던 기세문, 통일청 위원장 서리였던 김시현과 주요 간부였던 이문교 등이 지하에서 수년 동안 비밀모임을 통해 정세교양과 학생운동의 지도 및 조직화 등의 활동을 계속했다. 이들의 활동에서는 이른바 '3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역할분담을 하되 조직이나 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不名), 문서화하지도 않고(不文), 조직에 관한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다(不言).

우리는 그런 것(조직이름-인용자) 없다니까. 일기도 안 썼다니까. 기록도 없고. 그렇게 철저히 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죽을 고비를 몇 번 지나고(김시현 구술, 2007. 7. 19).

이들의 활동은 학생운동,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내의 학생운동 활동가를 재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왜냐하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주체역량의 창출을 중요한 조직의 과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시 김시현의 진술을 보자.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학내 지하서클을 만들었어. ...一思會(one source party)라고, 회칙을 내가 실제로 초안을 했어. 그 초안을 조목조목 (작성)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때 1학년 중심으로 만들었어. 나머지 (이)홍길이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고, (박)석무가 3학년이고, 그때 한참 활동할 때니까. 이 사람들 졸업한 이후에는 후임을 누군가 대신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사회를 조직 했어. 거기에 핵심멤버가 이문교 동생 이현교라고 있어. 그때 1학년이었거든. 그 중심으로 해서 한 2~30명이 됐어. 홍길이가 홍갑기, 박석무 졸업을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일사회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학교를 떠났지...그래서 전번에 돌아가신 우리 선배들 몇 사람이랑 홍길이란 같이 운동에 60년대 초부터 일어났던 운동의 연장선상이 광주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다 결론을 냈더라고(김시현 구술, 2007. 7. 19).

김시현을 비롯한 혁신세력 잔존세력들은 군사정권 하에서 혁신정당의 건설이나 통일청의 재건과 같은 합법적인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동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역량을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일사회 등을 조직해서 선진적인 활동가를 비밀리에 양성했다고 한다. 일사회 등을 통해 양성된 활동가들이 1960년대 광주지역 학생운동의 중심이자 지도급 활동가로 성장했고, 이러한 주체역량의 선순환적인 재생산과정을 거쳤기

에 광주민중항쟁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³⁷⁾

다만 조선대학교의 경우 이러한 주체역량의 선순환적인 재생산 구조가 단절되어버렸는데, 이는 이문교의 증언처럼 당시 조선대학교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조선대학교는 박철웅총장 퇴진 문제로 학내분규를 겪고 있었는데, 5·16 군사쿠데타로 통민청 활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구속되자 학교 측에서는 이들을 즉각 퇴학조치해 버렸다. 박복규, 박명서, 김수연, 이문교, 박동희 등이 그들인데, 이들 중 일부는 전남대학교로 전학을 갔고, 일부는 학교를 포기하면서 노동현장으로 진출했다. 김수영의 경우 전남대학교 공법학과로 전학을 와서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에 투신한 대표적 사례고, 이문교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현장으로 진출했던 대표적 사례다(이문교 구술, 2007. 10. 16).

통민청 활동 참여자들과는 별개로 또 다른 흐름 역시 존재했다. 민자통 전북협의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수배를 받고 전남 화순지역에 피신 중이던 유락진(유갑룡의 개명)은 역시 사회당 청년부와 민자통 전남협의회 대의원을 역임한 바 있던 기세문 등과 1966년 8월경 통일혁명당 호남지부를 건설했다가 공안기관에 발각되었던 소위 '통혁당 호남재건위사건'도 있었다. 당시 기세문은 혁신좌파 정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 노선에 입각한 민족통일혁명당의 창당을 구상, 당 규약 및 강령과 "미제의 앞잡이 파쇼 괴리정권을 타도하라" 등의 투쟁구호 등을 작성하는 한편, 청년 및 대학생 핵심활동가들을 '햇불회'라는 조직에 가입시켜 민족통일혁명당의 중심세력으로 삼고자 했다고 한다. 기세문은 햇불회의 강령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고 한다(기세문 구술, 2007. 10. 19).

IV. 전남지역 혁신세력의 조직결성과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

1. 조직결성

4·19 혁명공간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혁신세력 최초의 조직적 대응은 혁신정당의 결성이었다. 이는 7·29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혁신계의 주요 인사들이 지식인 출신이 많았고, 민주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혁신정당의 결성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혁신세력 내에서도 좌익적 성향의 인사들은 합법적인 대중정당의 건설을 통한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적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

37) 김시현이 주장하는 단체의 규모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의 문제를 떠나, 그 문제의식과 광주지역 학생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성장한 학생운동이 김시현이 설명한 방식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이다(전남대학교 1982, 621~634; 전남대학교 2002, 885~921).

과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대중운동과 결합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선도적 세력의 결집체로서 정당을 사고하게 된다. 이 경우 정당결성의 목표는 선거참여와 당선, 의정활동보다는 대중투쟁의 조직화와 지도가 우선하게 된다. 전자의 흐름이 7·29총선 이전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와 같은 합법적인 혁신정당의 건설노력에서 관철되었다면, 후자의 흐름은 7·29총선 실패 이후 사회당과 같은 좌익적 성향의 혁신정당에서 관철되었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혁신세력들의 조직화 시도는 합법적인 대중정당의 결성과 대중정치조직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대별되었다.

이와 관련 혁신세력의 합법정당 결성이 어떤 맥락에서 제기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바로 제5대 민의원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1960년 6월 27일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회에서 보고된 「경과보고」다. 이 문건에서는 혁신세력의 조직화노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한국사사료연구소 1986, 331).

4·19 직후 비법적으로 해체되었던 진보당, 등록을 거부당하여 오던 민혁당, 근민당, 사회당, 민사당, 노동당 등등 구당원들이 핵심이 되어 일반 대중들의 절대적인 요청이었던 혁신세력 규합운동의 선봉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혁신세력 조직결성의 출발점은 종래의 혁신세력, 즉 이승만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고 해체되었던 진보당계열이 조직결성의 중심세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로 표출된 혁신정당결성운동은 해체되었던 진보당의 복원이라는 기본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고, 임박한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혁신세력 진영이 내부의 이념적 차이와 계파간의 갈등을 자제하고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는 흩어져 있던 혁신계 인사들을 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하는 대통합의 산물이었는데, 여기에는 혁신정당의 정당결성 목표를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선도적 세력의 결집체로서 보다는 선거참여와 당선, 의정활동에 두고 있던 진보당 계열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는 진보당 계열, 민혁당계열, 근민당계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발기했고, 6월 17일 창당준비위 모임에서는 집단지도체제인 총무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하는 계파들이 다양했기에 단일지도체제의 채택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현실적 조건 하에서 정당결성 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임시 통합할 수 있는 최선책은 집단지도체제의 채택이었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는 선거를 치르기에 효과적인 지도체제는 아니다. 입후보자 공천문제에 있어 계파간 배분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혁신계 인사들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거운동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힘든 지도체제다. 결과적으로 7·29총선에서 사회대중당은 실패했고, 선거에 실패한 사회대중당은 분열했다. 그렇지

만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는 4·19혁명 이후 7·29총선 참여라는 중요한 정치행사를 앞두고 혁신세력이 단일한 대오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결성한 범혁신세력의 대통합 정당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혁신세력은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라는 단일 대중정당을 결성하여 보수주의에 대항하였으나 7·29총선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즉 4·19혁명공간에서 혁신세력이 확립하고자 했던 보수 대 혁신의 정치구도는 결코 형성되지 않았다. 7·29총선은 여전히 보수 독점적 정치구조가 지배적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게다가 혁신세력은 정치노선의 추상성, 파벌주의 등으로 인해 이합집산하는 모습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의 의식과 유리된 '그들만의 정당'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다시 말해 사회대중당은 합법적 대중정당 결성을 모색했던 이들이 대중정당이 아닌 일부 지식인과 명망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대중정당(mass party)을 표방한 간부정당(cadre party)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혁신세력 내부에서도 이러한 반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사회대중당의 분열로 사회대중당 고수파, 사회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등으로 소위 혁신 4당 체제가 나타나자 혁신세력 내부에서는 합법적인 대중정당 건설노력과 함께 대중정치투쟁단체를 결성하여 대중적인 수준의 정치투쟁을 조직화하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마침 장면정부는 한미경제협정 체결,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등 2대법안 상정, 통일정책 등에서 혁신계 정치세력과 대립하고 있었다. 혁신세력, 그중에서도 사회당은 통민청과 민자통 결성 등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민자통은 각 지방에 민자통 지역협의회 결성을 서두르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의 면모를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자통의 지방협의회 조직은 대개 사회당과 민민청·통민청 등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면서 통사당 등이 중심이 된 중동련과 차별성을 보였다. 이는 민자통 참여인사들이 대개 해방 이후부터 중간과 혹은 좌파계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이후 혁신운동세력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 2대악법반대운동, 남북학생회담지지운동 등의 대중운동을 다른 정당·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연합하여 이끌면서 민자통의 세력화와 조직화가 용이하게 진행되었던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민자통의 통일운동은 4·19혁명공간이 부여한 주요 개혁이슈들을 방기하고, 분단모순의 해결만을 한국사회의 최우선적 해결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중산층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민자통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계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반발하여 통일사회당계에서 결성 4일 전에 민자통을 이탈하여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을 결성하게 된 것도 혁신세력 내에서 통일운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대중들에게 혁신세력의 또 다른 분열상으로 비친 점도 문제다.

이에 반해 청년운동조직은 민자통과 중동련의 분열의 전철을 밟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맥락에서 결성되어 활동하던 통민청과 민민청은 조직 간의 이념과 활동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인식하고 통합을 위한 논의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통합논의가 중단되지만 않았어도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청년운동 조직의 탄생도 가능했을 정도다. 특히 통민청은 자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4·19혁명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년조직이었으며,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다음 세대의 중추세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각 지역별로 조직화를 진행했다. 또한 통민청은 기존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대체할 대안세력을 자임하면서 혁신정당의 외부에서 혁신정당 내부의 변화를 강제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2. 정치활동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7·29총선 참여고, 다른 하나는 2·8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 2대약법반대투쟁, 통일투쟁 등 소위 3대 대중투쟁의 조직화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를 다시 범위를 좁혀 지역단위에서 전개된 7·29총선 참여와 지역단위의 3대 대중투쟁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우선 7·29총선 참여를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회대중당은 전남지역 32개 선거구 중 22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자를 공천했지만,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도 민주당이나 자유당, 통일당에도 뒤지고 말았다. 또한 득표율에 있어서도 7·29총선에서 사회대중당은 전국적으로 541,021표를 득표해 5.96%의 득표에 그쳤고, 이는 민주당의 41.71%, 무소속 합계 46.80% 보다 크게 낮고, 전남지역만 보더라도 민주당 46.01%, 무소속 합계 40.82% 보다 낮은 8.16%의 득표율에 그치고 있다. 22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의 득표율치고는 너무 낮은 득표율이다.

이처럼 7·29총선에서 혁신세력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혁신세력이 4·19혁명이 제기한 새로운 시민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전히 추상적인 민족통일운동에만 주력했고, 민생문제를 비롯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다양한 개혁이슈를 창조적으로 조직화하지도 못했다.

특히 혁신세력이 4·19혁명의 주체세력이 아니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즉 4·19라는 혁명공간은 혁신세력이 주도하여 만든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해 만든 공간이었다. 혁신세력은 주어진 혁명공간에서 무임승차하려는 것으로까지 비춰졌다.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이 “독제와 싸운 정당, 마음 놓고 찍어주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승만 정

권에 대항한 정통세력을 자임한 것에 비해 혁신세력은 자신의 정치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4·19혁명과정에서 보수 야당세력만큼의 주도성도 주장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점에서 혁신세력의 선거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혁신세력이 조직과 자금 면에서 열세였으며, 정당정책도 민주당과의 차이를 뚜렷이 내세우지 못했고, 선거제도 자체가 소수와 신흥정당에 불리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였기 때문에 7·29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스스로 혁명의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체성 확립의 실패야말로 7·29총선에서 혁신세력이 실패한 핵심이유다.

7·29총선 실패는 혁신세력의 존립근거와 활동무대를 의회가 아닌 '거리'로 옮기도록 했다. 의회정치지향에서 거리정치지향으로의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에 모든 혁신정당이 동의했던 것 같지는 않다. 거리정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여전히 의회 정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세력도 많았다. 이러한 정세에 대한 의견차이가 정치노선의 분화를 가속화했고, 정치경력과 인맥에 따라 다시금 혁신세력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 선거참여를 위한 통합혁신정당의 필요성이 선거에서 실패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제 새로운 활동형태와 투쟁이슈를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새로운 활동형태를 혁신세력은 쉽게 대중투쟁의 장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대중투쟁을 통해 조직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혁신세력에게 있어 대중투쟁을 통한 조직화가 가장 용이한 이슈는 통일문제였는데, 이슈선정의 적절성 문제를 떠나 통일문제는 혁신세력의 헤게모니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통일문제 이외에도 한미경제협정, 2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정부와 혁신세력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민자통 전남협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지방에서 결성된 최초의 민족자주화운동을 지도하는 대중운동의 집결체로 평가할 수 있다. 민자통은 통일운동을 위한 협의체로 출발했으나 자주적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통일전선체의 성격을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자통은 통일운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분열되었던 혁신세력의 재통합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대중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음도 사실이다. 특히 민자통은 1961년의 '3대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2·8한미 경제협정 반대투쟁, 2대약법반대투쟁, 남북학생회담 지지투쟁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중조직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갔다.

여기에 덧붙여, 2대약법반대 공동투쟁을 통해 혁신정당의 재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2·8한미경제협정 체결반대투쟁도 마찬가지지만 2대약법 반대투쟁은 혁신계 정당·단체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했다는 점에서 분열과 반목에서 제휴와 연합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점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는 전남지역 혁신정당과 혁신정치단체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 모든 투쟁의 성과들이 채 축적되기도 전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면서 혁신계 정당·단체가 축적해가던 대중들의 조직화와 대중투쟁의 활성화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혁신계 정당·단체 활동가들은 혁명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거나 도피하여 은거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4·19혁명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혁신세력이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혁신정치세력의 등장은 4·19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결여, 정체성 확립의 실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구상 등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인식 결여, 대중들의 지지 확보 실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패한 정치실험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모두가 실패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며 대중정치투쟁과 집단교양을 통해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되어야 한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1960년대의 사회운동, 그 중에서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형성을 둘러싼 혁신세력의 정치개입에 주목해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조직결성과 정치활동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스케치는 적지 않지만, 지역단위의 조직결성과 정치활동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 혁신세력에 관한 연구의 회소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켰다는 점이다.

전남지역 혁신세력의 정치활동 내지 대중운동은 사실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사실 혁신세력의 영향력은 1970년대 말, 5·18 광주민중항쟁 이전까지 사회운동의 기저에 면면히 이어져왔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4·19혁명 이후 혁신세력의 조직결성과 활동의 경험을 통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관통하는 반권위주의 저항운동의 주체역량이 양성되었기 때문이다. 주체역량의 양성은 직접적인 지도·육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경험의 공유를 통한 운동역량의 성장까지 모두 포함한다. 저항운동의 주체역량은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단절된 4·19혁명공간의 복원투쟁과정에서 형성된 것인데, 그 이념적·조직적 자원은 4·19혁명 이후 5·16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이어졌던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대중운동이었다. 즉 혁신세력의 존재와 활동은 이후 사회변혁운동과 학생운동의 원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본문에서의 검토를 통해 전남지역 혁신세력의 조직결성과 정치활동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혁신정당 중에서도 사회당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이의 영향으로 청년운동조직도 통민청만 결성되어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했고, 그 규모도 전국적이었던 점이다. 또한 사회당·통민청·민자

통에 이르기까지 중앙-시·도-군 단위까지 행정단위별로 계서적(hierarchical) 조직화를 시도했는데, 이는 단순히 조직화 역량의 차원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고, 조직화가 가능한 사회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다른 지역보다 광범위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전남지역 혁신세력 활동의 특징은 청년운동이 중심이 되어 혁신정당을 '채찍질하는' 형태로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7·29총선까지 혁신운동의 중심은 혁신정당이였다. 이는 선거공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었고, 실제로 사회대중당 전남도당 창준위가 중심이 되어 7·29총선까지 전남지역의 혁신세력 활동을 지도 및 주도했다. 그러나 7·29총선 실패 이후 혁신세력 운동의 주도권은 청년운동으로 이전되었다. 혁신정당은 동민청으로 대표되는 청년운동조직의 활동을 사상적으로 지도하고,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당과 민자당의 지도하에 동민청이 실천활동을 주도하되, 지역의 혁신정당들이 재정·인력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장면정부 하의 '3대 대중투쟁'을 수행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특히 2대악법 공동투쟁위원회는 전남지역의 모든 정당이 참여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는 대중정치투쟁을 통해 연대와 재통합을 모색했던 혁신세력 운동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비록 실패했지만 제2공화국 민주주의의 채우지 못한 빈 공간을 혁신세력의 활동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혁신세력이 남긴 발자취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혁신세력은 이념적 지향의 다양성과 빈번한 조직적 분화로 인해 종합적 접근이 쉽지 않은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과거사 정리 작업과 함께 시작된 1960~7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들 사건의 주체였던 혁신세력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복권을 가능케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이들에 대한 학문적 복권이다. 이 연구는 특히 지역사회의 혁신세력 운동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혁신세력을 1960년대 사회운동사의 중심으로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면면히 이어져온 지역 사회운동사의 한 조각을 기워 맞추어줌으로써 지역사회운동사의 완결성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이기도 하다. 흩어져 있는 더 많은 조각들이 모두 끼워 맞춰졌을 때 지역사회운동사의 완결된 서술도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고성국, 1990. "4월혁명의 이념."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서울: 한길사.
- 권대복, 1985. 『진보당』. 서울: 지양사.
- 권희경, 1989. 『한국혁신정당과 사회주의인터내셔널』. 서울: 도서출판 태양
- 기세문, 『과도기의 혼리와 우리 민족의 살길』. 민간행 원고
- 김광식, 1988. "4·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 1988년 봄호(통권 2호).
- 김광식, 1989. "한국현대사의 증언-해방 직후 근로인민당에서 4·19시기 사회당 박정권 하에서의 인혁당-남민전 사건까지 혁신계 변혁·통일운동의 맥." 『역사비평』 1989년 여름호
- 김광식, 1990. "4월혁명과 혁신세력의 등장과 활동."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서울: 한길사.
- 김낙중, 1990. "4월혁명과 민족통일운동."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서울: 한길사.
- 김동춘, 1990. "4월혁명에 관한 기존 연구와 그 문제점."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서울: 한길사.
- 김동춘, 1991. "제2공화국의 사회상황과 민족·민주운동."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서울: 도서출판 까치.
- 김민하, 1998. 『한국혁신정당론』.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세원, 1991. "4월혁명 이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역사비평』 제15권(1991.11).
- 김세원, 1993a. 『비트(상)』. 광주: 일과 놀이.
- 김세원, 1993b. 『비트(하)』. 광주: 일과놀이.
- 김수진, 1996. "제2공화국의 정당정치."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김지형, 1996. "4·19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과정." 『역사와 현실』 제21권
- 김지형, 2002. "전략당과 남민전: 권제혁, 이재문, 신항식 복권은 6·15 실현에 달려 있다." 『민족 21』 통권 제20호
- 노중선, 1992. "4월혁명기 혁신정당, 왜 좌절하였나." 『역사비평』 1992년 가을호(통권 20호).
- 류동민, 2002. "민족경제론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2002년 겨울호
- 문한영, 1990. "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운동."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서울: 한길사.
- 박명림, 1996. "제2공화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변화."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박찬호, 1991.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2』. 서울: 풀빛.
- 박태균, 1993.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부산 민주운동사』. 부산: 부산광역시.
- 서중석, 1988.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1988년 여름호(통권 제3호).
- 서중석, 1991. "4월 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1991년 가을호(통권 제16호).
- 서중석, 1997.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1997년 겨울호(통권 41호), 1997. 11, pp. 16 ~ 45 (30pages)
-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상)』. 서울: 역사비평사.
- 손병선, 1990. "2대약법 반대운동."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서울: 한길사.
- 손호철·정해구, 1996. "제2공화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송남현·정태영·서중석, 1995. "대담: 고초로 점철된 혁신계 50년" 『역사비평』, 1995년 봄호(통권 30호).
- 이갑윤, 1996. "제2공화국의 선거정치: 7·29총선을 중심으로"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이상우, 1985. "민족일보·인혁당 사건의 전말." 『신동아』, 6월호.
- 이우관, 1990. "4·26에서 7·29총선까지."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서울: 한길사.
- 이재오, 1984. 『해방 후 한국 학생운동사: 1945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 형성사.
- 이종석, 1990. "4월혁명 주도세력의 변천과정."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서울: 한길사.
- 이태호, 1982. 『70년대의 현장』. 서울: 한마당.
- 전남대학교, 1982. 『전남대학교 30년사 1952~1982』.
- 전남대학교, 2002. 『전남대학교 50년사 1952~2002』.
- 정기영, 1990. "4월혁명의 주도세력."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서울: 한길사.
- 정창현, 1991. "4월민중항쟁 직후 혁신정당운동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2』. 서울: 풀빛.
- 정태영, 1992. "5·16 쿠데타 이후 혁신세력은 어떻게 존재하였나?" 『역사비평』, 1992년 가을호(통권 제20호).
- 정태영, 1995.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사』. 서울: 세명서관.
- 정태영, 2006. 『조봉암과 진보당: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삶과 투쟁』. 서울: 후마니타스.

- 정태운, 1991. "1960·70년대 '공안사건'의 전개양상과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3』. 서울: 풀빛.
- 조희연, 2001. "50·60·7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운동사』. 서울: 한울.
- 차기백, 1983. "4·19, 과도정부, 장면정권의 의의." 강만길·고영복 외. 『4월혁명론』. 서울: 한길사.
-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2001. 『사법살인-1975년 4월의 학살』. 서울: 학민사.
- 최용호, 1999. "1970년대 전반기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 최용·이석연·이홍길·이종범·최영태, 1989a. "한국에서의 '혁신주의' 정당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I)." 『전남사학』 제3집.
- 최용·이석연·이홍길·이종범·최영태, 1989b. "한국 '혁신주의' 정당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II)." 『전남사학』 제4집.
-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 최장집, 1996. "제2공화국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등장과 실패."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편집부, 1986. 『공안사건기록 - 1964~1986』. 서울: 세계.
- 한경남, 1990. "7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위상변화."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20년의 결산과 전망』. 서울: 세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I~VIII)』.
- 한국사료연구소(이정식 집필), 1986. 『한국현대정치사(제3권): 제2공화국』. 서울: 성문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9.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 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 1962a. 『한국혁명재판사, 제2집』.
- 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 1962b.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
- 한국혁명재판사편집위원회, 1962c.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 한상구, 1990.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서울: 한길사.
- 황 건, 1990. "민통련과 민족통일운동."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서울: 한길사.

2) 관련자 구술

- 기세문 구술, 2007. 10. 19.
- 김시현 구술(1차), 2007. 7. 19.
- 김시현 구술(2차), 2007. 11. 3.
- 박동환 구술, 2007. 10. 19.
- 이문교 구술, 2007. 10. 16.
- 정길상 구술, 2007. 9. 10.

정종희 구술, 2007. 11. 9.

3) 기타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005.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조사보고서)』. 2005.12.7.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 1961. 6. 22, 법률 제633호)」(<http://www.klaw.go.kr>)

민국일보

민족일보

영남일보

한국일보

학생운동 연구방법론과 연구과제 확장을 위한 제언

이창언 (역사학연구소 연구원/한신대 외래교수)

I. 들어가며

1980년대는 70년대까지의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 운동의 단절을 복원하고 급진변혁 운동으로서의 사상, 이념, 대중적 기초를 강화시켜 온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80년대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변혁기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분수령이자 학생운동이 성장 분화되었던 정점기라는 사실만으로도 학생운동은 충분히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동안 학생운동 연구는 통사적으로 접근하여 이념적·조직적 '분화'의 관점에서 개괄하거나, 사회구조나 사회구성체에 대한 인식과 변혁의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에도 특정한 사건을 동태적 변화에 대한 평가, 가능한 장기적인 조사 및 동기 규명 작업 없이 하나의 특정한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일반화시키거나, 운동의 발생을 사회병리현상으로 단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학생운동 연구 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비롯하여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의식, 행동, 동기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 작업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원래 학생운동에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아 국간(cross-national)연구를 통한 일반이론화¹⁾가 어렵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의 과잉보수주의와 레드컴플렉스의 지적 분위기에 진보진영 내부의 지적편향과 정파적 목적에서 파생되는 독단적인 해석이 결부되면서 객관적인 분석과 연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 1990년대 국가사회주의가 '몰락'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동안의 학생운동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여 새로운 학생운동의

1)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이 학생운동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전개과정과 양상, 그 영향력, 향후 전망에 이르기까지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독자이론은 아직 없다. 자세한 내용은 김도준, 「한국학생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엔지오회, 2003 참고.

진로를 모색하고자 했던 연구 여건과 의지 역시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기존의 한국 학생운동 연구는 '학생운동의 발생원인', '학생운동의 이념과 역사', '학생운동의 목표와 사상'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시기적으로도 198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로 1980년대를 주제로 다룬 문헌들의 상당수는 논쟁²⁾ 또는 운동론 중심으로 당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학문적 접근과도 거리가 있다. 서중석³⁾은 이에 대해 "논쟁 또는 이론중심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을 편집하였다"고 지적하면서 "1960년대건 1980년대건 어떠한 여건에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고,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했으며, 무슨 책을 읽고 어떠한 생활을 하며, 농합·공합·야학은 어떻게 했는가를 다룬 것은 적은 편"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학생운동 연구는 학생운동 참여자들이 특정한 목표를 인지하는 방식과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하위문화(subculture)속에서 발생하는 운동 목표의 긴장과 갈등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록 이념적으로 편향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학생운동은 해당 시기 사회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한국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모순과 사회세력의 역관계 그리고 당면과제를 응집시켜 보여주는 한국 사회운동사의 기틀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학생운동이 자본과 권력의 전면적 억압과 배제 상황 속에서 공론장을 활성화했던 역사를 상기할 때, '실질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은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의 위기'는 '시민사회 공론장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기'의 극복은 과거 학생운동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객관적인 재평가 작업을 통한 긍정적 유산의 복원과 그 후과의 극복이어야 한다. 학생운동 연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구조 및 동학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당대의 시대정신을 밝히고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성찰적 재구축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과 목표들은 과거 학생운동 연구의 분석 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개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판의식을 지닐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다만 이것은 학생운동 연구의 내적 문제들과 한계 그리고 공백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의도성과 과장성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회적 실재라는 차원에서 더욱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학생운동 연구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집합적 기억을 가진 세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실용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⁴⁾

이 글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진행된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경향과 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생운동 연구의 방법론적 연계를 강조하며 학생운동 연구에서 상대적으

2) 운동론적 성격의 문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80년대를 연대기적으로 다루며, 그것을 운동역량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단계를 구분하여 운동세력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운동세력을 분류하는 기준을 변혁운동 노선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운동 관련 서적들이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론가나 학생운동가들에 의해 쓰였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3) 서중석,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집, 1997.

4) 조대열, 「386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합」,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2002, 252쪽.

로 소홀히 되었던 연구 영역의 보완을 위한 제언도 제시하고자 한다.

덧붙여 이 글의 후반부에는 80년대 학생운동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즉, 급진화와 참여, 동원전략에 대한 단상도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양한 학생운동 그룹의 노선과 입장을 모두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던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유는 첫째, 분석대상이 많아 짐으로 인해 논의의 집중성과 총체성을 잃을 수 있으며, 학생운동의 주류였던 민족해방계열이 당대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문화뿐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개혁·진보세력과 386세대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 여파가 운동문화와 사회적 관계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학생운동 선행연구 검토

1. 한국 학생운동의 개념·특징·유형변화·급진화를 둘러싼 선행 논의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의 개념 정의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 학생운동 연구들은 용어의 정의 없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용어의 표기에 관해서도 확정된 것 없이 이루어졌다.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student political activism 또는 student protest, student unrest 등의 용어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운동’으로 가장 많이 표기되며 ‘학생소요’, ‘학생시위(활동)’, ‘학생정치활동’ 또는 ‘학생정치운동’ 등의 용어로 쓰이고 있다.⁵⁾ 서구의 학생운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심리적인 특성’과 ‘정치적 특성’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한국의 선행 연구는 대체로 정치적 특성에 따른 정의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의 학생운동이 정치적 변화과정 속에서 민주화운동·노동운동·통일운동 등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변혁 운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기성세대에 대한 학생집단의 반항적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상과 사회모순에 근거한 사회운동의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⁶⁾ 한편, 학생운동의 행위자 범주 설정에는 대학생, 세대, 청년 일반, 지식인의 한 집단 등으로 규정하는 실제적 접근⁷⁾도 있지만 최근에는 엄혹한 군사정권 하에서 진행된 한국 학생운동의 특성 즉, 학내 지도부의 이중성(공개·비공개)과 다양한 영역의 사회운동에 학생운동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구성적이고 관계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은 변혁을 지향하는 여러 부문

5) 이재봉, 「한국 학생운동의 연구 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연구』 8집, 1990, 1~2쪽.

6) 신율, 「시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내 시민운동의 문제점」, 『시민운동 바로보기』, 2001, 52~56쪽.

7) 이재봉은 학생운동의 구성요소로 그 신분이 학생이라는 점, 기존 체제나 세력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 저항이라는 점,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 어떤 이념이나 이슈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었다는 점, 물리적 폭력을 수반한 힘의 행사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을 취합하여 자신의 조직 중심 주위에 그것들을 둘러 세우는 방식을 동원했으며⁸⁾ 브
 락피부르조아로서 자신의 이해보다는 민중과 민족의 총체적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하여
 민주-민족-민중-계급적 담론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⁹⁾ 이처럼 80년대 사회운동의
 연대주의적 성격을 고려하고 80년대 학생운동에서 학생과 공동체의 결합이 두드러졌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좀 더 풍부한 연구가 '관계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것
 으로 본다.

한편 선행 연구는 타국보다 한국의 학생운동이 강한 역사성·지속성·정치성을 지
 념음을 강조하며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학생운동을 조명해야 그 특수성
 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는 80년대를 시기에 따라 80년 신군부 집권에서 유화조치까지, 유화조치이
 후 1985년 2·12 총선, 총선이후 87년 6월 항쟁까지,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89년 공안
 정국 직전까지, 공안정국 이후 91년까지 구분(조희연,1990, 조현연,2001, 최장집,1993)하
 며 1984,1985년을 전후로 하여 급진적인 변혁론이 학생운동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고 보고 있다. 운동진영의 각종 문헌들도 변혁운동의 이론정립과 확산을 중심으로 80
 년~83년을 이론 정립기, 84년~85년 하반기까지를 1단계 이론 투쟁기, 86~88년 2단계
 이론 투쟁기로 설정하고 있다¹⁰⁾

학생운동의 이념적 유형변화에 대해서는 60년대 '소시민적 인식의 단계¹¹⁾', 70년대
 '민중주의적 인식의 단계', 80년대 '민중적·혁명적 인식의 단계'로 구분하는 조희연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¹²⁾ 70년대 초반까지는 장기집권 반대나 부정선거 반대 등의
 자유주의적 슬로건을 가지고 저항운동이 전개되었고 1972년 유신체제라는 폭압적 정권
 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저항담론 및 사회 운동론적 인식이 심화하였다는 것이
 다. 70년대 민중론의 다양한 형태들 - 민중사학이나 민중신학, 분단사회학 등 - 은 60
 년대의 비 혁명적 인식의 단계를 뛰어넘어 80년대 혁명주의적 인식의 단계로 가는 과

8) 이신행,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1997, 65쪽.

9) 김동춘,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당대, 1997, 80~81쪽.

10) NL의 입장에서 1980년대의 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조직을 정리한 최연구는 변혁운동과 지도이념의 정립이라는 입장에 근거하여 첫째, 10·12 - 83년 하반기: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시기. 둘째, 83년 말 ~ 85년 상반기: 기반을 확장하면서 전진하는 시기. 셋째, 85년 하반기 ~ 86년: 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시기. 넷째, 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선거투쟁: 대중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시기. 다섯째, 88년 ~ 89년: 반의세반독재 통일운동의 신봉에 선 시기로 구분한다. 최연구,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1990.

11) 최문성(1998:140)은 6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인식수준을 ① 반독재 민주회복운동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개념 ②사물과 모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곁여하였지만 반의세 민족주의 운동 ③ 형이상학적 관념이 갖는 낭만적 성격의 그야말로 소박한 민주적 열정의 운동으로서 체제 내적 성격이라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변적 참여자에게는 청년기의 어느 날의 열정으로 기억되고 그 주동자에게는 정치활동의 리허설과 같은 운동이 60년대 운동의 성격이라고 규정한다.

12) 조희연,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헌재·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1)」, 한울, 1989; 조희연, 「저항담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57쪽. 유명익은 한국 학생운동의 유형을 조선 말부터 해방 전까지의 반외세 민족주의형, 60-70년대의 반독재 민주주의형, 80년대 이후의 민중적 사회주의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외국학생운동에 비해 강한 역사의식, 도덕주의적 성향, 민족주의적 성향, 저항적 성향이었다고 말한다(유영익,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한국학생운동의 연구: 대학생의 태도조사 보고」,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87, 34-35쪽).

도기적 인식단계라는 것이다.¹³⁾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학생운동을 다룬 여러 유형의 논문들은 주로 학생운동이 어떻게 사회변혁의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에 연구초점을 두며, 왜 학생운동이 급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¹⁴⁾ 대체로 선행 연구들은 80년대 광주를 분기점으로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이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적 인식과 PD(people's democracy 민족민주주의)적 인식¹⁵⁾으로 표출되면서 '투쟁의 전투화', '이념의 혁명화', '운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87년 6월 항쟁 이후 90년대를 거치면서는 민주적 담론이 주변화된 것으로 상정한다. 또는 1980년 광주학살 이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수준에서 진보운동이 복원¹⁶⁾돼 남남 갈등의 새로운 모습이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한다.¹⁷⁾

대체로 선행연구자들은 진보·보수와 상관없이 80년대를 혁명의 시대(급진화), 신화의 시대¹⁸⁾였다고 본다. 80년대는 죽음을 마다 않는 희생으로 반미자주화화 조국통일의 과제를 확인시켜 준 시대, 운동 이념과 사회변혁론을 중심으로 한 논쟁구조의 심화와 이를 실천 활동과 연계시킨 시기, 운동의 대중화와 연대투쟁이 활성화된 시기로 80년대와 80년대 학생운동의 의미를 규정하는 논의가 다수를 차지한다.¹⁹⁾

한편 근현대사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속성·폭력성·절대주의(Absolutism)·정예주의(Elitism)·반대주의(Anti-ism)²⁰⁾등이 한국 학생운동의 주된 특징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성, 정예주의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며 80년대 중후반 대중화를 표방한 한국 학생운동을 설명해 주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조희연, 「저항담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함께읽는책, 2004.57~58쪽.

14) 장준오, 「사회운동 및 환경사회학: 80년대 학생운동의 담론 분석-분석의 대준거틀로서의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95년 전기사회학대회』, 1995, 37쪽.

15) 조희연, 위의 책, 58~59쪽.

16) 80년대 항쟁의 좌절은 지금까지의 운동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그것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첫째, 70년대 사회운동이 소시민적 운동관, 포퓰리즘의 운동관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범학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했다는 반성, 둘째,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체제변혁적 투쟁으로 전환시킬 목적의식적 전위가 부재했다는 반성, 셋째, 노동계급의 성장과 그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반성, 넷째, 군부독재 체제를 지원하는 외세에 저항하는 반외세 자주화 역량이 결여되었다는 반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17) 손호철,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이매진, 2006, 33쪽.

18) 이해영, 「사상사로서의 '1980년대': 우리에게 1980년대란 무엇인가」,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 세상, 1999.

19) PD적 인식은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혁명(PDF)론을 전제로 하면서 실제로 있어서는 한국적 레닌주의의 입장에서 저항 주체론을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에 NL적 사고는 반미주의적 혁명노선으로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통일선언을 강조하는 노선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론 모델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의 한 하위형태로서 북한식 모델을 전제했다고 보인다. (조희연, 위의 글, 60쪽.) 학생운동을 비판하는 연구도 80년대 학생운동의 성격을 첫째, 체계화된 이념으로의 철저한 무장, 둘째, 이념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개혁의 방법이 아닌 혁명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에 그 수단의 과격함을 기피하지 않음, 셋째, 타 운동과의 연합으로 사회 혁명운동의 역할을 밀집시키고자 함, 넷째, 조직에 있어 대중조직과 투쟁조직의 상호 보완체제의 구축을 들고 있다. (김한보, 「한국학생운동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20) Kim, Doh-jong, "The politics of the Korean Student Movement: It's Tradition Evolution, and Uniqueness", Ph. D. Diss, Arizona State University, 1991, pp.292~297.

80년대 학생운동이 광주항쟁이후 정치주의, 혁명주의, 전위주의적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의 자기 제한적 사용, 노동자 계급 주체론적 사고를 계승하면서도 반제통일전선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다양한 계급계층운동을 망라하고자 했던 대중활동 강조론 등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과 지식인의 급진화(radicalization)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접근으로는 유교적 전통에서 지식인의 '사회내적 비중'을 그 기원으로 파악하는 '역사적인 설명'과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형성 간의 괴리'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험적인 분석도 있으며 비판적 집단으로서의 학생집단의 반항적 심리가 구조적 요인과 결부되어 신념화 내지는 가치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심리적 분석이 있다.

급진화의 연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리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대학생의 양적 팽창과 제도와 의식 사이의 긴장. 둘째, 70년대 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의식주의 상대적 안정화를 경험한 청년기 학생층 욕구의 변형(탈 물질적, 이상주의적) 셋째, 광주학살이라는 압도적 현실과 대학 안에까지 상주한 권력의 일상적 폭력과 정의감의 자극²¹⁾ 넷째, 한국지배블록의 정신적 무능, 다섯째, 학생집단은 군부를 제외하고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조직화된 집단, 조직화가 가능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즉, 일체의 사상적 소통을 금압하는 이데올로기적 견제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80년대 저항담론에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사상의 자기 준거성의 상실, 저항담론의 도그마화를 의미한다.²²⁾ 역설적 상황이 교조적인 ML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하여 기타 사상과의 경쟁 부재상황을 만들었지만 결국 90년대 이후 급진화의 폐기의 주체적 원인으로 되었다는 평가도 많다. 즉, 이러한 상황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든든한 이론적·방법론적 무기로 세련화시키기 보다는 그것의 단편적 명제와 가설들에만 집착하는 수많은 얼치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양산하는 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²³⁾ 노동자 중심주의(주체), 국가중심형 혁명(투쟁대상), 계급적대(모순), 국민국가(투쟁인식)적 투쟁을 지향한 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는 스탈린주의의 이명(異名)으로서의 ML주의와 그의 자립화된 아형으로서 김일성주의이며, 사고의 외부준거성으로 인해 현실보다는 원전 안의 보물찾기 경쟁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이다.

제한의회(CA), 노해동 소수파, 사노맹의 일련의 흐름이 러시아식 사회주의를 꿈꾸었다면 NL그룹 또한 그 대안으로 토착적 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며 반국적 사고에서 전국적 관점을 지향했지만 이 또한 북한으로부터 사상적으로 자주적이지는 못했던 것

21) 광주항쟁과 정권의 민주화에 대한 폭력적 대응,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감시와 처벌은 학생들의 정의감을 자극하는 사회심리적 조건이자 자발적 동원의 핵심적 근거가 되었다. 8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유지되었던 운동권의 헤게모니는 무엇보다도 논쟁이 필요없는 이러한 정서적 동원 기반에 기초한 것이었다.

22) 마르크스 사상 그 자체에 대한 탄압과 배제가 강한 조건에서는 마르크스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는 사실, 그러한 관점을 더욱 순수하게 견지하는 것이 모든 사고와 행동의 면죄부가 되고 찬양받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23) 김동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성격변화와 한국사회과학」, 『창작과 비평』, 1993년 겨울호, 308~309쪽.

은 사실이다. 단적으로 NL계열 운동권의 북한 역사서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혁명 전통 복원의 강조는 과거 역사를 해석과 평가가 아닌 현실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문제로 제기하여 진지한 역사논의를 어렵게 만들었고, 조선노동당만이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관통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것으로 강변하여 근현대 한국 진보운동 속에 녹아있던 소중한 경험과 교훈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았으며, 그 결과 북한노선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의 대중추수주의와 전술채택의 우편향,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대한 임무 방기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80년대 후반 주사파의 양적 확대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나 동시에 혁명 전통의 복원문제를 둘러싼 진보진영의 치열한 논쟁을 수반하기도 했다.²⁴⁾

비판사회과학계에서는 운동참여, 급진화와 관련해서 냉전반공주의의 부정적 효과로서 일상적 정치언어의 채색화인 이념적 불러내기(ideological interpellation)와 제도정치 의 허약함²⁵⁾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는 학생운동이 사회주의에 보인 '지체된 추수'와 '때 이른 폐기'에 대한 사회과학적 상상력의 모티브(motive)를 제공해 준다.

일종의 '역사주의 빈곤',²⁶⁾ '얕은 진보주의', '학습이 덜된 진보'²⁷⁾라는 비판을 받는

24) 주체사상을 수용한 NL의 역사관은 승리사관, 주류사관, 지도사관, 민족해방사관으로 압축 요약된다. 이들의 수용한 주체사관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먼저 '승리사관'은 주관주의에 입각한 관념론적 역사해석의 편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진실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역사사를 구성해내는 인식방법과 논리가 과학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진실은 최고의 과학성을 요구하며, 그것은 또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증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역사는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과거에 실재했던 생생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역사적 오류와 한계 속에서 때때로 귀착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승리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고통스러운 단절의 역사를 자랑찬 연속이라고 규정하는 속에서 위안받기 보다는 '실체'와 '단절'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상황을 깊게한 지난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로 되어야 한다.

둘째, 민족해방운동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중핵적 역할을 수행한 운동세력을 편별, 설정하고 그 세력의 형성,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는 주류사관은 주류설정의 주관성과 자의성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심대한 역사적 조작을 수반한다. 이재화는 항일무장투쟁이아말로 민족주체노선과 민족주체역할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력을 발산하면서 여타의 모든 반일운동을 고무, 추동한 중심적 투쟁이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합법칙적 발전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면서 승리를 쟁취해낸 주류운동이라고 말한다. 주류사관은 주류의 형성을 한 조직의 자기복제 과정으로, 사후적 평가를 미화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류사관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부동한 것으로 강조하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남한 노동운동의 주류로 인정하여 독자적인 한국 사회운동의 전망을 반대하는 폐해를 낳았다.

셋째, 지도사관이란 민중이 자주적 주체로 나서는데 지도와 그에 입각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도사관의 강조는 역사적 해석에서 혁명적 수령관(주체의 영도체계)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라는 요구만이 강조된다.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정을 뇌수와 당의 형성, 발전으로 설명하면서 전위와 대중의 결합과정에 대한 강조를 마치 주체의 역사서술에만 고유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넷째, 민족해방운동사관은 민족원리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식민지 치하 공산주의운동이 민족해방적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자주화가 최종목표는 아니었다.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해서 계급적인 과제와 범주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혁명전통론은 혁명전통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서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보다도 노동계급 혁명투쟁의 역사적 과정에서 수령의 출현과 그에 의한 참사를 강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의한 전통은 실 땅이 없다. 오직 수령에 의해서 수령에 영도 밑에 투쟁하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만 혁명전통 형성의 합법칙성이 있고, 그 발전, 풍부화의 합법칙성은 수령과 그 후계자에 의한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리하면 역사는 온전히 수령에 의한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창연, 「북한 역사서와 남한 야류적의 공개출간 현황과 운동전사 해석의 문제」, 2005. 미발표 논문) 혁명전통과 주체사관에 대해 NL적 입장에서 비교적 잘 정리된 책은 다음과 같다. (김태호,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사」, 1990. 조국: 이재화,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백산서당, 1988; 조진경, 「민족자주화운동론1,2」, 백산, 1988; 이주현, 「한국전위조직운동사」, 동해, 1991)

25) 최창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미니타스, 2003, 65쪽.

26) 김창진,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1980년대 한국 지식사회의 반응」,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함께 읽는 책, 2004, 205-229쪽.

27) 한경과 생명, 「독재 진보의 구상과 실천」, 「한경과 생명 42호」, 한경과 생명사, 2004, 54쪽.

80년대 학생 운동가들의 급진적 정체성의 형성과 이념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 김원, 조대엽, 권인숙의 연구는 단연 돋보인다.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때 이른 폐기를 학생들의 '관념적 민중의식'에서 찾는다. 김원(1999)은 학생운동을 '상상적 민중공동체'²⁸⁾로, 조대엽(2002)은 '이념적 수준'에서 형성된 '관념적 민중주의'²⁹⁾로 본다. 조대엽은 학생들이 현실의 민중이 아니라 이념으로써 민중주의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식과 세계관을 형성했던 사회주의가 몰락하자 운동의 현장뿐 아니라 노동 현장에도 더는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³⁰⁾ 그는 80년대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의 집합적 경험이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저항과 적응의 가치'로 구분³¹⁾하면서 두 가치 모두 조국 근대화와 개인적 성공을 향한 강한 '열망의 시대'를 거치며 내재화된 측면에, 80년대 운동을 통해 체득한 측면이 더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³²⁾ 조대엽은 저항과 적응가치의 교호과정을 분석하여 운동의 급진화, 운동의 재생산과 대중화, 급진담론의 주변화, 학생운동 내부의 비민주성³³⁾과 함께 386세대가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권인숙³⁴⁾의 연구는 권력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동원'과 학생운동의 목표 수행을 위한 '동원전략'이 큰 차이가 없음을 여성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현 시기 학생운동에 대한 진보학계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민주주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 민주주의를 단계론적으로 사고한 민중민주주의 개념의 한계, 조직 내 민주주의의 부재, 반이성과 비합리에 대한 저항과 근대성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내장한 차이에 대한 인식 부재와 발전주의와 성장주의의 한계, 민중저항성이 갖는 계몽주의적 한계 등이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지난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성취한 학생운동의 성과를 부정이 아닌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도전 앞에서 혁신과 재정식화를 통한 급진화의 시도라는 차원에서의 바라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변화된 상황에 주동적으로 대응하여 비국가주의적, 비 노동계급적, 비 계급적대적 저항성을 포괄하면서 일국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배의 지구화에 대응하는 저항의 지구화의 과제에 대한 논의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28) 김원, 『맞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후, 1999, 114쪽.

29) 조대엽, 『386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임희삼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2002, 256~266쪽.

30) 조대엽, 위의 글, 266쪽.

31) 조대엽은 '관념의 민중주의', '반민주주의', 그리고 '비판적 공동체주의'를 저항의 가치로, '저항의 권위주의와 과잉정치화', '유언적 전통주의', '적용적 모험주의', '연고주의의 재생산'을 적응의 가치로 개념화한다.

32) 조대엽, 위의 글, 276~277쪽.

33) 허문성은 독재 권력의 전면적 억압과 배제의 상황에서 반대의 권리와 기회조차 인정하지 않는 개발 독재체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의 이념이 학생운동의 기반이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양보 혹은 상호양보주의를 주장하는 최소주의자는 변절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주장하는 변혁의 수사학에는 거창한 비전과 초라한 현실 사이를 연결하고 행동이 빠진 연결고리를 채워 줄 정책적 중간 항을 모색하려는 지성적 사유의 노력은 미비하였다고 지적한다. 허문성, 앞의 글, 125쪽.

34) 권인숙, 『대한민국은 근대다』, 청년사, 2005, 69~72쪽.

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의 성격, 80년대 학생운동의 목표, 동원양식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의 중차대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2. 한국 학생운동의 주요 접근 방법들

한국 학생운동의 주요 접근 방법은 학자에 따라 분류상의 차이는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부분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

김도중³⁵⁾은 학생운동 연구의 주요 접근 방법으로 구조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을 택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학생운동의 오랜 전통을 고려한 역사적 고찰을 덧붙인다. 그가 말하는 구조적 접근이란 사회적 모순이 학생운동을 발생시킨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심리적 분석은 젊은이들로 구성된 집단인 학생들의 심리적 성향이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촉발시킨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좀 더 학생운동 연구를 세부화시켜 설명하는 이재봉³⁶⁾은 학생운동의 배경과 동인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선행 연구가 '역사기술적 연구', '조사 연구', '분석연구', '비교연구' 등의 4가지 시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봉은 이 외에도 학생운동의 원인이나 전개과정 중 특정부분과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방편으로 세대갈등론, 사회심리론, 구조·기능론, 사회발전론, 사회병리론, 계급갈등론, 다윈이익집단론, 군중심리론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과 접근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의 한국 학생운동 연구는 역사기술적 연구(historico-descriptive)에 입각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접근법에 의한 연구들은 엄밀한 이론과 판단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현상적인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집필자 혹은 참여자의 시각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접근법은 학생운동의 역사를 주로 이념적·조직적인 '분화'의 관점에서 개괄하거나 저항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살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예로 이재오의 연구,³⁷⁾ 일송정 출판사의 각종 논쟁사 시리즈, 강신철의 연구,³⁸⁾ 최연구의 연구³⁹⁾는 서술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과도하게 나타나 있고 내용상의 중복도 심하며 속칭 메이저 대학을 중심으로 운동사를 서술함으로써 학생운동 전체의 역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기술적인 연구는 운동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이나 그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주는 데는 기여할 수 있었으나, '조직·이념·동원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한국의 학생운동 연구와 관련한 또 다른 주요 연구 경향으로는 학생운동 발생과 참여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사회 구조적 모순과 경험을 강조하는 역사적·구조적 접근

35) 김도중, 「1980년대 한국의 정치변동과 학생집단」, 한국정치학회, 1997, 49~57쪽.

36) 이재봉, 앞의 글, 76쪽.

37) 이재오, 1987,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98.

38) 강신철,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형성사, 1988.

39) 최연구,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1990.

이 있다. 맑스주의와 레닌주의의 수용 이후 이와 같은 연구들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일군의 비판사회과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학생운동의 배경과 발생원인 및 학생운동의 동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인 배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각이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도 학생운동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술적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따르고 있다.

한국 학생운동 연구를 '역사기술적 연구'와 '경험 분석적 연구'로 구분하는 김동춘은 80년대 사회운동을 현장 주변에서 관찰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계를 맺은 연구자들은 대체로 전자의 방법에 서 있고, 주로 국외에서 이론을 연마한 학자들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한국 사회운동을 고찰한 경우는 후자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⁴⁰⁾고 말한다. '경험 분석적 접근' 역시 일반화나 이론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경험적인 토대가 취약하다는 점과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대입했다는 결함⁴¹⁾이 있었다. 하지만, 경험 분석적 연구는 그동안 사회운동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 관심이나 연구 풍토를 볼 때 장점이 많은 접근 방법이었다. 사실 구조기능주의와 맑스주의의 패러다임은 일반적인 연구 경향이라 할 수 있었지만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는 운동 현실의 풍요 속에서도 이론의 빈곤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관심은 시의성이 강조되어 새로운 현실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연구가 과거의 운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운동의 설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⁴²⁾ 이렇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생운동에 대한 '경험 분석적 연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역사기술적 연구의 성과와 접목하려는 시도들도 늘고 있다. 최근 조대엽의 연구⁴³⁾는 세대의 사회학이 제공하는 이론적 자원을 통해 '저항'과 '적응'이라는 386세대의 이중가치가 386세대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1960년대~1980년대의 역사적 시간과 결부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이 외에도 계층론적·심리학적 이론과 학생들의 의식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들은 미국의 고전적 집합행동이론을 한국에 적용한 것으로 고전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반면 실증적 연구는 학생운동 자료의 미비성을 보완하여 주고, 학생운동의 부정기성과 불규칙성 그리고 이념적 흐름의 비일관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정하여 객관적이고 상대적 보편성을 지니면서 이념적 맥락을 잡을 수 있어 문서분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의 성공 여부는 실증적 연구가 지니는 정태적·현상적 연

40) 김동춘, 「1980년대 社會運動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98.

41) 김동춘은 90년대 생산된 경험분석적 연구의 상당수가 80년대 사회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본격 연구라기보다는 논쟁사 정리, 담론의 분석, 이론에 건주어 본 운동의 특징에 관한 약간의 단상 등에 그치는 것이 많아서 80년대 사회운동에 관한 한 아직은 연구사를 정리할 상황은 아니며, 하나의 일관된 시각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상황이라 말한다. 김동춘의 위의 글 참고.

42) 조대엽, 「학생운동: 현실적 관심과 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한국사회학』 33집 4호, 1999, 946쪽.

43)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2002.

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동기의 심층적 규명과 동태적 변화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장기적인 조사와 동기 규명 작업, 사회 구조적·문화적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 작업의 결합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한국 학생운동 연구에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물⁴⁴⁾이 대단히 적다는 것이며, 눈에 띄는 연구들도 한국 학생운동의 사례를 배경으로 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경향의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운동의 경향을 연대기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소개하고 있는 한국 연구자들의 「이론적 자원」이란 것도 미국의 고전적 집합행동론, 일탈행동론, 자원동원론들을 한국 학생운동에 대입한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운동의 결과」를 놓고,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통해 사회현상을 추론하여 인과관계의 이론을 정립하는 「추론적 인과관계분석(speculative causal relationship)」에 집중하였다.⁴⁵⁾ 이 과정에서 문헌이나 면접 비교를 통해 독립변수·종속변수·개입변수를 기본 단위로 하는 「가설」을 정립하고,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는 소홀히 했다고 본다. 학생운동 연구가 학문적·실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존재양식, 또는 생성경로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연구들은 현상들의 결과를 가지고 이론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만을 기술함으로써 사회현상의 실체를 왜곡할 위험성을 지녔으며 집합적 실체의 지속적 과정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필자는 80년대 사회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경험 분석적 연구, 인과론적 복잡성(causal complexity)과 역사적 특수성이 고려된 해석학적 사례 지향적 연구(case-oriented method)가 좀 더 많이 생산되길 희망한다.⁴⁶⁾

이러한 방법론이 갖는 의미는 첫째, 한국 학생운동연구의 객관적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역사와 사회구조적 모순을 고려하면서도, 참여주체의 동기와 갈등에 대한 사회학적-해석학적 분석 들의 결합⁴⁷⁾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44)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연구동향을 다룬 학위논문으로는 조급주, 「한국학생운동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접근」,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7; 한상진,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72이 있다. 개괄적인 일반논문으로는 김도중, 「한국학생운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 3집, 1992; 김한구, 「한국학생운동의 사회인류학적 고찰」, 『한양대 한국학논집』 15집, 1989; 이재봉,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연구』 8집, 1990. 1990년대 사회운동연구차원에서 학생운동을 다룬 김동춘(1998)의 연구 등이 있다.

45) 장준오, 「80년대 학생운동의 담론분석: 분석의 대준거를로써의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95년 전기사회학대회, 1995, 137~138쪽.

46) 「해석학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한다. 이 접근의 특징은 1. 연구자의 직관적 이해가 중요하고 2. 직접 관찰, 공식/비공식적 문서의 이면적 의미를 중시하고 3.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입장이 되어 보거나 그들의 경험을 되살려 보는 감정 이입적 이해를 활용한다. 「해석학적 연구」는 인간 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파악, 주관적 의식의 심층적 이해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법칙 발견의 어려움, 정확성과 타당성 결여, 주관성의 문제가 있다. 「경험 분석적 연구」는 자료를 개방화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 자연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 적용한다. 즉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경험적으로 관찰된 자료를 계량화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해 보편적 법칙 발견에 유리,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 동기와 분리된 연구의 한계를 보인다.

47) 사회-해석학적 이론의 대화적 요소, 혹은 해석학적 차원은 두 가지 불충분한 사회학의 접근 방법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하나는, 대상을 왜곡시키면서 개념과 범주를 대상에 부과하는 태도이다. 다른 하나는 대상 자체의

둘째, 위의 연구방법이 이 연구의 과제 수행과 목적 달성에 있어서 적합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경험 분석적 연구'는 다른 연구방법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도성과 과장성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회적 실체라는 차원에서 학생운동을 분석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80년대 학생운동의 조직·이념·동원과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석학적 사례연구'는 일반적인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례에 대한 관심에서 선택되는 방법론이지만 그것은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도 그 배경에 반응해야 하는 주체의 인식과 구성 그리고 담론과 주체의 상호작용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⁴⁸⁾ 해석학적 연구는 운동이념과 조직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연구가 갖는 근원적 난제의 해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운동의 이념과 조직은 계량화하기 어렵고 자료만으로는 운동 전체를 드러내거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운동 이념의 급진화 정도, 동원전략 선택의 구조적 요인과 우연적 요인, 동원과 조직화의 내적 효과와 영향력, 지배와 저항의 상징 각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에 해석학적 방법은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설명적 인과관계의 분석을 넘어서 80년대 학생운동의 담론들을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해석하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연구⁴⁹⁾의 흐름은 아쉽게도 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게 된다. 그 등장배경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등장' 그리고 진보진영의 위기의식에 기초한 자기성찰이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NGO 등장에 힘입은 사회운동 연구의 재활성화에 비해 학생운동의 연구 여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당시 사회운동 연구는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전개양상인 민중운동의 침체와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란 상황에 주동적으로 결합하면서 시민운동의 논의를 심화·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대학사회는 국가사회주의 몰락, 군부정권의 퇴진, 계급담론의 퇴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의 다양성, 신세대 문화의 등장, 비판적 대학문화의 실종 등에 따라 상업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학생운동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관념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학생운동 내부분열, 무조건적 통일론, 폭력투쟁, 총학생회 선거에서 비롯된 학생운동권의 도덕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중적 선도성과 투쟁성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⁵⁰⁾ 여기에 지적 수입상 역할

개념에만 의존하여 대상 자체의 가능한 자기 오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태도이다.(조셉블레이저 저, 이한우 역, 『해석학적 상상력』, 240~247쪽)

48) 해석학적 방법은 이미 확립된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상의 구성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학적 방법론의 적합성 여부를 성찰한다.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이해의 공통성을 강조하며, 그 결과 서로 다른 언어 게임들을 매개하는 공통된 「전통」에 대한 이해 작용의 근본적 심격을 지적한다. 이러한 통찰은 주관적으로 의도된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해 사회학에는 결여되어 있다. 해석학적 사회학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의도적 행위 속에 나타나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특수성 속의 일반성(the general in the particular)」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는 포괄적인 의미 연관을 고찰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의도된 의미를 해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의미 내용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 조셉블레이저 저, 이한우 역, 위의 글, 247~249쪽.

49) 장준오, 위의 글, 138쪽.

50) 최문성,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1호, 2003, 128쪽.

에 충실했던 한국 학계의 지적풍토⁵¹⁾가 더해지면서 학생운동 연구는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학생운동 연구의 담보 내지 정체된 근거에는 학생운동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연구자의 부재도 관련이 깊다. 단적으로 한국 학생운동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주제와 시기에 상관없이 부족한 현실⁵²⁾만 보더라도 학생운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이론의 한국화를 시도한 학문적 연구의 담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국가사회주의와 급진변혁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높아졌는데 이와 함께 대두하고 있는 최근의 주요 연구 경향으로 '해석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이 있다. 이 관점은 역사적·구조적 접근이 갖는 메타 이론적 한계와 추상성을 극복 내지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도 그 배경에 반응해야 하는 주체의 인식과 구성 그리고 담론과 주체의 상호작용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이 접근은 진보진영에서 생산된 사회구조, 사회구성체, 변혁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일상', '주체', '문화', '담론', '상징'과 같은 문제에 주목한다.⁵³⁾ 이신행과 장준오⁵⁴⁾ 등의 분석적 연구를 필두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는 연구는 점차 탈근대 이론과 접합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런 연구 경향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이후 편집부, 김원, 권인숙 등의 단행본⁵⁵⁾이 있고 학위논문⁵⁶⁾으로는 신선영, 박현귀, 김재은, 김재민의 연구가 눈에 띈다. 이들은 90년대 이후 사회운동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한 분석 틀을 갖추기는 했지만 제도적·조직적 동원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의미의 후원자'로서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상징적 실천의 양식, 운동에 헌신하는 참가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흐름의 연구는 학생운동의 '상징' 즉 운동이 제기하는 '언어적 형식'과 그것의 '재구성 방식'에 주목한다는 것은 학생운동의 상징이 다른 문화적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이며 또 그람시적 의미에서 동의에 기초한 지도력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상징과 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는 문제들에 의존하는 텍스트 분석은 사회적 맥락(context)분석과 통합 속⁵⁸⁾에서 정치적 상징과

51) 새로 수입된 이론에 의해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론의 축출과 교체만이 있을 뿐 이론 간의 비판과 축적의 과정,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 부재한 한국 학계의 지적풍토를 말한다.

52) 학생운동을 다룬 학위논문, 특히 박사학위 수의 절대부족은, 학생운동에 관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가 의외로 많이 이루어져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학생운동이 한국민주화운동에 미친 그간의 영향과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예상 밖의 결과인 동시에 기존 연구현황의 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송병현, 「한국학생운동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생운동관련문헌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14쪽.

53) 송병현, 위의 글 참고.

54) 이신행, 「1987년을 전후한 학생운동의 상징」,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25집, 1994; 장준오, 「사회운동 및 환경사회학: 80년대 학생운동의 담론 분석-분석의 대준거틀로서의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95년 전기사회학대회, 1995.

55) 이후 편집부, 「오래된 습관 꼭잡한 반성」 1·2, 이후, 1998;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한국 대학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1999;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56) 신선영, 「삶의 전기(轉機-turning point)로서의 학생운동 경험과 일상생활」,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7; 박현귀, 「80년대 변혁운동가들의 정체성 변화과정-운동권 출신의 여성모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김재은, 「민주화운동에서 구성된 주체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1985~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김재민, 「한총련 정치수배자의 집합적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정연구」, 이화여대대학원, 2004.

57) 김재은, 「민주화운동에서 구성된 주체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1985~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1쪽.

58)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텍스트분석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상징과 담론이 갖는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어느 정도의 권력 효과를 갖는지를 명확히

담론이 '어떻게 의미되는가'라고 질문한다.⁵⁹⁾ 학생운동과 운동의 참여와 재생산을 연계시키는 문화적 형태와 그 하위범주로서 상징(symbol)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징은 물리적 세계의 일부로서의 현실적 실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살아있는 형식(living form)'이라는 점에서 굳어져 있는 사실들과 구분된다. 인간을 '상징적 동물, 인간의 지식은 본성상 '상징적 지식'으로 규정한 카시러(Cassier, 1956)의 논의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의사소통이 상징들의 체계나 이미지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연구는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 개념과 이제 는 보편적이거나 혹은 사라진 단어 그리고 언어가 가진 신비성과 물신성을 벗겨 내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무가치하다고 무시된 것들이 결코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의 흐름은 80년대 운동을 국가·민족주의와 남성중심의 관점에서 형상화한 시각과 '민주화운동', '변혁운동' 중심으로 해석되는 '민주화담론' 등과 같은 주류중심의 관점에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남성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성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운동조직 내의 남성 중심적 시각, 가치관, 조직양식, 문화⁶⁰⁾ 등에 의해 여성성이 어떻게 왜곡되고 침묵 되었는지를 해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화운동 속에 젠더의 작동, 사회운동이 행하는 젠더정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상징정치의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공모를 통해 위치되어지는 여성성의 문제 등을 다룬다. 한편 민주화담론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은 민주화담론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제도적 질서로 국한 시켜서 새로운 주류 담론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전유하고 소수자를 배제하는⁶¹⁾ 보수연합구도의 이론적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대두에는 '학생운동 위기의 반영'과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우려가 따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학생운동 내부의 비민주성, 조직운영의 엘리트주의, 운동문화 내부의 성차별과 가부장성, 학생운동 내부의 권력관계, 친근대적 폭력성 등을 드러내고 있고 운동진영 내부에서 금기시되었던 내부동학과, 운동문화, 현실양태에 대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1987년 이후 민주개혁의 시대정신을 구현했던 일종의 헤게모니적 성격의 민주화담론이 관성화하면서 스스로의 개방적 확장과 성찰적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논의들이 비판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출⁶²⁾되고 있다.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59) 강명구, 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31집, 1997, 127쪽.

60) 연구자들과 제반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운동양식 ②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성의식 ③ 위계화된 운동이념: 노동운동 중심성, 선차성, 우월성 ④ 남성적 '운동가상'과 '운동언어' ⑤ 언어적·물리적 폭력 및 운동권내 성폭력 ⑥ 고도화된 여성 배제 메커니즘: 성역할 분담, 능력주의, 학벌주의, 남성들만의 비공식 네트워크 ⑦ 문제제기의 불합: '합리', '논리',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왜곡과 무마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전희경,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112~132쪽).

61) 김원, 「어공담론의 남성주의 비판」,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37쪽.

62) 조희연,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1998; 신영복, 「시월/강물과 시간」, 「진보평론 3-봄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 김진호, 「무능력-가능성에 대한 보소서, 카인의 콤플렉스와 무능력자 담론」, 「당대비평 23

그러나 새로운 학생운동 문화가 지닌 한계에 대한 성찰적 고찰이 의미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다. 그런 바로 이전의 보수적 시각의 학생운동 비판이 학생운동 소멸론과 무용론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연구 중 일부는 탈근대적인 포스트-구조주의적 담론으로 양비론적 시선을 전제하고 있어, 현실을 인식할 때 '탈(脫)맥락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탈근대주의 담론은 차이와 비동일성을 강조하고 작은 이야기를 중시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이성의 횡포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해방'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다.⁶³⁾ 이 문제는 한국사회가 '이성의 횡포를 비판'해야 할 만큼 '합리화'되었는가 하는 고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연구가 기존 반독재 담론의 성찰과 혁신, 확장 혹은 '발본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을 넘어 대안적 학생운동의 모색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학생운동 문화가 구체적인 정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이 새로운 문화가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운동이 저항의 아젠다를 만드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지구화, 그리고 이에 대응한 사회운동의 전략전술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인식과 통찰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Ⅲ. 학생운동 급진화 검토와 연구과제 제언.

1980년대에 들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급진성을 보였다. 특히 학생운동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확산되고 동시에 자유주의적 저항을 넘어 민중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급진화의 원인과 급진화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음을 그러므로 학생운동 연구에서 무엇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을 앞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80년대 학생운동 급진화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급진화의 성격, 투쟁의 성격, 참여 및 동원기제를 살펴보면서 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제한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

80년대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변혁운동의 차원에서는 1991년 5월 '강경대 사건'의 종결로 그 한 순환이 나사선의 하강으로 끝맺는 것이지만 이후 민주노동

호』, 2003년 가을.

63) 김재현, 「사회구성체 논쟁과 철학적 담론의 변화」,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997, 350쪽.

운동과 시민운동의 상대적 활성화속에서 그 순환성이 연속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⁶⁴⁾

80년대 민주화운동⁶⁵⁾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과 새로운 주체형성이란 측면에서 단절과 계승의 성격도 갖는다.

선행연구들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심화되어 가면서 단절되었던 맑스주의가 복원되는 방식으로 저항사상이 급진화되어 간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70년대까지는 맑스주의적 인식과 패러다임은 '친북적인' 것으로 급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급진주의적 인식은 거의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을 경험하면서 인식의 급진화가 나타나고 투쟁양식도 좀더 전투화 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 맑스주의를 포함한 급진주의적 세력과 그들이 담지하는 담론들이 부활하였다 하는 것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단절된 이 땅의 사회주의세력과 인식들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⁶⁾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대거 분출하기 시작한 급진적 학생운동은 1960~70년대의 그것과 동일 선상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것은 첫째, 60~70년대 급진적인 운동세력의 소수 정예의 비밀 좌익운동과 국내적 배경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60~70년대의 급진적 운동세력은 경제개발의 논리로 장기간의 군사독제가 태동하고 정착하는 시기에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며 운동의 지도역량을 보존하는 일이 과제였다면, 80년대는 군사독제가 허물어지고 재등장하는 시기로서 결정적 기회를 무위로 돌려버린 재야 반정부 운동의 기본 한계에 대한 급진적 반성에서 출발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였다는 것이다. 즉, 1980년대 이전의 좌익운동은 한국전쟁과 5.16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에 기초하기 어려운 조건의 반대급부로 군사적 무력투쟁이란 대안적 가설을 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념적 현실적 지도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상정하는 형태였다면⁶⁷⁾ 1980년 이후 학생운동은 유화조치-개헌정국-가두투쟁-

64) 김진균, 1999)

65) 손호철은 민주화를 권위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비민주적 상태로부터 또 다른 상대인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며,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촉발시켜 비민주주의, 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행동이라 말한다. 손호철,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2003, pp15~61.

66) 조희연, 「저항담론의 변화와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화』, 2004, 59쪽.

67) 70년대 중후반 민주화운동은 분명히 탄압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운동 중심에서 청년운동, 종교운동, 지식인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이 확산되어 갔고 민청학련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조직성과 체계성도 높아졌다. 그리고 남한자본주의 발전을 반영하여 민주화운동내에 민중지향성이 강화되었다. 단적으로 학생운동 내 선진그룹 등에서 정치투쟁론과 민청강화론의 논쟁이 있었으며 노동현장 투신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일반 재야 민주화운동과 구별되는 지하당운동으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 등이 활동을 들 수 있다. 남민전은 기존의 통혁당, 인혁당, 해방전력당 등 비합법 전위정당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시에 자생적인 민주화운동가들과 보다 확대된 결합을 시도한 조직이었다. 남민전은 60년대 지하당의 활동가는 달리 자신들의 조직위상을 '민족해방전선'으로 설정한 점, 본격적인 민족해방투쟁의 전 단계로 반유신투쟁에 전술적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 자생적 민주화운동 출신인사들과의 결합으로 다소 확대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 조직체계가 고도화되었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졌지만 여전히 대중적 기반, 특히 기존 민중운동의 기반이 취약했고 이는 재정적 어려움과 정보기구와의 투쟁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70년대를 거치면서 자생적 민주화운동내에 이념적 심화가 있었고, 또 이들 중에서 변혁적 전망을 모색하는 흐름이 생겼으며, 지하당을 건설함과 함께 민주화운동과 결합하여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함으로써 이들이 삼호침투하고 결합하기도 하였으나 안정적이고 폭넓은 결합이 되지는 못했다. (안식, 『현대화, 혁신 그리고 연대』 1993, 232~233쪽.)

노동자파업의 일련의 정치적 격변을 통과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앞장서는 전민항쟁을 사 고하고 사회주의를 이념적 현실적 대안으로 상정하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셋째, 1980년 이전의 그것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절된 좌익운동의 명맥을 가까스로 유지하면 서 향후 진로를 암중모색한 목적의식적 산물이라면, 1980년 이후의 그것은 광주민중항 쟁을 통해 남한 혁명의 조건과 성격을 전혀 새롭게 인식할 것을 강제 받으면서 비롯된 시대적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적 구성의 측면에도 반영되는데 70년대가 한국전 쟁과 5.16을 거치며 잔존한 좌익인사들이 급진화를 주도하고 여기에 당시의 이념적 학 생운동 인자들이 결합하는 인적 구성이라면, 후자는 사실상 60~70년대의 재야 반정부 운동에서 성장한 학생운동과 자발적인 노동현장 진출자들이 주도하는 인적 구성을 보 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68) 이러한 주장은 광주항쟁 이후의 급진적 학생운동이 그 이전 의 급진적 운동과 단절된 자생적 흐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를 한국전 쟁이후 진정한 의미의 급진적 운동의 부활의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운동권에서는 통혁당 등 지하당의 보존된 역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급진적 운동의 연속 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 상 1960~70년대의 운동진영 내 소수의 좌익그룹은 유신독제의 최후와 함께 소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재야 반정부 운동에서 분화해 나온 새로운 세대의 급진적 운동세력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

이는 80년대 학생운동의 구체적 내용과 사례를 60.70년대와 80년대를 비교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비교 둘째, 민중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 식비교 셋째, 학생운동에 대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비교 4) 과제와 목표에 대한 인식비교 등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80년 광주민중항쟁은 한국전쟁 이후 80년까지의 '지배와 저항의 상호작용'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실들이 복합되어 있었던 사건이었다. 69)

한국의 사회운동은 광주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광주를 돌아보면서 혁명적 민주주의 운동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70) 이러한 혁명적 민주주의운동으로의 전환에는 한편에서 투쟁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내포된다. 투쟁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전두환 정권을 파쇼적 국가권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그것이 대미종속 적인 권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다음으로 투쟁주체에 대한 인식전환과 관련하여, 노동자 계급 등 민중 주체적 인식이 나타나게 되며, 이와 동시에 혁명적 전위주의 인식도 나

68) 김대일, 「21세기 좌익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1995, 76~77쪽.

69) 조희연, 「광주민중항쟁과 80년대 민주화운동-87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광주 민중항 쟁』, 1쪽.

70) 다음의 글은 80년대 중후반 운동진영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광주봉기는 당면 혁명의 타도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중의 권력은 어떻게 창출되는지 보여준다. 당면 혁명의 주체가 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인지음 르, 남한 민족민주혁명의 핵심고리라 민중의 무장에 의한 낮은 권력의 전복과 새로운 권력으로의 대체임을 보여주 며 그러한 경로를 알려준다" (노동해방문학, 1989년 5월호, 16쪽)

타나게 된다. 광주항쟁을 통해 국가권력에 대한 인식의 급진화, 미국에 대한 인식의 급진화, 운동의 실천주체에 대한 인식의 급진화가 나타나게 된다.⁷¹⁾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4기로 나누는 손호철은 민주화운동 1기가 자유주의적 헤게모니 하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적인 목표로 했던 시기라면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급진화가 심화되는 민주화운동 2기는 1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광주학살에 의한 우리사회의 급진화의 결과로 자유주의적 틀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려는 급진적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됐다고 말한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화운동, 좌파 민주화운동이 본격화하고 동시에 소위 민족문제를 중시하는 '민족해방파(NL)'를 중심으로 한 자주화 운동 '대외적 민주화' 운동도 활성화됐다.⁷²⁾ 1980년대 초반 제작된 <아학비판>, <아방타방>, <학생운동의 전망> 과 같은 학생운동권 내부 팸플릿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초반 제작 배포되어 널리 읽혔던 <1980년대 혁명투쟁의 인식과 전략-약칭 인전>⁷³⁾은 한국사회를 신식민지로, 군부정권을 제국주의 대리통치세력으로, 한국경제를 예측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학생운동가들에게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추상적 차원에서 인지됐지만 1985년 하반기 이후에는 보다 급진적인 주장이 학생운동 내에서 주류가 된다.⁷⁴⁾ 70년대 후반 현장론과 정치투쟁론, 무림과 학림, 아학비판(아비 1982)와 전망(학생운동의 전망 1982), 깃발, 반깃발 논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은 급속히 급진화 되어간다. 그러나 NL이 등장하기 전까지 최소한 학생운동 내에서는 맑스-레닌주의적 경향의 이념적 흐름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여하튼 광주민주항쟁 이후 70년대 운동과의 일정한 단절과 계승을 동시에 포함한 변화로서 그 내용은 운동의 과제가 ① 반제의 과제 ② 반자본주의의 과제 ③ 통일의 과제로 거침없이 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⁷⁵⁾ 광주항쟁이후 최소한 운동진영 내부에서는 ML주의와 주체사상이 한국사회에 대한 해석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 중후반 변혁운동의 사상 의식적 변천과정은 단절과 계승이라는 변화를 보여

71) 조희연 위의 글, 5쪽.

72) 손호철,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학술단체협의회, 『2003년 학술심포지엄 :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2003.

73) <인식과 전략>은 민족해방혁명이라고 주장하고 그 구체적 과제를 반제 민족주의혁명, 반파쇼 민주주의 혁명, 민중해방혁명, 북한과의 통일적 혁명으로 제시했다. 또한 우리 운동의 현단계는 지하진위운동노선의 강화발전을 필요로 하는 때이고 현 단계는 통일전선 형성이 필요하며 우리 혁명의 기본 대중 속에서 지도핵심을 키워야 하고 그 뿌리를 박아야 함이 절대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74) <인전>에서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미,일제국주의와 한국민중 간의 민족적 모순으로 파악, 미일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민족해방운동을 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5년 하반기 이후 이른바 시적투쟁(제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주장)전까지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을 미제국주의와 한국민중으로 설정했다 해도 실제로는 군부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나 삼민투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등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 미문화원 사건의 경우 일회성 투쟁이었고,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의 경우도 주동자들이 인식상으로는 미국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미국의 역할 등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지 미국을 타도하자는 주장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최홍제, 『386의 꿈, 그 성찰의 이유』, 나남, 2005, 57쪽.

75) 이주현, 『한국 진위조직운동사』, 동해, 1991, 158쪽.

주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경험 속에서 일정한 급진적 운동이념의 압축적 일시적 확산이 가능했다 할 수 있다.

“이전의 하나의 역사적 시대 또는 시기라는 것이 동시대인들 간에 합의된 목표, 대상, 주체, 사상과 이념, 방법 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 한다면 80년대는 그 자체로 나름의 자기 완결성을 갖춘 시대⁷⁶⁾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80년대 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은 투쟁의 전투화와 이념의 급진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80년대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이 PD적 인식과 NL적 인식으로 표출⁷⁷⁾되었지만 양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민’국가적 혁명지형과 ‘국가’혁명주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⁷⁸⁾ 이해영의 80년대를 “계몽의 시대, 해결적으로 진보하는 이성의 시대였다. 80년대의 행동력은 역사철학적 승리주의에 기반하여 주체에게 혁명적 결단과 투신을 요구하였던 집단적 자아의 시대”라고 말한다.⁷⁹⁾

그러나 이러한 시대정신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한 시대정신 형성의 연원은 단순하게 광주 외에는 없었는가도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천착하지 않으면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흡사 시공간을 초월해 미래에 출현했다가 과거의 운명으로 종적을 감추는 유령과 같았던 이유에 대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대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급진적 운동에의 참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변부적 근대성과 반체제 운동의 한계성 즉 지배적 가치로부터의 탈피와 대안 가치 확립에 빈번히 실패한 이유와 연동시켜 연구해야 한다. 왜 학생들이 주체사상이나 맑스주의를 대안으로 여기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이념에 열광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때늦은 급진화와 때 이른 급진적 이념의 폐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지속적인 통시적 내용에 관심을 두며, 한국의 근대(성)과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요인과 이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던 대학생, 대학사회(지위,

76) 조희연은 한국의 저항 및 저항담론의 역사에서 볼 때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의 시기와 80년대, 90년대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데 저항에 있어서 80년대가 갖는 의미는 첫째, 해방이후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단절되고 억압되었던 급진주의의 부활이며, 둘째, 저항 자체의 대중화 및 국민화를 들고 있다. 이에 비해 90년대는 기존의 저항담론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진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조희연은 이를 첫째, 현존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도전, 둘째,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진행되는 민주주의 이행 과정으로 80년대 급진주의의 저항대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민주적 지배’ 혹은 정상적인 지배가 출현하게 되고, 이것이 80년대 급진주의의 국내적 전제를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전위적 선도자들에 의한 주도가 아닌 대중 혹은 다중의 등장, 넷째, 일국적 지배를 대상으로 한 저항에서 세계화로 상징되는 변화가 저항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은 80년대 급진주의의 유산을 현재적 급진주의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석학적 재전유’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조희연,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2004, 10~17쪽)

77) 전자가 노동자 계급중심의 혁명과 계급적대 중심형 혁명을 강조하는 흐름이었다면 후자는 반제민족해방운동 및 반파시즘 투쟁과정에서 농민층이나 제국주의적 지배에서 유래하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적 저항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통일전선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다. 조희연, 「저항담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2004, 59~60쪽.

78) 조희연, 위의 책, 92쪽.

79) 이해영, 위의 책, 30~32쪽.

역할)와 대학문화에로의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급진적 이념의 수용과 확산과정을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추적하되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정치적 상황·대학정책)와 함께 한국사회 대학의 특수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 대학사회의 연결망, 대학 등도 하나의 요인으로 검토될 것이다.

학생운동의 급진화를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저항의 개념이 '직접적인 투쟁', '봉기'로서의 개념에 앞서 더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저항적 행위와 일상생활 속의 저항 요소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동원'과 학생운동의 목표수행을 위한 '동원 전략'은 당대 학생운동의 일상적 동의·실천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상적 관계나 행동과 표현을 읽는 코드로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선행연구(진보적)들은 독재정권이 물리적 억압과 폭력으로 시민사회를 통치했고, 그 결과 민주화가 지연되었다는 가정을 일반화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피지배층인 민중들은 언제나 강력하게 사회 위에 군림해 있는 국가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저항하는 '진보적인' 주체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를 부각한 나머지, 지배의 안정적 기반이 되었던 '보수적인'계층들의 역할과 이들에 의해 창출되었던 국가에 의한 사회집단의 조직화와 동원방식 그리고 동의의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⁸⁰⁾

위의 논의는 시민사회가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억압적 국가 대 저항적 피지배층'의 이분법적 도식은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유산과 신화를 설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약점이 있다. 즉, 지배블록이 어떠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국가 권력의 기제를 사회 속에 침투시켰고, 그것이 어떻게 특정한 계층들을 포섭(co-optation)하여 부분적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했는지를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다.⁸¹⁾

사실 80년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혁명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운동권의 투쟁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무엇이 혁명이고, 무엇이 혁명적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엄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대중은 생존형식으로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중성을 가지며 삶을 구성하는 동참, 국가의 요구에 복종, 침묵하는 행위들, 또는 무관심으로 국가에 보이지 않게 불만을 표현한다. 이러한 동원과 저항의 요소들을 일상생활세계에서 찾아내는 연구는 서발

80) 정상호(2003:93)는 기존 연구들이 경제발전과 권위주의의 각각의 성격 규명과 상관성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동원은 사회과학의 독립된 주제로서 경시되었다고 말하면 그 편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동원과 조직화의 방식으로서 제약(Constraints)의 과잉강조와 유인(Inducement)의 과소평가 경향이며, 둘째, 사회적 동원의 대상으로 노동자 농민계급에 대한 편중 셋째, 분석단위로서의 거시적 수준의 연구경향이다. 정상호는 중범위 수준의 연구대상은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적 모임에 대한 미시적 동원맥락(micro-mobilization context)을 강조한다. (정상호, 「유신체제의 사회적 동원의 유형과 특성」, 『박정희체제의 국가동원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박정희동원체제 연구팀, 003.)

81) 양명지, 「박정희 정권의 지배전략으로서의 계급정치 : 노동계급의 배제와 중간계급의 포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턴 연구(Subaltern studies)와 나치즘의 일상을 연구한 데틀레프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를 꼽을 수 있다.⁸²⁾ 그리고 지배권력 이데올로기의 허점을 부분적으로 간파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담론을 만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화적 헤게모니와 그에 대한 저항적 실천의 관계를 분석한 폴 윌리스⁸³⁾의 논의도 학생운동문화연구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스튜어트 홀(Hall)이 강조하는 이데올로기⁸⁴⁾이론은 어떻게 특정한 관념들의 집합이 그림시적인 의미에서 어떤 역사적 블록의 사회적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⁸⁵⁾

결론적으로 말하면 향후 연구는 급진화의 인지적 동인으로서 ‘근대’에 대한 열망과 ‘광주의 아픔’을 동시에 연계시켜 급진화와 관련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80년대 한국의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 ‘근대’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386세대에게 내면화 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내면화한 근대성이 저항운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1980년대 학생 운동가들의 급격한 ‘정체성의 변화’와 ‘학생대중의 시위참여’를 “반공의식과 국가주도의 집단 동원에 의한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실천”⁸⁶⁾이자 냉전반공주의의 부정적 효과로서의 일상적 정치언어의 채색화인 이념적 불러내기(ideological interpellation)와 정치사회의 허약함⁸⁷⁾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학생운동이 급진적 저항이념의 수용이나 실천과정에서 선두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반공이데올로기의 효과라는 측면과 지배 이데올로기적 공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학생집단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 구성원들은 주기적인 총원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확고한 통제를 통한 지배이데올로기를 체제 내로 사회화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물론 다시 말해 마르크시즘 내지는 주체사상적 가치의 내면화가 대학시절 형성된 제반 정치·문화적인 가치관의 부정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사이의 커다란 갭’⁸⁸⁾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급진화(radicalization)를 ‘국가 사회주의’로 단순 환원시키지 않고 계급지향성의 민중주의가 부가된 ‘민족·민중주의’로 규정할 수도 있다.

당대 학생들이 수용한 민족·민중주의가 역사를 구체적으로 전진시키는 운동이라기

82) 이정윤,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문화재생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7쪽.

83) 폴 윌리스는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문화적 경험으로 구성되는가를 분석하면서 계급을 구성하는데 있어 문화적인 형태는 생산관계 등의 구조적 요인과는 별도의 독특한 차원임을 강조한다. 노동운동을 문화적으로 접근한 구해근(구해근, 「한국노동운동계급의 형성」, 창직과 비평시, 2002)도 계급형성에 기여한 문화적 측면으로서 비우호적인 문화적, 정치적 장애를 극복한 또 다른 문화적 요소들 즉 공장 내의 실존적 경험과 그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석, 이와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과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한 공장 외부의 문화적, 조직적 자원에 주목한다. (은수미,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21쪽.)

84)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이데올로기를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 정의, 파악,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계급과 사회 집단이 사용하는 정신적인 틀-언어, 개념, 범주, 사유의 상, 재현(representation)체제들”이라고 말한다.

85)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86) 권인숙, 『대한민국은 근대다』, 청년사, 2005.

87) 최장집, 2003, 65쪽.

88) 권인숙, 『대한민국은 근대다』, 청년사, 2005, 69-72쪽.

보다는 분단국가 혹은 종속국가를 주권과 독자적인 정책수립,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정상국가로 만드는 운동⁸⁹⁾, '국가'와 '민족'의 순응적 질서의 제한 속에서 저항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냉전질서의 이식, 민주주의의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한국인들은 현실생활에서 서구의 단선적 역사관을 은연중에 수용하게 되었다. 이 역사관은 한국의 역사 자체뿐 아니라 한국인의 시간의식까지도 변화시킬 만큼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인류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규정한 단선적 역사관은 과거와 현재의 중요성보다는 미래의 진보를 강조하고, 대립을 정당화하였고, 정치적으로 냉전질서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군부권위주의는 단선적 역사관의 변형인 발전주의에 기초해 전통의 망각을 은밀하게 강요하였다. 발전주의는 근대성의 한국적 수용과 심화로 한때 권위주의적 억압체계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군부권위주의는 단선적 역사관의 변형인 발전주의에 기초해 전통의 망각을 은밀히 강요하였다. 발전주의 역사관은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의 중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역사속의 귀중한 것을 다시 드러내어 유지하는 노력을 무시한다. 이 역사관은 우리가 미래와 과거 사이의 현재(nunc stans)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역사관은 사회와 역사발전의 주체를 상정하고 그 배타적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립의 원리를 기초로 깔고 있다.⁹⁰⁾ 민주화운동, 학생운동도 단선적 역사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민중을 단일한 집단적 주체로 설정하고 대안적 '전통'이라는 개념에 집착했던 민주화운동세력의 사유방식은 애국주의, 국가정향적 담론의 헤게모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구의 단선적 역사관의 수용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내면화와 단극적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력, 학생운동이 수용한 맑스주의(레닌주의, 주체사상 포함)는 프롤레타리아트 유일주의나 토대와 계급으로 환원되는 철학적 본질주의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은 '근대성'과 '사회주의적 이념'에 대한 성찰과 정교화에 입각하여 진행된 운동이 아니라 군사독재와 재벌에 대한 적의와 이들의 위기에 기초한 운동 즉, 자체의 정책과 대안에 입각한 운동이 아닌 자본과 권력의 전략에 대한 반사적 운동이자 근대국가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적 성격의 운동⁹¹⁾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의 성격과 목표 방식을 근대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기획⁹²⁾이자 정상국가를 위한 '자기 제한

89) 이와 관련해서는 김동춘,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당대, 2000을 참고하길.

90) 홍원표, 『한국 민주화의 좌절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하기':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제자리 찾기』,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28쪽.

91) 1980년대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를 제국주의 질서와 국가권력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92) 자유주의란 전형적인 중도파의 교리로서(보수주의에 대해) 구시대의 잔재인 정당화되지 못한 특권에 반대하고(사회주의·급진주의에 대해) 무분별한 평준화에도 반대하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곧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칭한다. 윌러스타인은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는 국가 주도의 개혁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변형들이 불과했으며, 이렇게 세 쌍(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으로 구성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세계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고 말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견해는 윌슨주의와 레닌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잘 나타난다(Wallerstein, 1996a:7, 김호기, 1999:68).

적 급진화(self-limiting radicalization)'로 재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군부가 집권하고 산업화의 후유증과 억압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성장한 이들이 '내면화한 저항'은 형식적으로는 급진적 혁명을 상징하기는 했지만 '반 개인주의'와 '공동체적 덕목'으로 충만 되어 있었다.⁹³⁾ 80년대 학생운동 주류세력이 취한 급진적 이념은 형식적으로만 서구가치를 반대할 뿐 내용적으로는 서구주의의 핵심 논리인 '발전'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었으며 근대적 가치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박정희의 근대화주의가 북한과 경쟁, 가난에 대한 기억과 식민지 군인으로서의 치욕이라는 트라우마(trauma)⁹⁴⁾, 그리고 일본의 발전에 대한 선망에서 발원한 것이라 할 때 '박정희의 아이들⁹⁵⁾', '오월의 사회과학'에 심취한 '오월의 아이들'인 80년대 학생운동 핵심부의 '사회주의'의 수용은 단지 대안적 사회체제에 대한 이념적 갈망 또는 가용적 정보의 태부족 뿐 만이 아니라 '근대 서구'의 우월주의를 심리적으로 수용⁹⁶⁾한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학생 운동가들은 저항과정에서 자신의 주변성과 타자성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긍정을 필요로 했고, 긍정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의 존재와 가능성이라는 쟁점을 취했던 것이다.

정리하면 학생운동의 급격한 정체성의 변화를 식민과 분단을 거쳐 뿌리 깊게 내면화된 근대화의 열망과 사회적 격차에 더하여 광주민중항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이해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근대적인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 비록 근대성의 필수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세계체제의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⁹⁷⁾

93) 80년대 학생운동은 국가가치와 개인가치의 분리, 개인 이념보다는 민중 이념을 활용하여 왔다. 조대업이 설명하는 저항과 적응 가치(관념의 민족주의, 반미주의, 비판적 공동체주의와 저항의 권위주의화, 과잉정치화, 유연적 전통주의, 적응적 권위주의, 연고주의)는 학생운동의 급진화의 수준과 저항과 목표를 설명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대업,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2002, 256-266 참조

94)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경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 기억되는데,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출처: <http://kin.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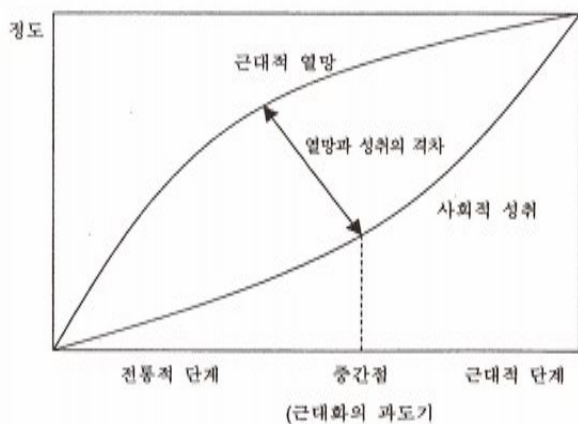
95) 조대업의 논의를 참고바람.

96) 사회주의 붕괴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듯이 국가 사회주의와 근대성은 분장관계에 있지 않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 합리성, 기술합리성, 생산력 중심주의라는 근대의 특징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기업가와 사회주의의 혁명가는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여 이성의 힘에 의해 미래 시간을 기획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베버가 말한 자본주의 금융윤리와 합리적 노동형식은 공산주의 윤리 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계획과 노동에 대한 이상화에 부합한다. 바우만(Zygmunt Bauman)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근대의 잠재력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함을 폭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사회주의는 그러한 잠재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 바탕으로 주장한다.

97) 근대성은 보통 국민국가의 성립, 자본주의 발달과 산업화, 개인주의, 시민사회, 합리주의적 정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 그로부터 야기되는 세속화, 도시화 등으로 구현된다고 정의된다. 베버에게 근대성이 우선적으로 합리화와 세속화를 의미했다면, 맑스에게 근대성의 핵심은 자본축적의 역동성이었으며,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근대성은 신권에서 벗어나 자의식적 주체성에 입각한 개인과 세속화된 세계를 가름하는 철학적 특징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근대성은 시간의 특수한 경험과 역사의식을 가리킨다. 근대성은 따라서 질적인 초월을 포함하는 역사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는 단순히 고대나 중세에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통'에 대립되는 개념 즉 전통의 탈피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단절과 혁신 근대성은 역사적 필연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 진행된 전 세계적 통합,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비유럽 문화와 게서적으로 구분하려 한 유럽인들의 의도에 의해 근대성의 절대적 위치가 결정된 것이다. 과거 서양이 동양을 본질화했듯 동양도 서양을 본질화하는 위험에 빠져들어 서양이 만들어놓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같은 반 주변부 국가들이 복잡한 근대적 행위유형과 조직 유형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면, 그 국가들은 바로 그와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본격화된 조국근대화는 일정 기간 사회적 성취를 높였고 대중 동의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근대화는 대중의 요구와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식민과 분단의 기억으로부터 서구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서구를 넘어서야 한다는 열망을 내면화하였다. 70년대는 학교, 교회, 공장, 농촌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는 선진 조국의 장밋빛 환상에 들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바람과 성취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격차(갭)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70년대 산업화는 노동자들을 소외시켰고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저항을 낳았다. 근대적 열망과 성취 사이의 갭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80년대 5월 '국가를 자임한 세력'에 의한 국가폭력이 자행되자 이에 대한 저항의 형식도 국가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의 방식으로 강화되어 나아갔던 것이다. '근대주의(modernism)⁹⁸⁾ 없는 근대화'⁹⁹⁾ 과정 속에서 성장한 주변부 지식인들의 극도의 절망감과 지적 빈곤은 비정상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사회주의의 수용으로 나갔지만 내면화된 근대의 열망과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조건은 급진적 실천의 양식을 일정한 테두리 안에 한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근대의 부분적 완성이 이루어지자 운동권을 배회하던 국가사회주의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림 1> 과도기의 과정에서의 근대적 열망과 성취의 증감 모델



<그림1>은 특정의 국가가 근대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그 국가의 발전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취와 사회적 열망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계적 목표와 그것의 성취만족 간의 가장 극심한 격차(이때 체계적 좌절감이 극대화됨)는 과도기 과정

때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가정된다. 이 그림은 완전히 근대화가 달성된 국가나 순

은 오리엔탈리즘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타자성을 극복하려는 제3세계 토착주의가 진부적이고 비타협적인 토착 문화주의 형태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박지철,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98) 근대주의(modernism)는 근대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낸 지성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칭한다. 서구에서 근대주의는 계몽주의, 개인주의, 국가주의가 근대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성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특성들이다.

99) 근대성을 통한 근대화는 서구식 근대화와는 달리 근대화는 “외부로부터의 근대화”, “타율적 근대화”, 그리고 “근대성 없는 근대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수한 전통적인 국가는 체계적 좌절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적인 국가는 근대적 열망들을 달성시켜 줄 수 있는 높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순수한 전통적 국가는 아직 근대성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근대적 열망이 전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1>100은 최소한 80년대 학생운동의 급격한 급진화와 운동조직이 내장한 근대의 그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급진적 이념의 쇠퇴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본다.

2. 80년대 학생운동의 투쟁성격

80년대 주류학생운동 세력의 국가폭력과 특정사안을 둘러싼 상징투쟁에서 확인되듯이 항상 지배세력과 '민족(국가)공동체'라는 기표를 놓고 투쟁해 왔다.

80년대 주류 학생운동(NL)은 항상 민족(국가)의 위기라는 담화를 통해 '공동체의 경계'와 '역사쓰기'를 논쟁하였다. 80년대 주류 학생운동의 저항담론은 한국의 극우·보수 집단의 생래적 유전자로까지 보여 지는 '맹목적 근대화주의', '민족주의'를 넘어 서지 못하였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저항담론 밑바닥에는 '제국은 집합적 유죄이고 악의표상'(친일·친미·독재=비정상국가), '민중(민족)은 집합적 무죄이며 선의표상(반일·반미·통일조국=정상국가)'이라는 '세습적 희생자 의식'에 기초한 이분법적 구도인 '기억과 전선(戰線)의 정치학'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극우 중심의 비대칭적 관계구조를 지니게 된 분단체제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물론 금단과 배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과 방식의 차이에서 그 강도도 달라지는데 보수정치세력의 단극구조(unipolar structure)의 강화는 학생운동세력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지배자와 피지배의 동일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고,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하게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며 등장한 학생운동의 급진적 저항담론의 등장 초기 일부 과격한 구호와 실천101), 녹두대, 오월대 등 대항폭력 조직의 설치102) 등은 슈미트의 논의와 비교적 잘 부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냉전체제의 지속과 광주학살의 경험이 당대 학생들에게 '항시적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든 예외상황103)이었고, 이러한 예외상

100) 아이보 K,파이어 밴드 등, 『사회변동과 정치폭력:비교국가연구』,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현암사, 1988, 334쪽.

101) CA의 혁명을 예고하는 상황이라는 주장, 대학을 해방구로·인천을 해방구로 라는 구호의 등장, 다양한 기관 점거농성과 88년 미문화원 점거시 사제폭탄 사용 등.

102) "군사주의 문화 녹두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여성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전쟁논리와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군대입니다. 녹두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군대의 위계질서인 대장-중대장-소대장이라는 조직구조를 답습하고 있으며, 녹두대의 존재는 운동 질서 속의 학생회체계 안에 녹아나 있는 질서로 군사주의 문화를 담아나갈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기자회견문 중 부분 발췌, 2003).

103) 이 개념에 대한 논의로는 윤근식, 『정치학』, 대왕사, 1976, pp46-69; 이광일, 『한국의 진보정치운동, 시도의 상실과 좌절』, 김진균,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2003. 참고

황에서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은 제 3자(대중)에게 상대를 강력한 “폭력”과 “죽음”이라는 상징투쟁으로 밀어 넣는 기제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안기관과 극우단체의 학생운동에 대한 언술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저항세력을 민족 공동체의 타자인 북한과 연계시켜냄으로써(좌경, 용공, 친북) 이들을 민족공동체의 상상적 경계 외부로 추방하는 상징투쟁과 담론을 구사한다. 군부권위주의 시절 한국전쟁의 기억에 대한 지배의 코드화¹⁰⁴ 및 극우반공사회의 지속적인 실천에 힘입어, 빨갱이라는 기표는 악마적 행위성과 쉽게 접합되기도 했다.

학생운동의 동원담론도 이와 유사한데 이들의 해석에서는 군부독재정권 및 매관세력은 사실상 ‘민족공동체’의 ‘민족의 삶’의 외부에 있는 적으로 의미화 되었던 것이다.¹⁰⁵ 실제로 학생운동세력은 지배세력을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세력으로 자신을 민족민주(民族民主)세력으로 규정하였다. 74년 민청학련의 삼민선언 이후 80년대 학생운동 세력은 단체와 학생회¹⁰⁶의 이름도 삼민주, 민민주(민족민주투쟁위원회), 자민주(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애학투(애국학생투쟁위원회), 조통위(조국통일위원회)등과 같이 민족, 민중, 해방을 위한 투쟁과 연결시켜 왔던 것이다. 이처럼 예외상황에서 80년대 학생운동은 민족적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배제하려는 적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외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민족과 민중의 수난사와 그로부터 해방을 위한 투쟁과 연결짓는 담론을 구사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민족공동체의 적법한 주권자로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보편화’와 국가폭력에 당당히 저항하는 ‘영웅화’를 통해 이를 가능케 하고자 했다. 분신투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⁰⁷

1980년대 지배와 저항블록 사이의 긴장에서 형성된 ‘민주주의 담론’은 대중들이 독재 권력의 각종 고문사건이나 탄압을 해석하는 틀로 제공되었고 하나의 사건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속성을 드러내는 총체적 구조의 사례로 자리매김 되면서 대중동원과 배제의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특히 ‘저항담론의 연계성’, ‘총체화 과정

104) 김동훈,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105) 빨갱이는 사회체 내에 존재하는 병균으로, 박멸하고 퇴치하거나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해야 하는 ‘내부의 외부’가 되었던 것이다. 지배세력에게 학생운동은 기성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규범파괴 집단’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일례로 1986년 서울대생의 반이분신, 53인천사태, 건국대 사건, 부천시 성고문 사건서 공안당국의 발표문, 1991년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실의 유서대필의혹사건과 91년 5월 투쟁 당시 정부의 발표문들은 저항세력에 대한 ‘불순분자’, ‘규범일탈 행위’로 적극적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지배세력은 저항세력을 민족공동체의 외부로 배제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국가폭력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옹호하고자 했다.

106) NL성향의 학생회는 ‘애국’한양, ‘민족’고대, ‘국구’영지, ‘자주’경희 등으로 PD계열의 학생회는 민중00, 노동해방00 등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깃발에 새겨 넣었다.

107) 한 시기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은 각 시기에 존재하는 특정한 역사적 상징과 담론 자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지배 혹은 저항담론으로 ‘구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신자살의 사례들을 검토하면 자살행위가 저항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가져 오는 인과과정(mechanisms)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살과 저항공동체와의 조직망의 관계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첫째, 자발적 죽음을 통해 그 행위자가 속한 제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불의성을 고발함으로써 ‘체제 부정’이라는 의미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둘째, 자살행위는 그 행위자가 속한 동료집단으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분노, 집단 구성원간의 연대감, 그리고 자신의 소극성이 동료들 죽음으로 물고 갔다는 죄책감과 수치의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 냉소적인 행위자들의 의식성과 행동성을 고양시켜 세력, 의례를 통한 기억을 주기적으로 되살려 상징적 및 정서적 효과를 영구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추모사업회를 통한 저항공동체의 조직망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인 ‘담론효과’는 각축하는 지배와 저항담론의 상호·경합하면서 공모하고 있었다. 특히 상호경합과 공모는 결코 사회주의대 자본주의 이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합과 공모의 룰(rule)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상속받은 특정한 유산의 제약 속에 있었던 것이다. 공모의 특정한 유산은 국가(민족·민중), 가족(아버지·어머니·형제·사회적 만이), 전통(공동체)이었고 이러한 유산이 매 시기 담론의 각축의 과정에서 재현되고 호명되고 있다.

3. 80년대 학생동의 목표

80년대 학생운동은 비정상적 억압구조에 대한 안티테제이자 주변부 민족해방운동의 정상국가 만들기 전략이었으며 혁명적 실천을 조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진위집단과 형식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학생 대중이 결합¹⁰⁸⁾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 지도부는 ‘기획하고 인내하는 인간이성과 의지에의 강조’, ‘순수주의에 근거한 타자의 배척’, ‘계몽의 주체로서의 전위’, 나아가 전체를 기획하고 그것에 토대에 무질서·혼돈을 제거하여 질서를 세우고 집단내부의 동질성을 만들어 내는 지도자관, 자본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속도 전식 성장주의를 강조했던 스탈린주의의 변종인 주체사상과 ML주의를 수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고의 외부준거성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다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학생운동을 양분한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PD)계열의 저항담론은 그 자체가 1980년대 새롭게 구성되는 현실에 조용하는 저항담론은 아니었다. 민족해방계열의 저항담론이 1948년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연결되는 1948년 질서에 대한 안티테제의 담론이었다면, 민중민주계열의 저항담론은 1961년 이후 군부권위주의 하에서 지속된 종속적 자본축적에 대한 안티테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 대안이론을 만들어 낼 수 없었던 한국 사회과학의 ‘지성의 빈곤’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배제와 억압의 비정상적 국가에 대항한 새로운 국가 만들기라는 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학생운동의 급진화의 직·간접적인 계기로 언급되는 80년 5월 광주 비극은 80년대 전체 학생운동을 이해하는 ‘코드’이자 그 모드를 규정하는 ‘계명’이었지만 그것은 악한 국가(친미적인 군부독재)에 맞서 좋은 국가(민주정부)¹⁰⁹⁾를 만들어야 하는 지식인의 부채의식이었으며 사회주의는 상상된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도부의 사고와는 별개로 많은 학생들은 혁명적 수준이 아닌 일반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인식하였고, 권위주의적 국가의 무자비한 탄압에 분노하여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였다. 주류 학생운

108) 전재호,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본 민주화운동 - 제 1 공화국에서 제 5 공화국까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Vol.22 No.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109) [필자주] 민주정부에는 민선민간 정부에서 사회주의의 혁명을 수행할 전단계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까지 스펙트럼은 다양하였다. 다만 학생운동 지도부들은 해당 시기 야당과 연합한 민주연립정부 수립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등은 결코 사회주의를 공론화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한 실천에 안주하였다.

때로는 일부 지도부의 목적의식적인 편향과 과격한 실천도 있었지만 그 즉시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 되거나 소수화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주류 학생 운동가들은 '최대민주화연합'에 의거한 일반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스스로의 실천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운동의 이념적 급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던 80년대 중후반 개헌국면에서 제헌의회 소집과 임시혁명정부 수립 등 급진적인 논리들은 거부되고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쟁취'라는 목표로 결집되었던 것, 민주화 이후 급진적인 이념의 약화도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¹¹⁰⁾

이처럼 저항과 지배담론의 해석적 틀의 극단화 과정이 지배자의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동시에 학생운동의 과격화, 급진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내적(운동권 내부의 이념 분열), 외적(자유주의적 정치세력, 온건보수세력) 정치사회적 경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내적으로는 80년대 중후반 NL과 CAPD의 분화, 90년대 자주대오와 사랑사랑의 분화 등, 외적으로는 86년 5.3 사태이후 양김의 3비론(비용공, 비반미, 비폭력)의 등장, 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투쟁이후 온건 개혁세력의 분화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실례들을 통해 극단화된 지배담론으로 온건개혁세력의 급진저항세력의 경계 안으로 인입되기도 하지만 극단화된 저항담론의 확장은 정치사회적으로 또 다른 경계와 균열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통해 80년대 운동이 급진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적인 세력의 기우처럼 매시기 운동을 과격하고 급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80년대 운동은 내적으로는 급진적이었으나 주요한 전술적 슬로건은 늘 온건 개혁적 흐름이 주류를 형성했다. 운동권의 체제변혁적 의식변화와 대중의 의식은 비례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담론은 단순히 토대를 반영하는,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투쟁을 구성하는 유기적 일부였던 것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지배와 저항담론의 분석은 지배와 피지배, 순응적 대중과 역응적 대중의 경계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현실운동의 구성적 일부이며 지배와 저항의 경계의 긴장과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학생운동의 참여, 동원의 유인기제

학생운동의 참여, 급진적 이념(특히 주체사상)의 수용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항이데올로기의 개종과정을 개종자 스스로가 삶의 전 과정을 통해

110) 근대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근대화를 위한 헤게모니 투쟁은 대중화 전학을 필연화한다. 조대업은 교조적 반미주의가 왜 그토록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이념이 학생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반미주의가 갖고 있는 운동이념의 내재성과 운동전략의 대중성에서 찾고 있다. (조대업,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한국과 국제정치』, 제 21권 4호, 2006, 209쪽)

추구해 온 의미체계가 주체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의 능동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개종현상은 밀폐된 골방에서 홀로 책을 읽다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인 상승작용을 통하여 강화되기 때문이다”¹¹¹⁾. 이는 사회구조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개인의 미시적인 삶, 관계망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문제의식의 소유,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려는 욕구의 존재, 일상적인 해석체계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설명체계의 모색, 새로운 해석체계와 대양 이데올로기와의 접촉, 운동 집단의 동료(선·후배)들과의 정서적 유대의 형성, 운동 집단 밖의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또는 폐기, 운동 집단 내부성원들끼리의 집중적인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¹¹²⁾

인터뷰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참여 동기와 동원담론은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것은 ① 서구에 대한 열망과 희생자의식 ② 광주에 대한 원죄의식¹¹³⁾ ③ 지식인의 부채의식¹¹⁴⁾ ④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책임의식이었고 내부 의식화 과정에서는 참된 인생관 담론(애국의 길, 혁명의 길)이 덧붙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 또한 근대화의 열망과 사회적 성취에서 오는 차이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를 ‘자기 제한적 급진화’로 규정할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다.

근대의 열망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주의 아픔이 만들어낸 80년대 주류 학생운동의 급진적 저항담론의 구성적 차원을 정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① 광주의 재구성 ② 민족의 경계 재구성 ③ 새로운 공동체 재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3가지 차원의 의미 구성과정과 정식화에 대한 분석은 학생운동의

111) 정수복, 『의미세대와 사회운동』, 1994, 52쪽.

112) 정수복, 위의 글, 53~54쪽. 필자가 만난 학생운동 경험자들도 주체사상을 수용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인터뷰는 10월 15일~10월 30일까지 진행하였고 NL에서 활동한 82~87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체사상의 수용 원인을 유형화하지 않고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 민중론(민중지향적)의 영향 / 민족주의, 세습적 희생자 의식 / 보다 나은 민족, 국가건설 / 광주항쟁과 정통성 없는 정권/ 지식의 인권화, 변혁사상의 빈핍화 : 개인주의, 자유주의, 낭만주의를 배격, 혁명사상의 빈핍화/ 감옥에서 만난 선배 운동가의 영향 / 분단과 통일문제, 인간문제를 통한시 하는 열렬주의의 한계를 주체사상이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 전국적 관점에 대한 강조 / 운동권의 폐쇄성, 전위주의에 실망, 상대적으로 대중을 강조하는 풍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에 끌림, 개헌국면(대중투쟁 슬로건)- 대중노선 / 친일파 숙청, 소련 몰락이후에도 견재한 자주적인 북한에 대한 동경,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 /주체사상의 쉬운 문풍/ 북에 대한 정보의 부재 / 주술적 반공주의 이에 반해 변혁이론의 정연한 논리/ 북한방송(평양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의 영향/ 약자의 편에 선다는 명분/ 기성세대, 권위에 대한 반항 / 권위의 부재 등.

113) 나는 광주시대를 체험하면서 이전의 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학교가 원했던 어떤 모범생의 틀을 벗어버린 것처럼 현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게 되어 버렸다. 대학에 들어와 빈번하게 데모를 겪으면서, 또 사회과학 서적들을 대하면서 나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실상을 조금이나마 꿰뚫어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 허상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작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다운 지식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재뉘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한상진 엮음, 『386세대. 그 빛과 그늘』, 2003, 중 백희라,심리학과 83학번의 글).

114) 지식인들은 예술의 순수성, 윤리의 수신성, 학문의 중립성이란 허울 아래 부당한 강자의 변호사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허영과 배를 채우고 역사의 모순 속에서 아파하는 이웃의 신음 소리에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민한 정신을 가동시켜 그 신음소리를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한다(한상진 엮음, 『386세대. 그 빛과 그늘』, 2003, 중)갈홍,서양학과 86학번의 글).

이념, 저항과 동원담론, 동원을 위한 상징화, 운동의 확산과 퇴조를 설명해 준다.

'광주의 의미 재구성'을 통해 광주가 혁명의 표상 구성되고, 여기에 '희생자 담론'과 '부채 담론'이 접합되어 어떻게 급진적 저항담론으로 확대 재생산되는지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민족의 경계 재구성'에서는 세습적 희생자 의식을 통해 군부와 외세가 적어지고 북한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과 북한이 어떻게 민족의 적에서 주체조국으로 의미가 재구성되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한편, 80년대 급진화된 학생운동가들은 '새로운 대안공동체 재구성(⇒민족자주민주정부, 통일조국)'를 통해 식민과 독재의 이분법적 구도를 확산하였고 이를 통해 애국주의를 강화한다.

현실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 놓여있는 세력들의 투쟁은 그 내부에서만뿐만 아니라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담론이라는 형태로 투영된다. 이는 하나의 투쟁이 담론적 언술로 어떻게 정식화되느냐에 따라 전선이 변화하고 현실 역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80년대 급진적 저항담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광주에 대한 상징화는 이를 반영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운동세력은 광주를 '탄압받는 광주, 투쟁하는 광주, 해방된 광주'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광주'사태, '광주'항쟁이 아닌 '5·18'민중항쟁이란 기억과 상징투쟁을 통해 전국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를 자주와 통일 민중해방의 상징으로 만들어 민중혁명 또는 전민항쟁의 침로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기억과 상징투쟁이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유화국면이 열리기 전인 84년까지 광주항쟁에 대한 운동권의 저항담론은 광주가 폭력과 공포로 점철된 무질서와 혼란의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이었다. 저항담론은 지배자의 비정한 학살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국가공권력의 공백상황에서도 광주는 도덕적으로 우월했음을 밝히려는 수동적 방어적 관점의 '대동세상론(공동체론)'이 주된 담론이었다. 그러나 80년 중후반 부터는 '코뮌제생론'을 넘어 훨씬 급진적인, 권력쟁취 수단으로서의 '무장투쟁론', '무장봉기론이 사노맹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되게 된다. 저항담론내부의 노선차이에 따라 "5월에서 혁명으로", "5월에서 자주통일로"라는 담론으로 대체된다.

저항과 동원을 상징경계의 3가지 차원으로 규정해 보면 당대 주류 학생운동가들의 총체적 지향은 '자주민주통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 민주주의 차원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심의 힘을 선망하는 '주변부 민족 해방운동'이었으며 그것은 이미 '지배가 내장된 저항'이자 '정상국가승배'로 규정하며 이 또한 '자기 제한적 급진화'의 한 사례로 설명될 수 있다.

80년대의 학생운동의 대중화 또는 전국적 확산에 대한 평가도 좀더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운동의 확산이라는 긍정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질곡이라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김일성주의의 단편적 지식권력이 동원되었다는 점 뿐 아니라 도덕주의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중화 전략이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품성론'과 '애국적 사회진출'을 당대 대중화 전략의 성공 사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국가주의적 학교교육의 역동일시 효과로 그것의 작동방식으로서의 규율화 메커니즘이란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운동의 대중화에 특별한 영향을 끼쳤던 품성론이 운동의 교조성과 하향 평준화를 심화시켰으며 역권위주의적·비성찰적·비주체적 운동으로 전변되었다는 사례는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대중화 전략은 이념보다는 쪽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복종, 총체성과 동일성의 강조로 운동 내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협소화 내지 왜곡시켰고 이러한 요인들이 90년대 사회주의 몰락과 시민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학생운동의 질곡과 위기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80년대 학생운동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80년대 주류학생운동은 국가주의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통해 근대화의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항한 사회적 동원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현 시기 권력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발전하는데 필연적으로 실패(서구적 발전론-근대화론을 보편화한 민족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활세계의 자율성, 차이의 놀이, 시민사회의 다양성, 참여, 분산, 연대, 등의 변혁에너지는 담지하지 못했고, 기술의 근대성을 넘어 해방의 근대성에 까지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지 못했던 관계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이 왜곡된 원인을 이미 내장하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정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¹¹⁵⁾

한편 민주화담론이 민주화 이후 수동혁명에 의한 '보수연합구도'의 이론적 산물이자 '민주주의의 종말'로 추인하는 논의(신영복, 2000:195~196)¹¹⁶⁾라는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민주담론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⁷⁾. 민주화담론은 민주주의를 다수의견의 수립방식이라는 형식주의(절차적 민주주의)에 한정하며(정영태, 2005), '사회적 적대'의 성격이 '다원적 적대들이 응축된 민주주의 적대'에서 '다원적 적대들의 활성화'(조희연, 1998, 2004, 정태석, 2005)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를 계급내부의 것으로 한정하여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갈등과 적대를 설명할 수 없게 하였으며 근대화의 열망으로부터 비롯된 동원화 전략을 구사한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신화¹¹⁸⁾만을 양산하며 현재의 민주주의의 과제를 협소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대중화 전략의 결과적인 측면은 진보적 연구자들에게 학생운동의 긍정적인 유산의 역사화와 재보편화, 부정적 역사의 성찰¹¹⁹⁾을 통한 우리

115) 이 부분은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2006을 참고바람.

116) 신영복, 『시평/강물과 시간』, 『진보평론 3-봄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

117) 새안금, 천성산 문제와 같은 환경문제, 평택미군기지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와 일부 386 운동권 출신의 태도를 보라.

118) 당대 대학문화가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상당히 기여하였지만 그 내부에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 동시에 반민주적인 가치에 기반한 행위 전략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당시 학생운동의 문화가 '유사 저항담론'이라는 비판도 있을.

시대 저항의 과제를 현재화한다.

87년 이후 제도정치영역이 확장되면서 사회운동의 권력 획득적 요소가 제도 정당적 형태로 표출되게 되고 그 결과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맺는 관계가 달라졌다. 물론 '정치의 운동화'에서 '운동의 정치화'시대로 이행하고 과대포장해서 볼 일은 아니다. 제도정치 영역의 확장이 곧 사회운동의 제도정치로의 환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국면에서 '운동의 정치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운동의 급진성과 역동성은 새롭게 조성된다. 다양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운동의 정치화도 단일한 통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앞으로 학생운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은 먼저 87년 이후 운동의 정치화에 대한 유형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80년~90년대 활동했던 주류학생운동 계열 인사들의 제도정치의 참여의 특징, 참여이후 사회운동 의제의 정책 의제작성 과정이다. 필자도 운동의 정치화가 사회 운동적 의제와 친화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운동의 정책 의제화의 시도를 위한 다양한 실천(제도정치 참여를 포함하여)을 변질 내지 배반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왜 상대적으로 주류 학생운동 인사들의 제도정치 참여형식이 유독 '초대받은 정치'의 형식, 나아가 제도정치로의 포섭(co-optation)이라는 결과로 귀결 되었는지는 반드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의 의제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소극적 반대 수준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주류 학생운동의 이념의 한계와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체적 접근과 원인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정치의 변형주의적 재편의 과정을 넘어 민주화 이후 탈 제도화된 운동 정치, 생활 정치의 급진화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 연구가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과거의 부정을 통해 권력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성찰이 사장된 '비판적 역사'가 아닌 가치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생성적 역사'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단순히 현재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와 연결짓는 시각을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망각에 대항하여 투쟁한다고 할 때, 그것은 역사 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다시 새겨 넣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기존 주류담론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기억을 위한 투쟁'¹¹⁹⁾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일반화된 기억에 반하는 투쟁이고, 그 매끈한 역사의 흐름에 거친 "틈새를 내기 위한 것"이며 정연하게 배열된 기억들 사이에 난데없고 "때 아닌 것들"을 끼워 넣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¹²¹⁾ 민족·국가정향적 운동으로 침윤된 저항의 역용성을 극복하고, 그것이 우리 내부에

119) 권인숙, 임지현, 김원, 김동춘의 논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화,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할 예정

120) 강인철에 따르면 기억의 정치학은 기억들의 투쟁→기억의 정형화→망각 및 무기억과의 투쟁→지배적 기억의 균열과 위기라는 일련의, 때로는 중첩적인 과정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강인철은 우리가 현재 '지배적 기억의 균열과 위기'의 국면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강인철,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한국전쟁50주년에 즈음하여」, 창작과 비평 2000년 여름호, 창작과 비평사, 2000, 343쪽.

121) 마르코스 지음, 후아나 폰세 데 레온 편집,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해냄, 2002, 433쪽, 547쪽; 박태호 재인용, 「기억에 반하는 기억을 위한, 전쟁에 반하는 전쟁」, 『진보평론 제 19호』, 2004, 132-133쪽.

각인된 식민지적 낡은 지배의 관계들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내부 비판의 준거로 작동하는 방향에서 자기 제한적 급진화가 아닌 자기 확장적 급진화¹²²⁾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IV. 학생운동 연구방법론의 확장을 위한 과제

어떤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연구대상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점차 일반성을 띤 법칙을 찾아내는 데까지 발전한다.

학생운동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학생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 시각의 정립문제(인식론), 자료의 종류와 수집문제, 그리고 적절한 이론틀(모델) 내지 접근법의 적용과 개발문제 등으로 발전해야 한다.

방법론에 대한 자의식은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자기반성의 의미를 가진다. 보편에서 시작할 것인가, 특수에서 시작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그 선택의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연구자의 자의식 과잉이 야기할 수 있는 편향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특정 방법의 선택이 반드시 좋은 연구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연구결과는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정치(精緻)한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하나의 방법론이 한국 학생운동의 모든 측면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¹²³⁾

이 연구는 물론 이 연구는 방법론적 연계와 학생운동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과 학문체계를 넘어서 사회과학의 개방과 재구조화¹²⁴⁾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학제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미시·거시와 구조·행위를 설명하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의 예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경험 분석적 연구와 인과론적 복잡성(causal complexity)과 역사적 특수성이 고려된 해석학적 사례 지향적 연구

122) 이 연구는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 서려고 한다. 그것은 제도정치 자체의 정상화 혹은 근대화의 문제의식을 뛰어 넘어, 제도정치 자체의 한계성을 묻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떤 점에서 이를 '새로운 사회운동'적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근대적인 진보정당 까지를 포함하여 근대적 정당 자체의 한계성, 제도화된 권위주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탈각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123) 구갑우,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 한울, 2003, 302쪽.

124) 월러스틴은 전체로서의 세계체제, 역사적 체제로서의 세계체제 인식과 함께, 이 역사적 체제의 해석도구로서 '역사적 사회과학'을 주창한다. 그는 이를 통해 법칙정립 대 개성기술, 특수성과 보편성, 역사성과 구조결정성 간의 긴장을 두고 대립, 방황해 온 사회과학을 탈피하여 그 극복을 모색한다. 그는 현재 '칸막이 처져' 있는 사회과학 분과 학문들을 "통일과학"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단 하나의 총체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 총체는 그 구조와 동인에 관한 이론화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전체로서의 체제의 역사를 그 기원에 서부터 현재까지에 걸쳐 추적함으로써 이해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발견적' 방법과 '전체론적' 방법을 옹호한다.

(case-oriented method)¹²⁵⁾방법의 활용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 학생운동연구의 객관적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역사와 사회구조적 모순을 고려하면서도, 참여주체의 동기와 갈등에 대한 사회학적-해석학적 분석 틀의 결합¹²⁶⁾이 강조되고 있는 학생운동 연구의 내적 요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경험 분석적 연구’는 다른 연구방법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도성과 과장성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회적 실재라는 차원에서 학생운동을 분석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며 분석 대상인 80년대 학생운동의 조직·이념·동원과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해석학적 사례연구’는 일반적인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례에 대한 관심에서 선택되는 방법론이지만 그것은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도 그 배경에 반응해야 하는 주체의 인식과 구성 그리고 담론과 주체의 상호작용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¹²⁷⁾ 그러므로 해석학적 연구는 운동이념과 조직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연구가 갖는 근원적 난제의 해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운동의 이념과 조직은 계량화하기 어렵고 자료만으로는 운동 전체를 드러내거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운동 이념의 급진화 정도, 동원전략 선택의 구조적 요인과 우연적 요인, 동원과 조직화의 내적 효과와 영향력, 지배와 저항의 상징 각축은 수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에 해석학적 방법은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방법론만으로 사회현상의 존재양식 또는 생성경로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가능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법론적 연계의 시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과학의 특성상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사회과학자가 현상의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participant-observer)임을 상기할 때 사회과학자 역시 일종의 편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 과제의 정밀성과 객관적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기점검과 자기성찰에서 출발하여 다른 방법론에 대한 개방

125) ‘해석학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한다. 이 접근의 특징은 1. 연구자의 직관적 이해가 중요하고 2. 직접 관찰, 공식/비공식적 문서의 이면적 의미를 중시하고 3.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입장이 되어 보거나 그들의 경험을 되살려 보는 감정 이입적 이해를 활용한다. ‘해석학적 연구’는 인간 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파악, 주관적 의식의 심층적 이해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법적 발견의 어려움, 정확성과 타당성 결여, 주관성의 문제가 있다. ‘경험 분석적 연구’는 자료를 계량화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 자연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 적용한다. 즉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밀접한 거리를 유지한 채 경험적으로 관찰된 자료를 계량화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인해 보편적 법적 발견에 유리,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 동기와 분리된 연구의 한계를 보인다.

126) 사회-해석학적 이론의 대화적 요소, 혹은 해석학적 차원은 두 가지 불충분한 사회학의 접근 방법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하나는, 대상을 왜곡시키면서 개념과 범주를 대상에 부과하는 태도이다. 다른 하나는 대상 자체의 개념에만 의존하여 대상 자체의 가능한 자기 이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태도이다(조셉블레이처 저, 이한우 역, 『해석학적 상상력』, 240~247쪽).

127) 해석학적 방법은 이미 확립된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상의 구성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학적 방법들의 적합성 여부를 성찰한다.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이해의 공통성을 강조하며, 그 결과 서로 다른 언어 게임들을 매개하는 공통된 「진동」에 대한 이해 작용의 근본적 성격을 지적한다. 이러한 통찰은 주관적으로 의도된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해 사회학에는 결여되어 있다. 해석학적 사회학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의도적 행위 속에 나타나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특수성 속의 일반성(the general in the particular)」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는 포괄적인 의미 연관을 고찰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의도된 의미를 해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의미 내용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 조셉블레이처 저, 이한우 역, 위의 글, 247~249쪽.

적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사회현상의 속성상 어느 한 방법론을 절대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본 방법론 안에서 여러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¹²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운동의 발생을 억압하거나 촉진하는 정치적 개방성과 운동을 지지해줄 수 있는 연대세력의 존재여부 그리고 운동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적 조건 등을 의미하는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분석만으로는 개인 혹은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집합행동 참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근 사회구성주의적 연구에서는 프레임 분석을 결합하여 구조와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물론 프레임 분석 역시 소수의 활동가와 운동조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엘리트주의의 편향성(elite bias)과 참여하는 개인들 그리고 운동조직들이 가지는 문제의 상황에 대하여 상이한 프레임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현상인 프레임 분쟁(frame disputes)의 문제가 남는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구술사방법론¹²⁹⁾과 담론분석을 결합시킨다면 당대 지배와 저항의 대담 구조, 저항이념의 틀 형성·확장·소멸의 과정, 지배와 저항의 상징 및 의미체계를 밝혀낼 수 있다.

둘째,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을 위해 비교연구방법의 도입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운동 연구들은 비교분석이 결여된 채,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한국적 현상'을 예외 없이 강조한다.¹³⁰⁾ 이것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구체적인 국가별 비교분석 과정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낳았다. 앞으로는 한국의 학생운동이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사례인지, 한국의 학생운동이 여타 다른 나라들의 학생운동과 비교하여 어떠한 전개와 특징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각국 학생운동의 공통성과 특수성 및 차이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고 해명¹³¹⁾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서구의 이론을 무리하게 대비시키거나 짜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일반이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론적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운동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기존자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 및 활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들은 문자로

128) 한홍수·김도중,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24집』, 1993, 50~51쪽.

129) 학생운동사의 발굴과 정리의 과제와 관련하여, 문헌조사에만 안주하지 말고 학생운동 주체들의 체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체험에 대한 구술작업을 통해, 학생운동 주체들의 경험을 발굴·정리하고 보다 폭넓은 학생운동사 정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30) 이런 시각은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과 학생운동을 '운동정치'(movement politics)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은 민주주의가 제도정치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적인 투쟁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의 특수성의 강조도 서구와 다른 제3세계 및 한국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이론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제3세계 민주화 과정에서 제도정치차원 혹은 제도정당을 중심으로 한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131) 송병헌, 위의 글 19쪽.

기록된 것을 포함해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동원전략 연구에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이미 알려진 자료라도 가치를 재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운동의 각종 자료들로 당대 지배와 저항담론의 각축 그리고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정서와 문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침묵되어져오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밝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중가요가 수용자 대중의 선택과 향유에 의해 존재하는 예술이라고 할 때, 민중가요의 흐름은 학생운동의 흐름과 그 안에 살았던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와 정서 및 생활태도를 놀랄 만큼 민감하게 드러내 준다.¹³²⁾ 심지어 동아리 공간의 날적이를 통해서도 당대 학생들이 운동을 어떻게 느끼고 의식했는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하위문화 속에서 학생운동의 목표는 어떠한 긴장을 일으켰는지와 같은 '주체'와 '문화'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세부 시기별 역사자료의 활용을 통해 역사기술적 연구의 인과분석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고, 경험 분석적 연구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즉, 기존 연구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¹³³⁾할 수 있으며 주관적·정파적 해석에서 벗어나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자료를 열심히 찾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과 자료의 상호보완이 요구된다.¹³⁴⁾ 자료 활용과 분석이란 차원을 예로 들면, 학생운동의 역사성과 운동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텍스트의 함축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콘텐츠 분석(contents analysis)과 텍스트구조분석이 결합될 수 있다. 콘텐츠 분석은 역사적으로 의미 생산의 공간을 지배했던 언어 형태가 무엇인지를 도출함으로써 글로 쓰인 자료가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이 다양한 이야기(story)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운동의 다양한 이야기도 하나의 특정한 구조적 요소들의 연쇄나 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텍스트 구조분석은 이러한 구조들에 대한 분석과 전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1980년대 '저항담론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학생운동의 권위주의적 성격, 남성중심주의는 80년대 변혁론 특히 좌파민족주의 이론(주체사상)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 있다. 담론·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은 "언어를 장악하려는 투쟁이며 동시에 언어의 사용을 정의할 권리를 누가 갖는 가에 대한 투쟁"¹³⁵⁾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민족주의는 민족구성원들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자신의 계

132) 1986~1987년 이후 대학의 민중가요는 한편으로 정서가 덜 긴장되고 편안해지는 경향과 함께 통일과 반미 주제의 노래나 북한풍의 노래가 유행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1986년경부터 학생운동에서 계파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고, 대중화 경향이 짙어지는 것, 반이통일운동과 이른바 민족해방계열의 학생운동이 크게 성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영미, 「노래로 본 학생운동의 역사」, 『역사비평』 39호, 1997.

133) 이론에 기초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구상하고 이에 따라 가설을 세운 후, 그 가설을 입증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자료 속에서 필요한 조각을 찾아 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134) 류길재, 「김일성·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 한울, 2003, 48쪽.

135) Sara Mills 저,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72쪽.

급적 당파성, 성 정체성, 종교적 신념을 배제해야 하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지배담론인 동시에 저항담론이다. 민족주의는 통합과 동일성의 이데올로기 담화지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담론분석은 다중을 인지적·해석적 공동체의 일부로 규정하며, 지배와 저항에 대한 구조적 환원이 아닌 해석과 규정을 통해 당대 학생들이 왜 저항했는가, 어떻게 동원되거나 참여했는가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바람직한 자아상을 찾아보기 위하여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학생운동 연구의 한국화를 위한 방법론적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생운동 연구가 타 부문 운동연구에 비해 대단히 정체되어 있으며 '주변적 자기정체성'의 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민주주의의 특징인 '강한 운동의 전통'에 중심에 있던 학생운동의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 연구는 자체이론의 형성 내지 비판적 적용의 수준에조차 근접하지 못하였다. 이는 비단 학생운동 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부침에 영향을 받는 한국 사회과학계의 책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 학계는 단절적 유행에 따라 서구이론의 수입과 폐기를 반복해 왔고 이것이 학생운동 연구의 정체현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런 한국 사회과학계의 지적풍토는 한국 학생운동 연구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본문에서 획기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수준에서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먼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존재양식 또는 생성경로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정립과 방법론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과학의 분과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우리 사회의 독특한 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학과 역사학의 개방적 교류를 통해 미시·거시, 전체·부분, 구조·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국간(cross-national)비교연구를 통해 한국학생운동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간극을 좁히고, 더 나아가 한국의 학생운동 연구를 국제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연계와 선호하는 학생운동 방법론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기점검과 자기성찰 그리고 다른 방법론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의 특성상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사회과학자가 현상의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participant-observer)임을 상기할 때 사회과학자 역시 일종의 편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과 자기성찰이 개방을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직 학생운동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풀어야 할 난제가 많긴 하지만 학생운동 연구는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연구의 저수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연구영역과 미해결 과제를 남겨 놓고 있는 매력적인 연구 분야임에 틀림없다.

5월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그 계기 및 의식성

- 5월 18일과 19일을 중심으로

임종명(전남대 사학과 교수)

I. 서론: 역사적 사건과 의식, 계기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은 이후 남한 역사의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5월항쟁은 대한민국 국가, 예컨대, 신군부가 1980년에 수립한 5공화국의 운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광주항쟁은 신군부의 5공화국 축성 '명분'으로 전용(轉用)되면서 축성의 건설제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5공화국의 '민주적·민족적 정통성' 위기의 근원으로 작동하면서 제5공화국의 붕괴를 촉진했다.¹⁾ 이와 같은 5월항쟁의 영향은 정치라는 영역에서의 단기적인 효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그것은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 전역에 걸쳐 영향을 끼쳐, 1980년대 민족·민주주의의 확산과 사회운동, 및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이고 1980년대의 문화 역시 광주항쟁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광주의 5월항쟁을 한국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historical event)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5월항쟁이 지닌 역사적 의의는 그 동안 5월항쟁에 관한 많은 연구를 낳았고, 이에 따라 5월항쟁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심화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한편으로는 항쟁 자체의 역사적 배경과 진행, 그 결과와 그것의 역사적 영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5월항쟁'을 둘러싼 '사후(事後)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기존연구가 대체로 항쟁의 전국·지역적 역사·구조적 원인과 공시적(共時的)인 정치·경제·사회적 배경과, 항쟁주도자의 의식과 실천, 항쟁의 영향과 의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항쟁자체에 대한, 특히 항쟁의 확산과 대중의 항쟁참가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은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연구는

1) 임종명, <표상(表象)과 권력: 5월광주항쟁의 전용(轉用)>, <<역사학연구>>29(2007), 279쪽.

항쟁의 확산과정과 주민의 참여기제를 추적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논하였다.²⁾ 이러한 연구는 항쟁의 확산구조를 설명하는 데 커다랗게 기여하였지만, 지역민의 항쟁 참여의 동기와 계기, 감정·의식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항쟁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확인되는 5월항쟁을 보다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항쟁참여기제와 계기 및 동기·의식에 대한, 요컨대 대중참여의 동학에 대한 보다 주도한 파악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과 현재 연구성과에 유념하여, 본 연구는 1980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의 항쟁초기 2일간 나타난 광주시민의 항쟁참여 동기와 계기, 태도나 감정·의식 등에 추적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8일과 19일은 학생시위가 대중항쟁으로 전환되는 항쟁의 초기시기이다. 이러한 사실에 유념할 때, 앞의 이들은 항쟁발전의 계기와 의식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 적절한 연구대상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논문은 양일간의 사태진행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지역대중의 항쟁 참여기제에 주목하고, 이속에서 형성되는 대중의 의식과 감정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가 역사구조에 의해 제약되면서도 일종의 “창조적인 집단 행위”인 역사적 사건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창조적인 집단행위가 산출되는 계기와 그러한 집단행위의 주체인 대중의 의식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항쟁참여 계기나 그들 의식성에 주목하는 것은 5월항쟁 자체에 대한 파악, 나아가 5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대중의 항쟁참여계기와 그들 의식성의 해명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항쟁의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고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항쟁확산의 구조와 기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확산과정에 대한 전면적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중참여와 확산과정에 대한 파악은 5월항쟁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를 보다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월항쟁의 특징과 역사성 중 하나가 대중항쟁에 있다면, 대중참여에 대한 연구는 대중항쟁으로서의 5월항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중 참여의 계기와 의식성의 연구는 전국·지역적 역사구조와 공시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국현대사와 광주전남지역 현대사에 있어 5월항쟁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존의 역사·사회구조 중심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충하고, 구조와 주체(agency)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1980년 5월 광주이라는 특정시공간에서 발생했던 5월항쟁의 동학 해명에 기여할 것이다.

2) 최정기,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5·18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을 중심으로>,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5·18기념재단, 2007); <광주민중항쟁의 지역적 확산과정과 주민참여기제>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민중항쟁의 전개 과정>>(5·18기념재단, 2007)

II. 본론: 5월 18일과 19일, 학생시위로부터 대중항쟁으로의 발전

잘 알려져 있듯이, 5월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 시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의 시위는 5월 16일 비상조치와 휴교령이 있을 시 다음 날 교문에 모이기로 한 약속에 따라 나온 학생,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위해 나왔다가 전남대에 진주한 계엄군에 의해 학교출입이 제지당한 학생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³⁾ 처음 백여 명에서 이, 삼백 명으로 늘어난 학생들은 공수부대 중대장의 귀가 종용에도 정문 앞 다리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계엄군 물러가라,” “휴교령 철회하라,” “전투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⁴⁾ 이어서, 공수대원이 “돌격, 앞으로”의 명령과 함께 쇠심이 박힌 살상용 특수근봉으로 학생들을 무차별 난타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투석으로 응수하면서 전대 정문 앞에서 20분간 학생과 공수부대 및 전투경찰과의 투석전이 전개되었다. 바로 이렇게 5월항쟁은 시작되었다.

이러한 항쟁시작의 장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항쟁 시작의 ‘자생성’이다. 많은 연구가 확인하고 있듯이, 18일 전남대학생들의 정문 앞 시위는 “80년 봄” 학생운동의 연장선 상 위에 있다. 이러한 연속성은 정문 앞 학생 중 일부가 ‘비상조치·휴교령 발동 시 익일 정문 앞 집결’이라는 “당초의 약속을 기억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했고, 이들이 계엄군의 귀가 종용과 해산작전에도 정문 앞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여기에서 우리는 항쟁과 “80년 봄”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연결성에서 우리는 항쟁 이전 전남대의 학생운동이, 특히 5월 14, 15, 16일 개최된 ‘민족민주화성회’가 항쟁의 시작과 관련해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볼 수 있다.⁶⁾ 이러한 역사적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문 앞 시위의 자생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전남대 학생운동지도부의 18일 정문 앞 시위와의 관련성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5월 17일 임시국무회의의 계엄령 전국확대 선포와 함께 전남대에 주둔할 특전사 7공수여단 33대대는 새벽 1시 전남대에 도착하자마자 도서관, 총학생회실 등에서 철야를 하던 학생들을 급습하여, 다수의 학생회 간부 및 복학생, 시위 주동 혐의자 등을 검거하였다.⁷⁾ 이어진 합동수사본부(안기부·경찰·보안대, 이하 합

3)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황석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 24~25쪽.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 민중항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V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59쪽.

5)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 기념재단 위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 기념재단 위음, 2007, 이하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8쪽.

6) 5월 14일 도청 앞 ‘민족민주화성회’에서 광주지역 6개대학과 목포지역 2개 대학의 학생들의 결의에는 ‘만약 휴교령이나 휴업령이 내린다면 일차적으로는 학교 교문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2시 정오에 도청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임낙평, <<광주의 낮-박관현>>(사계절, 1987), 103~104쪽.

7) <5.18계엄군의 「작전상황 보고서」>, <<말>>23(1988년5월호), 31쪽; 전대 진주와 학생체포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은 (<구술:이승룡, 고헌운-협사연 조사>,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작전일지(이하 전교사 작전일지)>,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풀빛, 1990), 22쪽); <5.18계엄군의 「작전상황 보고서」>, <<말>>23(1988년5월호), 31쪽;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1988), 18일 2~4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수부)의 학생운동 지도부 사전검속작전으로 전남대 학생운동의 중심인물 중 적지 않은 인물들은 검거되었다.⁸⁾ 이로 말미암아, 전남대 총학생회 지도부가 계엄확대소식을 접하고 일단 피신을 하고 계속 상황을 점검하면서 상호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학생지도부의 상당부는 이미 검거되었으며, 검거되지 않은 지도부와의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다.⁹⁾ 이것은 “학생대중들은[이] 그때까지의 단일화된 운동의 지도부가 증발되어 버리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조직적인 비상 대중동원능력이 상실된 채 방치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했다.¹⁰⁾ 이런 상황에서 최초의 시위를 전개한 학생들 역시 ‘비조직화된’ 일반학생들로, 그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자 등교했다가 계엄군에 의해 출입이 금지당한 것을 “직접적인 동기”로 해서 시위를 했다.¹¹⁾ 이러한 것들은 5월항쟁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비조직적인, 즉 현장에서의 즉자적, 자생적 시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교문에서 시작된 전남대생의 시위는 시내 중심부에서의 시위로 이어진다. 즉 공수부대에 밀린 전남대 학생들은 “여기[*전남대 정문]에서 소모전 하지 말고 시내로 나가자”는 생각에서 “도청에서 집결하자고 하면서 분산”하여 먼저 광주역 앞에서 집결한다.¹²⁾ 10시 55분에(?) 광주역에 모인 학생 2백여 명은 대열을 이루고 공용터미널을 돌아 가톨릭센터로 가면서, ‘김대중의 체포’와 ‘전두환의 쿠데타’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그들의 동참을 촉구했다.¹³⁾ 11시경 금남로에 진출한 학생 500여명은 카톨릭센터 앞에서 연좌하여,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사임’을 요구하며 가두농성을 시작했다.¹⁴⁾ 경찰이 연좌 데모하던 학생에 대해 진압작전을 펼치자, 학생들은 흩어졌다가 현대극장 앞 등에서 일행을 규합하여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때 조선대학교 및 전문대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시위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상기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형

<<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 민중항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VI, 59쪽; <광주진압계엄군의 작전일지>, <달>>26(1988년8월호), 14쪽) 참고.

- 8)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2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8일 3쪽.
- 9) 안중철,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시민군의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5·18 기념재단 위촉,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2007), 331쪽.
- 10)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광주항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30쪽.
- 11) 안중철,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시민군의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331쪽. 안중철은 “당초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학생들”도 “개별적 학생들이었다”고 판단한다. 안중철, <알 논문>, 같은 쪽. ‘직접적 동기’와 관련해서, 다음의 기록은 흥미롭다. 즉, 몇몇 자료들은 전남대 정문, 학교에 들어가려던 교수가 계엄군에 의해 구타당하자 전남대생 2백여 명이 분개해서 투서전을 전개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光州, 悲劇의 10日間>><<신동아>>7월호(1985), 233-240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8일 4쪽) 마찬가지로, 아침의 ‘총알’과 관련해서 다음의 기록도 흥미롭다. 즉 (<구술: 김한중, 현시연 조사>,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3쪽)은 “2백여 명의 학생이 전남대 정문 앞에 모여 있었다. 교내에서 마이크를 통해 ‘다리에 있는 학생에게 알린다. 죽시 귀가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해산시킨다’는 경고방송을 했다. 그 말을 듣고 흥분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그때까지 끔찍도 않고 있던 공수들이 울음을 듣고 질주해 오자 순식간에 흩어졌다.”
- 12) <구술: 김한중, 현시연 조사>,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3쪽; <계엄사 상황일지>,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4쪽.
- 13) <光州 1990년5월...“惡夢의 10일” 秘錄 첫公開>><<경향신문>> 1988년 5월 17일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 민중항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VI, 59쪽.
- 14) <<光州, 悲劇의 10日間>><<신동아>>7월호(1985), 233-240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8일 4쪽.

태로 계속되었다.¹⁵⁾ 이와 같이 시내에서의 학생시위는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학생시위 초기, 무엇보다도 전남대 정문으로부터 광주시내 중심가로의 진출이라는 시위 공간의 이동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지배의 공간이었던 전남도청은 다음에서 보듯이 5·18 이전 시기의 '80년 봄'의 공간적 상징이었다. 즉 도청은, 보다 정확하게는 도청 앞 광장과 분수대는 5월 14, 15, 16일의 '민족민주(화)성회'가 개최된 장소였다. 하지만 "도청 앞"은 단순히 성회가 개최된 장소가 아니었다. 당시 민주화를 열망하던 학생과 시민들에게 있어서 도청은 민족민주화를 위한 '집결지'이자 그 행렬의 '목적지'이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의 다음과 같은 '민족민주대성회'(5월 14일) 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즉, 그는¹⁶⁾

만약 오늘 저녁에 휴교령이나 휴업령이 내려지면 이미 총학생회에서 공고했듯이 교문이나 후문 앞에서 오늘과 같은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12시 정오에 도청 앞에 집결하여 오늘과 같은 시위를 벌일 것을 여러 분과 함께 약속합니다. (강조, 필자)

박관현의 연설은 당시 광주·목포지역 전체의 학생운동지도부의 휴교령·휴업령 대비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문이나 후문 앞에서"의 "시위가 불가능"할 때 학생들의 집결지로, 따라서 목적지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은 '80년 봄' 시기에 도청이라는 '구체적 삶의 장소(place)'가 민주화[와 그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추상화된 장소(space)'로 되었음을 의미한다.¹⁷⁾ 이러한 것에 유념할 때, 학생들이 도청을 목표로 시내로 진출한 것은 5월항쟁이 항쟁 이전 '80년 봄'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동시에 그것은 전남대 정문 앞 시위로 시작된 5월 18일의 시위를 5월광주항쟁의 출발지로 만들었다. "5·18이 도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시민군의 최종 기착지도 도청"이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되듯이, 도청은 5월광주항쟁의 현장이자, 항쟁의 공간적 상징이었다.¹⁹⁾ 이에 유념할 때, 우리는 학생들의 시중심지진출이 전남대 학생시위를 5월항쟁으로 변화시킨 '공간적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시내 중심지진출로 이제 도청을 둘러싼 광주 중심가는 5월항쟁의 중심지가 되면서 항쟁의 틀과 내용을 형성하게 된다.

먼저 시내 중심부로의 공간이동은 광주 학생들의 집결을 가능하게 하면서, 학생시위

15) <光州, 그悲劇의 10日間><<신동아>>7월호(1995), 233~240쪽;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8일 4쪽.

16) 임낙평, <<광주의 낯-박관현>>, 104쪽.

17) '장소'와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주-루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역사서문>>, <<공간과 장소>>(대운, 1995), 8쪽 참고.

18) 하지만 도청이 5월항쟁 이전의 '80년 봄'과 5월항쟁을 상징적으로 연결한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 단절성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즉 '80년 봄'의 도청에는 학생지도부가 있었지만, 5월항쟁의 도청에는 이전의 학생지도부가 없었던 것이다.

19) 김병인, <5·18과 죽을 그리고 학생운동과 정치적 복권> 5·18 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22쪽 주 33.

대열의 팽창과 시위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당시 금남로 등의 시중심부에는 ‘휴업령이나 휴교령이 발동될 때 학교 교문 앞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며 도청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한 5월 16일의 광주·지역 학생대표들의 결의에 따라 여러 그룹의 시위대들이 산재해 있었다. 예컨대, 카톨릭센터 앞 이외에도 “조흥은행 앞에는 간밤의 학생연행소식과 함께 ‘오늘 도청 앞에서 데모한다. 모이자!’는 말이 전해 퍼지면서 데모대가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남로를 중심으로 동구 쪽에서도 비슷한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다.²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분산적으로 각각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학생들은 서로 만나 합류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충장로 쪽 시위대와 동구 쪽 시위대가 길에서 마주쳐 8백 명 이상”의 시위대열을 형성하게 되었다.²¹⁾ 분산된 시위대열의 합류는 “학생들의 사기”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시위를 지역적으로 확산시켰다. 즉, 경찰의 진압 작전 앞에서, 학생들은 “기동성이 큰 소규모의 집단으로 찢어지면서,” 재집결을 반복하면서 “충장로, 계림동, 동산, 산수 등”으로 시위를 지역적으로 확산시키며 충장로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투쟁”을 계속했다.²²⁾ 이와 같이 시위의 공간 이동은 시위규모의 팽창과 시위의 지역적 확산을 낳았다.

5월항쟁의 역사적 특징이 대중항쟁에 있다면, 공간의 이동은 대중항쟁으로서 5월항쟁을 탄생시키게 된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시내로 진출하는 동안 전남대 학생들은 전두환의 쿠데타와 김대중의 체포소식을 전하면서 광주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것은 이전의 학생 시위와 다른 양상이었다. ‘80년 5월’ 동안, 예컨대 5월 16일의 ‘민족민주화 대성회’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교외 시위에 광주시민들의 시위대열에로의 합류를 만류하였다. 즉, 학생들은 “시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시민들의 대열 참여를 만류하였고, 또한 시민들 역시 민주화대성회에 관심을 갖고 시내 금남로, 도청 앞 분수대 등에 접근하고, 또 시위대열에 합성이나 박수 등으로 격려하기는 했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직접 시위대열에 참여하지는 않았다.²³⁾ 이러한 시위풍경은 5월 18일 오전 변화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학생들이 시민들의 시위대 동참을 호소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시위의 변화와 향후 시위 양상의 방향이 확인되지만, 학생들이 광주역으로부터 시내로 진출하는 동안에는 시민대중이 직접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중항쟁이라는 5월항쟁의 기본적 특성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시위학생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시민들에게는 아직 ‘생경’한 것으로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2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8일4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運動>>VI권, 60쪽. 앞의 <<일지>>는 ‘조흥은행 앞에 아침 8시에 시위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5월 18일 항쟁의 개시시간과 장소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다. 따라서 앞의 기사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확인이 요구된다.

2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알 책>>, 60쪽.

22) <<未公開 資料·朝鮮日報 取材日誌>>, <<월간조선>>7월호(1985), 412~414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알 책>>, 60쪽; <<전교사 작전일지>>, <<개업사 상황일지>>,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4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8일 6쪽.

23) 김영태,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79~80쪽.

것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당시 '전두환 물러가라' 혹은 '김대중 석방하라'라는 구호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단히 의아"해 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전두환은 그리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고, 김대중의 연행소식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⁴⁾ 이러한 이슈(issue)의 대중적 형상력(形象力) 부족이 학생들의 시위대열에로의 대중 참여를 지체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당시 학생 시위가 시내진출을 목표로 이동하는 '대열'이기도 했다는 점 역시 대중의 시위참여를 막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신속하게 시내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이동중인' 시위대열은 학생들의 동참추구와 "대단히 의아"한 이슈만으로는 연도의 시민대중의 동참을 이끌어 낼만한 시공간적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²⁵⁾

하지만, 광주시내로의 학생 진출이라는 공간이동은 시민대중의 동참을 가능하게 할 시공간을 창출하면서, 대중항쟁이라는 5월항쟁을 만들어낸다. 먼저 시민대중의 동향과 관련해서 앞에서 소개했던 18일 오전 학생들이 시내 금남로 시위의 풍경을 좀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경찰이 연좌 시위하던 학생들을 해산시키면서 학생들을 체포하자, 이때 연변의 시민들이 야유를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²⁶⁾ 이러한 것은 학생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시민들의 '보호의식'의 표현이었다. 즉, 이미 '80년 봄'의 시기에 광주시민은 민주화를 위한 사회단체와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예컨대 광주시민은 일찍이 1979년 11월 29일 민주청년인권협의회·광주기독교연합회 등 6개 단체가 광주 YWCA에서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거 분쇄 시민대회'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대회 이후 벌어진 가두시위가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였을 때 동조의 박수를 보냈을 뿐 아니라 직접 시위대열에 참여했다.²⁷⁾ 또 가까이는 5월 14, 15, 16일 민족민주화 회 기간 동안 일반 광주시민들이 비록 학생들의 가두시위대열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함성, 박수" 등을 통해 그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보여주고, 실제로 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성회에는 일부 시민들이 참여했었다.²⁸⁾ 그리고 16일의 '민족민주화성회를 위한 햇불대회'에서 시민들은 직접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대열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대열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양쪽 보도를 걸으면서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그들의 동의와 학생들에 대한 자신의 연대감을 표현했다.²⁹⁾

24) 김병인, <앞 글>, 523쪽 주 35.

25) 본문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이 광주역에 집결한 시간은 10시 55분경이고, 금남로에 시위를 한 것은 11시경이라 한다. 그렇다 한다면 학생들은 광주역에서 금남로까지의 3km의 길을 10분 내외에 '주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연두의 시민들이 학생 시위대열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26) <光州, 그悲劇의 10日間><<신동아>>7월호(1985), 233~240쪽;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8일 4쪽.

27) 村常南·山本剛士 編역, <<한국현대군정사>> (삼민사, 1987), 315쪽. 시민대회는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반대·유신잔당 처벌·민주세력 거국내각 구성 등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37,00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37,000명의 참석 인원에는 주체단체 회원 이외에도 적지 않은 일반시민이 참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당시 민주화대성회와 학생시위대열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호의적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29)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황석영 기록, <<앞 책>>, 28쪽.

민주화운동에 대한 동의는 광주시민, 넓게는 호남지역민의 역사와 존재, 및 그들의 의식과 당시 정치현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호남지역민들은 한국 근대사,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개발경제 하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고, 또 이러한 차별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자신들과 “고난에 찬 정치적 역경, 그가 받았던 탄압, 수난, 소외의 기록”을 가진 호남출신의 정치가 김대중을 동일시하면서, 그의 집권을 열망하였다. 바로 이러한 열망이 민주화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동의를 낳으면서, ‘계엄해제와 정치일정의 단축, 이원집정부제도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학생시위에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³⁰⁾ 이와 같은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3일간의 민주화 시위와 집회에 호의적 태도를 갖게 했고, 나아가 거기에 일부 참여하게 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서로 간에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³¹⁾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난 ‘80년 봄’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그들로 하여금 연행당하는 학생들에게 동정을 표하고, 학생을 체포한 경찰에게 야유를 보내도록 하였다. 나아가 그것들은 시민들을 다음과 같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게 하였고, 또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했다. 즉 “시위대는 맨 선두에 지휘자격의 사람이 앞장서고, 그 뒤엔 태극기를 치켜든 사람이 서고, 그 뒤에 스크립을 짠 학생 전위대가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신속하게 시위대열에 합세”하였다.³²⁾ 뿐만 아니라, 시위대열에 합세한 시민들은, 예컨대 박철은 “충장로파출소 앞 노상에서 학생시위에 가담,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과도정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산동 노동청 앞까지 시위하다가 노동청 앞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들과 빈병을 [동명동] 파출소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는 등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게 된다.³³⁾(뒤에서 보듯이, 학생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동의에 기초한 것만은 아니었고, 학생에 대한 ‘보호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만이 시민들을 학생들의 시위에 호의적 관심과 태도를 갖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최정운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민주화라는 이슈는 “5·18을 촉발시킨 학생시위의 직접적 요구였고, 다시 해방 광주에서 중요한 언술의 주제로 떠올랐지만 사건 전체의 일차적인 원인이나 동기로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³⁴⁾ 다시 말해서,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동의는 5월항쟁에의 대중참여의 환경이었지, 항쟁발발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시민들이 초기 시위에 ‘연루’되게 한 것은 학생들이 시내로 옮긴 공간성의 효과이기도 하다. 즉, 학생들의 시위가 광주시민들이 집

30) 김준, <196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63쪽.

31) 김준, <알 논문>, 57쪽.

3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60년대 민주화운동>>, 60쪽.

33) <공소장>,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5쪽.

34)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244쪽. 최정운은 “5·18담론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23일 오후 도심 앞 광장에서 있었던 시민결기대회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최정운, <알 논문> 같은 쪽 주 17.

중되는 시 중심부로 이동되어 졌다는 것, 이러한 시내 중심부에서 학생들이 일정 시간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형태의 연좌시위를 감행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을 시위에 '연루'되고 '경찰 야유'와 같은 소극적이고 초보적 형태이기는 하나 시위에 '개입'하게 했다. 이러한 공간성의 효과는 시내 중심부의 다중집중성(多衆集中性)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시위 해산에도 불구하고 시위학생의 이합집산과 재결합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게 된 데에서도 나타났다.³⁵⁾ 이러한 공간적 효과와 학생들의 연행을 계기로 광주시민은 경찰에 대한 야유라는 형식으로 시위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5월 18일 시작된 시위가 이제 단순히 학생들만의 것이 아닌, 광주시민들이 '연루'된 시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에 유념할 때 우리는 5월 18일 초기시위의 성격 변화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시위 및 학생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더하여 시위 공간의 이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³⁶⁾

이와 같이 공간성의 효과가 5월 18일 오후의 시위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계엄군이 직접 진압하면서 나타나는 시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계엄군이 직접 시위를 진압하기 이전에,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격화되었다. 즉,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시위대는 경찰의 지프차나 가스차에 투석하고, 또 파출소를 공격·파괴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생회관 앞에서 점심 먹는 전경을 기습하여 "허겁지겁 도청 쪽으로 도망"치게 만들고, "그들이 버리고 간...폐포프차를 뒤집어놓고 기름통에 불을 붙여 차를 전소시키고, 심지어 산수동 5거리에서는 경찰수송버스에 타고 있던 경찰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기까지 했다.³⁷⁾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찰의 진압 작전으로 인해 시위대가 "2, 30명 단위로 분열되면서 점차 수그러들"면서, 시위의 상황은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의 "시위 수준을 넘지는 않고" 있었다.³⁸⁾ 하지만 신군부세력에게는 "저항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서울 동국대 주둔의 11특전여단을 광주로 이전 배치했을 뿐 아니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배치된 7특전여단의 33대대와 35대대를 시위진압에 투입하였다.³⁹⁾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공수부대의 시위진압 투입에 대해서 이

35) 예컨대 연좌 데모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흩어졌다가 현대극장 앞에서 다시 일행을 규합해 시위를 계속한다. <光州, 그悲劇의 10日間><<신동아>>7월호(1985), 233~240쪽;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8일4쪽 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당시를 "학생들은 집요하게 흩어졌다 모이면서 일진일퇴 거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VI권, 59쪽.

36) 시민들의 태도는, 좁게 한정하면, '80년 봄' 기간에 '지속'된 것으로, '5월 18일 오전 시위'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기초치운, 일종의 '상수(常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상수로만 '오전 시위'에의 시민들의 '연루'를 설명할 수 없다 한다면, '시민들의 연루와 개입'과 관련하여 공간성의 계기적 효과는 보다 심각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3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 민중항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VI, 60쪽; <시청 상황일지>,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4쪽; <光州 1980년5월... "惡夢의 10일" 秘錄 첫公開>> <<경향신문>> 1988년 5월 17일자; <구술: 이광호, 현사연 조사>,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4~25쪽;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앞 책>>, 18일 7쪽.

38) 김영태,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국민대 박사논문, 2004), 93쪽.

39) 정해구, <군작전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436쪽.

야기할 필요가 있다. 항쟁관련 기록을 보면, 우리는 경찰의 진압노력 실패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도청 앞과 금남로 일대 1천5백여 명, 충장로 일대 1천6백여 명의 군중이 데모를 시작. 데모 군중들이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과 콜라, 사이다 병을 투척. 경찰은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사용했으나 갈수록 과격해지는 데모대의 진압에는 실패”와 같이 경찰의 진압불능을 보여주는 기록을 만날 수 있다.⁴⁰⁾ 하지만, 김영태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계엄사령부와 제2군사령부의 당시 상황일지 등은 “시위현장을 급박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⁴¹⁾ 반대로, 계엄확대와 체포작전에서 피신하면서도 시위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학생회지도부의 동향도 유사한 것을 보여준다. 즉, 학생회지도부는 18일 오후까지는 계속 은신처를 옮기면서 시위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오후 4시경 마지막 시위대가 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도 끝장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광주를 빠져 나갔다.⁴²⁾ 또 공수부대의 증파결과와 광주 현지 공수부대의 시위진압 투입결정의 ‘시간’도 대단히 시사적이다. 즉 공수부대의 증파결정이 18일 점심 직후에, 또 1시 30분경 7특전여단의 시위진압 투입지시가 2군사령부 진중체에 의해 내려지고, ‘현장지휘관의 상이한 판단과 건의’ 속에서 실제 집행된다.⁴³⁾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정과, 앞서와 같은 계엄군과 학생회지도부의 판단은 당시 시위상황에 대해서, 또 계엄군의 진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즉 당시 시위상황이 경찰의 통제불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공수부대의 시위진압 투입이 ‘시위진압을 위한 순(純)기술적 필요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수부대의 투입이 ‘기술적 필요성 이외의 다른 것’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주목해서, 일부 연구는 5월항쟁을 ‘신군부의 집권음모에 따라 계획된 살상작전에 의해 촉발되고 또 그 음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신군부 음모론’을 주장한다.⁴⁴⁾ 하지만, 5월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신군부집단의 수미일관한 책략(plot)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는 군부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다면, 역사적 사건은 우발적인(contingent) 사건의 연쇄반응(chain reaction)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이해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무엇’은 반드시 단선(單線)적인 음모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⁴⁵⁾ 오히려 ‘그 무엇’은 다양한 의도와 계기 등이 작용하는 역사

40) <5.18계엄군의 「작전상황 보고서」 >, <<앞>>23(1988년5월호), 31쪽. 경찰의 진압노력 실패와 진압능력 부재를 이야기하는 자료는 시위대의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표상하고, 또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정당화하는 ‘정치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실패와 능력 부재’ 관련 자료들은 엄밀한 사료비판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통제불능의 폭력 강조와 계엄군의 진압작전 정당화에 대해서는, 임종명, <표상(表象)과 권력: 5월광주항쟁의 전용(轉用)>, 303, 313쪽 참고.

41) 김영태, <앞 논문>, 93쪽.

42) 임낙평, <<앞 책>>, 119쪽.

43) 이때도 현장의 31사단 사단장 정용은 경찰력만으로는 시위진압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2군사령부로부터의 재차 투입지시와 독촉명령이 있거되면서, 실제 현장의 2개대대 공수부대의 투입 지시는 3시 전후에 실행되었다. 정해구, <앞 논문>, 436쪽. 이 이야기는 공수부대 투입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자, 동시에 ‘시위상황이나 경찰의 시위진압능력’에 대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현장지휘관 역시 시위가 경찰의 통제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4) 김영태, <앞 논문>.

45) ‘군보음모론’의 인식론적 기초의 하나가 본문에서 언급한 ‘권력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신화에 있다면, 다른 하나는

적 사건의 실재를 이해하는 실마리로 작용된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그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자. ‘그 무엇’과 관련해서 정해구는 “광주에서의 저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김대중 구속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저항 사실이 신군부에게 “중요”했다고 설명한다.⁴⁶⁾ 하지만, 앞의 “가능성”의 내포와 함께, 17일 발표된 계엄령 전국확대와 공수부대의 실제 배치라는 상황에서는 저항 발생 사실 자체가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17일의 계엄령 전국확대는, 이규현문공부장관에 따르면,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사태를 감안할 때 전국일원에 비상사태 하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선포된 것이다.⁴⁷⁾ 이에 따라 계엄령 사령관 이회성 명의의 포고령 10호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포고하였다.⁴⁸⁾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최규하대통령의 <특별성명>은 다음과 식명(釋明)한다.⁴⁹⁾

작금의 국제정세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사회혼란을 이용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책동이 날로 격증되고 우리 사회 혼란 교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집단의 계속적인 침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으며…엄연한 계엄 하에서 학원소요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현실정치문제에 깊이 간여하면서 교외소요로 과격 폭력화되어 감으로써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방 및 치안력의 투입을 강요하는 사태로 발전되어 막대한 국력의 소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우리의 국기마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를 보호하고 3천7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안정 속에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현 지역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전환선포하고 국가의 기강과 사회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소 길게 인용된 <특별성명>은 전국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논리뿐만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 지배엘리트의 국내외 정세인식과 그들의 인식들을 잘 보여준다. 즉, 앞의 인용문은 당시 지배엘리트들이 국민생존권 수호와 사회 안정, 또

역사를 ‘인과의 단선적 발전과정’으로서 해석하는 태도에 있을 것이다. 전지와 후지에 대한 비판은 각각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238~243쪽; Prasenjit Du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7~83 참고.

46) 정해구, <군직전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436쪽.

47) <정치활동 일체금지>, <<조선일보>> 1980년 5월 18일자.

48) <김종필·김대중씨등 26명 연행>, <<동아일보>> 1980년 5월 19일자.

49) <사회안정 위해 단안>, <<동아일보>> 1980년 5월 19일자.

국가기강과 국가존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내의 정세를 해석하면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의 경거망동,” 특히 학원소요와 교외소요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4월 30일에 개최된 계엄지휘관회는 학원 및 일부 노조의 난동사태가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강조, 필자)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계엄 하에서 학원소요가…교외소요로 과격 폭력화되어 감”(강조, 필자)이라는 구절에서 사태진행에 대한 지배엘리트의 ‘당혹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당혹감’과 지배엘리트는 다음과 같이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즉, <<조선일보>>는 자신의 <(사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서> 결론부분에서 “정치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능은 국민적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만 비로소 그 권위가 보장되며 그 기능의 정상화가 확보된다. 이 국민적 여망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시국은 최단시일 안에 조속히 수습돼야 하며, 그 길만이 백척간두에 선 고난 많은 이 민족의 통환을 풀 수 있는 이정표와 생명력의 원천과 민족사의 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⁵⁰⁾ 이것은 <백척간두>라는 제목이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조선일보’의, 나아가 당시 지배엘리트의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조선일보’라는 언론권력은 정치엘리트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집권 신군부에게 ‘최단시일 안에 조속히 수습’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래야만 ‘국민적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또 국가의 권위가 보장되고 그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제언’한다.⁵¹⁾ 이러한 주문과 제언은 신군부세력에게는 일종의 기회이자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만일 신군부세력이 “국민적 여망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그들은 “국민적 믿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적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5월 18일 광주에서, 그것도 시내 한 복판에서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엄연한 계엄 하에서” 그것도 “국가의 기강과 사회 안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전국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에-전국계엄은 17일 24시, 달리 표현하면 18일 0시 발포되어진 것이다- “교외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 앞에서, 위기이자 기회의 기로에 서서 전국계엄을 통해 자신의 전면 등장을 선언한 신군부는 광주시내의 시위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절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절박감은 계엄군 지휘부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즉,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장군은 육군전투병과 교육사령관 윤홍정장군에게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엄확대조치에도 이렇게 소요가 계속된다면 가만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계엄군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초기에 군중들의

50) <(사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서>, <<조선일보>> 1980년 5월 20일자.

51) 당시 <<조선일보>>는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고유 업무로 삼는 언론기관”이기보다는 “파시즘 체제의 신봉자”로서 “군부세력의 권력장악을 부추기고, 유신체제와 전두환 체제를 지지”하였다. (최영태, <1980년도의 기사를 통해서 본 조선일보의 정체성>, <<민주주의와 인권>>4-2(5·18연구소, 2004), 99~100쪽.)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백척간두에 서서>는 군부가 개입하여 ‘80년 봄’으로 위기에 빠진 지배체제를 백척간두에서 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심리를 가라 앉혀야 옳지 않겠습니까?”(강조, 필자)라고 주장한다. 다른 자리에서 정호용이 앞의 맥락의 주장을 펼치자, 보안사령관 전두환장군도 “20사단도 함께 진입시키는 게 좋겠어.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나서면 그만큼 이쪽의 시위가 위력적일테니까”라고 동의를 표한다.⁵²⁾ 여기에서, 특히 “계엄확대조치에도 이렇게 소요가 계속된다면…”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앞의 최규하대통령의 <특별성명> 중의 “엄연한 계엄 하에서 학원소요가…”라는 구절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정호용장군이 ‘계엄 하에서도 광주에서 학원소요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당혹해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뿐만 아니라, ‘초기에 계엄군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초기에 군중들의 심리를 가라 앉혀야 한다”는 절박감, 또는 ‘위력 시위’를 통해 서라도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당시 신군부의 강박관념에 의한 ‘과민반응’이 시위상황이나 경찰의 진압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공수부대를 증파하고 시위진압에 투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공수부대의 시위진압 투입과 함께, “양민학살”은 시작되었고, 5월항쟁 또한 시작되었다. 공수부대의 폭력적 진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기술이 있음으로 여기서는 잔혹한 진압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잘 알려져 있듯이, 공수부대 33대대와 35대대는 오후 3시부터 경찰과 합동작전으로 시내 진압작전을 개시하면서, 시위군중을 해산하고 일거에 대규모 인원을 체포한다.⁵³⁾ 하지만 이러한 신속한 진압은, 광주사람들이 1980년 5월 18일을 ‘피의 일요일’이라 부를 정도로, ‘잔인하고 무차별한 폭력’을 동원한 것이었다.⁵⁴⁾ 즉, 그것은 다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시위참여 여부를 불문한 무차별한 진압이었다.⁵⁵⁾

[18일 오후 4시 정각] 대열을 따라온 초록색 1.5톤급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금속성으로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 여러분,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빨리 돌아가십시오.” 학생들의 시위광경과 경찰의 진압과정을 인도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군인대열과 그 대열로부터 1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시위진압 경찰들의 중간쯤에서 특별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여 삼삼오오 짝지어 서성이기도 했고 시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스피커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방송이 나온지 1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짧은 순간을 두고 엄청난 명령이 뒤따라 튀어 나왔다.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전원 체포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돌변해 버렸다. 누구라

52) <5.18계엄군의 「작전상황 보고서」>, <<말>>23(1989년5월호), 32쪽.

53) <광주진입계엄군의 작전일지>, <<말>>26, 15쪽. 예컨대, 이때 금남로 좌우측 총장로 등을 차단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던 제35대대는 데모군중 273명을 체포, 연행하였고, 한국은행 쪽을 담당했던 경찰은 206명의 시위군중을 체포, 연행한다. <5.18계엄군의 「작전상황 보고서」>, <<말>>23, 23쪽.

54) 최정기,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5·18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을 중심으로>, 258~260쪽; <5·18과 양민학살>,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5)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사계절, 1988), 13-15쪽.

가릴 것도 없이 사람들을 무조건 잡으려는 공수부대 군인들의 살벌한 군화발소리와 겁에 질려 황급히 도망가려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뒤범벅이 되어버렸던 것이었다. ...군인들은 어느새 들고 있던 방망이 대신 착검한 소총을 겨누어 잡고 '사람'사냥을 시작했다. 시위했던 학생들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꿩다고 보여 지는 사람이면 보는 대로 두들겨 패고 잡아끌었다.

이것은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전원 체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시위 현장 주위에서 호기심과 불안감에서 시위광경을 구경하는 이나 “시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고 있는” 행인까지, 그 모두를 대상으로 “누구나 가릴 것도 없이 사람들을 무조건 잡으려는 공수부대 군인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수부대의 진압은 무차별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양민학살이라 이름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그 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⁵⁶⁾

[광주]터미널 뒤편에서 쫓기던 학생이 잡히자 무릎을 꿇으며 살려 달라고 빤. 옆의 할아버지가 몸으로 학생을 가리며 봐 달라고 사정하자 곧바로 내리쳐 할아버지는 피를 토하고 쓰러짐. 이를 본 학생이 돌을 집어 들자 공수대원은 곧바로 후려치고 대검으로 등을 찌시고도 다리를 잡아 길거리로 끌고 감.

여기서 우리는 시위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심지어 할아버지도 곧바로 내리치는 시위참여 무차별한 폭력을, 또 대검으로 “등을 찌시고도 다리를 잡아 길거리로 끌고” 가는 무자비한 폭력을 목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수부대의 무차별하고 무자비한 폭력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후 5월항쟁의 전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공수부대는 진압과정에서 폭력을 공공연하게, 그것도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행사했다. 광주시내 중심가에서 공수부대의 폭력은 당시 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보고 있는 속에서, 아니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은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행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공수부대의 폭력은 시민들이 바로 보고 있는 대로상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폭력이 대로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에서 보듯이 사적인 영역으로도 민가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자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폭력행사장의 확대는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 황급히 도망가려고” “급한 대로 인근 점포와 주택을 가리지 않고 우루루 피신”하면서, 요컨대 “잰사게 달아나는 시민들”을 공수부대가 쫓아가면서 이루어진다.⁵⁷⁾ 즉, “15시 45분, 금남로에서

5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알 책>> 63쪽. 많은 폭력사례가 5월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 일일이 사례를 예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다. 여기서는 서술상의 필요에서 두 가지 사례만을 예시하도록 한다.

군인들에게 쫓긴 대학생들이 북동 쪽 민가에 잠입하자 군인들이 가정집을 수색하여 대학생으로 보이는 장발청년과 여자를 마구 때리고 차고 대검으로 찌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후 차에 실어 연행해 감.”⁵⁸⁾ 이것은 폭력이 이제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구별 없이 무차별하게 자행되었음을 증언하는 사례였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의 행사 광경이 금남로나 충장로 등 시내 중심부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떨어진 “산수동 5거리”나 “풍향동”에서, 그것도 “주태가”에서도 목격된다.⁵⁹⁾ 이것은 이제 폭력의 행사가 공간적으로 시내중심부에서 점차 시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여기서 살펴 본 것은 시내중심가라는 공적 공간으로의 학생시위의 공간이동 이후 그를 진압하는 공수대의 폭력이 사적인 공간으로, 다시 시 주변부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폭력행사는 단순히 폭행의 피해자와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폭력이 물리적 행위인 한, 그것은 제삼자에게도 “분명하게 감각될 수 있”는, 즉 사람의 눈이나 코, 손으로 쉽게 포착되고 확인될 수 있다.⁶⁰⁾ 폭력의 이러한 속성은 폭력행위와 그 결과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폭력현장에 있던 제삼자에게 분명히 감각되고 또 인식되도록 한다. 이것은 5월 18일의 공수부대의 폭력행사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광주 시중심부, 나아가 주변부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집안의 가정주부에게도 공수부대의 폭력을 분명히 감각·인식되도록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폭력의 감각·인식이 현장성에 의존하는 한, 공수부대의 폭력을 인식한 광주 시민은 지역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 ‘유언비어’(流言蜚語)나 유인물은 공수부대 폭력의 인지범위의 지역적 제한성을 해소시켰다.⁶¹⁾ 당시 극단 ‘광대’의 단원들은 아침 전남대 정문에서의 충돌을 본 후 바로 유인물을 제작하였다.⁶²⁾ 즉, 그들은 공연연습을 중단하고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일부는 가두시위에 참가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계엄령 확대와 공수부대의 광주 진입에 관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산수동·학동 등의 주태가에 배포하였다.⁶³⁾ 하지만 유인물을 통한 보다 본격적인 공수부대 폭력성의 전달은 시내에서의 계엄군의 폭력성이 시위된 후 나타난다. 즉,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금남로와 계림동에서 목격된 후, 윤상원 등은 ‘광주시민민주투쟁회’ 이름으로 된 ‘호소문’이 19일 새벽 양림동·사동·구동·월산동·방림동·학동 일대에 배포한다.⁶⁴⁾ 이제 금남로와 계림동에서의 공수부대 폭력성은 유인물을 통해 양림동과

57)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14-15쪽.

58)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알 책>>, 18일자 10쪽.

59)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알 책>>, 18일자 14쪽; 윤재길 엮음 이문구 펴냄, <<직전명령- 화려한 휴가>> (실천문화사, 1987), 95-96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 민중항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VI, 64쪽.

60) David Riches, “The Phenomenon of Violence,” David Riches, ed, *The Anthropology of Violence* (Oxford: Basil Blackwell, 1996), 11.

61) 본문 이하에서 사용되는 ‘유언비어’라는 어구는 자구 그대로의 의미, 즉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사용되는 유언비어는 ‘허구의 정보’라는 언외의 뜻을 함축하지 않는다.

62) 최정훈,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245쪽 주 21.

63) <천사연 조사 종합>,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3쪽.

같은 광주에 다른 지역에 전달되고, 그곳의 사람들도 폭력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지만, 유인물이 비록 문자의 형태로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종이 위에 분명히 새겨 독자에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보안문제 등으로 그 배포량이 따라서 배포범위가 제한되면서 독자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폭력성 전달의 지역적 제한성은 여전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나 '유언비어'는 전언(傳言)이라는 형태로 인지범위의 지역적 제한성을 신속하게 타파하면서, 대부분의 광주시민이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당시, 귀가한 시민들은 "친척과 일가에 전화를 걸어 그 집의 안부를 물으며 이런 저런 일을 전하고 또 모르고 있던 사실을 전해받기도" 했다.⁶⁵⁾ 이것은 전화와 이를 통한 전언이 공수부대 폭력성의 인지범위를 확장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언비어'는 전화기를 옆에 둘 수 없는 계층까지 포함해서,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문자 그대로 신속하게 전시에 퍼져 나가게 했다. 예컨대, 대부분의 광주시민들은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운운하는 '유언비어'를 18일 오후부터 19일 오후를 전후로 하여, 즉 24시간 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들었다.⁶⁶⁾ 이것은 당시 유언비어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면서 공수부대 폭력성의 인식범위를 신속하게 또 광범위하게 확장시키면서 광주시민 거의 전체에게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유인물과 전화, 유언비어에 힘입어, 금남로 등의 시내 중심가나 몇몇 인근지역의 국지적 사태였던 18일의 공수부대 폭력행사 사실은 밤사이 거의 전체의 광주시민들에게 노출되게 되었고, 역으로 그들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광주시민의 공수부대 폭력성 인지는 아직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통한 추체험에 기초한 것이었다. 공수부대 폭력성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인 실체험은 아직 19일을 기다려야 했다.

휴일이었던 전날의 18일과는 달리, 19일은 노동일인 월요일이었다. 19일이 노동일이라는 것은 "피의 일요일" 때보다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더 많은 시민에게 노출되고 또 그들에 의해 목격될 수 있음을 의미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즉, 월요일 아침, 전날의 여파로 시내 중심가의 상가는 대부분 철시했지만, 초·중·고교가 정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또 관공서·기업체·공장 등도 정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⁶⁷⁾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전날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알고자 하는-가두로 나오게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밤 9시부터 실시된 통행금지시간 연장으로 더 오랜 시간 진상을 보지 못했던-아침부터 거리의 모습을 보게 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그들은 경찰서나 파출소는 물론 도로교차지점 등 시가지 요소요소에 경찰과 함께 지난밤에 배치된 군인의, 즉 폭력 집행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듣고 목격했던 "피의 일요일"을

64) 김영태, <앞 논문>, 240쪽; <구술> 김태중, 현시연 조사, 韓國現代史史料研究所,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23쪽;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앞 책>>, 18일자 14쪽. 이때 같이 '조선대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민주시민들이어'가 나타난다.

65) 김영태, <앞 논문>, 112쪽.

66)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246, 247 쪽 주 25.

6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앞 책>>, 64쪽.

기억해야 했고, 나아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환기해야만 했다.⁶⁸⁾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오전 10시부터 금남로에서 어제의 충격과 분노의 공감대를 가진 3, 4천 명 군중의 시위 모습과 이어 곤봉과 대검을 들고 “잔인한 살기로 군중들을 덮”쳐 “젊은 사람이면 남녀 불문하고 곤봉으로 난타질하여 길바닥으로 끌고 나”오고, “대항이라도 하면 즉시 대검으로 찌”시는 공수부대의 모습을 보아야 했다.⁶⁹⁾ 이렇듯이 19일, 노동일의 개시와 함께, 더 많은 시민이 폭력에 노출되면서 그들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그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대중의 5월항쟁 참가를 촉진시키면서, 5월항쟁을 만들어 간다. 19일 오전부터 이미 시위대의 중심세력은 학생에서 일반 시민대중으로 옮겨지고 있었다.⁷⁰⁾ 또한 시간의 경과는, 공수부대의 희망이나 예상과는 달리, 더 많은 시민을 시민 대열에 끌어들이었다. 즉, 오전의 폭력적 진압으로 시위가 소강상태로 들어가자, 금남로의 공수부대는 점심식사를 위해 조선대 캠퍼스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空間), 또는 ‘빈 사이’는 “공포보다는 연대감과 증오로 뭉쳐”진 광주시민의 카톨릭 센터 앞 재 집결을 허용했고, 여기에는 오전에는 볼 수 없었던 40대 이상의 중년층과 부녀자들도 합세하였다. 나아가, 후미의 아주머니, 아가씨들은 보도블록을 깨어 전위로 날라 전위와 후위의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조직적인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대형화분·전화박스·교통철책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또 불붙은 승용차나 기름통을 진압경찰에게 밀어붙인 사례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시민들은 진압군의 폭력진압에 대해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심지어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세로의 전환 앞에서 군중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19일 오후의 모습은 18일의 학생시위가 대중항쟁의 모습으로 전환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것은 19일 오후에 5월항쟁의 기본적 틀이 형성되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¹⁾

이러한 대중항쟁으로의 변화는 다양한 계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 계기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시위의 공간성 문제이다. 광주시 지역정치·경제 등의 중심지인 금남로 등 시중심부에서의 시위발생은 주위 관공서·기업체 등의 다수 직장인들에게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쉽게 노출되게 하면서, 그들은 폭력성의 목격자로 만들었다. 나아가 몇몇 수강생들이 밖을 내다보자 공수부대원들이 학원에 난입하여 수강생들을 “무차별 난타”한 금남로의 무등고시학원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폭력 현장 주위의 사람들 역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성의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노동일의 폭력행사는 그 폭력성이 다수 대중에게 노출되고, 또 그들을 폭력의 희생자로 만들었다. 폭력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은 단순히 현장

68) 18일 야간의 공수부대의 시내 배치에 대해서는 <광주진압계엄군의 작전일지>, <<말>>26, 15쪽 참고.

6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말 책>>, 64쪽.

7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말 책>>, 64쪽.

7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말 책>>, 64쪽; 김준, <말 논문>, 59쪽.

에 있던 시민만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로, 이들은 잠재적 희생자가 되었다. (광주시민의 잠재적 희생자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시공간적 계기와 함께, 공수부대의 폭력 그 자체는 ‘학생들의 교외시위’를 ‘대중들이 시위와 저항의 주체로 참여’하는 5월항쟁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폭력과 5월항쟁의 연관성 때문에, 5월항쟁은 “국가권력의 대항자인 군인에 의해 민간인 테러 및 살상이 발생한 사건과 대중에 의해 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한 사건이 결합”라고 설명된다.⁷²⁾ 이는 5월항쟁이 공수부대의 “양민학살”과 불가분리의 “역사적 사건”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⁷³⁾ 하지만 폭력 자체는 피해자와 주변의 제삼자의 공포를 불러 일으키면서 그들의 수동성을 강화시켜 저항의지를 빼앗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공수부대의 폭력이 광주시민의 저항을 낳기까지에는 다양한 계기와 변수 및 광주시민의 의식적 결단이 필요하다.⁷⁴⁾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지금부터는 공수부대 폭력의 대중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자. 공수부대의 폭력은 무엇보다도 광주시민들에게 반인간적인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인간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시기 폭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의 시대적 특성은 인본주의(humanism)에서 찾아진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인간문제를 근대적 사유와 상상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물리적 침해, 내지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인 폭력은 당연히 가장 부정시되는 반인간적인 행위로, 또 그 행위자는 반인간적 존재로 된다.⁷⁵⁾ (또한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폭력행위와 그 행사자는 반(反)근대적인, 따라서 반(反)시대적인 행위와 존재로 등식화되면서, 근대시기 그 존재의 이유가 부인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은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근대적 사고의 핵심적 전제이자 관심인 인본주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그것은 근대인으로서의 광주 시민에게 설명·이해할 수 없는 충격으로 올 수 밖에 없고, 또 그 폭력의 행사자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반인간적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⁷⁶⁾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당

72) 최정기,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5·18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을 중심으로>, 5·18 기념재단 역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5·18기념재단, 2007) (이하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252쪽.

73) 대부분의 연구자는, 계엄군의 폭력을 초기 상황 전개의 중요 계기, 즉 ‘첫날의 산발적이고 수세적인 저항이 물결 날로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적극적 공세로 전환된 일차적 계기’로 파악한다. 김창진, <광주민중항쟁의 발전구조-‘무장투쟁’과 ‘민중권력’>,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167쪽.

74) 우리는 종종 공수부대의 폭력행위와 저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나 연구를 볼 수 있다. “공수부대의 살상행위는 ‘집재된 민중의 투쟁역량을 폭력적인 방향으로 대응, 분출시키는 자극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가공할 폭력이 오히려 공포를 사라지게 하고 치열한 엄대감과 증오를 낳은 것이다.”(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황석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61쪽) 이러한 류의 서술이나 연구는 피해자의 연대감이나 증오, 나아가 저항을 폭력의 가공성으로, 즉 ‘폭력의 양(量)’의 문제로 설명하거나 “잠재된 민중의 투쟁역량”이나 “특유의 무정부적 파괴본능”으로 설명한다.(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황석영 기록, <<알 책>>, 62쪽) 하지만, 살상행위가 저항의 기폭제로 기능하는 것이 결코 ‘폭력 양’의 문제이거나, 인간본성에 기초한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다. 즉, 동일한 폭력도 주변의 다양한 계기와 변수들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예컨대 순종과 저항이라는 상이한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것은 광주항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5) 폭력의 정의는 Christian Krohn-Hansen, “The Anthropology of Violent Interaction,”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50-4 (1994), p. 361 참고.

76) 필자는 본문에서와 같이 폭력이 가져다 준 대중적 충격을, 다시 말해서 폭력의 대중적 의미를 역사적으로 설명하

시를 이야기하는 많은 자료는 계엄군의 '아수성' 즉 비(非)인간성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충격을 서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충격은 국가성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목도한 광주시민의 기록은 “정말로 저들이 이 나라, 국토방위라는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군일까?”라는 의문을 던진다.⁷⁷⁾ 이것은 광주시민이 대한민국으로서 가지고 있던, 또는 가져야 했던 생각, 즉 “국가를 보호하고 3천7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존재로서의 군대와, 나아가 한국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존재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관념과 믿음이 계엄군 폭력성에 의해 부인되는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국민의 안전, 즉 그들 생명의 보호는 국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명되고, 또 그렇게 상상된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시대, 또 민족의 시대로 이해되는 근대에 있어 민주적 국민국가는 국가주권의 헌법적 소유자인 국민을, 또 민족이라는 집합체를 구성하는 민족성원을 보호하는 존재로 제시되고, 또 그렇게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인 광주시민 역시 헌법조항이나 각종 헌법에 의해 그렇게 믿도록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부대, 나아가 국가의 폭력은 자신 존재의 정당성을 스스로 말소하는 것이자, 또한 광주시민의 기존 관념들을 부인하는 것이었다.⁷⁸⁾ 이와 같이 공수부대의 폭력은 인간과 국가에 관한 근대적 담론과 상상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면서, 근대인으로서, 또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광주시민을 이해 불능의 충격상태로 몰아넣는다.⁷⁹⁾ 하지만, 이러한 관념상 이해와 수용불가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충격만으로 광주시민의 목숨을 건 저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충격이 저항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결시킬 다른 계기나 동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저항 동기와 계기의 하나로 광주시민이 당시 갖게 되는 현재적·잠재적 피해자 의식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당시 광주시민들이 다양한 방식과 계기로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실체험하거나 추체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속에서 공수부대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광주시민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피해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당시 광주시민들은 “전 시내 주택가를 운동권 학생들의 학적부를 갖고 수색한다는 소문에 공포에 떨”면서 “부모들은 젊은이들

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계엄군의 아수적 폭력이 충격적인 것은 폭력이 근대적 상상의 핵심적 전제이자 관심인 인본주의를 부인하면서, 근대인으로서의 광주시민의 상상법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그들을 이해는커녕 설명할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7)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2권 (광주광역시, 1997), 123쪽.

78) 국민의 조건이 민족인 민족국가에서, 또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 폭력은 국가 자신을 반(反)민주적, 반(反)민족적, 나아가 반근대적인, 따라서 반시대적인 존재로 규정되도록 한다. 또한 민족성과 민주주의 성을 국가성의 제일 요건으로 하는 근대시기에 있어서, 민족성원이자 국가성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스스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폭력이 근대적 담론과 상상에서 국가 존재·존립의 정당성(legitimacy)을 스스로 박탈하면서, 국가를 이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한다.

79)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폭력성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느라 어리둥절”해, 예컨대, “일가친척이나 친지들에게 전화로 물어” 보기도 했다.(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257쪽) 이와 같이 공수부대의 폭력성은 당시 광주시민들의 기존 관념들에서 쉽게 이해되거나 수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광주시에는 공수부대는 복귀가 남파한 무장공비들이라는 소문도 퍼다”했다.(최정운, <알 논문>, 252쪽 주 33)

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말렸다.”⁸⁰⁾ 또 “자식이나 남편 등 가족이 귀가하지 않고 있는 집에서는 그 행방을 찾느라 아우성”이었는데, 이중에는 “혹시 죽지 않았나, 붙잡힌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고 대성통곡하는 가정”도 있었다.⁸¹⁾ 이것은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잠재적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잠재적 피해자의식은 “학생”이나 “젊은 이”를 매개로 하여 가정이라는 틀을 넘어 확장된다. 최정운에 따르면, “공수들이 젊은 학생들을 다 잡아죽인다’ 또는 ‘내 새끼들을 공수부대 군인들이 다 죽인다’는 말을 들은 장노년층들은 공동체의 장래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⁸²⁾ 이것은 광주의 장노년층, 아니 광주시민들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공수부대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최정운의 앞 서술은 피해우려 대상이 가족이라는 족적(族的) 범위를 넘어 광주의 젊은이와 학생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피해우려대상이 젊은이나 학생과 같은 특정계층이나 연령층을 넘어 광주시 자체로, 광주시민 전체로 확장된다.⁸³⁾ 이와 같이 당시 광주시민은 스스로를 현재적·잠재적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당시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이 현재적으로 공수부대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령 지금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언제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재적·잠재적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재적·잠재적 피해자의식은 군부폭력에 대한 저항을 가능하게 한 계기와 동기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계엄군의 무차별한 폭력으로 말미암은 광주시민의 현재적·잠재적 피해자의식이, 최정기의 표현을 빌리면, “시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일종의 운명 공동체로” 전환시키고, 그들을 목숨을 건 저항에 나서게 했다.⁸⁴⁾ 최정운이 주장하듯이, 광주지역은 “광주지역은 상공업의 발달이 뒤져 외지 인구의 유입이 거의 없”어 “주민들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었다.⁸⁵⁾ 하지만 주민의 동질성 유지가 단순히 경제적 과정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근대 이후 광주를 포함한 ‘호남’의 역사적 과정의 결과였다. 즉 호남은 근·현대 식민주의와 권위주의의 역사, 또 세계분업구조 내지는 세계체제내로의 적극적 내포화를 통한 (탈)식민지 개발의 역사 속에서 지구적 규모의

80)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257~258쪽.

81) 김영태, <앞 논문>, 240쪽.

82)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245쪽. 또한 최정운은 20일부터 나타나는 아수머니들의 음식 제공의 경우에도 “젊은 학생들의 상징적 의미는 결정적 동기”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최정운, <앞 논문>, 246쪽.

83) 당시 전경은 시민들이 “광주를 지켜야 한다, 우리 손으로”를 외쳤다고 증언한다. (최정운, <앞 논문>, 266쪽 주 48) 이는 당시 시민들이 광주자체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피해 대상으로, 따라서 거기에 사는 광주시민 자신들로 잠재적·현재적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20일 이후의 사례이기는 하나, 한 기록은 당시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아리랑’이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먹이기 시작”하여 “오열과 통곡들을 거리에 쏟아 놓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박남선, <<오월 그날: 시민군 상황실장 광주상황 보고서>> (샘물, 1988), 137쪽; 최정운, <앞 논문>, 267쪽 주 51 재인용) 아리랑이 ‘한’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앞의 에피소드는 광주시민이 스스로를 ‘한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84) 최정기,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5·18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을 중심으로>, 200쪽.

85)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249쪽.

다층적 계서구조(식민도국-식민지 내 중심지-식민지 내 주변부 또는 중심부-주변부 중심지-주변부 주변부) 내에서 하위화되었다.⁸⁶⁾ 동시에, 이러한 위치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엘리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남(인)을 이질적·열성적(劣性的) 지역과 집단으로 표상(表象, representation)하고 그렇게 구성해냈다.⁸⁷⁾ 이러한 열성적 이질화에 대항해서 호남인은 스스로를 '비(非)호남지역·인'과 같은 한민족, 또 같은 대한민국사람으로 동질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문화적 우수성'을 선양하면서 스스로의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였다.⁸⁸⁾ 이러한 이중적 과정, 즉 외부로부터의 호남규정과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 확립노력 속에서 호남(인)은, 따라서 광주사람은 강한 지역적 동질성과 인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발전시켰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구성된 호남인과 광주인의 공동체의식이 현재적·잠재적 피해자의식과 결합되면서 그것이 운명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키고, 이것이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목숨을 건 저항에 나서게 했다.

Ⅲ. 결론: 계기로서의 공간성 문제와 잠재적·현재적 피해자 의식의 생산

지금까지 우리는 5월항쟁이 시작되는 5월 18일과 19일 양일의 진행과정과 그러한 진행을 낳은 여러 계기점과 이 속에서의 광주시민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공간성과 피해자의식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5월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 시위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항쟁 시작의 '자생성'이다. 이러한 것들은 5월항쟁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비조직적인, 즉 현장에서의 즉자적, 자생적 시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교문에서 시작된 전남대생의 시위는 공수부대에 밀린 전남대학생들의 시내 중심부 시위로 이어진다. 도청을 목표로 한 학생들의 시내 진출은 5월항쟁이 항쟁 이전의 '80년 봄'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은 전남대 정문 앞 시위로 시작된 5월 18일을 5월광주항쟁의 출발로 만들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진 학생들의 시내 중심부로의 공간이동은 광주 학생들의 집결을 가능하

86) 손호철, <80년 5·18항쟁: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6), 162~167쪽.

87) 근대이후, 각각의 지방(local)은 이중적 요구에 의해 대상화되었다. 즉, 한편으로 그것은 민족의 공간·경계내로 등가적으로 포섭되어야 할 동질화(homogenization)의 대상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서구)문명의 이식통로인 중심지(metropole), 즉 '서울'과 같은 도시에 의해 서열화되어야 할 이질화(heterogenization)의 대상이었다. (임종명, <脫식민지 시기(1945~1950) 남한의 국토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역사학보>>193(2007), 115~118쪽) 이러한 이중적 규정성은 '호남'이라는 지역 또한 예외이지 않다. 즉 호남도 근대 이후 여타 세계의 지방과 문명을 깊이하면서 민족화·문명화'의 대상지였다. 하지만, 호남은 한국근·현대사(modern Korea)의 전개 속에서 등질·등가화되기보다는 상대적 의미에서 이질·하위화되어 왔다.

88) 바로 이러한 근현대 역사가 역으로 '호남'과 호남의 역사, 특히 '저항'의 역사를 낳았다. 이에 관해서는 강만길, <근대 민족운동의 전통과 광주>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참고.

게 하면서, 학생시위대열의 팽창과 시위의 지역적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광주시 내로의 학생 진출이라는 공간이동은 시민대중의 동참을 가능하게 할 시공간을 창출하였다. 물론 시민의 동참은 기본적으로 학생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고 또한 그들의 동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동의는 광주시민, 넓게는 호남지역민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5월 18일 이전의 14, 15, 16일 3일간의 민주화 시위와 집회에 호의적 태도를 갖게 했고, 나아가 거기에 일부 참여하게 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서로 간에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동의는 5월항쟁에의 대중참여의 환경이었지, 항쟁발발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시민들이 초기 시위에 ‘연루’되게 한 것은 학생들이 시내로 옮긴 공간성의 효과이기도 하다. 즉 시위 공간의 이동은 시내 중심부의 다중집중성(多衆集中性)으로 말미암아 경찰과 공수부대의 시위 해산과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학생의 이합집산과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아가 그들의 시위 가담을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광주시 지역정치·경제 등의 중심지인 금남로 등 시중심부에서의 시위는 18일 오후와 19일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더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도록 만들면서, 더 많은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목격하도록 만들었다. 즉, 시중심부에서의 시위발생과 그것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은 공수부대의 폭력성이 주위 관공서·기업체 등의 다수 직장인들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면서, 그들을 공수부대 폭력성의 목격자로, 나아가 그것의 희생자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시위가 역으로 광주시 외곽으로 확대되면서, 공수부대의 폭력성은 시외곽지역에서까지 노출되게 되었다. 이제, 공수부대의 폭력성은 광주 시중심부, 나아가 주변부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집안의 가정주부에게도 분명히 감각·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대중의 5월항쟁 참가를 촉진시키면서, 5월항쟁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간성의 효과는 5월항쟁 발발과 깊이 연관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위와 폭력진압의 공간성 문제 이외에도 대중항쟁으로의 발전은 다양한 계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기 중에서 광주시민의 현재적·잠재적 희생자의식은 광주항쟁의 발전을 추동한 광주시민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공수부대의 무차별한 폭력행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지 않던 사람들까지 폭력의 잠재적 희생자로 만들었다. 즉, 전하나 ‘유언비어’(流言蜚語), 유인물은 폭력 인지가능범위의 지역적·공간적 제한성을 해소시키면서, 폭력 현장에 없던 사람들도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공수부대의 폭력성은 공수부대의,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그 기반에서부터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사람들에게 그들의 근대적, 국민적 사고와 관념, 상상법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불가해의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공수부대의 폭력은 광주시민을 광주시민 전체를 현재적·잠재적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

태진행은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현재적·잠재적 피해자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자의식이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진행과정 속에서 구성되어진 호남인과 광주인의 정체(整體)의식과, 이에 기초한 공동체의식과 결합되면서, 그들의 운명공동체의식은 발전되었다. 바로 이러한 의식들이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공수부대의 폭력에 맞서 목숨을 건 저항에 나서게 했고, 광주시민의 저항은 5월 18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를 5월항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었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말>>, <<신동아>>, <<월간조선>>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2권 (광주광역시, 199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年代 民主化運動>>IV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비매품, 1988)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고(故)박관현열사추모사업회 편 임낙평, <<광주의 넋 박관현-그의 삶과 넋>> (사계절, 1987)
김영택, <<현장기자가 쓴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황석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강만길, <근대 민족운동의 전통과 광주>, 5·18기념재단 위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5·18기념재단, 2007, 이하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김병인, <5·18과 죽음 그리고 학생운동과 정치적 복권>, 5·18 기념재단 위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 기념재단 위음, 2007, 이하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김영태,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4)
김창진, <광주민중항쟁의 발전구조-‘무장투쟁’과 ‘민중권력’>,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손호철, <80년 5·18항쟁: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세길, 1995)>
안종철,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시민군의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윤계걸위음 이문구(피냄),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7)
이용기, <5·18에 대한 역사서술의 변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대사연구>>32(2005)
<표상(表象)과 권력: 5월광주항쟁의 전용(전용)>, <<역사학연구>>29(2007)
<脫식민지 시기(1945~1950) 남한의 국토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역사학보>>193(2007)
정해구, <군작전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 최정기,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5·18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을 중심으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5·18과 양민화살>,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광주민중항쟁의 지역적 확산과정과정과 주민참여기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 최정운,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담론의 정치사회학>, 5·18기념재단 위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 5·18민중항쟁의 의의>> (5·18기념재단, 2007)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 村常南·山本剛士 최현 역, <<한국현대군정사>>(삼민사, 1987)
- Christian Krohn-Hansen, "The Anthropology of Violent Interaction,"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50-4 (1994)
- David Riches, "The Phenomenon of Violence," David Riches, ed, *The Anthropology of Violence* (Oxford: Basil Blackwell, 1996)
- Prasenjit Du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liam H Swell Jr., "Historical Events as Transformations of Structure: Inventing Revolution at the Bastille," *Theory and Society* 25-6(1996)

5·18 민중항쟁관련 노래수집 및 악보화와 해제

- 민중가요, 대중가요, 예술가곡, 창작판
소리를 포함하여 -

정유하(전남대학교 민주·인권·평화센터 객원교수)

I. 해제에 들어가며

1980년 5월 27일은 5·18 광주항쟁이 실패로 마쳐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항쟁과정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만행과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폭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구체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5월운동이란 용어를 낳게 되었다. 5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 발발하여 5월 27일에 좌절되었던 항쟁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추구했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집단적 활동이 해마다 5월에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념화되었다. 이는 항쟁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각종 의례와 행사도 포함하는데 전야제, 기념식, 추모제 등 항쟁을 재현하는 각종 의례와 공연이 이에 해당된다. 또 이를 위하여 생산된 문화 예술적 생산과 공적 재현활동도 포함된다(나간채, 2007). 오월운동은 노래운동을 포함하는데 이는 대학생문화권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탈세속가요 노래활동이 구체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설정한 운동을 말한다.

5월운동은 항쟁 과정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만행과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폭력에 의해 지역사회에 파생된 인적, 물적, 제도적 피해에 대한 복원과 배상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운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리회복운동, 인권운동, 반전평화운동, 통일운동 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재생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생산물로는 단연 민중가요가 시기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나마 대중가요와 가곡, 판소리, 예술음악 등의 분야에

서도 5월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생산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서양예술음악의 대규모작품을 제외한 민중가요와 대중가요, 가곡, 판소리 등의 작품을 수집하고 해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제에 있어서 방법은 주로 작곡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작품생산 당시의 상황과 작품배경을 조사하고, 그 외에도 기존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민중가요, 대중가요, 그리고 가곡 순으로 배열하고 판소리는 장단과 가사를 중심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다만 가곡의 악보와 판소리의 가사 및 장단은 차지하는 페이지 수가 많아 부록으로 처리한다.

II. 오월음악 해제

1. 민중가요

1) 전진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직후에 만들어진 민중가요이다. 마단조, 못갓춘 마디의 곡으로 한 도막 형식(8마디)으로 작곡되어졌다. 이 노래는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수 년 동안 생산되었던 '5월노래운동'에 사용된 민중가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작품이다. 80년 이후 5월노래운동의 정점에 있었던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전진하는 오월>, <광주출정가>, <혁명 광주> 등 행진곡으로서 느린 단조곡으로 창작되어진 민중가요들 중 가장 먼저 발표되어 마치 표본처럼 느껴지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1980년이 갖는 비통함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단조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며 민주화를 향한 생각들을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당시의 절망감과 상황들이 느린 템포로 표출이 되어졌을 것이다.

작곡지이자 대학노래패 일원이었던 박치음은 1980년 당시 서울대학교 공대 4학년으로 그 해 말 <전진가>를 작곡하여 1981년 4월 5일 경기도 원당의 산 속에서 발표하였다. 식목행사를 위장해 열린 이날 공연은 옥중에 있었던 김지하의 구상으로 연출 김명곤(전 문화관광부장관), 안무 채희완(부산대 교수), 음악은 박치음(순천대 교수)이 맡았던 「밤하늘의 별처럼」이란 마당극에서 불려졌다. 당시 마당극의 관객은 30여명의 문화운동가들이 전부였으나 이 노래는 얼마 후 전국을 강타했고 제주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4개월이었다고 한다. 이 노래는 1980년대 초반 시위의 현장에서 수 없이 불리어짐으로서 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운동가 <진짜사나이>와 같은 군가가 사라지게 한 노래이기도 하다.

박치음은 <반전반핵가>, <내사랑 한반도>, <미안해요 베트남> 등의 노래를 작곡했고 최근 그의 두 번째 앨범 「소쩍새」(2006)에 <가자, 가자>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실었다. 민중가요가수 안치환의 CD 「Beyond Nostalgia」에도 실려 있으나 원곡과는 다르게 훨씬 빠른 템포와 당김음 처리된 리듬으로 경쾌하게 연주되어 있다.

박치음의 CD 「박치음-소쩍새」(2005)와 안치환 「BEYOND NOSTALGIA」(서울: sonybmg, 2006)에 실려있다.

<악보 1> 전진가

전진가

박치음작사, 작곡



새 전진가!

박종화 시.곡

Dm 3 A7
 쓰러지는 동지를 일으켜세우며 사랑하는 조국을 보듬는다

Dm 3 A7 Dm
 독압으로 일룩진 산마루턱에 우뚝 섰다 전사여

Dm A7 Dm A7
 오 - 월 이 산하에 불 - 은 피가 흐른다

Dm Gm A7 Dm
 이 름 없 이 쓰러져간 전사의 불은 피로

Dm A7
 일 - 어 서 자 전진하자 통일의를 바람으로
 일 - 어 섰다 전진한다 해방의 몸부림으로

Dm
 총을 들어라(총) 칼을 잡아라(칼) 내 조국 찾으러가자
 총을 들었다 칼을 잡았다 내 조국 가슴에 담는다

3)님을 위한 행진곡

'오월노래운동'의 분수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오월운동'에 많은 에너지를 제공했던 민중가요는 당연히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노래는 1982년 소설가 황석영의 집에서 공연된 노래극 「넋풀이」에 속해 있는 7곡의 노래 중 하나인데 백기완의

시 <뫼비나리>를 바탕으로 황석영이 노랫말로 다시 구성한 가사를 사용하였고 MBC 대학가요제에서 입상한 작곡가 겸 가수인 김종률이 작곡하였다.

노래극 「넛풀이」는 당일 녹음되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이름으로 전국의 대학, 노동현장으로 신속하게 보급되었는데 그해 겨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사한 대학인의 노래순위에서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으며, 1983년 전국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은 이 노래를 그해 가장 많이 불리어진 저항가요로 선정했다.¹⁾ 이 노래는 5월운동기간 동안 특히 1997년 5월 18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5월항쟁 관련 민중의례에서 애국가를 대신하여 불리어짐으로서 의례음악화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의 투쟁현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와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항쟁현장에서도 많이 불리고 있는 민중가요가 되었다.

그러면 <님을 위한 행진곡>이 5월운동기간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노래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

첫째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억압의 정치사속에서 개인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정서가 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80년대 당시의 정서인 비장함, 패배감, 자괴감등이 단조의 선율과 느린 속도, 그리고 리듬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또 항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죽은 자들을 향해 느끼는 죄의식과 부채의식이 나타난다.

둘째, 이 노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쟁에 적극 참여했던 자들과 추모제와 같은 의례를 주도하는 자들이 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이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소극적 참여자에게 계속투쟁의 결단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이 노래는 다양한 상징적 표상의 기능을 한다. 이는 노동운동가이면서 항쟁당시 시민군이었던 윤상원과 민주교육지표사건으로 무기정학을 당한 뒤 위장 취업한 노동자이면서 야학의 강학이었던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모델로 만들어진 음악극의 노래이므로 교육, 노동, 정치 등 여러 맥락에서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면서 불려진다.

넷째, 이 노래는 민주화운동의 규범을 강화하고 항쟁문화의 존속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추모제, 광주민중항쟁 계승 범국민대회, 기소촉구 국민대회, 기념식, 마당놀이, 각종 시위현장에 모인 다양한 사회적 관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이념과 관심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다.

다섯째, 이 노래는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래 느린 4/4박자의 단조행진곡이었으나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불리면서 정서가 비장함에서 역동성으로 변하고 리듬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손사위를 끌어낸다.

1) 오창규, 「오창규 오픈 스튜디오」(프로그램), 1988년 12월 15일 YMCA 무진관, 빛고을 기획실 제작·기획.

2) 정유하, 「5·18 의례음악의 특성과 변화의 양상」, 『지역사회연구』 제12권 제1호, 30~33쪽.

이와 같은 이유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거니와 아직도 이 노래는 투쟁의식의 고취와 투쟁에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힘차게 불리어지고 있다.

<악보 3>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시
김종률 곡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inor, 2/4 time. It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lyrics and chord markings above the notes.

Chords: Dm, F, Gm, Dm, A7, Dm, Gm, Dm, F, C, F, A, Gm, Dm, E, E7, A, A7, Dm, Gm, F, A, A7, Dm, F, A, Dm.

Lyrics:

사 - 랑도 명 - 예 도 이 름도 남김 없 이
 동 - 지는 간 데 없 고 것 - 발 만나 부 켜

한 평 생나 가 자 던 뜨 거운 - 맹 - 세
 새 날 이올 때 까 지 흔 들리 - 지 말 자

세 월은 흘 러 가도 산 천은 안 다
 깨 어나 서 외 치는 뜨 거운 함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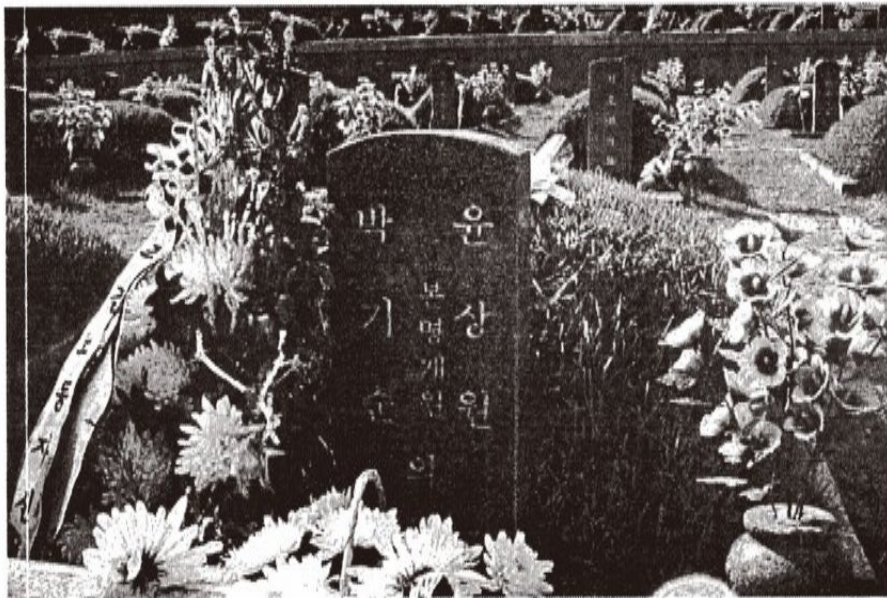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 자 여 따 르 라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

4) 노래극 「넋풀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포함되어있는 음악극 「넋풀이」는 박기순과 윤상원의 영혼 결혼식을 기리는 노래극이다. 박기순은 전남대 국사교육과 학생이었으나 '민주교육지표 선언 지지시위'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1978년 6월 동료학생들과 창설한 들불야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던 중 1978년 12월 피곤한 상태로 잠을 자다 연탄가스 사고로 숨졌다. 윤상원은 전남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주택은행 봉천동 지점)에 입사하였으나 6개월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낙향하여 들불야학과 노동운동 중 5월 항쟁을 맞아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다.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산화한 열사이다.³⁾ 두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지인들에 의하여 1982년 2월 이 두 영혼은 영혼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 문화인 몇 사람들이 모여 이를 기리는 노래극을 창작한 것이다. 소설가 황석영, 김종률, 오창규, 김선출, 임희숙, 영혼결혼식을 소재로 한 이 노래극은 5월 항쟁 희생자들의 부활을 상징화한 작품이다. 노래극 「넋풀이」는 7곡의 창작곡 <젊은 넋>, <교정에서>, <무등산 자장가>, <에루아 타령>, <영혼의 노래>, <축가>,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⁴⁾

<사진 1> 망월묘지에 있는 윤상원과 박기순의 합장묘



3) 정유하, "5·18의례음악의 특성과 변화의 양상", 『지역사회연구』 제12권 제1호, 30쪽.

4) 작곡가 김종률씨로부터 제공받은 악보와 한겨레신문 인터뷰 첨부

'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씨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 한평생 나가자면 뜨거운 맹세 / ... 깨어나 소리치는 불꽃을 함성 / 함서서 가나니 산자의 따르라."

80년대로 넘어오는 순풍가요와 흐름에 큰 획을 그으며 진정한 민중가요로 '님'으로 일컬어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오늘날의 시대상황과 더불어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될지 오래다.

여마다 5월이 오면 '깨어나 소리치는 함성'과 함께 더욱



불의님을 위로하는 <무풍산 자장가>와 <용용풀 비가>, 푸른강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복은 모험을 펼쳐 보려하는 노래와 주인공들을 피상화한 대사 등으로 이어지다가 맨 끝에 주제곡(항양)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나온다.

노래같은 이별 모인 사람들이 한두마디씩, 거르고 백기완씨의 시집 등에서 한두구절 따온 것을 황석영씨가 "가사가 될지나"며 탄숨에 경리해 만들었다. "행진곡이란 밝고 경쾌한 것 뿐만 아니라 비장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단조율이 있으며 생각하고, <님을...>의 것

폭풍우 속에 만든 "산자여 따르라"

80년 광주 희생자 넋풀이 위해 곡 만들어

또였이 우리 첫걸음 따르노라 이 시대의 애창곡 <님을...>이 만들어진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 1주년 되던 81년 봄, 엄청난 폭우가 가져온 충격과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좌절감들이 거내고자했던 몇몇 광주 사람들의 일치된 뜻에서였다.

김종률(33, 화산면)씨, 지광까지 사람들 틈에 끼여 <님을...>을 따라 부르거나 했던 그가 <님을...>이 있는 때보다도 눈이 울며 피는 모습을 처음으로 입술 열고 이 노래를 짓게 된 얘기를 들려주었다.

"80년 5월21일 오전 어느 막다른 길목에서 '영수부대' 별과 맞닥뜨렸습니다. 25가 넘은 말을 단숨에 쫓아 버렸지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단장형 두 사람은 '피! 피! 피! 피!' 소리만 들먹이고 쫓아 왔습니다." 그의 하수진 지휘관의 휘호가 주인공 소구들과 요강을 안착시키며 밤과 낮이 바뀌는 줄 모르고 지내기를 일마만인 얼굴과,

'세상이 왔다'는 말을 듣고 나와 제일 먼저 상부관과 가보았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듯 생각과 울음과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가진 본능의 표정을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가지만 너희들 옆을 '힐지 않자'고 본능의 외침 대고 있었습니니다."

그 뒤 벌어진 더욱 처절한 양상과 해악될 수 있는 후풍,

그리고 끝으로 엄청난 살벌한 분위기에서 숨어서 죽을 조종한 기념행사 소식과 좌절감을 떨꾸어 내려는 미세한 움직임만 눈앞으로 훑아낸 뿐 세상은 한동안 얼어 붙은듯 했다.

"81년 5월19일 아침 석성이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니다. 그냥 지나기는 너무 허전한 것이 아니라 불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오전 9시 용운동 박석영씨 집에는 황석영, 김종률씨와 김희숙, 김순경, 오정복, 이준우씨 등 "공대"를 비롯한 광주외 문화계들 사이에서 늦익은 열광 15명이 녹음기 3대와 사운드를 끌고 모여 들었다. 이들은 도장을 사수하고 승진 유상민씨와 '불꽃의학'을 하다가 승진 박기순씨의 영혼질문식이 있게 된다는 말을 듣고 있던 황이라, 광주항쟁 때 희생당한 청년노동자와 유대성을 가상하여 그들의 넋을 '영의부인' 넋풀이 형식의 노래를 만들기로 했다.

살벌한 분위기에서 많이 새 나가자면 입을 풀내기, 위의 오전의 대분과 노래를 짓고 연습까지 하여 오후에 녹음을 끝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85분짜리 노래곡 레코드(광주외 살던 어느 푸른은 넋의 죽음과 사랑에 관한 노래 이야기)는 광주항쟁을 상징하는, 북풍우로 시작하여 도성이 함락되던 아침을 그린 노래, 주인공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주메마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김종률씨는 그렇게 때문에 그날 녹음에서 <님을...>를 빼는 것이 기수를 보완적으로 하는 <무풍산 자장가> 등 대역섯 곡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후 <님을...>은 박관현씨의 촉음을 계기로 82년 가을부터 광주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김씨가 정보기관에 불려가 따귀를 얻어갔을 직후도 불어갔다. "북풍 친구와 이웃들을 생각할 때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씨가 만약 입대하여 휴가 나온 83년 봄 어느날 연석대 앞을 지날 때 <님을...>은 서늘이 있었고 87년 6월 항쟁의 중심노래가 되었을 때 그로써 워리얼에서 특이 버저라 자신이 만든 곡을 불렀다.

김씨는 79년 제3회 문화당수 대학가요제에서 <영광의 장진>이라는 노래로 우승을 받았고, 그때 지구라코토사에서 대상, 황상 수상자보다 그의 노래로 대학가 출신 최초의 특집 음반을 내 줄 정도로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은 가수였다. 그는 "새날"을 앞당기기 위해, 또 새날이 오면 부를 노래 1백의 곡을 지어, 후배들에게도 부르고 스스로 날마다 연습하고 있다"고 했다.

91. 5. 12 (화성민 기자)

5) 오월의 노래 2

오월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님을 위한 행진곡>만큼 불러진 노래는 단연코 <오월의 노래 2>이다. 가사가 오월에 일어났던 일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서 그 표현의 치열함이 노래 부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오월에 대한 기억과 함께 투쟁의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오월의 노래 2>는 <님을 위한 행진곡>처럼 오월운동을 넘어선 여러 분야의 항쟁현장에서 불러지지는 않았다. 주로 광주항쟁 추모제와 같은 5.18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이나 민주정치구현을 위한 모임과 같은 정치, 사회문제와 직접 관련된 현장에서 불러졌다.

<악보 4> 오월의 노래 2

오월의 노래 2

작사자 미상
프랑스 상송

1. 꽃 잎 처럼 금 남 로에 뿌 리 진너 의 붉 은 피
 2. 왜 쏘았지 왜 찢 었지 트 릭 에 실 고 어 디 갔 지
 3. 산 자 들 아 동 지 돌아 모 여 서 함 깨 나 가 자
 4. 대 머 리 아 쪽 바 리야 양 키 놈 솟 은 꽃 대 야

5. 두 부 처럼 잘 리 나간 어 여쁜 너 의 젖 가 습
 땅 월 등에 부 름 뜯 눈 수 천 의 핏 발 서 리 있 네
 옥 된 역사 고 통 없이 어 땀 게 해 처 나 가 라
 물 리 가라 우 리 역사 우 리 가 보 들 고 나 간 다

9. 오 월 그 날 이 다 시 오면 우 리 가 습에 붉 은 피 솟네

<오월의 노래 2>는 번안곡이 다시 '노래가사바꾸기'를 통해서 민중가요가 된 독특한 예이다. 본래 <오월의 노래 2>의 선율은 프랑스 상송으로 미셸 폴라레프(Michel Polareff)가 1971년 작사·작곡한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Qui a tué Grand Maman?)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박인희가 <사랑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나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사바꾸기를 통해서 오월을 형상화하고 오월의 육된 역사를 이겨내는 길은 투쟁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탈바꿈되어 오월운동에 중요한 민중가요가 되었다. 오월을 기억시키고 투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반정부, 반미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원곡인 미셸 뵈라레프가 노래한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는 선율이 장식적이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나 민중가요<오월의 노래 2>는 역동적이며 격렬한 분위기로 변해있다. 주로 리듬과 빠르기 때문 인데 원곡의 주요리듬은 ♩인데 반하여 <오월의 노래2>는 ♩♩로 변하였다. 후자인 일명 깡총리듬은 강박에 강세가 오는 관계로 4/4박자의 노래인 경우 훨씬 더 행진곡과 같은 규칙성과 역동적인 힘이 더 느껴진다.

이 노래는 <님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매년 기념식과 추모제 등에서 묵념, 분향순서 등에서 연주되어 의례음악화 되었다. 반면에 조용히 연주되면서 운동기간 동안에 불려지면서 발산하던 역동적인 힘과 행진곡적인 분위기는 사라져 박제화된 느낌의 운동노래가 되어가고 있다.

<악보 5> Qui a tué Grand Maman?

Il y a-vait, du temps de grand-maman. Des fleurs qui poussaient dans son jar-din.

Le temps a passé seules restent les pensées Et dans tes mains ne reste plus rien

Qui a tué grand - maman est ce le temps Ou hommes qui plus l'temps d'passer le temps

La la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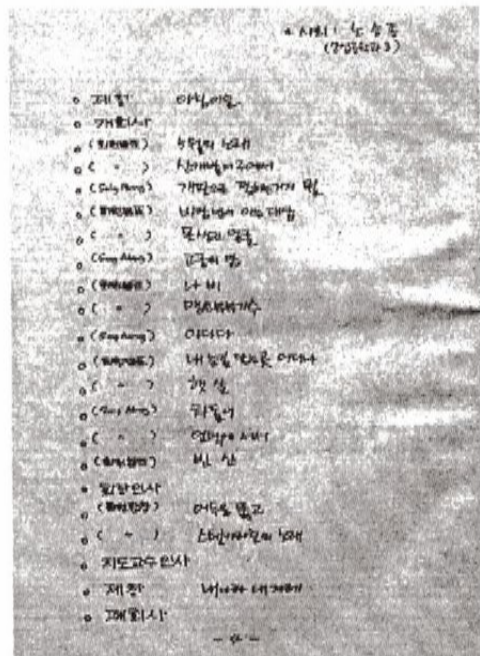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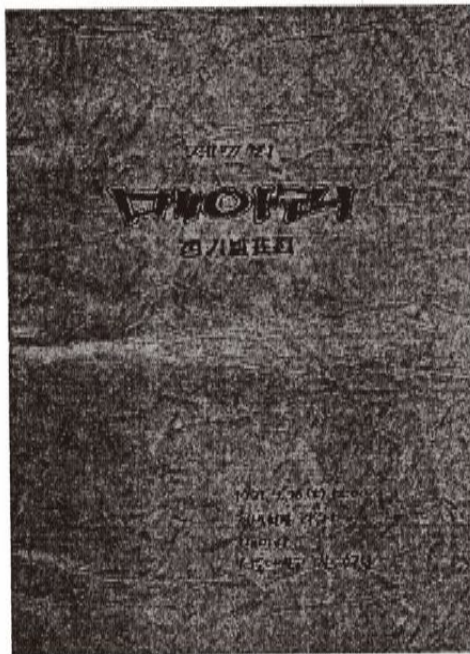
6) 오월의 노래 1

광주항쟁에 관한 노래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오월의 노래>는 앞서 소개한 <오월의 노래 2>이다. 하지만 이 노래에 앞서서 이미 <오월의 노래>가 있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노래동아리 '메아리'의 제7회 정기발표회(1981)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학생이

던 78학번 문승현이 작사·작곡하였다. 1981년은 1980년의 광주항쟁 직후로 제5공화국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이며 대학에는 사복경찰들이 상주해 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간섭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공공연히 ‘오월’을 노래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터이다. 실제로 메아리의 정기공연은 동아리 회장이 각서를 쓰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학교의 검열을 통과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월의 노래>는 ‘메아리’의 제7회 정기발표회에서 첫 곡으로 발표되었다.

<오월의 노래 1>은 당시의 정서가 잘 나타나있는 단조 서정 가요이다. 오도된 광주항쟁이 ‘광주사태’로 알려지고 있었던 시기인대도 악보 하단에 ‘광주항쟁을 민족적인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아픔의 편린들을 기리며 사랑을 외친다’고 써여 있다. 광주항쟁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들어진 노래임에 틀림없다.

<그림 9> ‘메아리’의 제7회 정기발표회 프로그램



오월의 노래 1

문승현 시.곡

Am E7 Am Dm G7

1. 봄 별 내리는 날 — 뜨거운 바람 부는
2. 이렇듯 봄이 가고 — 꽃피고 지어도

7 C Bdim Dm Dm/F E Am

날 — 봄은 — 꽃잎 저 흩어지고 꽃
북 — 멀 리 — 오월의 하늘 끝에 꽃

13 F Dm7 E E7 Am

향기 무는 날 — 묘비 없는
바람 다 하 도 북 — 해기우는

18 E7 Am Dm G7 C

죽음에 — 커다란 이름 드리오
분숫가에 — 스며들면 — 벗어살아

24 Bdim Dm Dm/F E Am

— 여기 죽지 않은 목숨 — 에 이
— 양천 의 눈 — 매 되뜨 — 는 이

29 F Dm7 E F C

노래 드 — 리 — 오 — 사 랑 이 여 내
질 은 오월이 — 여 —

35 Em Am Dm E Am

사 랑 이 여 hum — —

8) 꽃아, 꽃아

국악민중가요 <꽃아, 꽃아>는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에 삽입된 노래이다.

<악보 7> 꽃아, 꽃아

꽃아, 꽃아

김정희 글
정세현 곡
마당극<일어서는 사람들 중>

꽃 아 꽃 아 아 아 아 오월
의 꽃 아 꽃 아 꽃 아
아 아 꽃 아 다 시 피 어 나 라
모진칼에 너의 냇이 쓰러졌어도
꽃 아 꽃 아 아 아 아 다 시 피 어 나 라
꽃아 꽃아 아 아 아 오월의 꽃아
꽃아 꽃아 아 아 아 다 시 피 어 라
우리누나 고운 냇이 쓰러졌어도
망월동에 너의 냇이 쓰러졌어도
꽃아 꽃아 아 아 아 다 시 피 어 나 라

작사는 이 극의 연출을 맡았던 김정희가 썼고 정세현이 작곡했다. 「일어서는 사람들」은 1988년 마당극의 형식으로 극단 '신명'에 의해 1988년 제1회 민족극한마당에서 초연되었고 광주 오월항쟁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재공연되었다. 연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꼽추와 곰배팔이는 사랑하고 결혼하여 오일팔이라는 아이를 낳는다. 오일팔은 공장에 다니다 광주항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일팔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치참한 아들의 시체만을 찾게 되어 통곡하면서 그를 묻는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은 오히려 이들에게 올바른 삶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들은 병신의 상태를 벗어나 정상인이 되어, 같은 아픔을 지닌 이웃들과 함께 단결하여 아들이 못 다한 투쟁에 나선다.

최근에도 1997년 제1회 과천 세계마당극큰잔치 공식초청, 1997년 제2회 아시아연극인페스티벌 참가 (부산), 1999년 제3회 아시아연극인페스티벌 참가 (일본 아마구치현), 2000년 광주민중항쟁20주년 기념 전국 6개 도시 순회공연 등 재공연되고 있다. 이 노래는 정세현의 앨범 「오월의 꽃」, 「정세현 우리노래 1집」(1990)에 실려 있다.

작곡가 정세현은 1961년 전남 화순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에서 피리를 전공했으며, 우리소리연구회 (광주 1990)를 조직하여 민요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였고 노래패 '친구'(1987)를 조직하여 민중가요보급에 큰 공헌을 했다. 지금은 출가하여 '법승'이라는 법명으로 수행과 음악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광주출정가>, <혁명광주>, <진군가>, <섬진강> 등 80년대 후반에 많이 불리던 민중가요를 작곡하였다.

9) 광주출정가

역시 정세현이 작곡한 <광주출정가>는 시인 고규태가 작사하였다. 고규태는 1984년 <민중시>로 문단에 등단했고 시집<겨울법정 111호>가 있다. 노래운동에 작사가로 참여한 그는 이 노래 외에도 민중가요 <전진하는 오월>, <묶인 몸, 묶인 세월>, <내님>, <혁명광주>, 박승희 열사 추모가인 <봄날의 코스모스> 등이 있다. 다음은 <광주출정가>와 <혁명광주>의 악보이다.

<악보 8> 광주출정가 혹은 광주출전가

광주출정가

고규태 시
정세현 곡

Dm F A Dm

동 지 들 모 여 서 함 께 나 가 자
무 쟁 의 깃 발 이 높 이 솟 았 다

5 Gm Dm B \flat A7 Dm

무 등 산 정 기 가 우 리 에 계 있 다
혁 명 의 정 기 가 우 리 에 계 있 다

9 B \flat F Gm A

무 엇 이 두 려 우 라 출 정 하 여 라
무 엇 이 두 려 우 라 출 정 하 여 라

13 Dm A B \flat E7 A

영 원 한 민 주 화 행 진 을 위 해 나
억 눌 린 민 중 의 해 방 을 위 해 나

17 Dm B \flat F C7 F A

가 나 - 가 도 청 을 향 해
가 나 - 가 목 숨 을 걸 고

21 Dm A A7 Dm

출 정 가 를 힘 차 게 힘 차 게 부 르 세

혁명광주

정세현작곡

1. 흰 옷 입은 민 주 혼 이 부 르는 언 덕
2. 열 빛은 몸 짓 눌 런 삶 참 을 수 없 어

햇 살 맑 은 망 월 묘 지 우 리 형 제 여
관 심 만 의 광 주 시 민 함 께 나 섰 네

총 장 로 금 남 로 굽 이 보 머 옷 는 형 제 여
숨 죽 인 만 백 성 굴 래 빛 고 일 어 실 때 에

있 으 리 그 대 닢 이 깃 물 되 어 흐 르 던 날
최 전 선 총 탄 짧 고 우 리 모 두 전 진 하 는

끓 는 피 총 을 들 고 전 진 하 는 혁 명 - 광 주
보 아 라 혁 명 전 사 용 맹 스 런 혁 명 - 광 주

이 깨 질 고 나 가 자 매 판 외 세 부 수 자

살 아 오 는 이 오 월 에 총 을 들 고 싸 우 자

독 제 정 권 부 수 자 오 월 혁 명 동 지 - 여

10) 전진하는 오월

고규태와 정세현은 <전진하는 오월>의 작업도 함께였다. 1984년 작곡되었는데 전남대 총학생회가로 채택되었고 노래의 투쟁적인 분위기가 당시의 시위현장의 분위기와 맞아 떨어져 많이 불려졌다.

<악보 10> 전진하는 오월

전진하는 오월

고규태 작사
정세현 작곡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4/4 time, and consists of 8 staves of music. The lyrics are as follows:

1. 지 기 오 네 젊 은 녀 들 들 판 가 로 질 러
2. 앞 서 가 네 오 월 형 세 사 선 끝 내 뚫 고

밤 은 노 래 해 방 노 래 높 이 부 르 며
불 을 켜 는 집 승 충 칼 맞 서 싸 우 며

쟁 의 깃 발 불 고 힘 차 깨 달 러 오 네
주 의 깃 발 불 고 불 밀 웃 달 러 오 네

눈 부 신 무 진 주 들 판 가 로 질 러 통 트
피 땀 인 금 남 로 사 선 끝 내 뚫 고 함 캉

는 꽃 새 벽 무 죄 나 팔 소 리 따 라 진 달
한 한 밤 중 진 군 하 는 함 성 따 라 시 민

래 불 은 가 승 여 기 달 러 오 네
군 녀 과 합 계 여 기 달 러 오 네

물 러 서 지 않 으 리 사 슬 람 고 전 진 하 는

오 월 오 늘 은 불 러 서 지 않 으 리

11) 봄날의 코스모스

이 노래는 1991년 4월 29일 미국반대, 노태우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했던 전남대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생이었던 박승희열사를 추모하며 작곡한 작품이다. 박승희를 추모하며 창작된 작품은 이 외에도 <그날의 약속>, <그대의 날>, <그래 희망으로>, <꿈이 아니길>, <나의 조국>, <사랑일기>, <생일선물[승희에게]>, <소망>, <승희에게>, <우리 모두 통일로>, <코스모스 길따라>, <통일 조국 찬가>, <통일진군>, <함께해요> 등이 2002년 전남대 용봉편집위원회에 의해서 발간된 「해방의 코스모스」에 실려 있다.

<악보 10> 봄날의 코스모스

봄날의 코스모스

고규태 작사
정세현 작곡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lyrics and guitar chords. The chords are: Em, D, Em, G, D7, G, E7, Am, G, Em, B7, Em, C, Em, Am, B7, Em, C, Em, C, B7, Em, B7, Em, Am, B7, Em, C, B7, Em, Em.

어 여쁜 가을꽃 - 아 봄날에 피지마라 스무
 내 사랑 아가다 - 아 봄날에 지지마라 스무
 살 코스모스 너홀로 피지마라 철이
 살 고운꽃 - 잎 너홀로 피지마라 해맑
 른 그대 님 - 이 불타네 타오르네 은뭉
 은 그대 숨 - 걸 들리네 살아오네 순결
 에 불을 놓 - 아 새날이 밝아오네 그대
 한 꽃이 되 - 어 어둠을 불사르네
 의 뜻을따라 민주 의 불꽃이 되어 뜨겁
 게 뜨겁게 타오르리 -

12) 광주여, 무등산이여

<광주여, 무등산이여>는 1988년 4월에 작곡되어 1989년에 발표된 노래이다.

<악보11> 광주여 무등산이여

광주여 무등산이여

윤민석 글.곡

Am Em7 Am G Am B^b

Am B^b Esus4 E Am G

Esus4 E Am D F

B^b Esus4 E Am G Esus4 E

Am D F B^b E Am

F /G Am Am/G# C A Dm

Am G FEm Am Am/G F G Am Am/G#

G C A Dm Am B^b Esus4 E Am

광주여 오육의 식민
지 그대를 뚫고 부서지리라 깨어지리라 분노
의 큰불길로 광주여 그대와 함께 가-기위하
여 햇빛 깃발로 아우성치는 위대한 혁명이여 무등
산이여 숨죽여왔던 붉은 원혼의 일어섬이여 노래 부르며 함-께
가리라 동학에 서오월로 무등산이여 피할수없는 이길
쓰러져 압살이여 북소리높이 진-군하리라 오월에 서봉일로

작곡가 윤민석은 1984년 한양대학교 입학해 노래패 ‘소리개벽’, ‘전대협노래단’(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노래단)으로 활동했고 이어 ‘노동자노래단’, ‘민족음악연구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 노래는 윤민석이 민족음악연구회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작곡된 곡으로 어떤 자료에는 민족음악연구회 작사, 작곡으로 기록되어있기도 하다.

1992년에 ‘윤민석 연주곡집’ 발표했고 같은 해 민족해방에국전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3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 1996년에 ‘프로메테우스’를 창립하여 ‘윤민석과 함께 하는 몇 가지의 실험’ 음반 과 ‘김남주 시인 육성 낭송시선 1집’ 제작하였다.

윤민석의 대표곡으로는 <전대협진군가>, <전대협찬가>, <애국의길>, <전사의 맹세 1·2>, <편지 1·2·3...>,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다시 떠나는 날>(신형원 노래), <그대 고운 내 사랑>(이정열 노래), <소리없이 흰 눈은 내리고>(정태춘·박은옥 노래), <들국화> 등이 있다.

13) 선생님, 광주 5월을 아세요?

2004년 5월 18일 제24주년 기념식에서는 5·18관련 행사에서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공연이 있었는데 특별한 감동의 무대였다. 이 공연이 특별하고 감동이 있었던 것은 광주항쟁 이야기를 담은 <선생님, 광주 5월을 아세요?>와 <금남로>를 어린이들이 노래했기 때문이다. 이 공연에 나선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 어린이예술단 ‘아름나라’였다. 1980년대 후반에 창작된 <선생님, 광주 5월을 아세요?>의 가사는 창원용지초등학교 2학년 이예슬로 되어있고 ‘아름나라’ 대표며 작곡가인 고승하선생이 작곡하였다.

80년대 광주 5월항쟁은 정부와 언론의 왜곡보도로 전국민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다. 작사자 이예슬의 부모는 경상도에 출신으로 그곳에 거주하면서도 광주 5월항쟁을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부모는 예술에게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사실들을 아이에게 들려주었고 광주 5월을 알게 된 아이는 어른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아저씨, 광주에서 5월에 일어났던 일을 아세요?”, “선생님, 광주 5월을 아세요?” 어른들의 대답은 당연히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였다. 이를 어린이예술단 ‘아름나라’의 대표이며 작곡가인 고승하가 정리하여 작곡하게 된 것이다. 고승하는 5월이면 광주에서 열리던 ‘거리음악제’에 초대되어 해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⁶⁾ 그러다 2004년 5월 18일 제2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공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아름나라는 마산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단체로 지금은 전국 여러 도시에 ‘아름나라’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주변과 사회를 글로 표현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체의 취지라고 한다.

6) 고승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07년 10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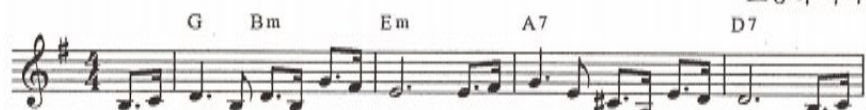
<사진 2> 2004년 5-18 민주화항쟁 기념식에서 광주아름나리아 어린이의 기념공연 모습



<악보 12> 선생님 광주의 오월을 아세요?

선생님 광주의 오월을 아세요?

이에슬 작사
고승하 작곡



선생님 광주의 오월을 광주의 오월을 아세요 그—
선생님 슬픔의 망월을 슬픔의 망월을 아세요 그—



날꽃잎처럼 쓰러져 간 언니 오빠를 아세요 (아이들)
날거름처럼 묻혀져 간 언니 오빠를 아세요



은 몰라도 되나요 우리들은 알면 안되나요 그—



날 남녘 땅이 곳에서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13) 금남로

김준태의 시 <금남로 사랑>을 가지고 작곡된 노래는 모두 세 곡이다. 1984년 가장 먼저 작곡된 <금남로 사랑 1>은 시인 고규태가 각색하고 박태홍이 작곡한 노래이다.

80년대 초반 박태홍과 박문옥은 시골학교 미술교사를 사직하고 광주에 올라와 화가 김경주⁷⁾가 운영하는 '큰나무화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함께 그림작업, 노래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금남로 사랑1>, <광주시민장송곡>, <전진하는 오월>, <죽창가> 등을 창작해내었다. 이들 곡 중에서 박태홍작곡의 투쟁가요풍의 노래 <전진하는 오월>은 전남대 총학생회가로 채택되어 많이 불러 졌다고 한다. 이 노래는 노래패 '친구'의 앨범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에 실려 있다.

두 번째 작곡된 노래는 앞서 소개한 대로 어린이 예술단 '아름나라'대표 고승하 작곡의 <금남로>이다. 이 노래는 김준태의 시를 발췌하여 가사로 사용한 8마디, 한도막 형식의 곡으로서 마단조의 곡이나 리듬과 음계의 선택이 다분히 국악민요에 가깝다. 2004년 5·18광주민중항쟁 24주년 기념식에서 광주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기념공연곡으로 연주함으로써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세 번째 작곡된 <금남로 사랑>은 1994년 박문옥이 작곡하여 거리음악제에서 발표하였다. 이 노래는 김준태의 시 원문을 그대로 살려 작곡하였다. 이 노래는 2002년 발매된 박문옥의 앨범 「운주사 와불 곁에 누워」에 실려 있다.

<악보 13> 고승하의 <금남로>

김준태 시
고승하 곡

금남로



1. 금남로는 사랑이 있다 - 내가 노래와 평화의
2. 금남로는 강언덕이었다 - 달맞이꽃흔들며

3. 눈물 뜬 봄날의 언덕 - 눈물 뜬 봄날의
4. 날은 물새들 - 금남로는 언초록

5. 언덕이 있다 - 아거리여
6. 강언덕이었다 - 아거리여

7) 김경주는 판화가면서 동신대학교 문화기획학과 교수로 <죽창가>(노래2)의 작곡자이기도 하다.

금남로 사랑

김준태 시
박태홍 곡



금남로는 금남로는 우리—의 참 사랑 노래와 평화와
금남로는 금남로는 어머니의 젖가슴 투쟁과 승리와



행—복에 물—든 봄날의 언덕 금남로는 내 사랑
죽음에서 물—든 봄날의 언덕 금남로는 내 사랑



모두 모여 기쁨—을 나누는 거리
일싸 안고 보리피리 부—는 거리



어린애와 나란히 감꽃줍는 금남로 봄날의 언덕
나비떼와 나란히 춤을 추는 금남로 봄날의 언덕



빛고을은 사랑이—있네
금남로는 사랑이—있네

<악보 15-1> 박문옥 작곡의 <금남로 사랑 2>

금남로 사랑

김준태 시
박문옥 곡

금남로는 사랑이었다 내가 노래와 평화에 눈을 뜬
봄날의 언덕이었다 사람들이 세월에 머물
적시는 거리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 처음으로 -
알아 - 버린 거리 금남로는 사랑이었다
금남로는 언초록 강 언덕이었다 달맞이꽃을 흔들며
날으는 물새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입술이 젖어 있었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발바닥에 -
흙이 묻어 있었다 보리 피리를 불고 있었다
어린애와 나란히 출렁이는 금남로 어머니와 나란히

<악보 15-2> 박문옥 작곡의 <금남로 사랑 2>

할배와 나란히 밤나무심는 금남로 누이와 나란히
 감꽃줍는 금남로 할머니와 나란히 손자들을 등에 업는
 금남로 금남로는 민들레의 고향이었다
 그리움의 역세디역센 끈질김이었다 그래
 좋다 - 금남로는 멀리 청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 그래 좋다 - 금남로는
 가까이 - 마을로 찾아가는 길 나비떼의 고향이었다
 금남로는 어머니의 젖가슴이었다 우리가 한때 고개를 문던
 하이안가슴이었다 어머니가슴이었다.

14) 목련이 진들

'우리네 오월에는 목련보다 더 회고 정갈한 순백의 영혼들이 꽃잎처럼 떨어졌던 것
 을....'

오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글이 많다. 그러나 정말 가슴을 치는 글은 오월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글이다. 어린 시인 박용주도 80년 오월에 일곱 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었다. 그래서 박용주의 오월은 매년 '소리없이 스리졌던 영혼들이 흰 꽃잎이 되어 가슴속에 또 하나의 목련이 핀다.' 망월에 누워계신 아버지를 보면 눈물이 절로 나 한동안 오지 않겠다고 하직인사를 한다. '.....어른되서 울지 않고 벌초하고 술 따루어 올릴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올립니다 무정타마시고 기다리지 마소서 무정하기로야 어린 자식 두고 가신 아버지만 하겠습니까? 하직인사 올리오니 이 절 받으시고 바람소리 쓸쓸하고 날 추워도 더는 기다리지 마소서'⁸⁾

중학교 2학년 16세의 나이로 박용주는 <목련이 진들>을 써 전남대학교 1988년 '5월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이 시 외에도 5월과 아버지를 소재로 한 시가 다수 있으며 시집 『바람찬 날에 꽃이여 꽃이여』를 1989년에 도서출판 장백에서 출간하였다.

이 시를 바탕으로 가수며 작곡가인 박문옥이 작곡하였다. 박용주시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시집을 선물 받은 박문옥은 <목련이 진들>에 곡을 붙였고 1993년, 1994년 오월거리음악제등의 여러 행사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1995년 북미주 7대 도시를 순회한 박문옥, 오창규 초청공연 <광주여! 우리의 노래여>의 주제곡으로 교포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1996년에는 광주MBC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에 아카펠라 중창과 첼로 독주로 편곡되어 주제곡으로 쓰였다.

박문옥은 1977년 제1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저녁무렵>으로 동상을 받으면서 데뷔했고 트리오 '소리모아'로 20년간 활동한 후 지금은 솔로가수로 활동 중이다. 최근 '꽃잎처럼'을 주제로 전국 5대도시 전국순회공연(2007)을 마쳤다.

<악보 16> 목련이 진들

목련이 진들

박용주 시
박문옥 곡

목련꽃이 한날 목련꽃이진다 해도 무에그리
 - 그리 슬프라 - 피었다
 가 피었다지는 것이 어디 - 목련
 꽃 뿐이라 - 우리네
 오월에는 - 목련꽃보다 - 더 하얗
 고 - 순결한 영혼 - 영혼들
 이 꽃잎처럼 - 아프게 떨어진 것을 -

8) 박용주, <하직인사>

15) 광주시민장송곡

1984년 화가 김경주의 화실 <큰나무화실>에서 함께 지내던 김경주, 박태홍, 박문옥은 그 무렵 <전진하는 오월>, <죽창가>, <금남로 사랑> 그리고 <광주시민장송곡>을 생산해내었다. 이 노래도 고규태의 작사에 박태홍이 작곡하였다. 박태홍은 박문옥과 함께 제1회 MBC대학가요제에 <저녁무렵>으로 참가하여 입상했던 싱어송 라이터이다.

<악보 17> 광주시민장송곡

광주시민장송곡

고규태 시
박태홍 곡

무진빌의 백성들이 햇불을 들었다 -
손에 손을 맞잡으니 피끓는 형제여
조국위해 바친 몸이 무슨 죄만 말인가
어둔그늘 채찍앞에 쓰러져 죽어도
피에 젖은 민주함성 끝까지 지키리니
설운눈물 거두시고 고이잠드소서

16) 노래 2 혹은 죽창가

<노래>는 민족시인, 저항시인이라 불리는 김남주의 시집 「사랑의 무기」에 실려 있다. 해남 농군의 아들로 태어난 김남주는 전남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70년대 유신독제에 맞서 저항하다 80년대를 옥중에서 보냈다. 옥중에서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 등 옥중시집을 발표했다. 옥중에서 탄생한 그의 시들은 창살을 넘어 시위현장에서 복사되어 나돌았고 낭송되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노래2

김남주 시
김경주 곡

이 두 매는 날라 와 더 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 -이 피어

눈 물로 고여 발등 에서 갈라진 녹 누 꽃이 되자 하네 이

산 골은 날라 와 더 불어 새 가 되자 하네 새 -가 아

땃 녀 웃 녀에서 울어 - 예는 파 탕 새 가 되자 하네 이

들 판은 날라 와 더 불어 불 이 되자 하네 불 -이 타는

들 녀이 뿜을 사르 - 는 들 불 이 되 자 하 네 (들 불이) 되

자 하네 되고 자 하네 다시 한 번이 고을 은 반 관 이 되 자하

네 (반관이) 청 송 녹 - 죽 가슴에 찢히는 죽 창 이 되 자 하 네

88년 출소 후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한국민족 예술인 총연합 이사 등을 맡아 민족문화운동에 힘을 쏟았다. 10여년 간의 영어생활로 얻은 지병 때문에 출소 후에도 고생을 해온 시인은 췌장암을 선고받았고 94년 2월 13일 망월동 5.18 묘역에 안장했다. 거대한 사회에 작은 몸과 벌거벗은 혼으로 부딪치며 탄생한 그의 저항시는 예술

음악작곡가들과 민중음악작곡가들에 의해서 노래로 창작되었다. 김선철의 <학살>, 김대성의 <달>, 이명선의 <학살>, 안치환의 <자유>, <똥파리와 인간>, <저 창살에 햇살이>, <지는 앞세 쌓이거든>, <물따라 나도 가면서>, <돌맹이 하나>,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국화>, <희망이 있다>, <아이고, I GO>,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등이 그것이다.

작곡가 김정주는 화가로 광주민예총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동신대학교 문화기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노래는 시의 제목처럼 <노래>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지막 소절에서 죽창이 강조되는 까닭으로 <죽창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17) 광주천

1984년 민요연구회가 창립되면서 민요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민요연구회를 통해서 전통민요의 보급에서부터 창작민요의 생산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데 이때 창작된 작품 중 창작민요 하나가 <광주천>이다.

<악보 19> 광주천

광주천

박선옥 작사
이정란 작곡

1. 흘러라 - 네 은 갓서 리움 - 더러운 - 네 - 굴 옥과 수모
2. 굽이쳐라 - 네 은 갓노 여움 - 주림에 - 지 친 다 리이 끌고

흘러라 - 네 은 갓서 리움 - 보 리밭 - 길 - 흘러라 -
굽이쳐라 - 네 은 갓노 여 - 피 - 가 - 숨 에 굽이쳐라

호남밭 - 푸르른 - 길 - 배 - 앓기 - 고 - 깃 - 밝히 - 는데
망월봉 - 도깨비춤 - 승 - 냥이 - 와 - 형 - 별의 - 망

흘러라 - 네 은 갓서 리움 - 보 리밭 - 길 - 흘러라 -
굽이쳐라 - 네 은 갓노 여움 - 피 - 가 - 숨 에 굽이쳐라

민요운동을 그 내용이 반드시 오월항쟁과 그 외에도 <돌아가리라>,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우리 것이다>, <비야 비야>, <남도의 비> 등이 있다. 또 마당극과 같은 연행예술을 통해서도 창작민요가 탄생되었는데 국악과 출신의 정세현작곡의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에 나오는 <꽃아, 꽃아>와 같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요풍의 민중가요는 쉽게 대중화되지 않았다.

18)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이 노래도 역시 민요연구회에서 창작되었다. 1989년 1월 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에서 발매한 앨범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에 수록되어 있다.

<악보 20> 모두들 여기모였구나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신경림 작사
김용수 작곡

불 - 길 도 해 치 고 물 - 속 을 해 업 치 고 가 시 밭 길 들 무 덤
 바 위 산 을 뚫 고 서 모 - 두 들 여 기 까 지 모 - 두 들 여 기 까 지
 달 러 왔 구 나 온 나 라 에 올 리 피 지 는
 노 래 크 게 외 치 부 르 며 - 이 제 갈 길 알 았 노 라 고
 아 - - 아 - - 모 두 들 여 기 까 지 여 기 모 여 있 구 나

2. 대중가요

1) 5·18

정태춘 작곡의 <5·18>은 정태춘박은옥의 데뷔20주년 기념 앨범 「정동진/건너간다」에 수록되었다.

<악보 21-1> 5·18

5. 18

정태춘 작사, 작곡

이 디 에 도 붉 - 은 꽃 들 - - 심 지 마 라 - -

거리에도 산비탈 에 도 내 집 마 당 가 에 도
꽃들 - - 배 이 진 날 에 빛 - 나 민 별 - 들

살 아 남 은 자 - 들 의 - 가 - 습 - 엔 아 직 도
송 정 리 - 기 지 춘 너 머 스 러 지 - 던 햇 살 에

칼 날 보 다 봉 송 아 보 다 더 옥 붉 은 저 꽃 - 들 이
떠 오 르 는 헬 리콥 터 - 날 개 노 을 도

찢 - 고 붉 - 게 - - - -

무엇 을 보 았 니 아 들 아 - - 나 는
나 는
나 는

26 F#7 Bm
깃 발 없 는 진 압 군 을 보 았 소 -
옥 상 위 의 저 격 수 들 을 보 았 소 -
태극 기 아 래 시 신 들 을 보 았 소 -

이 노래는 공중과 3사의 심의 판정이 엇갈려 한동안 판정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던 대중가요이다. 결국 MBC에서 가장 먼저 “<5·18>이 다소 직설적이긴 하지만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이미 정착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방송가판정을 내렸다.’⁹⁾

<악보 21-2> 5·18

무엇을 들었니 팔달아 — 나는

뱅크들의 행진 소릴 들었소 — 아
 난사하는 기관 총 소릴 들었소 — 이
 정규하는 통곡 소릴 들었소 —

우리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날
 디에 도 붉—은—꽃—을—심—지—마—라, 여기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희수되지 않았네
 망—월봉인덕 배기의 노이 음—으로 말하네

어디에 도 — 붉—은—꽃—을—심—지—마—라
 있—지—마—라 있—지—마, 꽃—잎—같은—주—검—과—훈—장

소년들의 무덤 앞에 —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누이들의 무덤 앞에 —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오 — — — —

정태춘이 광주민중항쟁에 보낸 헌사로 평가되고 있는 이 노래는 대중가요분야에서도 5월 광주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태춘은 본래 서정적 포크음악을 하다가 사회를 향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동안 운동권에서 음악활동을 했었다. 그의 작품으로 5월 관련 민중가요 외에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를 다룬 <장마, 버섯구름

9) 무등일보, 1998/04/29

의 노래, <종로에서>, <아, 대한민국>등의 민중가요와 농민들의 어려움을 표현한 <우리들의 죽음>, <저 들에 불을 놓아> 등이 있다.

2) 무등산 엘레지

1987년에 발표된 <무등산 엘레지>는 대중가요 <옥경이>, <칠갑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 많은 히트가요의 가사를 쓴 조운파의 가사에 대중가요 작곡가면서 김점도의 작곡으로 <칠갑산>으로 잘 알려진 주병선이 노래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순수대중음악인 셈인데 5월항쟁 동안 희생된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1987년 7월에 반도음반에 의해서 발매되었다.

<악보 22-1> 무등산 엘레지

무등산 엘레지

조운파 작사
김점도 작곡

Chord symbols: Cm, Dm, G7, Fm, Cm, Cm/B, Cm7/Bb, Cm6/A, Ab, G7, Fm, G7, Cm, Dm, G7, Cm, G7.

안개

긴 계곡을 스쳐오는 솔바람은 내님
산 봉우리를 서성이는 저구름아 비피

의 승걸처럼 가슴을 파고트-는 데 목이 매
어 내리거든 이 가슴도- 찢어서다 오 울다 떠

이 불러봐도 그님은 대답없고 새 소리
난 그저리에 잔디만 수북한 데 바람 쫓

만 들려오 내 매이리만 돌아오 내 산아산
애 흠어지 는 꽃잎이 예치름 다 산아산

작곡가 김점도는 KBS 가요무대 자문위원이며 가요자료 수집광으로 알려져 오다가 지금은 자신이 30여년간 수집해오던 대중가요의 자료를 기증하고 인천 예총지회의 장소제공으로 설립할 수 있었던 한국가요사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악보 22-2> 무등산 엘레지

아 무등산 아 님 계 신 곳 어디에 나
 아 무등산 아 님 계 신 곳 어디에 나
 나

3) 그 외의 대중가요

아마도 가장 먼저 5월 광주를 표현한 대중가요는 아마도 인순이가 불렀던 <여기가 어디냐>일 것이다. 그녀가 1984년 처음 이 노래를 취입할 때는 아래와 같이 '광주 광주'를 외쳤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후에는 후렴의 '광주'대신 '한줌 한줌'으로 바뀌어 버렸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여기가 어디냐 꿈속에 그리던 곳 꿈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 나 여기
 떠났던가
 정든 내 땅 다시보자 눈물이 앞을 가리네 나 떠난 뒤에 누가 너를 이
 령게 아껴주었나
 여기가 어디냐 추억이 숨쉬는 곳 정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 나 여기
 떠났던가

정든 내 땅 다시보자 너도 많이 달라졌구나나 떠난 뒤에 누가 너를
이렇게 아껴주었나

여기가 어디냐 어머님 계시던 곳 정이 그리워 꿈이 그리워 나 여기
다시 또 왔네

광주 광주 다시보자 내 어찌 너를 잊으라 나떠난 뒤에 누가 너를 이
렇게 아껴 주었나

광주 광주 다시보자 내 어찌 너를 잊으라 나떠난 뒤에 누가 너를 이
렇게 아껴 주었나

광주 광주 다시보자 내 어찌 너를 잊으라 나떠난 뒤에 누가 너를 이
렇게 아껴 주었나

(한층 한층 다시보자 내 어찌 너를 잊으라 나떠난 뒤에 누가 너를 이
렇게 아껴 주었나)

이선희가 부른 5월광주와 관련된 노래로는 윤행기, 이선희가 작사하고 윤행기가 작
곡한 <오월의 햇살>이 있다. 이 노래는 1989년 발매된 이선희의 음반 제5집에 실려
있다.

어디선가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보이는 건 쓸쓸한 거리 불어오는 바람뿐인데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쓸어 올리며
가던 걸음 멈추어 서서 또 뒤를 돌아다보네
어두운 밤 함께 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가고
아침에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머물다 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오월의 햇살 가득한 날 우리 마음 따스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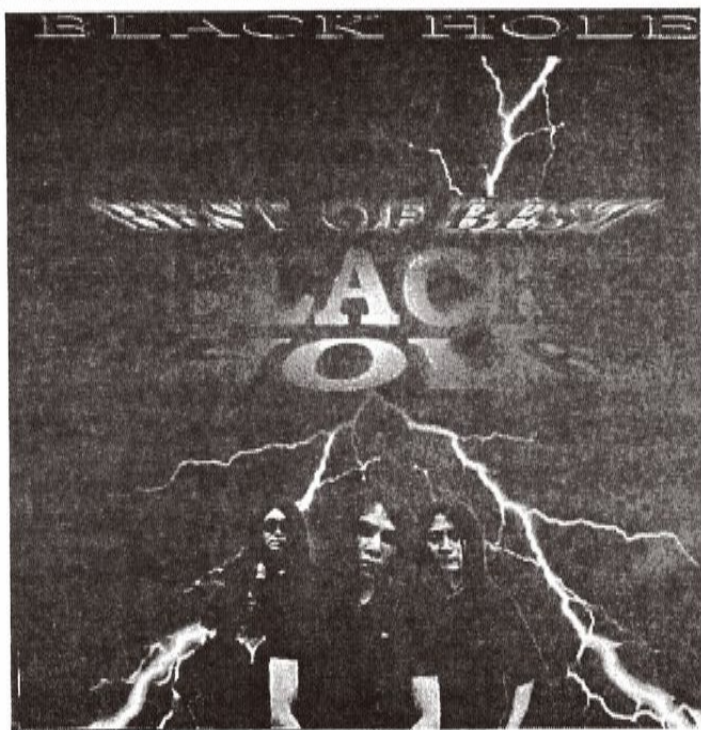
Rock 그룹 블랙홀이 부른 <마지막 일기>는 1980년 5월 27일 오월항쟁의 마지막 밤
도청을 사수하겠다고 남았던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의 메모에 근거해 가사를 구
성하고 작곡한 노래이다.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들이닥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청을 죽음으로 지키려했던 그들의 사명감 뒤에는 그러나 죽
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블랙홀의 리더 주상균이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다른 운
동가요와는 전혀 다른 Rock이라는 장르의 작품으로 블랙홀의 앨범 제4집 「Made in
Korea」에 실려 있다.

고향이 전주인 주상균은 이 노래 외에도 2집의 <녹두꽃 필 때에>와 4집의 <잊혀진
전쟁>에서 동학혁명의 이야기를 담았고 4집의 <1:4갈등>에서는 지역 간의 갈등을 노

래하고 있다. 그들은 꾸준히 자신들의 노래를 통해 사회를 들여다보고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마지막 일기>의 가사이다.

사실 두려워요 내게 다가올 시간이 아직 내겐 너무도 벅차요
먼저 떠난 친구들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아직도 내 가슴에 흘러요
이 어둠이 가기 전에 나의 짧은 시계소리 멈추고 나도 잊혀지겠지
달빛 아래 펼쳐있는 나의 일기장에 그런 어머니 영원히 사랑해요
못다한 나의 숨결은 오월의 하늘 위에 붉게 떠있는
눈부신 큰빛이 되어 그리운 모든 사랑을 바라볼거야
이 어둠이 가기 전에 나의 짧은 시계소리 멈추고 나도 잊혀지겠지
달빛 아래 펼쳐있는 나의 일기장에 그런 어머니 영원히 사랑해요
못다한 나의 숨결은 오월의 하늘 위에 붉게 떠있는
눈부신 큰빛이 되어 그리운 모든 사랑을 바라볼거야

<그림 10> <마지막 일기>가 실린 블랙홀의 앨범



3. 예술가곡

1) 이 오월에

<이 오월에>의 작곡가 이민수는 1981년 광주항쟁 직후 병역을 마치고 복학한 학생이었다. 그는 1981년 5월 동대학 사범대 영어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금자의 시 <이 오월에>가 전남대학교 학보에 실린 것을 보고 강한 창작욕을 느꼈다. 그는 곧장 작곡에 착수해 가곡으로 완성했으나 오랫동안 발표를 미뤘다가 1989년에야 교수의 신분으로 시민회관에서 연작회의 작곡발표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작곡가와는 달리 5월 항쟁을 직접 목격하고 겪었던 이금자는 1년 전 무서웠던 생생한 기억인 '총, 칼, 피, 고함소리, 관, 죽음, 피 묻은 태극기 등을 깔깔한 웃소리, 붉은 나팔소리, 비명소리, 붉은 보자기 등의 은유적 표현으로 격렬한 내적 감정, 즉 고통과 절망, 두려움을 전하고 있다. 이민수는 이러한 분위기를 표현주의적 기법의 음악으로 테너, 클라리넷, 피아노를 매체로 작곡하였다.

그의 음악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오히려 장7도의 꾸밈음, 장2도와 감5도의 불협화음, 증4도의 화음 등 기존의 조성음악에서 피하는 모든 불편한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여 극단적인 절망과 불안, 두려움을 전하고 있다. (<부록 1> 참조)

2) 망월동 연가

시인 이지엽은 그의 연작시를 「현대시학」에 2년간에 걸쳐 발표한다. 이 연작시들 중에서 몇편을 골라 작곡가 윤대근은 곡을 붙여 작곡발표회를 열었다. 1994년의 일이다. 이날 발표된 작품 중에 <망월동 연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망월동 연가>는 무겁고 느린 코랄로 시작한다. 왼손에서 반음씩 하행하다가 낮은 음역에서 옥타브 진행을 계속하면서 망월동이 가지는 무거움을 표현한다. 그러나 점차로 16분음표의 아르페지오로 변하고 왼손은 자주 반음씩 하행하거나 상행하면서 불안정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곡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결국 A-B-A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록 1> 참조)

3) 그 밖의 예술가곡

이민수와 윤대근의 가곡 외에도 한만섭, 김진선, 김성훈, 나은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가곡이 창작되었다. 다음 곡들도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 가곡 <5·18에가> 정동수 작시, 한만섭 작곡, 1993년
- 가곡 <신부머리에 고깔쓰듯> 김종 시, 김성훈 작곡, 1999년
- 가곡 <오월이 오면> 윤영훈 시, 김진선 작곡, 1994년
- 가곡 <그대의 하늘길> 양성우 시, 나은하 작곡, 2001년

4. 창작 판소리 <오월광주>

판소리는 서사적이며 동시에 극적인 장르로서 역사적 사실이나 담시와 같은 장문의 표현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졌다. 판소리라는 장르가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창작판소리보다는 이미 짜여진 <춘향전>, <홍보가> 등 전통 판소리 다섯 마당을 중심으로 주로 연행되고 있으나 1900년대 초 <최병두 타령>, 1930년대의 박동실의 <열사가>, 박동진의 <성서판소리> 등 판소리가 창작되기도 했다. 임진택도 <오월광주> 이전에 완판이라 할 수는 없어도 몇 편의 창작판소리를 짜기도 했었다. 7, 80년대의 사회를 비판하던 시인 김지하의 담시 <소리내력>, <똥바다>, <오적>에 판소리 가락을 얻어 이미 수백회의 공연을 해왔었다. 목포출신 시인 김지하가 썼던 위의 시들이 이미 그 어투와 리듬이 판소리에 적당하게 창작되어 있고 전통적 해학과 풍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판소리로 태어날 운명을 가진 것 같은 시들이었다. 임진택은 판소리를 배워본 적도 없었지만 이를 놓치지 않았고 창작판소리를 위하여 보성소리의 보유자 무형문화재 정권진을 찾아가 5년의 수련 끝에 창작에 임하게 되어 위에 제시한 세 편의 창작 판소리를 창작해냈다.

1990년 임진택은 다시 새로운 창작판소리를 발표했다. 연행에 앞서 창작동기는 '1980년 5월 도청을 사수하다 사살당한 친구 윤상원을 그리워하다가 창작 판소리 <오월광주>를 짜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속해서 그는 오월항쟁으로 생명을 유린당한 넋을 기리기 위해, 또 오월항쟁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변혁운동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오월항쟁 주체의 입장에서 실상대로 형상화해서 예술적인 미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구연한다고 밝힌다.¹⁰⁾

이 작품은 1990년 민요연구회에서 첫 완창발표회를 가졌고 1994년(광주항쟁기념 문화제와 조선대학교 대동제 기간), 1995년(서울 대학로 오늘 소극장), 1999년 윤진철의 <오월광주>전수 기념공연, 2000년(5·18 민중항쟁 제20주년 기념행사) 등에서 연행되었다. 광주의 소리꾼 윤진철은 이를 전수받아 다시 '윤진철류'로 발표하기도 했다. 창작판소리 <오월광주>의 가사와 장단은 <부록 2>으로 붙인다.

Ⅲ. 오월음악의 의의와 전망

1980년 5월을 표현하거나 항쟁의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월운동은 정치, 사회적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여러 문화적 산물을 생산해내었다. 그 중에서도 노래는 오월운동기간 내내 운동에 많은 에너지를 제공했으며 운동기간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는 또 다른 노래를 생산하는 계기가 되어 수많은 노래들이 창작되었다.

10) 정성훈, "신작판소리 <오월광주> 연구: 임진택 창본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50쪽.

80년대 초반에 문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 가명을 쓰거나 창작자의 이름 없이 노래를 세상에 내어놓아 지금도 작곡자나 작사자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이 있다. <오월의 노래2>가 그러한 경우이다. 최근에는 가명이 밝혀져 알려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작곡자와 작사자가 잘못 알려진 노래도 있는데 <광주천>의 경우가 그러하다. 조사결과 이 노래의 창작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한 공동작품이었다. 80년대 문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는 창작에 있어서도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다만 터져 나오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만이 중요했었다.

이렇게 창작된 노래와 가요, 가곡, 판소리는 연행을 통해 당시에는 기억을 일깨우며 운동의 에너지를 부여했고 지금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족하나마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가 만들어져 전국민을 대상으로 5월의 참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감히 이름도 내걸지 못하고 창작하고 불법 혹은 비합법적인 앨범을 제작해 전국 학생회나 운동권에 보내던 시절과 비교하면 대단한 사회, 정치적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이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 민중가요, 가곡, 판소리, 대중가요 등을 통해 진행되었던 음악운동은 한 몫을 감당했었다.

창작판소리 <오월광주>는 장르의 특성상 그 청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렬하다. 매우 직접적인 표현을 지닌 아니리와 소리, 그리고 현장감 있는 극적 표현을 지닌 연행의 결과이다. 창작자이며 연행자인 임진택은 이 판소리가 전통판소리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완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소리 <오월광주>가 지니고 있는 내용은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내용만으로 열흘간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에 와서는 늘 '오월광주가 이 열흘만 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27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오월광주의 의미는 재해석되었으며 그 정신이 더욱 발전되어 재정립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판소리 <오월광주>의 후편이 나와 완성된 느낌의 오월의 광주가 표현되기를 바란다. 또 과거의 비합법 노래 책속에, 묵은 테이프 속에 묶여 박제화 되어가고 있는 민중가요와 가곡, 대중가요들은 더 자주 연주되어 그 생명을 되찾고 우리의 기억을 살리면서 다시는 과거의 패배나 실수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더욱 나아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노래, 미래의 노래가 생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하여 오월문화제기간을 포함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여 기존에 생산된 오월음악의 재연하고 또 새로운 창작곡, 훨씬 더 예술적으로 승화된 오월음악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노래는 멀리멀리」 상,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노래는 멀리멀리」 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우리시대의 노래 1」, 서울: 민맥, 2000.
「우리시대의 노래 2」, 서울: 민맥, 2000.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마산: 마산YMCA.
윤대근,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광주: 삼일정판사, 1994.
「해방의 코스모스」, 광주: 전남대학교 교지편집인 연합/전남대학교 노래패 연합, 2000.
「해방의 코스모스」,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2002.

논문

- 노동은, “5·18과 음악운동”,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4.
정성훈, “신작판소리 <오월광주>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년.
정유하, “5·18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표현 양식”, 「음악과 민족」, 제26호, 2003.
정유하, “5·18 의례음악의 특성과 변화의 양상”, 「지역사회연구」, 제12권 제1호, 2004.

CD

- 「노래를 찾는 사람들 2·3」, 서울: 노래를 찾는 사람들, 2004.
박문옥, 「양철매미」, 아세아레코드.
범능, 「오월의 꽃」, 광주: 소리모아.
「아름나라노래」, 마산.
임진택, 「오월광주」, 서울: 서울음반사, 1994.
정태춘·박은옥, 「정동진/건너간다」, 서울: 한국음반, 1998.

인터뷰

- 고승하, 2007년 9월
김종률, 2003년, 5월
박치음, 2003년 5월
유지 타카하시, 2007년 10월~11월
임진택, 2007년 10월

<부록 1> 예술가곡

<부록 2> 창작판소리 <오월광주>

창작판소리 <오월광주>

10·26 사건과 그 여파 대목

아니리

이때는 어느 땐고.

1979년 10월 유신독재자 박정희씨가

그의 오른팔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

비명에 간 뒤,

통일주체국민회의라 허는 데에서

최규하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해 12월

합동수산본부장 전두환에 의해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체포되는

하극상의 사건이 일어났었다. (어

이~ 북장단 딱~)

과도정부 개헌서 유포 대목

그러던 중 해를 넘겨

1980년이 되었는데

길으로는 민주화의 봄이요.

속으로는 안개정국이라. (옴지~)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세마

치 장단으로

신년벽두 과도정부

이~ 원~ 집~ 정~ 부~ 제

개헌서를 시중에

유포~허여~ 놓니~(헛~)

민~심~은 흥흥하고

경제마저 불황이라 (헛~)

사방~에~서~ 조업단축에 휴업 폐

업

급증한다 (얼씨구 헛~)

그해 4월 사북에서

광산~노동자 수천명이

읍내를 점령하니 (헛~)

무~력~한~ 과~도~정부~ ~ ~ ~

는

속수~무책~이로구나(얼씨구 헛~)

서울역 앞 학생시위 대목

이때여 대학생들

학원자율 추진하고 (헛~)

이어 사회민주화

투쟁으로 나아갈제

도섭 구호조로

비상계엄 해제하라 (허이~)

유신잔당 물러가라 (헛~)

정치일정을 단축하라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얼씨구 헛~)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세마

치 장단으로

서울~역~ 앞 집결하니 (헛~)

운집인과 15만이라. (얼씨구 헛~)

학생지도부 허는 말이

이만 ~ ~ ~ 하면 우리 뜻은
충분히 전달 ~ 됐다 ~ (헛 ~)
당분간 시국 ~ ~ ~ 추이를 (허이 ~)
관망 ~ ~ 키로 ~ ~ 하자“
자진해산 하였구나 (얼씨구 헛 ~)

아니리

진양조 세마치 장단으로 단가 곁해
서 지금 정세 설명을 주욱 ~ 했는데
아직 추임새 한 번도 못해본 분들
있지요? (칭중 : 웃음) 지금 교수님
이랑 여그 저 바랍잡이로 데려다 놓
은 사람이랑 추임새를 ~ 호흡을 맞
춰서.

햇불대행진 대목

아니리

이때여 저 호남의 광주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한껏 고조되
고 있었으니,
광주로 말 할 것 같으면
일찍이 동학농민전쟁에서 허서 의병
투쟁으로,
또 일제시대 학생운동으로 해서
민중운동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온 곳이라 (그렇지 ~)
5월 들어 광주 지역의 대학 ~ 전문
대학 ~ 학생들이
도청 앞 분수대로 집결을 허는디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자진
모리 장단으로

학생들이 모여든다

전남대생, 조선대생,
광주교대, 조선공전,
동원전문, 서강전문,
동신실업, 성인경상,
기독교간호 전문대생
까지 합세하니
그 숫자가 3만여라

노래도 불러 구호도 외쳐
시국선언문 발표
시민에게 드리는 글,
교수님께 올리는 글,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글까지
차례차례 낭독하니
날이 우뚝 저물었다.

수백개 햇불에다
불을 활활 지피

1개조는
금남로로 해서 유동삼거리로
복개상가 지나 중앙여상으로
현대극장 거쳐
다시 금남로로 행진하고,

또 한 개조는
체신청으로 해서 산장입구 지나
산수동 오거리 나아갔다.
동명파출소 노동청을 돌아
다시 분수대로 집결하니

햇불 ~ 대 ~ ~ 행 ~ ~ 진이 ~ ~

장 ~ ~ ~ 엄 ~ ~ ~ 허구나.

비상계엄령 선포 대목

아니리

이때여 전두환씨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내 강경소장파는 (어 ~ 이 ~)
이 소장파도 계급이 모다 소장이었
던가 보더라 (칭중 웃음)
이미 정권찬탈의 야욕을 굳히고
병력배치와 진압훈련을 착착 진행하
던 중에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돌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선포
허는디
서슬퍼런 설령제였다. (그렇지 ~)

**우조길의 선율을 설령제 성음과 중
중모리 장단으로**

계엄포고를 발한다.
계엄포고를 발한다.
일체의 정치활동 중지한다 ~ (어먼
어허이 ~)

정치목적의 집회는
옥내외 막론코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은
사전에 검열을 득할 것. (아먼 어허
이 ~)
각급 학교는 이 시각부터
무기한 휴교조치하고,
유언비어 유포 및 날조는
엄중하게 금지 (어허이 ~)
계엄포고령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하여
가차없이 처단한다 ~ (어허이 ~)

이렇듯 으르는 소리
텔레비 라디오 생방송으로 (얼씨
구 ~)
땡그렇게 들린다.

오월광주 접화 대목

아니리

계엄당국은 (으음 ~)
김대중씨를 비롯한 제야정치인과
민주인사들을 불시에 급습
체포하여 놓고 (어이 ~ 복장단
딱 ~)
특히 서울에 이화여자 대학교에 있
던
전국 각 대학에 총학생회 임원들을
모조리 연행을 헌 뒤에
전국 각 대학교마다 계엄군을 증강
배치시키는데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모
리 장단으로**

얼룩무늬 공수부대
전남대학 진주하야 (어허이 ~)
교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할제 (으음 ~)
학생들 모여들어 (허이 ~)

도섭 구호조

“계엄령 해제하라”

“휴교령 철회하라”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모리 장단으로

공수부대 중대장이

갑자기 뛰어나와

“돌격 앞으로!”

공수대원들 우르르르 (어허이~)

쇠심이 박힌 곤봉으로

마구 후러갈기니 (허이~)

학생들 도망치며

도섭 구호조

“시내로 나가자”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자진모리 장단으로

광주신역 광장에서

전열을 정비하여

금남로로 나아간다 (어 허이~)

대기하던 전투경찰

핑 핑

최루탄을 쏘아대니

시위대 흩어지며

도섭 구호조

“시민 여러분 동참합시다. (좋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소.” (허이~)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자진모리 장단으로

경찰과 습바꼭질 계속할제,

그때여 군용트럭 10여 대가

맹속력으로 당도 (허이~)

계엄군들 내리는데

공수단이 분명쿠나 (허이~)

한손에는 대검들고

또 한손에는 곤봉들고

살기등등

표적을 정해서 끝까지 추적

닥치는 대로 패고 찌르는데, (어 허이~)

우조길의 선율을 계면 성음과 자진모리 장단으로

피투성으로 늘어진 사람

다리와 머리를 맞들어서

몇 번 추스르더니 (허이~)

트럭 위로 내던진다. (허이~)

계면길의 선율을 계면 성음과 자진모리 장단으로

숨어보던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섭 개탄조

“아이구 저놈들이 사람 다 죽이네” (허이~)

계면길의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중중모리 장단으로

“허허 이게 웬짓이여 (어먼~)

이것이 웬짓이여 (어허이~)

학생들이 무슨 죄라 (어허이~)

광주시민이 무슨 죄라

이리도 무자비하여“ (그렇지~)

일제 때 순사도 겪어보고

공산당도 겪었지만 (얼씨구 어허
이~)

이리 잔인한 놈들은 난생 처음이네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마는

망연~개탄을 허는구나. (으음~)

화려한 휴가 대목

아니리

(잠시 침묵이 깔린다)

이날 밤 (으음~)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한 소문이 (으
음~)

전화줄을 타고

또 이웃집 담을 넘어

광주 전역에 불길처럼 번진지라

모두들 분노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겠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궁금해진 시민들이

꾸역꾸역 시내로 몰려나오니 (으
음~)

삼시간에 금남로가

군중으로 가득 찬지라. (그렇지~)

전투경찰이

페퍼포그를 쏘아대면서

해산할 것을 종용커늘

최루탄을 쏘아댔으나

이때 군중들은 물러서지 않고

투석전을 벌이면서 대항을 허는데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잇머

리 장단으로

공수특전 대원들

장갑차를 앞세우고

진치며 들어온다

철망달린 철모쓰고

개머리관으로 둘러쳐

착검한 소총으로

가차없이 찢러댄다.

분노한 군중들 (허이~)

화염병으로

격렬하게 맞설제 (허이~)

공수부대 거동짜라

캘리버 기관포를

장갑차에 쏘고

시위대열 한 가운데로

미친 듯이 달려든다. (어 허이~)

뒤쳐진 시민들

여지없이 당할 적에

공용터미널 지하도에선

출입구가 봉쇄되어 (어허이~)

수십명이 당했구나 (허이~)

도섭 슬프고도 노여움이 담긴 성음
으로 고발조

부상자를 이송하던
택시기사까지도
대검으로 배를 찢러

계면길의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엮
머리 장단으로

무참하게 살해되니
광주시내 전역이
아비규환이로구나. (허이~)

계면조의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중
모리 장단으로

(어으~)
가스냄새 자욱하고
가로등은 깨어지고
길가에는 돌맹이들 유리조각들
흩어져 널렸는디 (허이~)
어둠속에 사람들은 (어허이~)
헤어질 줄 모른채
두 주먹 불끈 쥐고 (허이~)
“광주를 구해야 허 (그렇지~)
광주를 살려야 허“ (어어 허으~)
속으로만 울음운다. (어어 허으~)

아니리

이렇듯

잔인한 학살을 자행한
공수특전단의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였겠다. (허이~ 복장단
딱~)

시민들이 시내로 몰려나오는 대목

아니리

이튿날 아침이 되자 (으음)
시민들이 꾸역꾸역 시내로 몰려나오
는데
택시기사들은 특히 분개해야
따로 대책을 세우기로 의논들을 허
고,
시장 상인들은
“이판에 무슨 장사냐”
하면서 밖으로 나오고,
가게 점원, 요식업소의 종업원들도
“시방 우리가 이려고 있을 때냐”
하면서 밖으로 나오고,
회사원들도 일이 손에 안 잡히니
공연히 밖으로 나오고,
가정주부·할머니들도
(이빨 빠진 할머니 목소리로)
“아, 시방 일이 워터케 돌아간다
냐.”
안달이 나서 밖으로 나오고,
술집아가씨들도
(새침떼기 아가씨 목소리로)
“아, 시방 먼 일이 났는가본디
우리라고 라만히 있을 수 있냐.
시간도 남는다.“(충중 : 웃음)
덩달아 나오니
전시민 전계층이
몽땅 거리로 쏟아져 나왔겠다.

전두환이 정체를 깨는 대목

아니리

사람이 워떡게 많이 쏟아져 나와버렸던지

자연 연좌농성이 되야부었는디

꼭 여그 앞에 앉은 사람들 모양이 되었던가 보더라.(청중 : 웃음)

한 사람이 나와갓꼬

구호를 외치믄

모두들 따라 외치는디

누가 이렇게 외쳤던가 보더라.

(부채를 든 손을 허공으로 내 지르며)

“살인마 전두환이를 찢어죽이자~.”(청중 : 찢어죽이자~.)

그때도 아마 이렇게 따라했던가 보더라.(청중 : 웃음)

웬 농부 차림에 사내 하나가

실컷 따라 외쳐놓고는 슬그머니 자기 손을 내려놓고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양 눈을 금적끔적 대면서)

“찢어죽이는 것은 찬성인디 전두환이가 누구여?”(청중 : 웃음)

“아니 이 사람이 이복서 넘어왔는가 아 얼마전에 박정희가 죽었을 때

거 텔레비 나와갓꼬는

수사본부가 무너가 설치대는 놈 있잖여?”(청중 : 웃음)

(광대가 손짓으로 머리 벗겨진 흉내를 내며)

“아, 이 놈 말여?”(청중 : 웃음 고조)

“아, 그러. 아 이 놈이 정권을 먹것다고

시방 공수대를 내려보냈당게.”

“아, 저런 시방구 시러베아들놈이.”

(청중 : 웃음 최고조)

대강 이리 했것다.(고수 : 어~이~ 북 장단으로 딱 치며 맺음)

제1차 금남로 전투 대목

아니리

이때여 계엄군은 (으음~)

탱크부대가 진을 치고

공수부대가 앞쪽으로 배치되어

돌격명령을 기다릴제 (허으~)

일 출 즉 발 위기가 감돌 적에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중모리 장단으로

이때여 유동 쪽에서 (어허~)

수백 대 차량들이

헤드라이트 울려 키고

경적을 울리면서

금남로로 들어온다~ (얼씨구~ 어~헛)

12톤짜리 대형트럭

선두에다 세우고 (그렇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으음)

영업용 택시들 뒤따를제 (어허이~)

트럭 뒤에 청년들 (어헛)

머리며 질끈 동여매고 (어으)

태극기르 흔들며

도섭 구호조

“여러분 뒤를 따르시오 ~
군 저지선을 돌파합시다“ (얼씨구 ~)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종종
모리 장단으로

일진일퇴 공방전을
한나절이나 전개한다 (얼씨구 어
이 ~)

아니리

이름하여 제1차 금남로 전투라. (어
이 ~)

방송국 방화 대목

아니리

이때여
흥분을 현 광주시민들은 방송국을
들어가 갓꼬,
(분기가 충천한 사람 목소리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사실대로 보도를 허라 이 말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디
가량이 벌리고 흔들어대고 있는 꼴
이나 내보내고 있는 것이 방송이
여?“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확 ~ (소리꾼이 부채를 퍼러 했으나
잘 퍼지지 않았다.) 불을 질러버렸
던가 보더라.

방송국 기제가 고장이 났던가 보더
라. (청중 : 웃음)

전옥주가 가두방송 하는 대목

이때여 어떤 여인 확성기를 들고 다
니면서 외치는데
(양손을 모아 확성기 모양을 만들어
입에 대고는)
“광주시민을 몰살하려는 공수대놈들
을 몰아냅시다.
우리는 맨주먹입니다.
그러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광주항쟁에 여결이
라고 불리는 전옥주라는 여인이라.

신역 전투 대목

우조길 선율을 우조성음과 자진모리
장단으로

새벽 두시가 넘도록
가두방송 계속하니 (어이 ~)
수천명 시위대가
양동 복개상가 거쳐
광주천변 따라가
무등경기장 경유 (어으 ~)
광주 신역에 집결할제,
다섯 갈래 도로마다
경비가 삼엄하다 (허이 ~)

한 청년 트럭에다
드럼통을 잔뜩 채워
불을 얼른 지핀 후 (어이 ~)
전속력으로 질주

계엄군전방 20m에서
차장 밖으로 탈출하니
트럭은 그대로 돌진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역전 앞 분수대에

광! (하이~)
평
불기둥이 치솟는다. (하이~)

또 한 청년 트럭에다
드럼통 잔뜩 싣고
불을 얼른 붙인 후에
전속력으로 질주 (하이~)
바리케이드 부수고
역전 앞 분수대

광!
평! (하이~)

필~사~적으로 공격하니
계엄군 할 수 없이
퇴각을 하는구나
(청중 중 한 사람이 크게 열씨구 하
야~ 외친다.)

아니리

이 때 가장 열심히 싸우던 사람에
일가친척 되는 사람이 여기 있었던
가 보더라.(청중 : 웃음)
이때가 새벽 4시가 이룸하여 신역
전투였다.

시민공동체 대목

아니리

이날 새벽부터 (으음~) 시위전화가
완전히 끊기고 (으음)

고속버스 열차도 통행이 막히고 (으
음~)

신문과 방송의 편집도 중단이 되었
는다

이날사 계엄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광주에 폭동이 일어났다” (어이~)
하고 발표를 했었다.

허나 광주시는 이미 계엄군의 통제
를 벗어나 시민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있었으니 (으음~)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모
리 장단으로

아침부터 주민들이 (어~ 하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렇지~)

시위차량이 지나가면
한 합지씩 실어주고 (그렇지~)

양동시장 대인시장 (그렇지~)
학동시장 산수시장

서방시장 아줌마들 (하이~)
길목마다 조를 짜서 (아암~)

김치에다 계란에
김밥에다 계란에

음료수에 빵에다가 (그렇지~)
갖가지 음식을

길바닥에 늘어놓니 (열씨구~)
한 청년 주먹밥을 (열씨구~)

두 손에 받아들고
한입에 먹더니만 (좋다~)

도섭 아양조

“아침씨 고맙소 잉, 내가 그 공수놈
들 짝 몰아낼팅게 한 접시 더 주소
이잉.”(청중 : 웃음)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모
리 장단으로

다짐허니

한~소오울~밤에 한식구라 (어허
이~)

술집 아가씨들도 현혈하는 대목

아니리

이때여 (어이~)

광주시내 병원이란 병원은
모다 피가 모자란 바람에
현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는디
적십자 병원에는
웬 아가씨들이 단체로 몰려와 갖꼬
현혈을 자청혈제,
속눈썹에 입술연지 매니큐어 보아허
니
황금동 술집 아가씨들인지라.
요 서울로 치른 야마 588 아가씨쫓
됐던가 보더라. (청중 : 웃음)
병원당국서는 난처허여
“호의는 감사허제마는 보건위생상
죄끔 곤란하고만요” (청중 : 웃음이
커진다.)
아가씨들 화를 내여 눈썹을 치켜뜨

고

입을 뽀로퉁해 갖고는
(불쾌하다는 듯 부아가 치민 목소리
로)

“아니 시방 이 급헌 참에 보건위생
이 다 뛰시디요?

아 우리는 광주 시민 아니디요?

우리 피도 깨끗허요,

검사 해볼라든 해보시오“

들이 대니 별 수 없이 현혈을 받았
것다.

사용 여부는 확인이 안되앗어도.

(청중 : 웃음)

어떻튼 (어이~)

문자 그대로 피로 뺏어진 공동체라!
(어이~)

해방광주 대목

아니리

한편, 이날 시내 곳곳에서는
도민들 쫓기를 촉구하는 격문과 전
단들이 긴급히 살포되는디 (허이~)
(야무진 목소리로 씩씩하게~)
동포여! 이 억울하고 분한 한맺힌
광주시민의 분노를 아는가?
삼천만 애국동포여, 이 억울한 죽음
의 소리가 들리는가?
애국시민이여, 애국근로자여, 애국
농민이여,
전 도민은 승리의 그날까지 매일 정
오를 기하여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모이자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자진모

리 장단으로

광주 전 시민이
도청으로! (어이~)
도청으로! (좋다~)
집결하니
그 수가 30만이라 (허이~)

이때여 도청상공
군 헬리콥터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매아닌 애국가가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총소리
탕~ 탕~
탕 탕 탕 (어이~)

선두에 선 사람들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시위대열 일순간에 좌우로
물결처럼 좌악~ (허이~)
갈라진다. (헛~)

도섭 구호조

“저놈들이 발포를 했다
우리도 총이 있어야 한다“ (허이~)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자진모
리 장단으로

시위대 차량들이
광주시를 빠져나가
총기에다 탄약에다
실탄을 확보하여

도청 앞으로 다시 집결, (아이구
야~)

총격전을 벌이니
시민군이 이 아니냐. (좋지~)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엇모
리 장단으로

계엄군 거동봐라
관광호텔 전일빌딩
요소요소 건물마다 (허이~)
메복 은폐해야
조준 사격할제
하늘엔 헬리콥터 (어이~)

돌연 저공비행
기총소사를 가한다 (어이~)

시민들 황겁하야
건물 속에 숨을 제 (헛~)
시민군 거동 봐라
특공대를 조직하야
계엄군에 맞선다 (헛~)
LMG 기관총을
어깨에 메고

옥상으로 올라 (어이~)
도청 내부를 향해
기관총을 설치 (허이~)
가늠자 세워 목표를 조준
왼손으로 받침목 잡고
오른손으로 방아쇠 (얼씨구V)
숨을 한번 들이쉬고
바짝 잡아당기니 (어이~)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
연속 발사되는구나 (얼씨구 어이~)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빠른
엇모리 장단으로

계엄군 거동봐라
계엄군 거동봐라.
장갑차 한 대가
되로를 확보터니

군용트럭 십여 대가 (어이~)

재빨리 도망치고 (어이~)
경찰국 간부들은
도청 뒷담을 넘어
허겁지겁 달아난다 (아 하~)

도섭 환희조

“만세! 이겼다!
(고수는 집어놓은 부채를 활짝 펼친
다)
(청중 : 만세~)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되찾았다 (얼씨구야~) (청
중 : 만세~)
광주시민 만세!“
해방광주 만세! (청중 : 만만세를 따
라 외치고 긴 박수 이어진다.)

아니리

이렇게 도청을 되찾는 대목까지 진
행되었던가 보더라. 헌데 광주항쟁
이 일어난 지 15년이나 되니까 쯤

끔씩 잊어먹은 대목이 생겼던가 보
더라. (청중 : 웃음이 계속 이어진
다.) 그래도 잊어먹은 대목보다는
기억나는 대목이 훨씬 많은 걸로 봐
서 (청중 : 아면~)머리가 그렇게 나
쁜 편은 아니었던가 보더라. (얼씨
구~ 외치고 북장단을 딱 친다.)

판소리라는 게 장단 하나만 틀려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계속 연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
는 건데 제가 이 판소리를 오래 간
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많은 사
실을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지
만 (청중 : 웃음) 쪼끔씩 잊어 버리
고 그랬습니다. 양해하시지요? 여러
분도 다 마찬가지니까. (청중 : 웃음
이 이어지면서 박수로 격려 하는 사
람도 있다.)

그런데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립니
다. 지난번에 제가 공연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구경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판소리 다 한 끝난 다음에
소리를 잘했는가 하고 궁금해서 오
신 분들한테 묻고는 어머님께도
“제가 잘 했습니까?”
물어보니 관심이 소리 쪽에 있는데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
“진택아! 외니라고 욕봤다.”(청중 :
웃음바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정곡을 찔러 주셨어요.

시민군의 암구호 대목

아니리

이렇게 도청을 탈환한 연후에 (헛기
침) (어이~)

계엄군을 몰아낸 시민군은 (으음~)
곧 외곽지역마다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 무장을 하여 경계케 할제, (어
이~)

이날밤 시민군의 암구호는
담배~

연기라~

연락집차를 이용해서
외곽지역들로 즉각 전달이 되었것
다.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담배~”(청중 : 연기~ 하고 받고
는 웃음이 이어진다.)

웬 시민군이 이렇게 많아? (청중 :
웃음이 커진다)

계엄군의 광주 봉쇄 대목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세마
치 장단으로

이날밤 계엄군은

20사단을 증파하고
광주지역을 봉쇄할제 (어이~)

송정리 방면은 화정동에서
화순 방면은 지원동에서
목포 방면은 대동고 앞에서
여순 방면은 문화동에서 (얼씨구
야~)

31사단 쪽 은 오지에서 (으음)
장성 방면은 동운동에서 차단
교도소 일대를 엄중 경계할제 (어
이~)

계면길의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세
마치 장단으로

광~주~시는~(히이~)

고립~무언이로구나~ (얼씨구 히
이~)

시민들이 시민군 맞이하는 대목

아니리

이튿날 동이 트니 해방광주 첫날이
라. (그렇지~)

시민군들 트럭에 올라 시가지를 누
비는다

시민들 환호하며 청량음료에 박카스
에

담배까지 몇 보루씩 올려주면서
시민군을 맞이하것다. (어이~)

유가족 시신 수습 대목

아니리

[서러운 목소리로 바꾸며]

이날 아침부터 도청 앞에 앰블런스
차가 들나드니

계면길의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진
양조 장단으로

사망자 시신을

분수대 앞에

일렬로 눕혀 놓는구나 (으음~)

자식 찾아 나선 가족들이

허둥지둥 물러들제
 시신 ~들~을~
 늘~어~놓고 (으음~)
 무명으로
 덮었~난디~ (으음~)
 새하얀 천 위로
 검붉은 핏자욱이
 얼룩져 배었구나
 무명천을 들쳐보니 (아앙~)
 머리통이 깨진 사람 (헛~ 어이~)
 얼굴이 몽~개~지고
 팔과 다리가 잘리우고 (얼씨구 허
 이~)
 내장이 터져나온 사람 (허이~)
 너무도
 참혹~ ~ ~ 허여 (어이~)
 눈뜨고는 볼 수가 없네.
 확인하던 가족들이~ (으음~)
 울~음~을 삼킬 적에 (어이 얼씨구
 허이~)

어떤 아낙이 시신 부여안고 통곡하
 는 대목

계면길의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중
 중모리 장단으로

어떤 아낙 한 사람 (허이~)
 어따 절릭 주잖으며 (어 허~)
 “아이고 이게 누구여 (어 허~)
 내 새끼가 죽었네 (어 허이~)
 엇그제부터 소식 없어 (어 허이~)
 행여 마음 조렸난디
 여기 와서 누웠다니 (어 허이~)
 에이 인두집을 쓴 놈들아 (얼씨구

허이~)
 국군이 되야 제 나라 백성을
 이리 죽인단 말이냐.“ (얼씨구 허
 이~)

시신을 부여 ~ ~ ~ 안고
 내리등~ 굴 치등~ 굴며
 방성~ 통~곡을 하는구나

시위 행렬 대목

아니리

이렇듯 하루가 지나고 (허이)
 해방광주 이틀째가 되었는데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모
 리 장단으로

아침부터 주민들이 (어 허이~)
 수백 명씩 집결하야
 도청 앞으로 행진하다 (어이~)
 플래카드 쳐들고
 피켓을 흔들면서
 들어올제 (어 허으~)
 도청주변 담벽에는
 울긋불긋 그림들과
 구호가 걸렸난디

도섭 구호조

전두환을 처단하라! (얼씨구 허이~)
 김대중을 석방하라! (어허이~)
 유신잔당 물러가라! (얼씨구 허이)
 비상계엄 해제하라! (어이~)
 노동삼권 보장하라! (청중 : 보장하

라고 따라 외친다.)
유신잔당 물러가라! (청중 : 물러가
라고 따라 외친다.)
광주를 사수하자! (청중 : 사수하자
고 따라 외친다.)

우조길의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모
리 장단으로

깃발처럼 필력인다 (어허이~)

미국이 항공모함 보낸 이유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대목

아니리

이날 아침
전일빌딩 앞에서
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
거늘 (아먼)
먼일인고 하고 가까이 가서보니
웬 대자보가 붙었으되 (으음)
미국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했다는
내용이라. (어이 복장단 딱~)
대자보를 쳐다보던 어떤 젊은이 하
나가
(즐겁고 경쾌한 목소리로)
“시방 미국이 이 사실을 싹 알고 있
웅께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만요.”
한 노인 이 말 듣고 혀를 절절 차면
서
(엄숙하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 나라가 못되
야.”
“아 영감님 요상한 말씀도 다 있소
잉.

그라민 뗏힐라고 비싼 휘발유 들여
감서 항공모함을 보냈당가요?”

“그 항공모함이 광주사람 죽일라고
보낸건지 살릴라고 보낸건지 알수
없웅께 허는 말이여.”(그렇지)

“어, 점점 더 이상한 말씀만 하시
네. 영감님, 여그 광주 시민 맞어
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내가 여그 웅애할 적부텀 살아온 사
람이여.”

설왕설래 태격태격 했것다.

시민 성토 대목

아니리

이때여 광주시내 유지들로 구성된
5·18 수습대책위원회는 (으음~)
무기를 회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으음~)
학생위원장 김창길 등이
회수된 무기를 기업사에 반납을 허
니
연행된 시민 30여 명을 석방을 허
였것다. (으음 복장단 따악~)
이것이 모다 기업군축 계약이라.
고로 윤상원을 비롯하여 청년문화운
동권의 핵심들은
무기반납을 막고 민중의 요구를 관
철시키기 위해서는
군중집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어이~)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할제 (어이~)
술한 사람들이 분수대 위로 올라와

갖꼬
성토를 벌이난다. (으음~)
그 중에 한 사람 소개를 할작시면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평중모
리 장단으로

“시민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땀시 여기 모였소. (얼씨구 허
이)
사람목숨을 파리 죽이듯 하는
홍악무도헌 전투환이를
때려잡기 위해 여그 모였소. (좋
다~)
시민 여러분우리 똥똥 뭉쳐 (어
하~)
끝까지 광주를 사수합시다“ (청중
중 한 사람이 도드라져 아이구야~
좋다고 버럭 추임새를 넣는다.)

아니리

뭐 다른 사람은 추임새 안 해도 괜
찮것구만. (청중 : 웃음 뒤에 박수가
이어진다.)
이 사람이 대표팀이여, 대표팀.
이 양반이 제가 그 낸 그 테이프 시
디 판에 오월광주가 있고
김지하 시인님의 오직하고 똥바다하
고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그때 녹음실까지 따라와 갖꼬
이 추임새를 넣어 갖꼬
지금도 그 씨디 안에 추임새가 있다
니까요.
이 양반이 그런 분이예요. (청중 하
나가 “박수나 쳐 줘시다” 제안을 해

주자 모두들 박수를 쳐서 격려를 한
다.)

그러면 그 외에도 성토한 사람이 수
십 명이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시민들이 빼라 내용 보고 욕하는 대
목

아니리

이때여 군 헬리콥터가
도청상공을 날면서 빼라를 뿌리는데
빼라에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그 글씨체가 영 개발새발 써놔 갖꼬
하도 엉망이라
장단 붙이기도 불능이라 (청중 : 웃
음)

그냥 한번 읽어보는다.

“시민여러분,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
분자 폭도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
니다.

지금 즉시 대열을 이탈, 가정과 직
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빼라를 주워본 시민들 하도 기가 맥
혀서

헬리콥터에 대고 욕을 한번 하는다.
이~ 저~ 전라도에 수수백년 간 전
승되어 온 온갖 욕이 터져나왔겠다.
(허어이~) (청중 : 웃음바다)

“저~ 저~ 니미 씨버럴벌 놈의 잠
자리 비행기 날개쪽지나 뚜욱 분질
러져 버려라.” (청중 : 웃음 뒤에 박
수 이어진다.)

어떻게나 욕이 강렬했던지

헬리콥터가 한번 기우똥했던가 보더
라. (청중 : 웃음)

소나기 피하는 시위대열 대목

아니리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해방광주
사흘째가 되었는데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세마치
장단으로

수습 대책 위원회는
게임분소를 방문하여
8개항을 협상하고 돌아오니 (어
허~)
대다수 시민들은
불만이 팽배쿠나 (어이~)
오늘도 도청 앞에서는
권기대회가 개최될제 (헛~)
수습대책 위원회는
냉담~한 반응이라 (얼씨구 어허
으~)
분개한 청년들 단상으로 오르더니
(허이~)

도섭 구호조

“학살 책임자 처단하라.”
“피의 대가 보상하라.” (어이~)

계면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세마치
장단으로

외칠 적에 갑자기
후두두두둑
군중들 비를 피하려고

우왕좌왕 소란하니 (허이~)
사회자 심정도 처연 ~~~해져
“지금 이 빗방울은
원통히 가신 영~령~들이 (아하~)
흘뿌리는 눈물ियो.” (어이~)
겨우 진정되는구나. (얼씨구 허이~)

한 청년이 비를 맞으며 연설문을 낭
독하는 대목

아니리

한 청년 비를 죽죽 맞으며 마치 피
를 토하듯 어떠한 글을 낭독하는데
(무겁고 슬픈 심정으로 비장하게)
“동포여, 민주 제단에 흘뿌린
광주시민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소
서.
이 땅에서 영원히 독재를 추방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기 위
해
우리 80만 광주시민들은
피땀 물들은 아스팔트 위에,
무참히 죽어가는 시체더미 위에
죽음으로써 함께 모여 외칩니다.
3천만 애국동포여 모두 일어서라!
그리하여 이 땅위에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제는 다시 빼앗길 수 없는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우자.

박남선이 분통 터트리는 대목

아니리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는 (으음~)

학생수습대책위가 열렸으되 (어
이~)

강경파와 온건파,
아니 투쟁파와 투항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디.

김창길이 말하기를, (으음~)
(씩씩하고 호령하는 목소리로)
“무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계엄군은 무력으로 진압하겠다고 공
식적으로 통보했소.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면
광주시민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니
한시라도 빨리 무기를 반납해야 하
오.”

김종배가 반론을 하되, (어이~)
(씩씩하고 호령하는 목소리로)
“지금 무기반납이란 광주시민의 피
를 팔아먹는 행위요. (어이~)
우리의 요구사항은 한 가지도 관철
된 것이 없는데
무조건 무기를 반납하고 나면 그 결
과가 벌어지겠소?”

김창길이 말하기를
(기세가 누그러진 목소리로)
“일단 계엄군을 믿어 볼 수밖에 없
지 않소.”
이렇듯 갑론을박하던 차에 (어이~)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중모
리 장단으로**

이때여 한 청년 화를 내며
두눈을 부릅뜨고 의자를 번쩍 들어
(어이~)
넙다 집어던지면서 고함을 버럭!
“시방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아

면~)
계엄군을 믿는다고
바로 어제까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것이 누구인데 (어허이~)
만일 이런 따위로 무기를 반납
무조건 항복을 할 양이면 (어허~)
차라리 도청을 폭파하고
자폭해 버리겠다“
달려드니
투항파는 겁을 먹고
안절부절 허는구나 (어허이~)

아니리

이 사람이 바로
상황실장으로
후에 시민군 총지휘관의 지휘까지
맡게 되는
박남선이라는 사람이라.

독침사건 대목

아니리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내고 (으음~)
해방광주 나홀체가 되었는데,
도청 내의 분위기가 점차 투쟁 쪽으
로 선회함을 감지한 계엄당국은 (어
이~)
도청 내부를 교란할 목적으로
갖가지 공작을 기도하더니
이날 아침 소위 독침 사건을 조작하
였겠다. (어이~)

**원로인사와 청년운동권이 서로 호소
하는 대목**

아니리

도청 안이 뒤숭숭한 가운데
YWCA 2층에서는 (으음~)
정상용 · 윤상원 등 청년운동권의
지도부들이
광주지역 재야 원로인사들을 모시고
사태수습 방안을 논의할 하는데,
(으음~)
교수님 한분이 호소하는데

계면길 선율을 계면 성음과 중모리
장단으로

“청년들은 들으시오
어찌다가 우리 광주
이런~ 변을~ 당 했 는 지 (허
이~)
하늘도 무심~~~하고 (으음~)
원통하고 분하여라 (얼씨구~)
그러하나 여보게들 (허이~)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지~)
더이~상 피를 흘려서는 아니되오.
(그렇지~)
부디 무기를 회수~~~해서 (허
이~)
엄청난 참변을 막아~주오.“ (허
이~ 좋다~)

청년들이 이 말 듣고
“어르신네 들조시오. (허이~)
무기를 먼저 반납하면 (어이~)
협상에 절대 불리하고 (어허이~)
며칠~간만~~~(허이~) 더 버티
면 (얼씨구~)

저들이 먼저 붕괴되오. (으음~)
그러니 어르신들 (그렇지~)
싸움은 우리 청년들이 (허야~)
앞장서서 할 것이니 (으음~)

부디 우리를 지원해서
그렇게도 염~원~ 허던
민주화를 이룹시다.“ (그렇지~)

아니리

이렇듯 서로 간곡히 호소하니 결론
을 못 내리고 (으음~)

고교생이 투항과 청년을 조롱하는
대목

아니리

이날도 투항파의 무기회수 노력이
집요하게 계속되는데 (으음~)
웬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 녀석 하
나가
M1총을 들고 떠억 허니 나타나니,
무기를 회수하던 청년이 좋아라고
(기쁘고 방정맞은 목소리로)
“어이 동상, 어서 오소. 아 무기 반
납하러 오는가?”
“성님, 내가 시방 허다가 M1총을
하나 얻었는데 이것 어떻게 쏘아야
나가는거요?”
“아니 동상 무기를 반납할 사람이
총 쏘는 법을 알아서 뭇허?”
(외아하다는 듯 의문이 담긴 목소리
로)
“아니 시방 무기를 반납을 계엄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무기를
반납을 하요?”

그렇게 이렇게 쏘면 나가요?”

“아니 동상 총구를 위로 하. 아니
성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앗따 겁도 많소. 그렇게 겁이 많음
께 무기나 거둬들이고 있제. 나는
반납 못형께 그리 아쇼 잉.”

여유 작작 돌아갔것다.

시민군 대표 연설 대목

아니리

이날 오후 3시 쫓기대회가 다시 열
리는데

시민군 대표가 나와서 연설을 허는
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
가?

그것은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
다.

내 고장을 지키고자 여기 나와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

잔인 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이 폭습니까?

내 고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우리 시
민군이 폭습니까?

시민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여러분의 안전을 끝
가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즉각 총을 놓겠습
니다.

투쟁위원회 결성 대목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자진모
리 장단으로

이날밤 도청에서는 (허이~)

청년권이 주도하야

투항과를 구축하니 (허이~)

수습위는 해체되고

투쟁위원회가

결성되는구나. (어허이~)

위원장은 조선대생

김종배가 맡고 (허이~)

내무담당 부위원장

허규정이가 맡고 (허이~)

외무담당 부위원장

정상용이가 맡고 (어허~)

대변인은 광대출신

윤상원이가 맡고 (어허~)

상항실장은 골재업자

박남선이가 맡고 (어허~)

기획실장엔 김영철

홍보부장은 박효선 (하양~)

민원실장은 정해직이 (어이~)

조사부장은 김준봉이

보급부장 구성주 (허이~)

이같이 선임하니

광주민중민주항쟁 지도부라 (허
이~)

도청 내 경비대를

학생병력으로 전격교체하고 (허이~)

장기적인 대처상황~

대비~키로~ ~ ~ ~

하는구나~ ~ (허이~)

대통령 담화문 발표 대목

아니리

이날 밤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은
KBS 텔레비와 라디오를 통해서 광
주지역에만

특별담화문을 내보내는데. (으음~)

무슨 장단으로 담화를 발표해야 할
지

혼자서는 결정권이 없었던가 보더
라. (어이~)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에 문의를 허
여놓니 혹자는

(씩씩하고 호기있고 위엄있는 목소
리로)

“거 휘몰이로 해서 한꺼번에 싹 쓸
어버리는게 어떻겠소?” (어이~)

이런 주문이 있는가 하면 또 혹자는
“거 진양조로 길게 늘여서 슬픔을
좀 자아내 주시오.”

이러한 주문이 있는데, (어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되
(으음)

“성왕의 체통을 살려 잊중모리로 나
가되

협박과 회유를 적절히 배합해 주시
오.”

이렇듯 회유조로 협박을 하여 놓니
잊중모리로 담화가 나가는데.

우조길의 선율을 평조 성음과 잊중
모리 장단으로

(소리꾼이 담화문 읽듯 부채를 들고
본다.)

광주 시민 여러분

나는 대통령 최규하요 (어 허이~)

이번 사태로 인해

얼마나 슬프시오 (어 허이~) (청중
: 웃음)

원인이야 어쨌건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안보가 위태롭소 (어 허이~)

북한공산집단이

악용하면 어쩔테요 (어 허이~)

야만적 대결보다는

대화로써 해결하여 (허이~)

문화국민이 됩시다

광주 근교에서 (어 허이~)

대통령 최규하 (소리꾼이 부채를 흔
들어댄다.)

아니리

맨 마지막에 화면이 좀 떨렸던가 보
더라. (청중 : 웃음)

비상 사태 대목

아니리

이렇듯 또 하루가 지나고 (으음~)

해방광주 닷새제가 되었던가 보더
라.

새벽부터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우조 선율을 우조성음과 휘모리 장
단으로

새벽 다섯시
상황실 무전기가
갑자기

삐삐삐삐

타신을 보내온다

여기는 농성동
지금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하오

비상 ~ ~ ~ (허이 ~)
진병력 출 동 준 비!

우조길 선율을 우조성음과 휘모리
장단으로

도청이 발각
뒤집히더니만
시민군 출동하야
농성동으로 질주 (허이 ~)

계엄군의 탱크와
대치하는구나. (허 허이 ~)

계엄군 장교와 시민군 대표가 협상
하는 대목

아니리

계엄군 장교가 앞으로 썩 나서더니
“불순분자를 제거하고 총기를 전부
회수하여 반납하고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사태
에 대해서도 군은 책임질 수 없다.“
(어이)

상황실장 박남선이 썩 나서 큰 소리
로 응하느다 (으음)

“병력을 원위치로 후퇴시키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수된 무기를
전시민에게 다시 나누어주고 끝까지
싸우겠다. (어이 ~)

그래도 진입하면 보관중인 다이내마
이트를

전부 폭파시켜 자폭해버리겠다.“
(어이 ~)

말은 그리 했으되

시민군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
상할리아 있겠느냐. (어이 ~)

그저 겁을 주느라고 그랬겠지. (그
렇지 ~)

민중항쟁지도부 행정업무 집행 대목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중중모
리 장단으로

민중항쟁 지도부
행정업무를 집행할 제
기획실은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그렇지 허
이 ~)

민원원실은 사상자들
인적사항을 정리하고 (어 허이 ~)

조사부는 시민질서

교란사범을 관장하고, (얼씨구 어
허이~)

홍보부는 권기대회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보급부는 시민군의
물자식량 비축하고, (얼씨구 허이~)
대변인 거동보소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집행부 결정사항을
대~~내외에 선전 (그렇지 허이~)
상황실은 기도타격대 신설하고
계엄군 동태 파악
연락업무 담당하니
허수아비 과도정부보다
체계가 정연~~~허구나. (얼씨
구 허이~ 좋다~)

아니리

항쟁 지도부는
광주시장에게
매일 백미 한 가마와
부식 연료를 공급할 것과
사망자 장례를 도민장으로 할 것을
합의보고
이어 정부에 요구하는
'80만 광주시민이 결의'를 채택한
후 (으음)
도청 앞에서 권기대회를 개최할제
(어허~)
군중 수는 전일보다 다소 줄었으되
열기는 그에 못지 않은지라 (어
허~)
구호를 외치면 모두들 따라 외치는
디
학살책임자 처단하라!

피의 대가 보상하라! (청중 : 보상하
라)

합성이 요란할제

항쟁 회상 대목

아니리

이때여 계엄군은 부지사를 통해서
계속 최후통첩을 보내는디 (으음~)
무력진압을 강력히 시사하는지라.
항쟁 지도부 결국 제반 정황을 사실
대로 보고를 하는데 (으음~)
시민여러분!
오늘 밤 계엄군이 공격해올 것 같습
니다
시민 여러분!
홀어지지 말고 비상상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음~)

계면길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진양 조 장단으로

광장~의 분위기가
일시에 가라~~~~~않더니마는
침묵이 깔리~는디(어으~)
지난 며칠 겪은~~ 일이
일순간에 (어이~)다가온다. (아
항~)
공수부대에 무참하게 (허이~)
맞고 찢리고 당하던 일 (허으~ 얼
씨구 헛~)
시민 모두가 일어나서 (오이~)
맨몸으로 대들던 일 (어어이~ 얼씨
구 헛~)
주먹밥 받아들고

한 입에 먹던 일과 (얼씨구 헛~)
공수놈들 몰아내고
만세 외쳐~ 부르던 일 (얼씨구 헛~)
해방광주 그날~~일이
물거품이 되단 말가 (얼씨구 허이~)
궤기대회는 끝났~건만~~~
그 자리에 붙박~인 듯 (허이~)
망연히 앉았구나 (그렇지~)

시민 시위대열이 시가행진하는 대목

아니리

시민들 서서히 일어나
시가행진을 벌이는데,
한전 앞까지 나아가
계엄군과 잠시 대치한 후
다시 돌아오니
어둠이 완전히 내렸겠다. (그렇지~)
그새 군중들은 거의 흩어지고
이제 남은 사람은 불과 200여명이
라.

최후의 만찬 대목

아니리

이때 도청 안에서는
부지사와 수습위원들이
학생들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다가
허둥지둥 도청을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여성부에서 준비한 식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하니
'최후의 만찬'이라. (허이~)

윤상원이 고교생과 여성들을 피신시키는 대목

아니리

식사를 마친 후
윤상원 일어나며
“이제 최후의 결전의 시기가 왔소.
어린 여교생 고교생들과 여성들은
밖으로 피하십시오.”
(설움이 담긴 느리고 진중한 목소리로)

어떤 고등학생 하나 울부짖으며
“우리 누나가 공수놈들한테 무자비
하게 학살되었소.
원수를 갚고야 말 터이니 부디 함께
있게 해주소.”
윤상원 기가 막혀
“너의 심정은 알겠다만
살아남아 증언할 사람도 있어야 하
지 않겠느냐.
너는 꼭 살아서 너의 형들이 어떻게
장렬히 죽어갔는지를

계면길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중모
리 장단으로

후세~ 만~대~에 전해다오.

광주항쟁의 주체세력

아니리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았졌다. (으음~)
 남은 사람들 면모를 불작시면 (어
 이~)
 거의 다 일용노동자에 소상인 종업
 원 등
 근로빈민층이 주력이라. (아이~)
 광주항쟁의 주체세력은
 학생에서 시민으로
 그리고 노동민중으로 옮겨갔었다.

윤상원의 내심 표출 대목

계면길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진양
 조 장단으로

사방은 칠혹같이
 쥐죽은 듯~ 어느~결에~ (허
 으~)
 총을 꼭 껴안고는~ ~ ~
 살풋 잠이 들었구나
 그때여 윤상원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느라
 담배 한 대~ 피워무나 (허으~)
 지나~간~ ~ 젊은 날들
 회~한이 밀려온다 (허이야~)
 들불야학 아우들과 (허이~)
 동고동락 허던 일과 (하양~)
 광대패 벗들과 (어 허이~)
 마당극을 꾸미~던 일 (얼씨구야~
 얼씨구 헛~)
 녹두서점 선후배와 (그렇지~)
 전민노련 조직하야 (하양~)
 밤새~워 토론한 일 (그렇지~)
 이제와 (어이~) 생각하니 (하양~)
 두 눈에 눈물이
 팽~ ~ ~ ~ 돌더니

쭈루루루루~
 눈물 씻고 일어~ ~ ~ ~ 나서
 밤하늘 (으이~) 바라~ ~ ~ 보며~
 다짐을~ 허는~ ~ 구나

아니리

“이 싸움은 분명 패배요. 전멸당할
 것이지만
 그냥 이대로 총을 놓기에 지난 항쟁
 이 너무나 장렬했다.
 항쟁을 완성시키자면 누군가가 여기
 에 남아
 도청을 사수하다 죽어야만 한다.
 나는 그 길을 택하리라.”

여학생이 가두선전하는 대목

아니리

그때여 어떤 여학생 하나 홍보차량
 에 올라
 광주 시내 전 지역을 돌면서 가두방
 송을 허는디
 (애절하고 호소력있는 목소리로)
 “시민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가고 있습니
 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계엄군과 끝까
 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아이구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낮고 구슬픈 목소리로)
애절한 울부짖음에
광주시민 모두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 깨어 있을 적에

계엄군 노정기 대목

아니리

(우렁찬 목소리로)
“비상~!
비상~!”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자진모
리 장단으로

새벽 2시30분 경
계엄군 진입한다
외곽에서는 포성소리
지척에 들리난디

조명탄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더니
탱크를 앞세우고
계엄군 진입한다. (히이~)

지원동에서 광주천으로
학동에서 전대병원
백운동에서 한일은행
화정동에서 양동
서방에서 계림국교
압박해 들어올제

“누구든 얼씬거리면
무조건 사살이라.” (히이~)

새벽 3시30분
계엄군 장갑차가
금남로로 진입
도청을 사방에서
포위~~~~~ (히이~)
써치라이트

확~ (히이~)

계엄군이 시민군을 몰살하는 대목

아니리

(씩씩하고 호기있고 위엄있고 우렁
찬 목소리로)
“폭도들에게 경고한다.
너희들은 현재 완전히 포위되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탕!

우조길 선율을 우조 성음과 엇모리
장단으로

총성 한발 울리더니
탐조등 유리창을
박살을 내는구나~~~~ (히이~)
갑갑한 어둠 속에
중무장한 계엄군의 (히이~)
일제사격 개시된다~~~~~
자동화가 뿜뿜는 소리
천지가 진동
공수대원 일개조가
도청 뒷담을 넘어
시민군 등 뒤에서

무참하게 사살한다 ~ ~ ~ ~ (허이~)

또 다른 공수대원
창문턱까지 접근
수류탄을 투척한다 ~ ~ ~ ~ (허이~)

또 다른 공수대원
화염방사기를
광폭하게 분사한다 ~ ~ ~ ~ (허이~)

계면길 선율을 계면조 성음과 엇모리 장단으로

대항하던 시민군들 ~
실탄마지 바닥이라 ~
하릴 ~ ~ ~ 없이 죽어갈제 (허이~)
희뿌우 ~ ~ ~ 연 연기 속에 (허이~)
어슴 ~ ~ ~ 프레 새벽이
동터 ~ ~ ~ 어 오는구나. (얼씨구 허이)

외화(外話)

후일담

아니리

(청중 : 한 사람이 '만만세 ~ 만세 ~'를 하자 청중들 따라 박수를 친다. 이때 무대 앞쪽에서 신디씨가 저음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온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청을 사수하다 사망한 윤상원 열

사의
뉘을 기리기 위해
그의 들불야학의 후배동지였던 박기순과
뉘풀이 혼례를 마련하였으니,
이때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러온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
가신 영령의 뉘을 기리기 위해
잠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청중 : 다함께 묵념을 하고 그동안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온다.)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부록 3> 5·18 항쟁을 주제로 한 음악의 창작년대별 구분

연도	노래 명	작곡자	작사가	비고
1980	전진가	박치음		단조행진곡
1981	광주여 영원히	윤이상		
	님을 위한 행진곡	김종률	백기완	
	노래극 '넋풀이'	김종률		노래테이프
	이 오월에	이민수		
1984	전진하는 오월	소리모아		
1985	꽃아 꽃아	정세현	김정희	창작민요
	남도의 비	김상철	조용호	창작민요
1987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윤이상		
	망월동 가는 길	류영대		
	지리산 2	박종화		
	무등산엘레지	김점도	조은파	대중가요
1988	광주여 무등산이여	윤민석	윤민석	
1989	민중진혼을 위한 관현악	김광복		
	광주천	민요연구회		창작민요
	오월곡	전경숙	윤재걸	
1990	그날이여 영원하라	정철호		
	오월 광주	임진택		
	달	김대성	김남주	
1993	5·18에가	한만섭	정승수	
	산화가	김희갑	양민자	대중가요
1994	망월동 연가	윤대근		
	오월이 오면	김진선		
	화염에 휩싸인 천사와 에필로그	윤이상		
1995	오월의 햇살	이선희 노래		대중가요
	여기가 어디냐	인순이 노래		대중가요
	마지막 일기	블랙홀 노래		대중가요
1996	빛과 소금의 슬픈노래			대중가요
1998	5·18	정태준	정태준	대중가요
	한다	안치환	김남주	대중가요
1999	무등 등등	김선철		
	신부머리에 고깔쓰듯	김성훈		
2000	오월에서 봉일로	박종화		
	광주항쟁	정유하		

연도	노래 명	작곡자	작사가	비고
2001	그대의 하늘 길	나은하		
연대미상	광주출정가	정세현	고규태	단조행진곡
	광주여 무등산이여	윤민석		
	부활하는 산하	이성지		
	노래2(죽창가)	김경주	김남주	서정가요
	오월의 노래1	문승현		
	오월의 노래2	프랑스가요		단조행진곡
	오월의 노래3	미상		
	오월이야기	미상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민요연구회		창작민요
	혁명광주	미상		길어진행진곡
	눈감으면	김병준		
	다시 오월에	노찾사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안혜경	김남주	
	예성강	안혜경	김남주	
	목련이 진들	박문옥	박용주	
	그림움 가는 길 어드메꿈	민요연구회		
	찢어진 깃폭	미상		
	학살 2	이명선	김남주	
	광주천	민요연구회		
	오월의 노래 2	전경숙		
	이 산하에	문승현		

5·18민중항쟁과 의료 공간 그리고 의료인 대응

-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

정호기(성공회대 연구교수) 외 2명

I. 머리말

세월은 망각을 촉진시키지만, 기억을 강화하기도 한다. '잊지 못할 상처 또는 경험'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곤 한다. 이 표현은 자신 혹은 집단의 기억이 큰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애용된다. 그러나 이 표현은 '기억의 사회학' 또는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논의되는 기억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 또는 사회적 기억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18민중항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5·18민중항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시민(군) 내부의 갈등이나 '민중항쟁'이라는 담론을 저해하는 기억은 약화 혹은 축소되어 왔다. 반면, 피해 상황, 영웅적 항거와 투쟁, 일치되고 단합된 '공동체'적 행위는 강조되고 숭상되었다. 5·18민중항쟁에 대한 신군부의 평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자의 기억을 여전히 강조하고 되새기지만, 후자의 기억과 진술은 부정하거나 폄하한다. 그러므로 5·18민중항쟁은 투쟁과 협의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다시 기술되고, 재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18민중항쟁에 대한 기억들 가운데 오랫동안 강조되어온 것들의 하나가 이른바 '절대 공동체'론이다. 1998년에 개최된 '5·18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최정운 교수가 처음 공식화했던 이 용어는 5·18민중항쟁의 특성을 나타내는 보편적 개념으로 정착하였다. 그는 공동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자발적 '헌혈' 행렬이다. 비단 최정운 교수의 주장뿐만 아니라, '헌혈 운동'의 모습은 증언들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 증언들에는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병원 내의 모습과

정황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증언들에 기록된 병원에서의 부상자 치료과정과 의료인들의 행위는 계엄군과 시민(군)의 격렬한 대치와 충돌이 벌어지던 '거리' 혹은 '광장'과 사뭇 다른 상황들을 일러준다. 우리에게 익숙한 5·18민중항쟁의 대립구도는 신 군부와 계엄군을 한편으로 하고, 이에 항거한 대책위원회와 시민(군) 및 학생을 한편으로 하는 것이다. 5·18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연구한 대다수의 논문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구도를 공유한다. 5·18민중항쟁의 전개 과정과 증언들은 이러한 인식 구도가 크게 틀리지 않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렇지만 5·18민중항쟁을 시간적 배열과 순서가 아니라, '공간(space)'에 입각하여 고찰하면 다른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장소와 공간이라고 해도 경험한 주체에 따라 특정 장소와 공간에서의 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상이하기 마련이다. 물론 여기에는 5·18민중항쟁 기간 동안에 주체가 위치했던 혹은 특정한 행위를 했던 장소와 공간 및 시간적 특성, 행위 유형, 피해 정도, 이데올로기, 신분과 계층 등 수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중항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의 증언들은 공간이라는 준거점을 은연중 중요하게 고려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했는지라도 다른 기억과 차별화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5·18민중항쟁 기간에 희생자와 부상자를 치료했던 병원, 즉 '의료 공간(medical space)'은 우리에게 친숙한 5·18민중항쟁의 공간들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의료 공간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Starr, 1996). 일반적으로 질병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공적인 기관, 즉 병원에서 인가받은 전문 의료인들에 의해 관리 및 치료된다. 그러나 치료 행위는 공적인 의료 공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가 치료나 민간요법, 허가를 받지 못한 의료인을 비롯하여 사적인 의료 공간에서도 치료 행위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치료 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5·18민중항쟁의 부상자들은 대체로 공적 의료 공간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적 의료 공간에서의 치료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 공간들에서의 치료 절차와 행위는 일상적이지 않았다. 부상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공적 의료 공간을 회피하였다. 응급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이후에는 개인적인 치료를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했다. 당시 국가는 5·18민중항쟁의 참여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 행위도 나름의 각오와 신념이 요구되었다. 의료인들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상자의 질병을 달리 기재하거나, 의료 기록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생산한 기록을 폐기하기도 했다.¹⁾ 이는 명백한 의료법의 위반 행위들이었으나, 이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의료인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간은 특별한 구조와 체계로 작동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병원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위계적 구조로 운영되며, 구성원들의 직종별 횡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

1)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비밀 보장의 원칙은 '의료 윤리'의 가장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Gillon, 2005: 187).

는 곳이다(조병희, 2006: 353~363). 국가의 의료 공간에 대한 통제력과 연계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로 보면, 의료 공간의 구성원들이 모두 권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는 위계와 힘 관계들로 구조화되어 있다(Foster & Anderson, 1994: 274~281; 조병희, 2000: 41). 의료 공간에서 지배적인 힘을 갖는 집단은 의사들이다. 그렇다면 5·18민중항쟁이라는 비일상적인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 공간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작동하는가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글은 병원은 5·18민중항쟁 기간에도 특별한 정치·사회적 지위를 지닌 공간이었다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계엄군이나 시민(군)이 모두 의료 공간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직접적인 충돌과 대치를 위한 장소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의료 공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상자 치료였다. 그런데 병원에는 부상당한 시민(군)과 계엄군이 동시에 찾고 있었다. 적어도 5·18민중항쟁 초기에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띠었다. 의료인들의 합리적인 대처로 의료 공간에서 두 집단이 충돌하지는 않았다. 한편 의료 공간은 도피처의 기능을 했다. 병원은 때로는 계엄군을 피해 도주한 시민과 학생들의 도피처가 되었고, 때로는 분노한 시위대에게 쫓긴 경찰과 계엄군의 도피처가 되었다. 의료인들은 적대적 관계로까지 발전한 두 집단의 구성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숨을 곳을 제공했다. 계엄군과 경찰 및 정보 요원들은 적극적 시위 참여자를 연행할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에 의료인들은 환자임을 강조하면서 완강하게 항변하여 이들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의료인들은 5·18민중항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상당한 힘과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언과 치밀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5·18민중항쟁의 주요 현장이었던 병원을 특정한 사회적 공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공간은 외형적으로는 독자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 사회구조나 사회적 사건과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5·18민중항쟁 기간에 존재했던 병원의 공간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병원 내의 사회적 행위자들의 위치와 구체적 행위,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러한 연구는 의료진, 시민(군), 계엄군, 환자 등 병원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내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지배적인 신념·가치·이데올로기와 행위자들 간의 갈등·대립 등 관계 지형을 그려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 5·18민중항쟁 당시 전남대 병원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남대 병원을 하나의 의료 공간 및 체계로 보고, 이곳이 작동하던 방식과 더불어 이곳에 다른 이해관계와 시선을 갖고 있던 다양한 세력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였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은 의료 공간의 운영 구조와 변화에

있어서는 5·18민중항쟁으로 인해 변화된 병원의 운영구조, 의료 인력의 재편, 물자의 조달 구조 등이다. 그리고 의료 공간 외부와의 관계와 작동에서는 당시 커다란 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군 및 시민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5·18민중항쟁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체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남대 병원은 국립 병원이라는 특성상, 의료진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 조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극단적으로 부정되고 있던 사건과 이에 가담한 자 혹은 부상자들을 바라보는 조직적 또는 심리적 시선은 어떠했으며, 각 주체들 간의 갈등 혹은 협의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5·18민중항쟁 당시 의료공간이 지닌 여러 특성과 지역 의료체계 등을 감안하여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와 연구 방법

1. 5·18민중항쟁과 의료 체제에 관한 연구 검토

5·18민중항쟁에 대한 연구 주제들은 사실의 복원, 발생 배경과 원인의 규명, 시민들의 참여 과정과 활동 및 피해, 항쟁 이후의 계승운동과 기념사업, 5·18민중항쟁의 현재적 계승과 나아갈 방향 및 이념 등으로 정리된다. 5·18민중항쟁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전자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후자의 내용들로 다양화 및 확장되는 추세를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항쟁 당시에 관한 사실 규명과 내용 연구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진실과 피해의 내용들이 많고, 총론과 개별 주제 및 사실들의 연계 등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당시 의료 공간과 주체들의 행위와 인식 등에 대해서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사실 복원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5·18민중항쟁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부상자의 치료와 의료 활동에 관한 내용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극히 최소로만 할애되어 있다. 5·18민중항쟁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기는 했으나, 의료 공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적이다. 의료 공간의 실질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했는가는 의학 분야에서 접근할 과제이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와 행위 구조 및 담론은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서만 분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행 연구는 광주광역시 의사회(1996)에서 발간한 『5·18의료활동』이다. 이 책은 5·18민중항쟁 기간 동안 희생자들을 치료했던 의료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활동을 담은 최초의 기록이다. 발간사에

서는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여 보다 발전된 책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현대사료연구소의 구술 면접 자료가 1999년에 발간된 것과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 또한 이 책의 발간사에서 “80년대에는 감히 … 자료집을 만들 엄두도 내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은 문민정부 출범과 5·18특별법 제정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5·18민중항쟁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한 이후의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5·18민중항쟁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연구들은 몇몇 있지만, 당시의 의료 공간에 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격적인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의회(1996)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료 기록 및 증언”을 모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5·18민중항쟁을 주제로 현재까지 발간된 책들 가운데, 의료 공간에서의 상황들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가장 큰 한계는 증언 자료들이 체계적인 조사 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라는 점이다. 즉 자기 고백적인 기술방식으로 증언이 이루어져 모호한 내용, 생략된 내용, 추가 진술이 필요한 내용 등 여러 가지 공백들이 발견된다.

한편 5·18민중항쟁이 종료된 이후, 의료 공간에서의 치료, 병원 및 부상자들 간의 관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다. 즉 사건 이후 부상자들의 치유 과정과 문제점, 고통과 트라우마, 실질적인 치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변주나·박원순에 의해 2000년에 발간된 『치유되지 않은 오월』과 오수성 교수가 ‘심리적 충격’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 그리고 최근 선보이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조사와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2. 연구 방법과 자료

이 글에서 주요 하게 활용한 연구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과 구술 자료들을 활용하여 내용 분석을 하였다. 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²⁾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은 위에서 언급한 광주광역시의회 책자(1996)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자에서 전남대 병원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사례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전남대 병원은 국립 의료 기관이므로, 어디엔가 문서화된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회 책자 발간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문서를 담당한 직원들은 전남대 병원이 공사(公社)가 되면서 대다수의 문서 자료가 전남대학교로 이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남대학교에 이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진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간호일지’였다. 이 자료는 행정자료도 볼 수 있지만, 병원 내의 분위기와 의료적 활동들이 함께 기록하기 때문에 병원 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추적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표 1> 5·18민중항쟁 당시 전남대 병원 재직자 가운데 증언자와 그 내용

인터뷰 대상자	당시 직위와 활동	인터뷰 당시 활동	주요 인터뷰 내용	출처
김제권 (1996)	전라남도 의사회장	「5·18의 의료활동」 발간위원장	대학 병원들 운영 상황과 행정 기관들과의 접촉, 국군통합병원에서 산소를 공급 받음	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27-31
반상진 (1996)	광주시 의사회장 (도청 100m 거리에서 병원 운영)	「5·18의 의료활동」 발간부위원장	각 종합병원 및 병원들을 방문, 중환자를 대학 병원으로 직접 이송, 대학병원 내에서의 군인 치료에 관한 진술	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32-38
조영국 (1996)	전남대 병원장	전남대 명예교수	전남대 병원에서의 진료 상황, 노성만 교수 얘기를 함	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39-41
조석필 (1996)	전남대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1년차	「5·18의 의료활동」 편집위원	전남대 병원에서 수술, 당시 자기의 일기를 실음	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140-145
김승호 (1996)	전남대병원 안과 레지던트 1년차	성모안과의원장	전남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제7 공수부대에서 근무한 경험, 박병림(당시 생리학교실) 교수의 활동에 대한 회고	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161-163
박종욱 (1996)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1년차	동광주병원장	전남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19일 밤 공수부대원들이 전남대 병원에 최루가스 투척 진술	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164-167
유용상 (1996)	전남대병원 인턴	빛고을소아과원장	전남대 병원 응급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공수부대 퇴각과 사격에 관한 진술	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168-170
김영옥 (1996)	전남대병원 응급실 책임간호사		전남대 병원 응급실 환자 기록 담당, 외과 레지던트 박현준의 부상에 대한 진술	광주광역시의사회, 1996: 171-172

김제권과 반상진의 증언에서는 전남대 병원에 관한 내용은 매우 작은 부분에서만 확인된다. 당시 전남대 병원에 재직 중인 의료인들의 증언은 총 6개인데, 병원 운영의 책임자급에서는 병원장이었던 조영국의 증언만이 있고, 교수급 의사의 증언은 없다. 증언이 이루어진 경우는 응급실에서 실무에 종사했던 레지던트 1년차 3명, 인턴 1명 그리고 책임 간호사였다. 따라서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들, 행정직 종사들, 기타 여러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증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의사들에 비해 간호사들의 증언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 이외에 전남대 병원의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증인들의 사례로 몇 되지 않은데, 증언의 내용들은 응급실에서의 자신 혹은 가족의 상태를, 그것도 특정 사실에만 국한하여 진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증인자들의 처지로 인해 전남대 병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이 없어서 실제로 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언 조사가 이루어질 때 이에 관한 질문이나 조사가 누락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상과 같은 기존 자료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면접 및 구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항쟁이 발발한지 27년이 경과하여 당시에 관한 생생한 기억들이 엷어졌거나, 과장 혹은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기억이 약화된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왜곡된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하나는 증언자가 실제로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 혹은 선택적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증언자의 경험과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는 5·18민중항쟁에 대한 정치·사회적 복권에 고무되어 과장된 진술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런데 면접 및 구술 조사에서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오랜 세월이 경과했음에도 증언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우선 당시 전남대 병원의 최고 책임자들, 특히 병원장급의 경우는 증언을 들을 수가 없었다. 당시 병원장이었던 조영국(제17대) 전 교수는 위의 진술만 남아 있고, 사망하였다. 제16대 병원장(1978~1979년)이었던 김영표 전 교수는 자신은 일반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진술해줄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제18~19대 병원장이었던 장인원 전 교수는 5년 전에 사망하였다. 당시에는 조영국 교수와 병원 운영을 함께하고, 이후 제20대 병원장을 역임한 하민호 전 교수는 와병 중입을 이유로, 인터뷰를 사절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하민호 교수의 증언만이 당시 병원 운영진의 활동에 대한 밀도 있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당시 전남대 병원 운영진 급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였던 사례는 간호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료진이었다. 그는 항쟁에 관한 처음 증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 확보한 증언은 총 9사례였다. 이 가운데 앞서 이루어진 증언자와 중복된 사람이 1명이었고, 나머지는 처음 증언을 한 사람들이다. 9명 가운데 8명은 간호직 근무자였고, 1명은 일반직 직원이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은 녹음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증언을 담담하게 한 경우도 있었고, 당시에 입은 트라우마를 보여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음성 자료로 기록이 남겨지는 것은 꺼려하였다. 따라서 조사 이후에 증언을 문자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료화하였다.

<표 2> 증언자들의 특성

증언자의 성명	당시의 직업과 신분	현재의 직업과 신분
김〇〇A	전남대 병원 간호과장	퇴임
최〇〇	전남대 병원 중앙공급실 감호감독	퇴임
김〇〇B	전남대 병원 응급실 책임간호사	서강정보대 간호학과 교수
노〇〇	전남대 병원 응급실 일반간호사	전남대 학동병원 수간호사
윤〇〇	전남대 병원 수술실 일반간호사	전남대 학동병원 수간호사
이〇〇A	전남대 병원 수술실 일반간호사	전남대 학동병원 팀장
이〇〇B	전남대 병원 병동(10층) 일반간호사	전남대 학동병원 수간호사
임〇〇	전남대 병원 외래 조무사	작동
신〇〇	전남대 병원 정신과 주사	퇴임

Ⅲ. 5·18민중항쟁과 의료 공간의 변화

5·18민중항쟁은 의료인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고, 응급 상황이었다. 더욱 전남대 병원은 항쟁의 중심에 인접한 곳에 있었으며, 이곳 주위와 이곳에서도 시위와 전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매우 긴박하고, 긴장된 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전남대 병원은 어떻게 작동하였을까? 이장에서를 이들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 인력과 진료 체계의 개편

병원의 운영에 가장 책임자는 ‘병원장’이다. 전남대 병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에 소속된 교육직 공무원인 교수가 임명되었다. 전남대 병원은 1993년에 ‘공사’화되어 전남대와 분리되었으나,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가 전남대 병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현재의 전남대 병원 구성원들 가운데 전남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 소속된 교수만 공무원의 신분이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병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아웃소싱으로 파견된 사람들이다. 이것은 1980년 당시 전남대 병원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과 크게 다른 신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대 병원은 의료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곳들과 달리 나름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곳이었다. 의료인은 계엄군과 시민군 모두에게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5·18민중항쟁과 같이 ‘무기’에 의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희생자와 부상자의 발생은 필연적이었고, 자신의 안전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본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료인들은 자신의 동료와 주위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종사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적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전남대 병원의 구성원들의 많은 수는 주로 병원 내에서 생활하였다. 가까운 곳에 기숙사가 있었지만, 간혹 총알이 병원 내까지 날아오고, 계엄군의 침범이 빈번해서 간호사들은 기숙사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집이 병원 인근인 사람들의 경우는 출퇴근을 하기도 했다. 출퇴근을 하였던 사람들은 의료인의 복장을 하거나, 신분증을 패용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의료인임을 드러냄으로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의료인임을 드러냄으로서 안전을 보장받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³⁾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현준이다. 그는 외과 레지던트 근무했는데, 수술에 참가하라는 전갈을 받고 병원으로 오던 중 조선대 입구 부근에서 오전에 계엄군에게 체포되어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연행되었다가 오후에 풀려난 것이다. 그는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는데, 다행히도 공수부대에서 근무하던 의사 선배를 만나 석방되었다고 했다(김영옥 증언, 1996: 171~172). 이는 계엄군이 의료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배려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항쟁 당시 병원의 인력 구조는 상황에 맞게 재편성되어 운영되었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변화였다. 가장 긴급하게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 곳은 응급실이었다. 응급실은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의료공간에 진입하는 관문이었다. 따라서 평상시와 다른 부상자들의 쇄도는 공간과 인력의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응급실과 수술실에 의료 인력들이 집중 배치되었다(김영옥 증언, 1996: 172). 자체 의료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턴과 레지던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졸업생 및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도 치료에 동원되었다(박중욱 증언, 1996: 165; 김○○의 증언).

한편 외래 진료가 중단됨에 따라, 일부 인력이 '중앙 공급실'에 투입되었다. 중앙 공급실은 병원에서 소요되는 제반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중앙공급실에 투입된 주요 인력은 외래의 간호조무사들이었다. 당시 물품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평상시보다 수요가 많아 일손이 부족했던 것이다(최○○의 증언).

2. 응급 공간의 확장과 운영 : 응급실과 수술실

5·18민중항쟁이 발발하자, 전남대 병원은 중증 환자만 남기고, 어느 정도 자가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인 1/3이상의 환자를 퇴원시켰다(광주광역시의회, 1996: 164). 그리고 외래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였다. 여기에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3) 신○○은 3일간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이후에는 병원에서 집이 가까워 출퇴근을 하였는데, 병원 신분증을 보여주면 통과시켜 주었다고 증언한다.

환자들의 병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혹여 치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 항쟁 초기에는 그러하지 않았으나, 곧바로 환자들은 물론 의료인의 출퇴근도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5월 19일에 이르면, 전남대 병원 입구에 계엄군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김효석 증언, 2005: 106).

전남대 병원은 외래 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응급실은 전남대 병원 본관 1층의 현 종합 검진실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외래 치료가 중단된 상태여서 항쟁 기간에 발생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응급실로 몰려들었다. 여러 증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응급실은 환자와 가족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환자 수의 증가는 계엄군의 진압 정도와 방법과 일치하였다. 특히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발포를 하기 시작한 21일에 후송된 부상자 수가 급증했는데, 부상의 정도가 하나 같이 심각하였다.⁴⁾

“환자가 계속 밀려들어 아예 응급실은 발디딜 틈도 없었고, 접수실 로비에다 군용 야전침대를 20개 정도 준비해 놓고서, 환자가 들어오는 대로 줄지어 눕혀 놓았다. 환자의 동공, 의식 상태,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 후에 향후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량의 전상 환자 처리 지침에 따라 환자 선택 기준은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큰 경우를 우선적으로 수술실로 데려가고, 죽은 자는 영안실로 옮겨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다.”(박중욱의 증언, 1996: 166)

늘어난 환자들을 수용할 응급실의 공간이 부족했으므로, 많은 환자들은 복도와 로비 등에 수용되었다.⁵⁾ 응급 환자와 의료진들이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계엄군은 수시로 도피자를 찾는다는 목적으로 응급실을 비롯하여 병원 전체를 수색하였다. 심지어 계엄군은 응급실에 최루탄을 투척하여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에 큰 지장을 주기도 했다. 계엄군이 응급실에 최루탄을 투척한 사실은 다른 증언들에서 2회로 확인된다. 한번은 5월 19일 밤에 계엄군이 도망친 시위자를 찾겠다고 응급실에 최루탄을 투척한 것이었고, 다른 한번은 계엄군이 5월 21일 밤에 퇴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고 최루탄을 투척한 것이었다.⁶⁾

4) 계엄군이 최초로 발포한 것은 5월 19일 16시 50분경이었다. 광주고등학교 인근에서 퇴각하던 장갑차 탑승자가 쏜 총에 당시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3년생 김영찬이 맞은 것이다. 그는 인근 개인병원에서 정은택 의사에게 응급 처치를 받고, 전남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79-80).

5) 그러나 전남대병원이 이송된 부상자들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광영의 진술에 의하면, 22일에 척추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던 중학생 박상철을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이광영 진술, 1018).

6) 계엄군이 병원에 최루탄을 투척한 사례들은 다른 의료 공간들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정형 외과'이다. 당시 이 병원의 원장은 "최루탄 가스로 인해 병원이 난리가 났는데, 독한 가스가 입원실이 있는 2층 3층까지 올라가 정말 곤욕을 치렀다"고 증언했다(광주광역시 의사회, 1996: 194).

“5월 19일 밤, 공수부대 군인들이 도망간 폭도(?)들을 찾는다면, 병원 응급실에 최루탄을 던져 넣으니까 응급실은 말한 것도 없이 계단과 복도를 타고 1층에서 11층까지 병원 전체로 최루가스가 퍼졌다. 환자들은 물론 직원들도 제대로 근무하기가 힘들고 정말 이런 수가 있을까! 하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채 기침이 3~4시간 정도 계속되었다.”(광주광역시 의사회, 1996: 166)

“계엄군이 물러가면서 던진 최루탄 때문에 나는 거의 실신 한 적이 있었다. 밖에 나와야 했는데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서 ... 그 후로는 최루탄 냄새를 맡으면 그 기억이 난다.”(노○○의 증언)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시민군이 응급실을 수시로 출입했다. 시민군은 부상자들을 후송해 오기도 했고, 무기를 보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응급실 바닥에는 총알이 굴러다녀 발에 체일지경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는 시민군이 의료 공간을 계엄군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응급실은 시민군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심지어는 총알 자루를 우리에게 맡겨 놓고 필요시 찾아가곤 했었다. 바닥에 총알이 굴러다녀서 발로 체일지경이었다.”(노○○의 증언)

응급실과 더불어 가장 분주한 곳은 수술실이었다. 수술실과 응급실은 다소 거리가 있었다. 부상자들은 주로 외과의 치료가 요구되었다.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수술실이 운영되어야 했다. 병원 운영진은 2개의 수술실을 추가로 열었다. 수술실이라고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여러 증언들에서 확인되듯이, 수술실 내에는 수시로 총탄이 날아들었고, 수술을 준비하던 의사가 다리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환자들이 몰리고 수술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특히 신경외과 환자가 많았으며 밤새도록 수술을 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서 있을 수가 없도록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수술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도 했지만, 외과 계통은 숨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조영국의 증언, 1996: 40)

“내가 근무했던 Room에는 수술 중 수술실 내로 총알이 날아오거나 한 적은 없다. 지금의 12Room 창문이 총에 맞아 깨진 흔적을 발견했고, 벽면이 깨진 것들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총탄의 흔적이라 생각된다.”(이○○A의 증언)

“내가 알기로는 실제 수술 중 총알이 수술실 내로 날아 온 적이 있

다. 당시 수술실 내에 있던 의사 간호사들이 바닥에 반사적으로 엎드렸던 기억이 있다. 유리창이 깨진 것은 다수이고 벽면도 패여 있었다. 당시 의사 한명 김신곤 선생님은 수술실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총알이 다리를 스쳐서 다친 적이 있었다. 박힌 것은 아니었다.”(윤○○의 증언)

3. 의약품과 급식의 확보

5·18민중항쟁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 공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혈액’과 ‘산소’는 생명의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이 장에서는 항쟁 기간 동안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였던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진술들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안들은 혈액, 의료용 산소, 의약품, 급식 등이었다.

1) 혈액 공급

여러 증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혈액은 우려한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었다. ‘헌혈’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왕성하게 전개되었고,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았던 것이다. 이 시기 시민들의 ‘헌혈’에서 5·18민중항쟁의 정신과 공동체성을 찾으려는 연구들도 많다.

전남대 병원에서 필요로 한 혈액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헌혈을 한 사람들로부터 확보되었다. 전남대 병원은 자체로 헌혈을 받고 있었다. 헌혈은 당시 병원 ‘영안실에서 왼쪽으로 돌아간 지점에서 매트리스를 칸 상태로 이루어졌다. 줄을 지어 헌혈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진술들에 의하면, 광주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헌혈로 수집된 혈액들의 일부가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산소 확보

계엄군의 시위 진압이 총기를 사용하는 등 극단적인 방식을 띠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시민들의 항거가 격화되면서 환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남대 병원에 후송된 환자들의 부상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이들은 간단한 처지로 치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건의 발생적 특성상 환자들은 외과적 수술을 요했다. 따라서 환자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의료용 산소가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했다.

그러나 항쟁이 장기화되면서 교통이 차단되었고, 외부로부터의 물자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의료용 산소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 도달한 시기는 5월 22일이었다. 당시 전남대 병원에 비축되어 있는 의료용 산소는 겨우 응급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달리 산소를 공급할 방법을 찾지 못한 전남대 의료진은 전라남도 의사회장(김제권)에서 도움을 청했다. 그는 도청 기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을 방도를 모색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광주국군통합병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주국군통합병원은 부산의 군수기지사령부에서 기차로 수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 제의를 거절했다.⁷⁾

결국 의료용 산소의 공급은 연줄과 지연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순천도립병원장(최병주)을 통해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손수익에게 연락을 취하여 산소를 공급받았을 수 있었다. 5월 24일 100통의 의료용 산소가 공급되었는데, 이리에 소재한 공단에서 후송된 것이었다. 의료용 산소들은 일단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를 의사회가 인수하여 전남대 병원에 70통, 그리고 광주기독병원에 30통이 분배되었다.

3) 의약품의 조달

전남대 병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호남권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다. 따라서 병원에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의약품이 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부상을 당해 내원한 환자의 특성상 특정 의약품의 소모가 많아 부족한 의약품들이 생겨났다.⁸⁾ 전남대 병원은 부족한 의약품은 광주 시내 약국에서 충당했다(조영국 진술, 1996: 39; 이광영 진술, 1990: 1017). 한편 시민군이 의약품을 보급해주기도 했는데, 시내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민군들은 빵이나 우유를 가지고 와서 진료진과 함께 나눠 먹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마이크로 묻고 다녔다. 수액제가 부족하다고 말했더니 시내에서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응급실 한편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전남대 병원이 수액제가 부자가 되었었다.”(김승호의 증언, 1996: 162)

한편 광주국군통합병원에서도 상부의 허가를 받아 일부 의약품을 공급하였다고 한다(이정용 진술, 2005: 186~187). 그러나 이 의약품들이 어떤 체계와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약품들이 자발적으로 공급된 것은 아니고, 시민군이 총기를 휴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통합병원 측에 의약품(후리드) 제공을 요구한 결과로 획득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 시민군 대표였던 사람은 이후 총상을 당해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왔다고 한다.

7) 의료용 산소 공급에 관해서는 김제권의 진술에 의거했다(김제권 진술, 1996: 28~29). 그러나 이점에 대해 당시 광주국군통합병원 진료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정용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는 광주국군통합병원의 입장에서는 ‘폭도’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군 지휘체계상 보고와 허락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는 이와 관련된 의사회의 주장이 군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이정용 진술, 2005: 176).

8) 가장 필요한 의약품은 항생제, 신경외과에서 가장 중요한 뇌의 부종을 막기 위한 만니톨(mannitol)이 없어서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박종욱의 증언, 1996: 167).

4) 급식

항쟁이 확산되자, 전남대 병원의 일반인 외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중단했다. 혹여 치료를 위해 방문하다가 불행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래 진료를 중단한 이유는 시위와 진압으로 교통이 차단되고, 곳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외래 환자의 방문이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입원 환자 가운데 증세한 경미한 경우에는 조기 퇴원을 시켰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반 환자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시위와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이 몰려들면서 입원 환자들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전남대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이들에 대한 원활한 급식이 문제가 되었다. 전남대 병원은 자체 식당 운영을 총 기동했으나, 식재료의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었기 때문에 급식은 열악한 수준이었고, 배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⁹⁾ 병원의 운영진은 그나마 항쟁 기간이 짧아서 급식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5) 기타

전남대 병원의 영안실은 개나리 동산 바로 아래 인턴 숙소 옆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병원의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영안실은 있었으나, 규모는 매우 작았다. 이처럼 일시에, 그것도 통상적인 장례 일정과 달리 많은 시체들을 수용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23일 전남대 병원 영안실을 목격하였던 사람에 의하면, 시체들이 영안실의 냉동실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다. 그는 17~8구의 시체를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김지호 진술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 826)

IV. 의료인과 외부의 관계와 대응

항쟁 당시 전남대 병원의 의료진이 외부의 관계를 맺은 것은 크게 세 집단이었다. 즉 계엄군, 시민 및 시민군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의료진이 이 세 집단들과 각각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어떻게 대응 또는 응시하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전남대 병원과 계엄군

9) "식사가 문제가 많아서 아침이 주로 오전 10시경, 점심이 주로 오후 3시경에 들어왔다(신○○의 증언)

전남대 병원은 의료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학생들, 특히 전남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료진 혹은 환자로 위장하여 이곳에서 생활했다. 의과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환자로 위장하여 병실에 숨기기도 했다.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시위는 전남대 병원 일대에서도 발생하였기에, 간혹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시민이 숨어들기도 했다. 시민들은 전남대 병원은 계엄군의 진압으로부터 안전한 소도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의료진은 병원으로 도피한 사람들을 환자 혹은 직원으로 위장하여 숨겨주곤 했다.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의료인들만이 사용하는 공간 또는 병실에 이들을 숨겨 놓았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쫓기고 있다고 해서 환의를 입혀 침상에 눕히고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찾으면 환자라고 하여 숨겨준 적이 여러 번 있다.”(이○○B의 증언)

계엄군은 도피한 시위 참여자들을 찾아 전남대 병원으로 진입했다. 계엄군의 전남대 병원 수색과 진입은 일회성이 아니라, 빈번했다. 계엄군은 의료인에게 도피자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¹⁰⁾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의 말을 존중하여 도피자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간 계엄군도 있었으나, 병원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는 계엄군도 있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시위 참여자가 계엄군에게 발견되면, 구타와 폭행을 당하면서 연행되었다. 그리고 의료인에게 또 다시 시위 가담자를 숨겨놓으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전남대) 병원 안에 시위하던 청년 1명을 숨겨주었는데, 공수들이 들어와 병실마다 뒤져 시트 밑에 숨어 있는 청년을 그 자리에서 군화발로 짓이겨 끌고 가버렸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5월 22일에 청취함.(표강남 진술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1990: 816)

의료인은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의료 공간을 침입한 계엄군에 대해 무서움을 느끼기는 한편, 매우 불쾌했다. 왜냐하면 전남대 병원에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계엄군 부상자에 대한 치료도 했기 때문이다. 계엄군에 대한 치료는 항쟁의 초기 국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즉 계엄군에 대한 시민들의 적대감이 극대화되기 이전에는 부상 군인이 전남대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다. 그러나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의 적대감이 고조되고, 특히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엄군은 전남대 병원에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올 수가 없었다. 대신 도망친 시위자를 색출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

10) 당시 광주시 의사회 회장이었던 반상진은 계엄군들을 “군인들은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서의 대화나 타협 혹은 조절할 줄을 몰랐다. 생각이 고슴도치처럼 배타적이기만 했다”고 술회하였다.(반상진 진술, 1996: 37)

던 것이다.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의료 공간에서의 계엄군의 행동은 온순한 편이었다. 계엄군이 의료 공간에 있는 사람을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엄군이 다시 전남대 병원을 찾아온 것은 5월 27일 새벽이었다.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이 진주하는 광경을 병원 숙소였던 11층에서 의료인이 내다보았는데, 이를 시민군의 공격으로 오인한 계엄군이 찾아온 것이다. 다수의 의료인이 이에 관한 진술을 공통적으로 한 것으로 보면, 매우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전남대 병원에 다시 계엄군이 찾아온 것은 항쟁을 진압한 이후였다. 이들은 시위자들을 색출하기 보다는 치료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광주국군통합병원을 방문하기에 여의치 않은 계엄군 부상자들이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온 것이다.

2. 전남대 병원과 시민군

5·18민중항쟁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희생자는 신체적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로 구분되었고, 당시의 역할에 따라 계엄군이었던 사람과 시민으로 구분되었다. 일반적으로 계엄군은 부상을 당한 경우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계엄군이 도심에서 진압을 계속하고 있던 무렵에는 전남대 병원을 비롯하여 광주의 민간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전남대 병원에서 가장 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역시 시민이었다. 그러나 시민이 치료를 받기 위해 전남대 병원을 찾은 것만은 아니었다. 부상자가 아니라 조직화된 집단 즉, 무장부대인 시민군도 전남대 병원으로 왔다. 그 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시민군은 전남대 병원 본관 옥상에 LMG 기관총 2정을 설치하고, 계엄군과 대치했다. 전남대 병원이 전투의 공간으로 인식된 것은 5월 21일 오후 4시 이후였다.¹¹⁾ 이때의 기관총들이 사용되었든, 되지 않았든 간에, 이곳에 기관총이 설치된 것은 시민군이 전남대 병원을 의료 공간뿐만 아니라, 전투 공간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전남대 병원은 계엄군의 현장 지휘 본부로 사용되고 있던 옛 전남도청에서 직선거리로 300 여m에 불과하고, 인근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이었기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충분조건을 갖고 있었다. 전남대 병원 운영진은 병원 옥상에 설치된 기관총이 화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를 철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조영국 진술, 1996: 39). 한편, 계엄군은 전남대 병원 옥상을 점령하여 기관총을 설치한 것에서 크게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계엄군은 기관총을 제거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

11) 전남대 병원의 옥상에 기관총이 설치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1985년 7월에 발간된 <월간조선>에서는 오후 4시 혹은 4시 15분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진사 진투 상보』에 의하면, 오후 4시 40분경에 전남대 병원 등에서 시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를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택은 오후 4시 43분경 기관총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기관총들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김영택, 2004: 184).

으나, 퇴각 명령이 내려짐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김영택, 2004: 184~185). 전남대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만일 이 작전이 현실화되었다면, 의료 공간이 지닌 위상은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계엄군이 퇴각한 후, 기관총은 철거되었다. 굳이 이곳에 기관총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시민군이 전남대 병원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었다. 계엄군이 퇴각한 후 시민군은 새롭게 편제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가 전남대 병원에 배치되었다.¹²⁾ 전남대 병원에 배치된 시민군은 처음에는 '경호를 이유'로 무장을 한 채 의료인의 인근에 둘러서 있었다. 이에 전남대 병원은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에 시민군은 병원의 외곽에서 경계 작전을 펼쳤다(김○○A의 증언). 전남대 병원과 인근의 환경, 특히 도로와 야산 등은 도시의 발전과 개발에 따라 크게 바뀌어 당시를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시의 이곳 일대의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남대 병원 옆 도로가 화순 방면에서 광주로 도심으로 출입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고 말한다. 옛 전남도청의 계엄군이 퇴각할 때, 이 도로를 이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시민군은 계엄군의 재진입을 감시하고, 유리한 전투의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대 병원에 주둔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는데, 전남대 병원의 의료진들은 시민군이 병원에 주둔한 상황들을 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시민군이 주둔한 곳은 일명 개나리 동산으로 불리는 곳으로, 최근까지 전남대 병원 기숙사가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 건너다보이는 곳이 조선대 병원이다. 조선대 병원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으나, 조선대 뒷산에서 계엄군이 내려오는 것을 감시하기 어려운 점과 무엇보다 화순방면에서의 진출입을 감시하기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시민군들은 나무와 풀들로 숲을 이루고 있던 개나리 동산에서 계엄군을 감시했던 것이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시민군이 주둔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의료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일대에서 수시로 총소리가 났다고 한다. 주둔한 시민군이 이곳에서 사격 연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총격전이 벌어진 것인지 여부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만, 항쟁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곳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설사 총격전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재진입이 이루어지던 때였을 것이다.

계엄군의 재진입이 임박하자, 전남대 병원 옥상에도 다시 시민군이 배치되었다. 옥상에 시민군들이 재배치된 것은 5월 26일 밤이었다(나의갑, 2001: 253). 그러나 당시 병

12) 현사련의 한 자료에 의하면(1990), 5월 21일 오후 5시 경에 전남대 병원 주위의 야산에 시민군이 탑승한 버스 2대가 배치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대 병원 환자대기실, 학동 숭실고와 석전다리, 학동 평화맨션 부근 신당고개, 학동 배고픈 다리 등에 각각 버스가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사련의 「광주민중항쟁일지」에 의하면, 시민군들이 조직적으로 도심에 배치되었던 것은 22일 오전 7시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김영택, 1988, 「10일간의 취재수첩」에서 인용).

원의 11층에서 벌어진 상황들로 볼 때, 이곳에 배치된 시민군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계엄군과 전투를 벌인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제 진입하던 계엄군이 이들의 진입을 병원 11층에 구경하던 의료인을 제압하기 위해 올라왔지만, 전투에 관한 내용이 진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시민군이 무서운 것은 아니었고, 시민군이 기숙사를 점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기숙사에 접근을 하지 못했다. 기숙사는 병원 내에서 숙식을 지속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유일한 휴식처였으나, 총소리가 난 뒤로부터는 출입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기숙사 출입의 차단은 병원의 지침이었기 보다는 이곳을 의료인들이 전투 공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혹여 이곳을 출입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무기를 휴대한 시민군에 대한 공포도 다소 작용했다고 한다.

3. 전남대 병원과 환자 및 보호자

5·18민중항쟁 기간 동안 전남대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두 종류이다. 한 종류는 항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입원한 환자들로, 항쟁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의료인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지 못할 정도로 중세가 심각했다. 다른 한 종류는 항쟁 기간에 계엄군에 의해 피해를 당해 입원한 환자이다. 당시 의료진들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지어 경미한 수준 이상의 경우에도 서로의 의견 조정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으므로, 이들은 중증 환자라고 할 수 있다.

5·18민중항쟁 기간에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부상자가 자의에 혹은 타의에 의해 병원을 찾아온 경우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후송된 환자는 계엄군으로부터 구타, 폭행, 자살, 총상을 당한 시민이 주류였고, 간혹 시민의 공격을 받아 상이를 당해 후송된 군인과 경찰도 있었다. 군인과 경찰 신분의 환자들은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대부분 광주국군통합병원 등으로 이송되었다. 다른 하나는 의료인이 직접 전투의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한 경우이다. 이는 일상적 상황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대다수의 의료인은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벅찬 상황이어서 병원 내에 머물러 있었으나, 일부 의료인은 심각한 환자를 직접 후송하기 위해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달려가서 환자를 직접 병원으로 후송했다.¹³⁾

“박병림(당시 전남대 의대 생리학 교실) 교수가 흰 가운을 입고 도청 앞에서 환자를 실어 나른 기억이 생생하다. 한 때는 얼마나 부상자가 많았던지 트럭 위에 환자들을 쟁여갖고 오곤 했다. 당시 박병림 교수는

13) 전남대 병원 소속의 의료인이 현장으로 나가 환자를 후송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도 있다. 이점은 후후에 다시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를 기록하고 ‘이 환자가 급하니 빨리 치료해 주시오!’ 하면서 들것으로 받아내리곤 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김승호의 진술, 1996: 161~162)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한 환자의 치료와 관리는 병원과 의료인의 중요한 의무였다. 응급실과 수술실을 제외하고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평온했다. 간혹 총소리가 들리고,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급박하게 이송되어 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병원 옥상에 LMG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병실의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환자를 볼보는 보호자의 활동이 문제가 되기는 했으나, 항쟁으로 입원한 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밖의 세상이 궁급할 따름이었다. 의료인은 이들의 호기심을 달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간대는 야간이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야간 소동이 필수적이었다. 모든 시민을 적으로 간주했던 계엄군의 총탄이 언제 날아올지 몰랐다. 그래서 입원실은 가능한 야간에 소동을 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커튼을 내려 외부로 불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의를 기했다. 의료인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궁급증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창문 밖을 내다보곤 했다. 의료인은 이들을 단속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이○○의 증언).

전남대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 상황에 대한 가장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들에 비해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그러한 만큼 중증 환자도 많아 사망자 수가 많았다. 그렇지만 전남대 병원은 이송된 환자들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환자의 가족들은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급박했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치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상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¹⁴⁾

V. 맺음말

5·18민중항쟁은 일반 시민들도 그러하지만, 의료인에게도 매우 낮설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5·18민중항쟁은 일종의 내전과 같은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전시(戰時)에만 목격할 수 있는 무장 군인들이 그것도 특수부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민간인은 계엄군에 맞서 무장을 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항쟁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되었던 것처럼 시민군은 계엄군에게 진압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

14)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월여성회(2003)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특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진술된 지점들은 104쪽, 153쪽, 160쪽 등이다.

정에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다. 많은 수가 사망하였고, 더 많은 수가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들은 의료 공간들로 후송되었다. 가벼운 상처는 도심의 개인병원들에서 치료되었으나, 심각한 환자들은 모두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료 공간은 말 그대로 처절한 상처와 비극을 치료해야 하는 사회로 부터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글은 가장 많은 환자들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 기관이었던 전남대 병원을 사례로 하여 5·18민중항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인식을 가졌는지를 고찰하였다.

전남대 병원의 의료진들이 심각한 사건이 발발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은 5월 19일 밤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도 학생들의 시위와 계엄군의 배치 등으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였음을 감지하기는 했으나, 의료 공간 및 의료진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자들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 오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항쟁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전남대 병원은 이에 맞게 의료 인력과 진료 체계를 개편했다. 중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응급실과 수술실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을 집중 배치하였고, 외래 진료를 중단한 후 여유 인력들을 중앙 공급실 등에 배치했다. 항쟁 기간 동안 의료인들은 대체로 병원 내에서 생활하였으나,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일부는 출퇴근했다. 그렇지만 의료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환자와 더불어 반쯤은 병원에 구금된 생활을 했다. 한편 출퇴근을 해야만 했던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냄으로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다. 이 전략은 대체로 통용되었으나, 계엄군으로부터 구타를 동반한 구금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5·18민중항쟁은 전남대 병원 내의 응급 공간들의 확장을 강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특히 긴급하게 요구되었던 공간은 응급실과 수술실이었다. 그러나 응급실은 확장이 어려운 한정된 공간이어서 환자들은 복도와 로비 등에 배치된 상태로 치료되었다. 수술실은 평소에 비해 2개를 추가로 개설해야 할 정도 분주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응급실과 수술실에서는 희생자들의 목숨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계엄군은 의료 공간을 시위대가 은닉한 공간으로 또는 시민군의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곳에 비해 의료 공간이 안전하기는 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계엄군이 의료 공간을 수시로 출입하였고, 때로는 최루탄과 총탄을 피부었다. 물론 시민군도 이곳을 전투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했다.

응급 상황에 처한 의료 공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섯 가지였다. 혈액 공급, 산소 확보, 의약품의 조달, 급식, 기타 사체의 보관 등이었다. 이것들은 때로는 정부를 통해서, 때로는 시민군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자체적으로 조달했다.

전대 병원이 외부의 맺은 주요 관계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계엄군

과의 관계이다. 의료진은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하게 대처하면서 환자들을 보고하고, 시위자들을 도피시키고 있었다. 의료인들은 계엄군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기도 했으나, 자신들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둘째, 시민 및 시민군과의 관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군은 전남대 병원을 의료 공간이면서 동시에 전투 혹은 전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남대 병원에 시민군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느 규모로 주둔하였는가를 분명하지 않으나, 중요한 전투의 거점이 되었다. 의료인들은 시민군으로부터 혈액, 의약품, 음식 등의 공급을 받았다. 의료인들은 시민군 그 자체로부터는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의료 공간에 존재함으로써 이곳이 전장 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셋째, 당시 전남대 병원에 있던 환자는 항쟁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이 항쟁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달랐다. 항쟁과 직접 관련된 환자들도 두 가지 유형이었다. 의료인에게 환자는 일반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치료의 대상이었으나,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치료하였던 의료인들도 나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항쟁에 대한 기억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였고, 조심스러워 했다. 또한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한 자신들의 기억을 말하거나, 마음을 여는데 조심스러워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식과 활동이 '인도주의'와 '의료인의 본분' 등에 바탕하고 있었으며, 비정치적인 것임을 은연히 드러내고자 했다. 이와 같이 5·18민중항쟁에는 사회적 기억에서 배제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한 집단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의료 공간과 의료인들은 항쟁과 같은 거대한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발했을 때,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되며,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02, 『5·18부상자회 20년사』.
- 5·18유공자회 위음, 2005, 『죽음으로 쓴 5·18민중항쟁 증언록 1, 2』, 5·18기념재단.
- Cockerham, W., 박호진 외 역, 2005, 『의료사회학』, 아카넷.
- Creswell, J. W., 조홍식 외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학지사.
- Foster, G. M. & Anderson, B. G., 구본인 역, 1994, 『의료인류학』, 한울.
- Gillon, R., 박상혁 역, 2005, 『의료윤리』, 아카넷.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 by 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 Mason, J., 김두섭 역,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Starr, P., 이종찬 역, 1996, 『의사, 권력 그리고 병원』, 명경.
- Urry, J. 1985,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 광주5·18민중항쟁유족회 편, 1989, 『광주민중항쟁비망록』, 남풍.
- 광주광역시 의사회, 1996, 『5·18의료활동: 자료 기록 및 증언』.
-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5·18광주민중화운동 자료총서』 제1~15권.
- 광주광역시 의사회, 1996, 『5·18의료활동: 자료기록 및 증언』, 금호.
- 광주시 내무국장, 1992, 『5·18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현황과 향후 광주시의 입장』, 『광주민중항쟁의 현주소』, 한국기자협회 광주·전남지부.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 김양현·강현정 위음, 2005, 『5·18항쟁 증언자료집 IV』, 전남대학교 출판부.
- 김영태, 2004, 『5·18민중항쟁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택, 2004, 『5·18광주민중항쟁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균, 2000, 『5·18과 한국정치: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한울.
- 나간재, 1997, 『광주지역 5월운동조직의 형성과 발전』,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 5·18연구소.
- 나의갑, 2001, 『5·18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 문병란·전용호, 2000, 『부서진 풍경』, 5·18기념재단.
- 박영주, 2004, 『5·18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 5·18연구소.
- 백옥현, 2006, 『면접법』, 교육과학사.
- 변주나·박원순, 2000,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 신일섭, 2005, 『광주민중화운동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전남대 5·18연구소.
- 안성례 구술, 2006, 『그 말이 너무 쟁쟁해 눈물이 나더라고』, 『5·18의 기억과 역사 2』, 5·18기념재단.
- 오수성, 1990, 『광주 5월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 오월여성회, 2003, 『오월 여성의 이야기들』, 광주광역시.
- 유광종, 1999,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과정과 실태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윤택립, 2006,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아르케.
- 이민오, 2000, 『신체질환 진료실태 보고』,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 정해구 외, 1990,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 조병희, 2000, 『의료문제의 사회학』, 태일사.
- 조병희, 2006,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집문당.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편집부, 2004, 『현황과 방법: 구술, 구술자료, 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방법과 사례)』, 선인.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a,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b,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부록

<전남대 병원 관련 일지>

※ 참고 자료

- '5·18 - 그 10일 간의 항쟁(가제)',(80. 5. 18-27까지의 일자별 사건정리요약집)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다운 자료」, 기타 광주시청에서 정리한 자료
- 광주광역시사사회, 1996, 「5·18의료활동(자료 기록 및 증언)」.
- 김영택, 2004, 「5·18광주민중항쟁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 김영택, 『實錄5·18광주민중항쟁』,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0年代 民主化運動(전 3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1988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 황석영,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 5월 18일

- 전남대 의대에는 제7공수여단 35대와 본부대가 5월 18일 새벽 2:30과 11:50에 각각 배치되었음. 이 부대들은 조선대에도 함께 주둔함.(국방부 발표 자료)

○ 5월 19일

- 낮 이 때부터 광주 시내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 중환자가 줄을 이어 대거 입원하기 시작함(황석영, 77)
- 오후 학생이 총상을 당해 전남대 병원 응급실로 들어옴(의사회, 169)
- 15:55 군인 1명이 학생을 쫓다 놓치고 인근 시민들에게 붙잡혀 구타. 적십자병원에 입원.(현사련 조사)
- 16:00 금남로에 있던 학생들이 현대극장, 전남의대, 공용터미널, 계림파출소 등 4개소에 분산하여 대치 투석전.(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5월 19일자 9쪽; 현사련, 1999)
- 16:30경 동구 학동과 남광주역전 등 의과도로 부근까지 시위가 확산됨. 시내 전역에서 진압군과의 유혈극 발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0쪽)
- 18:00 친구 방문안을 간다고 나선 손옥례 양(당시 19세)이 최유방부자창·우측흉부관 통상으로 죽은 모습을 시민들이 목격함. 당시 전남대 병원에 근무한 의사도 대검에 의해 여대생의 젖가슴이 패어져 있었다는 증언을 함.
- 19:30 전남대 의대 앞 골목길에서 최미자 양(당시 19세) 계엄군의 대검에 가슴을 찔림
- 총소리가 난 뒤 전남대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를 제외하곤 1/3이상 퇴원하여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움(의사회, 164)
- 밤 공수부대가 도망간 폭도(?)를 찾는다면 병원 응급실에 최루탄을 투척함(의사회, 166)

○ 5월 20일

- 기업사령부가 광주 시내 사회단체장 70-80명을 상무대로 소집하여 사태의 평화적 수습에 협조할 것을 요청. 모든 문과 셔터를 닫을 것을 요청. 전남의사회장은 그럴수 없다고 하자, 기업군에서도 진료에 협조해주도록 말하려던 참이었다고 함(의사회, 28)
- 10:00 부상자 현황: 전남대 병원 23명, 기독교병원 4명, 전대병원의 김영찬(조대부고)은 19일 16:30 계림파출소 앞에서 장갑차에서 쓴 총에 왼쪽 배 관통상.
- 10:00경 부상자는 전남대 부속병원에 23명, 기독교병원 4명, 조선대부속병원 2명, 전남대 부속병원에 있는 김영찬(19. 조대부고 3년)은 19일 오후 4시 30분 계림파출소 앞에서 총격받고 왼쪽 배 관통상을 입었다고 함. 시민, 학생들에 의하면 중태인 사람은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자 늘어날 듯하다고 함.(조선일보 취재일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월 20일자 4쪽) (월간조선, 1985. 7) (현사련, 1990)
- 17:45경 공수부대는 전남일보 앞에 장갑차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듯이 버티고 있었다. 차량행진도 시민들도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20m 쯤의 간격을 두고 대치했다. 그러나 시위군중은 금남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노동청 쪽과 학동 쪽 충장로 입구에서도 길을 가득 메운 시위군중이 도청광장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었다. 공수부대원은 금남로만 말고 있었다. 다른 길은 경찰이 말아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수없이 쏘아대면서 도청 광장으로의 전진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었다.(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월 20일자 16쪽) (현사련, 1990)
- 20:00 전남대 병원 앞에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집결하여 도청으로 진격함.(시청 상황일지) (현사련, 1990)
- 21:00 전남대 의대 부근에서 전경과 대치중이던 시위대가 전경을 포위하자 철수(현사련)
- 21:00 "전남대 의과대학 부근에서 전경과 시위대들이 대치하던 중 시위대들에 의해 전경이 포위될 상태에 이르자 전경들이 철수했다. 1백여 명이 넘는 시위군중이 학동 파출소로 이동하여 파출소내 기물을 부수고 방화했다. 잠시 후 소방차 1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그곳으로 왔다. 그러나 그 소방차에는 시민들이 타고 있었다."(구술 : 조인호, 현사련 조사) (현사련, 1990)
- 21:30경 시위군중이 지른 불로 대낮같이 밝은 가운데 이쪽을 지키고 있던 경찰 저지선에 커다란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광주고속 배용주 기사가 몰아붙인 고속버스가 경찰대열을 급습해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저지선은 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합평경찰서 소속 강정웅경장(39), 박기웅(40), 이세홍(31), 정충길 순경(40) 등 4명에 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이다. 시위 군중들은 경찰 저지선에서 이런 사고가 나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수부대원이

아닌 다른 희생자까지 낼 생각은 없었다는 표정이었다.

- 차에 깔린 4명 중 3명의 시체가 먼저 도청 현관으로 운반되어 오고 나중에 1구가 다시 옮겨졌다. 5명의 부상자는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청 현관은 마치 함락 직전 격전으로 치르고 있는 야전 지휘본부처럼 긴장과 불안이 감돌고 있었다.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사망의 길이 막혀 버려 내 보낼 수가 없었다.
- 이때 경찰 측에서 스피커를 통해 군중들에게 길을 터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버린 차에 치어 4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관도 모두 여러분과 한 동포 한 형제 들입니다. 이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잠시 길을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한 후 경찰서 간부 한사람이 남도회관 앞 경찰서 쪽 길에 있던 군중들에게 직접 찾아가 호소했다. 군중들은 아무 저항없이 길을 비켜주었다. 5명의 중상자들은 전남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월 20일자 20쪽)
- ▲ 21:05 노동청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 버스가 경찰저지선으로 돌진, 경찰 4명이 깔려 죽사하고 5명이 부상.
- ▲ 21:25 MBC라디오 방송 중단.
- ▲ 21:45 경찰, 시위대와 협상 끝에 포위망 뚫고 부상경찰관을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김영택)
- 23:00 “MBC 방송국 건물이 불타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갔다. 옥상에 올라가보니 MBC 방송국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불기둥이 솟아 있었다. 전남대 부속병원 옥상에서 도청 쪽으로 예광탄이 포물선을 그으면서 날아갔다.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수없이 날아갔다. 그날 밤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구술 : 이지형, 현사연 조사) (현사연, 1990) - 잘못된 진술이거나, 날자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임.

○ 5월 21일

- 00:00 7공수 병력 조선대 2백 미터 전방에서 폭도와 대치.(특전사 전투상보) (현사연, 1990)
- 00:30고속버스 3대가 조선대 돌파를 시도했으며, 이 상황이 새벽 04시 40분까지 계속됨. 7공수 조선대 정문 차단기 설치하고 시위대와 대치.(특전사 전투상보) (현사연, 1990)
- 00:36 조선대 정문 3천 명이 차량 3대로 정문 돌파 시도 그중 1대는 담을 들이받고 정지. 고속버스 1대, 수류탄의 저지로 민가를 들이받고 정지. 폭도 3명 검거. (특전사 전투상보) (현사연, 1990)
- 00:40 조선대 정문 앞 55미터 전방에 폭도 5백여 명 출현.(특전사 전투상보) (현사연, 1990)

- 02:25 금남로는 물론 노동청 쪽 저지선도 뚫을 수 없게 되자 민중들은 전남대 부속병원 앞길로 돌아 충장로 입구 쪽으로 몰려들었음(김영택, 158)
- 새벽 시외 전화 단절. 시내 통화는 계속됨(김영택, 161)
- 09:40 조선대 정문 앞 5백 미터 지점에 시위대 운집.(현사연, 1990)
- 11:00-12:00 "18일, 시내에서 계엄군이 학생들을 죽도록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온 뒤 문 걸어 잠그고 바깥출입을 삼가고 지냈다. 2,3일을 그렇게 두문불출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식 키우고 사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밖으로 나갔다. 같은 동네 사는 선배 언니와 함께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 쌀을 걸어 밥을 지었다. 라면상자에 비닐을 깔고 주먹밥을 만들어 전남대 의과대학 앞으로 가서 시위차량이 지나가면 차에 올려주면서 몸조심하라고 격려도 해줬다."(구술 :김경애, 현사연 조사) (현사연, 1990)
- 13:00 시민들이 카빈 소총 300정으로 무장하고 전남대 의대와 경찰국 쪽으로 진행 중. (현사연, 1990)
- 15:00 광주시내 종합, 개인병원 총상환자들로 가득참
- 15:40 김광영이 방림동에 있던 집으로 가던 중 전남대 병원 옥상에서 헬기를 향해 총격을 가함(현사연)
- 15:50 시민들이 카빈 소총 300정으로 무장하고, 전남대 의대 오거리에서 분산하여 경찰국 쪽으로 총을 쏘며 이동(계엄사 상황 일지)
- 16:00 일단의 시위대들이 전남대 병원 옥상에 LMG 2대를 설치하고 전남 도청을 향해 사격을 개시.(월간조선, 1985. 7.)
- 16:00경부터 민중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형성된 전투지도부의 지휘로, 무장한 시민군이 탄 각종 차량들이 광주공원으로 집결 시작. 5시경 수백 대의 차량과 수천의 군중이 모이자 예비군 중대장으로 보이는 중년남자가 통제 시작. 조별로 부대 편성, 총기 조작법·수류탄 사용법·사격 요령 등 지도한 후 최후의 결전을 위한 배치를 하고 각 지역으로 분산시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8쪽)
- 16:00 시위대들이 카빈 3백정으로 무장, 전남의대에서 경찰국 쪽으로 진출 중.(조선일보 취재일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월 21일자 28쪽)
- 16:15 시위대 전남의대 12층 옥상에서 LMG 2대 설치, 5백 m 떨어진 도청 향해 발사 중, 소방차 1대에 석유를 만재, 도청 방화 위해 진출 중, 일선방직 집중 무기고에서 카빈 1백 50정 피탈.(조선일보 취재일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월 21일자 30쪽) (월간조선, 1985. 7) (현사연, 1990)
- 전남대 의대 11층 옥상에 LMG 2정을 설치, 도청 향해 발사(3백 미터 거리).(현사연, 1990)
- 16:15 시위대가 전남대 의대 12층 옥상에 LMG 2대를 설치하고 전남 도청을 향해 발사.(월간조선, 1985. 7.)
- 16:40 계엄군이 APC를 선두로 조선대 도청 15번 도로를 따라 이동. 전남대 병원, 남광주 시장, 숭의실업고교 등에서 사격을 받음.(특전사 전투 상보)

- 16:43 전대병원 12층 옥상에 LMG 2대를 설치하기 위해 11명의 특공대로 편성. 한발도 사용하지 않음? (10일간의 취재수첩) 계엄군은 이 기관총을 제거하기 위해 특공조를 편성하기도 했다고 함(김영택, 184)
- 17:00경 시민군 특공대 11명이 LMG기관총 2정을 메고 전남대 외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으로 올라가 설치함. 이 광경을 헬리콥터가 정찰함. 이들은 전남도청을 향해 사격을 시작함(황석영, 126-7) - 위의 진술에 따르면, LMG는 사용되지 않았음
- 17:00 기독교병원에서 헌혈하고 나오던 박금희 양이 헬기에서 쏜 총에 맞아 즉사.(현사련)
- 17:00 전남대 병원 주위의 야산에 시민군이 탑승한 버스 2대가 배치됨(현사련). 그 외에 조선대 병원 환자대기실, 학동 송실고와 석천다리, 학동 평화맨션 부근 신당고개, 학동 배고픈 다리 등에 각각 버스들을 배치함. / 전남대 병원에 배치된 시민군은 제4조였음.(현사련)
- 17:00 (광주공원에서) 군대 다녀온 사람을 조장으로 하고 10명 단위로 조를 짜 11대의 고속버스에 태웠다. 전대병원 주위의 야산에 버스 2대, 조선대병원 환자대기실에 2대를 정하고 계엄군이 지원동으로 넘어올 것에 대비해서 학동 송실고와 석천다리에 3대를, 학동 평화맨션 부근의 속칭 신당고개에 2대를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학운동 배고픈 다리에 2대를 배치하여 지역방위를 하게 했다.”(구술 : 문장우, 현사연 조사) (현사련, 1990)
 - 1조는 정찰임무, 2조는 도청 감시, 3조는 외곽도로 경계, 4조는 치안유지를, 5,6조도 각기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 나는 2조에 배정되었고 조원은 5명이었다. 우리 조가 광천동 외곽지역 순찰을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광주공원으로 모이라는 무전연락이 왔다. 본부인 공원으로 모인 특공대에게 각기 다른 임무가 부여되었다. 1조는 도청, 2조는 동구청, 3조는 적십자병원, 4조는 전남대 부속병원 경계의 명령이 하달되었고,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발포가 있을 시 즉각 응사하라고 했다. 도청 경계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조가 텅 빈 금남로를 따라 전일빌딩 쪽으로 나아가자 어디선가 우리 차를 향해 드르륵 총을 갈겼다. 그에 굴하지 않고 직진하는데 운전병이 총에 맞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 차는 분수대에 꼬꾸라박히고 말았다.” (구술: 최동복, 현사연 조사) (현사련, 1990)
- 17:30 계엄군의 총퇴각 결정. 장갑차 한 대가 학동 방면으로 질주하며 길 양옆에 M60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하며 지원동 입구까지 두 차례 왕복, 이는 계엄군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위협사격이었음. 많은 시민들 살상. 잠시 후 병력을 실은 군용트럭 10여 대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며 길 양옆으로 M16난사. 시민군도 맹렬히 사격. 계엄군은 소속 부대별로 조선대 쪽으로 퇴각. 어둠을 이용하여 외곽도로로 전 부대가 빠져 나감. 도경간부는 “사태가 급하므로 알아서 피신하라”지시하고는 도청 뒷담을 빠져 나가고 조선대와 전남대의 남은 병력도 퇴각. 시민군, 추격 계속.(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8-89쪽)
- 17:30경 계엄군의 총퇴각 결정

- 계엄군이 퇴각하면서 병원에 M16을 난사함(의사회, 167)
- 17:50분경 무사히 조선대 도착, 철수준비에 들어갔다. 조선대 철수는 11여단 통제 하에 도보제대와 차량제대로 편성. 차량제대는 APC를 선두로 조선대-도청 15번 도로를 따라 철수하던 중 전남대병원, 남광주 시장, 송의실고 등에서 사격을 받았다. 도보제대는 19:40분경 11지역대가 통로를 개척하면서 철수개시, 임시 숙영지에 02:40분에 도착, 잠시 가면을 취한 후 06:00출발, 08:30분 주남마을에 도착. (특전사 전투상보) (현사련, 1990)
- 19:00 시민 무장 개시. 남평, 화순, 나주 등으로 출발했는데, 나주에서는 실탄 4만 2천 발, 경기관총 2정, 카빈총 3,200정을 빼앗고, 화순에서는 폭탄(TNT 3상자)을 가져와 거의 무장 완료.
 - 시민군은 전남대 의대 옥상위에 LMG 2대를 설치하고 500m 전방의 도청을 향해 시험발사를 했다. 놀란 계엄군은 헬리콥터 편으로 급 도주했는데 그들은 비밀 문서와 무기와 몸만 빠져나갔을 뿐 떠난 자리에는 침낭, 식품 및 모든 소지품과 시설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월 21일자 34쪽)
- 21:40 버스와 트럭에 탄 시위대들이 오전 11시경 화순으로 향했다. 우리가 화순경찰서에 도착하자 무기고를 지키고 있던 보초병은 재빨리 도망갔다. 그곳에서 카빈을 탈취하여 그곳 주민과 함께 화순 군내를 돌아다니며 차량시위를 했다. 그날 밤은 화순에서 자고 22일 새벽에 광주로 와서 전남대 의대 부근에 있는 시민들에게 탈취한 무기를 나눠줬다.(구술 : 이상배, 현사련 조사) (현사련, 1990)

○ 5월 22일

- (07시 경으로 추정) (김원갑 주도) 광주공원 앞에서 5백 명의 무장시민군을 재편성하여 각 지역으로 배치하고, 시내 중심부 주요 빌딩에 시민군 경계병 배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5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5월 22일자 3쪽)
- 09:00 스피커로 도청 앞에 모이자고 외침. 도청 앞에서 강원도 출신 공수대원 1명을 생포함. 그는 “광주시민의 70%(490,000명)를 죽여서라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자백.
 - 전남대 의대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도 시위대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통행은 자유로웠다. 영안실 앞에는 울음바다였다. 시체는 모두 18구였다. 병원 측은 영안실이 비좁아 영안실 옆 공터에 텐트를 치고 시체를 옮겨 놓았다. 영안실에는 신원이 확인된 10구가 관에 안치되어 있었고 텐트 속에 있던 8구의 시체는 광목으로 얼굴을 가려 놓았을 뿐이다.[행여 내 가족이...]하는 시미들이 광목을 들춰 얼굴을 확인하다가 가족이 아니면 안도의 숨을 토했고 자기 아들임을 확인한 50대의 한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까부러치기도 했다. 이 구석저 구석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40여명의 부상자들은 병실이 모자라 복도가 입원실이 됐다. 대부분의 부상자는 20대 청년들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기독교병원, 적십자병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오전에 확인한 사망자는 전대병원 18명, 기독교병원 14명, 적십자병원 21명, 성요한 병원 2명, 시내의원 3명, 조대부속병원 4명 등 모두 62명이었고 부상자는 1백 50명이었다. 실로 엄청난 사상자였다.(조선일보 취재일지)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5월 22일자 5쪽) (월간조선, 1985. 7) (현사련, 1990)

- 새벽 화순경찰서에서 탈취한 카빈 소총을 전남대 의대 부근에 있는 시민들에게 분배 (현사련)
- 09:00 전남대 의대 병원 영안실 18구 시체. 신원확인 안된 시체 10구. 오전 확인한 사망자 전남대 병원 18명, 기독교 병원 14명, 적십자 병원 21명, 성요한 병원 2명, 시내 의원 4명 등 모두 62명, 부상자 150명.(월간 조선, 1985. 7.)
- 전남대 병원에는 22구, 기독교 병원에는 18구, 적십자 병원에는 17구가 안치됨(김영택, 203)
- 11:00 학생 및 청년들이 화물자동차에 스피커를 장착하고 병원에 피와 의약품이 바닥났다고 알려면서 헌혈을 호소함. 이 자동차는 헌혈 희망자를 가득 싣고 전남대 병원으로 감(김영택, 201)
- 12:30 종합병원에 사망자 인상착의를 적은 벽보를 부착
- 17:40 전남대 병원에서 썩차와 트럭 등 차량 5대에 시체 18구를 싣고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나옴(월간조선, 1985. 7.)
- 17: 55경 시위대들은 지프와 반트럭 등 차량 5대에 전남대병원에서 시체 18구를 싣고 도청 앞 광장으로 나왔다. 군중을 비집고 도청 분수대 잔디에 시체를 옮겼다. 유족들은 관마다 향을 피우고 울부짖었다.(조선일보 취재일지)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5월 22일자 19쪽) (월간조선, 1985. 7) (현사련, 1990)
- 18:30 전남대 병원에 있던 시체 18구 도청분수대 앞으로 옮겨 추도식, 관 구입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 5월 23일

- 10:00 수습대책위원회 조직개편.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전대병원 26명, 기독교병원 17명, 적십자병원 21명, 조대병원 1명, 요한병원 2명, 기타 3명, 도청 내 44명 등 114명
- 17:00 도청 무장폭도들이 회수된 무기 재 지급하여 무장 '정부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경화.
- 재향군인회관 옥상에 LMG 설치, 폭도 주동자 도청 철수, 장소 이동, 군 진입시 반격 태세(특공대, 방석복 착용).
- 차량 통제반은 차량통제를 위해 시민군이 타고 있는 모든 차를 도청으로 집결시켜 일련번호 부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비, 차량은 219호까지 있었음.(전교사 작전일지) (현사련, 1990)
- 각 병원을 순회 방문하던 전남의사회장은 전남대병원 응급실의 산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듣고, 여러 통로 산소 공급을 요청함. 그 뒤 광주통합병원 김영관

대령으로부터 부산 군수기지사령부에서 기차로 보내올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음. 내무부 차관에게 다른 통로로 연락을 하여 24일 트럭 한 대분 산소 100통을 통합병원에서 인수해 가라는 연락을 받음. 통합병원 행정장교 이소령으로부터 산소 100통을 인수하여 전남대 병원에 70통, 광주 기독교 병원에 30통을 배분함. 이 산소는 손수익 내무부 차관의 주선으로 이리공단에서 보내온 것임. (의사회, 29)

○ 5월 24일

- 12:00 시내 각 병원은 이날부터 산소와 의약품이 부족하여 전남의사회에서 대한의사회와 적십자사에 이를 요청(월간조선, 1985. 7.)

○ 5월 25일

- 08:00 전남도청에서 1층 화장실을 다녀오던 자칭 특공대장 장계범(24세)이 괴한에게 등을 찔려 쓰러졌고, 같은 특공대원 정향규(31세)가 상처난 부위를 빨아내다가 중독. 전남대 병원에 옮겨져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음을 발견. 학생들은 이들을 수상히 여겨 감시함. 김종배가 확인 지시를 하고, 순찰대원 윤석루, 이재희, 이재준 등 5-6명이 급히 전남대 병원으로 가보니 장계범은 도주하고, 정향규를 잡아 전남 도청 조사과에서 조사를 함. 5월 29일 헌병대 영창에서 전남 도청의 주요 간부들이 조사를 받을 때 장계범이 복면을 쓰고 나타나 진술함. 독침 사건은 계엄군 측의 조작극으로 판명됨.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전남 도청에서 빠져나감. 시민들 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혼란스러워짐.
- 13:00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부터 산소 1백여 통 받아 전남대 병원 70통, 기독교 병원 30통을 전달. 이 산소통은 전남의사회가 중앙에 의뢰한 것임.(진월동 노대마을)
- 13:35 독침에 찔린 학생은 조선대 병원에 입원. 의식 회복된 상태 - 사실 무근. 학생들 불신

○ 5월 26일

- 12:10 전남대 의대 부근에서 시민호소 벽보 부착. 대학생은 YMCA로, 광주시민 뭉치라, 최후의 일각까지, 전두환 퇴진, 과도 내각 책임질 것, 죽은 자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말자 등의 내용
- 12:00경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전남대 스쿨버스에 고교생 1천여 명을 선두로 하여 참석자 전원이 시가행진에 돌입. "우리는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 "무기반납은 절대로 안 된다" "살인마 XXX 찢어 죽이자"는 구호를 외침. 시위대는 금남로 광남로 광주공원 양림로 전대병원 청산학원 계림과출소 구역 한일은행 도청으로 되돌아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13쪽)
- 23:00 전일빌딩 40여 명(LMG 기관총 설치), 전남대병원 옥상 숫자 미상(LMG 기관총

설치), 서방시장 숫자 미상(LMG 기관총 설치) (넘어넘어) (현사련, 1990)

- 23:00 전남대 병원 옥상에 시민군 병력 배치. 약 10명(?). LMG 설치(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 5월 27일

- 계엄군 진입 * 양평 20사단 : 지원동 학동 전대병원 도청 후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19쪽)
- 26일 광주비행장에 집결되어 정비중인 제11특전여단은 1개 중대 규모의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일빌딩에 있는 방송국과 관광호텔을 점령하라는 작전명령을 전교사에서 수령하고 제61특전대대 4중대를 특공조로 편성, 동일 18:00에 특공대를 UN-1H 5대로 주남마을로 이동시켜 제20사단 61연대와 합류시켜 작전을 협조한 후 23:15분에 침투를 개시했다. 익일(27일) 01:50분에 임무지원 지점으로 선정된 조선대학교 뒷산에 도착하여 최종적인 작전준비를 완료하고 동일 03:30에 은밀히 목표지역으로 이동 04:00에 목표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완전히 점령했다. 당시 진압작전 상황은 3여단이 도청, 7여단이 광주공원에서 폭도들과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곳을 지원하기 위해 총장로를 우회하여 도청을 측방에서 공격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작전팀은 1개 지대로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정계하고 2개 지대를 중대장이 인솔하여 도청으로 이동 중 05:15분에 YWCA 건물 앞에서 30여 명의 폭도들로부터 사격을 받아 도청으로의 진출이 저지되고 현장에서 약1시간 동안 폭도들과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어 과감한 공격으로 06:20에 YWCA 건물 내부를 완전 소탕하고 사살 3명, 포로 29명의 전과를 올리고 06:40 작전지역을 보병 제20사단 61연대에 인계 후 작전을 종료했다.(특전사 전투상보) (현사련, 1990)
- 04:10 김재수의 아내(유복남)가 집에서 대인시장 부근에서 금남로를 향해 쓴 총탄을 맞아 전남대 병원으로 감.(구술 : 김재수, 유복남, 현사연 조사) (현사련, 1990)
- 04:25 제61연대 전남의대 일대에서 교전. (계엄사 상황일지) (현사련, 1990)
- 14:00 시청 직원 구호, 의료, 교통, 병역 문제 협의 중(월간조선 1985. 7.)
- 16:00 전라남도 의사회가 중경상자 1,129명, 중태 291명, 중상 280명이라고 발표
- 계엄군이 진압을 하러오는 것을 전남대 병원 직원 숙소가 있는 11층에서 구경하자 군인 1개 소대가 병원에 들어와 위협함(의사회, 40)

2
0
0
7

II. 지정과제

1. 5·18민중항쟁과 헌법개정

민병로 | 전남대학교 법학과

2. 광주시민미술학교의 개설과 5·18항쟁의 대항기억형성

배종민 | 동신대학교 강사

5·18민중항쟁과 헌법개정

민병로(전남대 법학과)

I. 서론

5·18민중항쟁 발발이후 27년이 지난 뒤인 금년(2007년)에 와서야 당시 5·18민중항쟁의 실제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개봉되면서, 수백만 관객들에게 5·18민중항쟁이 단지 역사적

사실만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경험적 실재로서 한국 민주화의 원천이며 그 발전의 추동력이라는 인식의 계기를 재차 만들어 주었다. 또한 영화를 관람한 당시의 세대들은 그동안 회미해져 가고 있던 5·18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날의 항쟁 정신과 희생자의 넋을 애도하였을 것이며, 5·18 당시 유년세대나 그 이후의 세대들은 영상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쟁취된 것이라는 인식이 각인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5·18민중항쟁¹⁵⁾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유신체제가 붕괴되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군사쿠데타를 통해 군부를 장악한 뒤, 정권 찬탈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1980년 5월 17일 자정에서 27일 새벽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서 결사 항쟁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는 사망 170명(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 4명), 부상자 380명(민간인 127명, 군인 109명, 경찰 144명), 검거자 1,740명(730명 조사, 나머지 석방)이었다¹⁶⁾.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15) 5·18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전쟁', '무장봉기', '민주화운동', '항쟁', '혁명'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5·18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 주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5·18민중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윤선자에 따르면, 5·18민중항쟁은 "일제식민지시대의 반봉건·반침략의 명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1945년부터 문단상황이 연쇄되면서 빚어진 독재와 반민주화를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이루려는 한국민주화운동선상에서 가장 극렬한 모습으로 폭발한 항쟁이었다"고 한다. 윤선자, "5·18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5권 2호, 2005년, 108면.

16)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년, 247면.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당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등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¹⁷⁾.

위와 같은 많은 희생을 치룬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정권에게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재라는 태생적 결함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 되었다¹⁸⁾. 더욱이 광주시민들이 사회적 정치적 주체로서 저항권을 행사하여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투쟁한 5·18민중항쟁 정신은 반미반독재투쟁의 강한 폭발력이 되어 마침내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으며, 당시 미국과 한국군부의 정책과 행동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전두환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하의 폭압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였다¹⁹⁾.

이러한 5·18민중항쟁과 6월항쟁의 성과에 의해 여야간 합의로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 87년 개헌은 우리 헌정사에서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제3차 개헌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 기존의 정치세력인 여야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주된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 대통령 5년 단임제,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 설치, 군의 정치적 중립 규정,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헌법전반에 걸친 개정이었다.

위와 같은 전면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부세력의 잔당인 민정당과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민주당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군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데 항거한 '5·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 및 '저항권'을 규범화하는데 실패한다. 즉 당시 각 정당의 협상대표들이 100개항 내외의 쟁점사항을 가지고 협상을 거듭했지만, 끝내 5·18광주민중항쟁정신의 계승 및 저항권 등은 삭제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3·1운동으로 건립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4·19민주이념"에 관한 것만 헌법전문에 도입하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18민중항쟁이 한국 민주주의의 구현 및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제9차 개헌에 미친 영향과, 당시 그 이념적 지표를 '헌법전문'에서 규

17) 1990년 8월 6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1990년부터 2004년까지 5차례 걸친 보상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가 심의한 결과 사망 154명, 행불 74명, 상이후 사망 99명, 상이·연행·구금 4,684명, 기타 61명에 대해 보상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행불자나 보상미신청자, 상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실질적인 보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신청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억울하게 누락된 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6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가 구성되어 현재 보상심리가 진행 중이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일섭,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2006년, 173-202면 참조.

18) 프랑수아혁명이 혁명적 세력들에게 정치적 격변의 모델이 되었듯이, "5·18민중항쟁은 민중항쟁의 모델이었고, 저항세력들의 정당성을 공유하게 만든 정체성 형성의 근원"이 됨으로써 80년대부터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최창집,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그 영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년, 17면.

19) 1980년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저항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킴으로써 6월항쟁의 핵심 추동력으로 작동하였고, 동시에 신군부와 미국의 행동에 보이지 않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군대동원을 통한 시위진압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용철,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1호, 2001년 4월, 235면.

범화하는데 실패한 배경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진행될 제10차 개헌에서의 5·18민중항쟁정신 계승의 헌법전문화 및 저항권 조항 등의 헌법규범화의 헌법적 당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87년 개헌의 헌법사적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5·18민중항쟁정신의 헌법적 의미를 근대입헌주의의 헌법사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헌정사의 변천과 내용

1. 이승만 장기독재와 헌법개정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지만, 미군의 상륙에 의해 38도선 이남은 미군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미군정하에서 1948년 남한만의 5·10단독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제헌의회가 구성되었고, 제헌의회는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헌법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유진오씨가 기초한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 의원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진행된 심의는 이승만의 주장에 의해 대통령제와 국회의 단원제가 채택되는 대신에, 한국민주당의 주장인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위원회와 국무총리제가 반영되는 타협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시행된다. 동년 7월 20일에 헌법규정에 따라 제헌의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고 독주함으로써, 불만이 고조된 한국민주당에서는 이승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의 움직임이 일어나, 1950년 1월 28일에 한국민주당의 헌법개정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제적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79명, 반대 33명, 기권 66명, 무효 1명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다. 그 뒤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압승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점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헌법상의 규정 하에서는 제선되는 것이 희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1년 11월 30일 피난지 부산에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952년 1월 18일 국회의결에서 부결되었다. 그 뒤 야당도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1952년 4월 17일에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여당인 자유당은 동년 1월 18일에 부결된 개헌안을 약간 수정해서 양원제와 대통령 국민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더불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은

대통령직선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폭력과 불법수단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위협하거나 강제연행해서 의사당에 연금하는 등 전단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여당의 개헌안인 대통령직선제에, 야당측의 개헌안에 제시된 국무원불신임제가 가미된 이른바 발췌개헌안이 1952년 7월 4일에 기립투표 방식으로 가결되었다²⁰).

그 뒤 제2차 개헌은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이 이끈 자유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더욱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자유당에 다수 입당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재적의원 203명 중 136명의 발의로 이승만의 3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유당의 개헌안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된다. 1954년 11월 17일 민의원에서 의결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에서 찬성 135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 부족하여 부결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를 후에 자유당 의원만이 출석한 민의원에서 4:5입이라는 계산방법에 의해 203명의 3분의 2는 135표라는 논거로 27일의 개헌안에 대한 부결 선포가 취소되고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다²¹).

제3차 개헌은 1960년 4·19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4·19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침략 위협이라는 정권의 안보논리 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극도로 유린당해 온 시민들의 불만이 장기집권에 집착한 이승만 독재 정권의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²²). 당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강력한 항의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씨는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다. 그리고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27일에는 사임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수리되었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은 무너지고, 동년 5월 2일 허정을 내각수반으로 한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국회에는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위원회에 기초한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한 헌법개정안은 동년 6월 15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제3차 개헌은 본문 55개 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에 걸친 전면개정이었으므로 규모면에서 신헌법의 제정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제나 검열제폐지를 명문화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확대·강화하

20) 발췌개헌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위험성이 지적된다. 즉 ①제헌헌법 제93조 제3항에 의하면, 개헌안은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점, ②의회절차와 자유토론이 생략된 채 강압적으로 표결이 진행된 점, ③1952년 1월 18일에 제2차 제출된 정부개헌안은 동일회기중에 부결된 1951년 11월 30일의 정부개헌안과 내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계획열, 헌법학(상) 제2보정판, 박영사, 2002년, 130면.

21)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5입이라는 계산방법에 의해 가결·선포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신2판), 박영사, 2002년, 104면.

22) 장기집권에 집착한 이승만 독재정권은 1956년 선거에서의 패배(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와 국민의 지지율 저하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국가보안법의 대대적인 개정(인심혹란죄 등)을 통하여 좌익세력뿐만 아니라 언론과 야당, 그리고 일반국민을 규제하여, 자유당 일당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 풀저, "국가보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방기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학과 행정학의 현대적 과제, 2000년, 137면.

였으며, ②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하였으며, ③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2.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헌법개정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입법·행정·사법의 3권 전부를 장악한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장면내각을 강제적으로 총사직시킨다.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혁명내각을 조직함으로써 국정의 운영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혁명내각에 의해 수행하게 하였다. 이른바 혁명내각은 5월 23일에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강제 해산시켰다. 그 뒤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²³⁾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졌으며, 제2공화국헌법은 이 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었다. 7월 3일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이 되어 3권을 장악함으로써 18년에 걸친 장기 군사독재의 서막이 열렸다.

군사정부는 이른바 '5·16혁명공약'²⁴⁾에 따라 민정이양을 위한 준비로써 1962년 7월 11일에 헌법개정안을 위한 헌법심의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였다. 군사정부는 제2공화국헌법이 정한 헌법개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1962년 9월 8일 비상조치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0월 12일에는 국민투표법을 제정·공포하였다. 1962년 11월 5일 헌법심의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되어 동일 공포되었다. 이 개헌안은 12월 17일에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후 12월 26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1년 뒤에 국회가 처음 집회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제5차 개헌에 따라 1963년 8월 제5대 대통령 선거 및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권력의 민정이양 약속을 깨고 입후보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의 지지 세력으로 구성된 민주공화당이 국회의원의 다수(175석 중에서 110석 차지)

23)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주요내용은 ①국가재건최고회의가 최고통치기관으로서 3권을 통합하고, ②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③대법원장과 대법심판사는 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④헌법재판소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그 밖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⑤제2공화국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계희열, 전개서주(6), 2002년, 136면 (주)138 참조.

24)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이른바 5·16혁명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 ②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헌정권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된 국민도덕과 민족정기를 진작시킨다. ④절망과 기아 속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체제를 완성한다. ⑤국민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반공실력을 배양한다. ⑥위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새롭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이다. 계희열, 전개서주(6), 136면 (주)137 참조.

를 차지하였다. 그 뒤 박정희와 민주공화당 정부에 의한 독재체제의 구축 하에서 1967년 5월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재선되고, 6월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대통령 3선을 금지한 헌법 제69조 제3항의 “대통령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1969년 8월 7일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른바 ‘3선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은 8월 9일에 공고되어 9월 14일에 국회 본의사당이 아닌 장소에서 여당의원만의 출석에 의해 기습적으로 가결된 후 10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었다.

그 뒤,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95만표에 불과한 근소한 차이(박정희: 53.2%, 김대중: 45.3%)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동년 5월 25일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야당의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정권유지에 불안을 느낀 박정희 군사정권은 동년 12월 6일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12월 17일 비상사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 등이 한층 더 억압받게 되었다. 그 뒤 장기집권의 제도화를 위해 박정희 군사정권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론의 분열 및 국력의 낭비를 막고, 국가의 단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하에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의 형식으로 헌법의 일부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비상조치’를 실시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

‘10·17비상조치’의 주요내용은 ①국회해산, ②정당 등의 정치활동 중지를 위해 헌법의 일부조항의 효력정지, ③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의 권한대행, ④10월 27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를 국민투표로 확정할 것, ⑤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1972년 말 이전에 헌정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 등이다.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27일에 제7차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하에서 11월 2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동년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제7차 개헌의 주요내용은 ①일반적 법률유보와 법률적 법률유보에 의해 기본적인 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제한 가능하게 된 것, ②인신권·재산권·노동3권의 제한, ③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회의에 대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의 선출권을 부여하였으며, ④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법관 및 일부 국회의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3권을 통제할 강력한 권한이 집중되었으며, ⑤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외권 등을 부가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강화, ⑥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입금지규정을 폐지, ㉞국회의 국정감사권의 폐지 및 국회회기의 단축 등에 의한 국회의 기능과 지위의 약화 등이다.

3. 전두환 군사정권과 헌법개정

박정희정권의 유신헌치²⁵⁾에 반대하는 지식인, 노동자, 학생, 종교인, 야당의 정치인 등의 격렬한 저항운동은 1979년 제10대 총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를 가져오고, 마침내 동년 10월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부산·마산 지역에서 데모 시위대와 진압경찰이 충돌하는 이른바 부마항쟁에 이르게 된다. 동년 10월 26일 부마사태의 수습에 대한 정권내부의 알력 등의 요인으로 박정희가 자신의 가신인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었다. 10·26사태에 의해 박정희가 사망하자 18년간에 걸친 군사독재정권은 막을 내리고, 이른바 1980년 '민주화의 봄'이 도래하였다.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뒤 12월 6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고, 12월 14일에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민주화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 하에 정부, 의회, 학계 등에서 자유롭고 폭넓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1979년 12·12군사쿠데타 및 1980년 5·17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파견하여 이에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을 무력 진압하였다. 그 뒤 5월 31일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²⁶⁾. 8월 27일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9월 1일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1980년 5·17계엄확대로 인해 정치되었던 헌법개정작업은 정부의 '헌법개정심의회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그 하부조직인 '요강작성소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소위원회가 작성한 헌법개정요강안을 바탕으로 헌법개정심의회위원회에 보고하고, 9월 9일 헌법개정안으로 확정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9월 2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되어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10월 27일 공포, 확정되었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헌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고(부칙 제5조), 정당이 해산되고(부칙 제7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되고, 통일주체

25) 독재자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위해 마련한 1972년 유신헌법(제53조) 하에서는 대통령은 국정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의 유신시대는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발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이른바 긴급조치 시대라 일컫는다.

26)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인 대통령과, 각료8명, 14명의 장성 등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에 전두환을 임명했다. 계획열, 전개서주(6), 각주(160) 147면.

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되었다(부칙 제4조).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0월 29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부의 역할을 대행하였다²⁷⁾.

1981년 1월 25일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2월 11일 대통령선거인단(5,278명)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2월 25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3월 3일에 취임했다. 또한 1981년 3월 2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276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4. 개헌의 헌정사적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헌정 50년사는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점철된 격랑의 역사로 일컬어지고 있다. 9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고, 세 번의 군부쿠데타로 민주헌정이 중단되었으며, 2차례의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었고, 7회의 간선제와 9회의 직선제를 통해 9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9인의 대통령 중 1인은 해외로 망명을 떠나고 1인은 피살되고, 2인은 무기징역형 등의 선고로 교도소에 수감된 일이 있다. 그리고 5회에 걸쳐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17회 실시되었으며, 국회가 세 번 해산당하고, 양원제 국회가 구성된 적이 한번 있으며, 13회에 걸쳐 선포된 계엄령이 무려 1,825일(5년 188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²⁸⁾.

위와 같이 파란만장한 우리 헌정사에서 9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헌법개정의 주요특징은 첫째,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중임금지조항의 수정 내지는 삭제나, 대통령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거나, 또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되는 것이었으며, 둘째, 개헌추진방식이 발해개헌·4사5입개헌 등 변칙적인 것이었고, 셋째, 개헌추진세력이 대부분 집권자 내지는 집권여당이었으며, 넷째, 헌법개정의 정당성 내지는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투표로써 정통성을 조작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다섯째, 헌법개정 전후에 계엄선포나 긴급조치와 같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점 등을 들 수 있다²⁹⁾. 그렇지만 4·19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제3차 헌법개정과, 5·18민중항쟁과 6월 항쟁의 성과에 의해 이루어진 제9차 헌법개정은 시민혁명의 성과로 여야가 주체가 되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합의개헌의 형태라 할 수 있다³⁰⁾.

27) 계획열, 전개서주(6), 148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약 5개월간에 걸쳐 헌법시행에 필요한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국회법뿐만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는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등(189건)의 법률을 제정하여 이후에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가속화시킨다.

28)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7년, 102면.

29) 권영성, 전개서주(14), 103~104면 참조.

30) 권영성, 전개서주(14), 103~104면 참조.

III. 5·18민중항쟁과 87년 개헌

1. 12·12군사반란과 5·18민중항쟁

전두환·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불안정한 정세를 틈타 군부 내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전후방의 병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세력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관저인 총리공관의 경비원의 무장을 협박하여 해제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가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보안사, 중앙정보부, 경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장악하였다³¹⁾.

위와 같은 12·12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정권찬탈을 위해 준비한 집권시나리오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³²⁾. 먼저 12·12군사반란으로 12월 13일 단행될 예정이었던 내각개편이 14일로 연기되면서 발표된 내각인사에서 신군부의 실세들과 밀접한 인사들이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였다. 또한 군부의 세력개편을 통해 12·12군사반란에 가세했던 이회성 중정부장서리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노태우 9사단장을 수경사령관에, 정호영 2군 50사단장을 특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군인사를 통해 군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신군부의 수뇌인 전두환은 1980년 4월 14일 보안사령관에 이어 정보부장서리에 취임하면서 국내외의 모든 정보망을 독점하였고, 공식적인 각료회의에도 참석함으로써 군부를 넘어 민간부분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권력의 배후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다³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신당설, 정부주도개헌론을 둘러싼 공방, 이원집정부제 개헌설, 공화당과 신민당의 내분 등으로 어수선하였다. 노동운동은 사복사태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국 전 사업장으로 확산되어갔고, 각계각층 민중들의 생존권적 차원의 요구와 각 부문에서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들도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들도 자신들의 투쟁의 초점을 학원자율화, 학원민주화투쟁에서 사회 전체의 민

31) 대법원은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착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따지 아니하고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정승화 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착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신군부에 의한 12·12군사쿠데타를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32) 신군부세력이 언제부터 권력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그 시기는 가장 빠르면 12·12가 계획되었던 시점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아무리 늦더라도 80년 1월경에는 이미 그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이원집정부제 구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당설이 유포되기 시작한 시점이 80년 1월 초라는 점,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작업을 목적으로 언론을 조정, 통제하려고 했던 이른바 'K공작계획'의 작성시점이 80년 2월-3월 중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미 그 이전에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 각주(22) 25면 참조.

33) 김준, 전계주(18), 23면 참조.

주화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계엄해제, 유신잔당퇴진, 정부주도개헌 중단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위를 벌였고, 1980년 5월 13일부터는 학교 밖으로 진출하였으며, 15일에는 서울역에 10만명이 집결하여 야간까지 시위를 계속한 뒤, 이 날 이후로 시위를 중단하고 정국의 변동 상황을 관망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이렇게 정치투쟁에 나설 무렵, 정치권에서도 계엄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김영삼씨와 김대중씨가 임시국회의 소집 및 정부의 개헌작업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마침내 공화당과 신민당은 총무회담을 열어 5월 20일 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하였다³⁴⁾.

그런데 1980년 5월 17일 10시부터 국방부에서는 계엄사전군지휘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나 각료 중 어느 누구도 먼저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보안사령관이 직무상 관련이 없는 보안사 참모들에게 지시하여 입안하게 한 다음,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의로 전국적으로 계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전두환 등은 신현확 국무총리를 찾아가 전군지휘관회의 서명을 들이밀면서 계엄확대와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국보위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은 헌정중단 불가론을 역설하였지만, 전두환 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다³⁵⁾. 이로써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었다³⁶⁾.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의 학생들은 18일 오전 전남대 교문 앞 시위를 계기로 광주 시내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인 가두시위를 산발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학생들의 초기 단계 시위진압과정에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된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살상행위는 시민들의 피 끓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³⁷⁾. 이런 상황 속에서 19일 오전부터 시위대의 중심세력이 학생에서 일반 시민 대중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으며,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의

34)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김준, 전계주(18) 39-49면 참조.

35)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0호 의하면,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권), 1997년, 19면.

36) 김준에 의하면, 신군부가 5월 17일을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날짜로 결정한 배경은 학생시위를 계기로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 대다수가 계엄의 지속이 사회불안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식이 확산된 데 있었다고 본다. 즉 공화당과 유정회까지도 정부에 조속한 계엄해제와 문제가 되고 있는 전두환, 신현확 등 극우강경세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 20일부터 열리기로 되어 있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었으며,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도 잇달아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5월 20일 이후가 되면 극소수 극우강경파를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연합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이원집정부제나 그와 유사한 헌법개정 등을 통한 권력 장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무력을 통한 권력 집약의 방법도 5월 20일 이후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지거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학생시위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 틈을 타서, 그리고 5월 17일 토요일 자정을 기해서 계엄확대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김준, 전계주(18), 51-52면.

37) 공수부대의 만행과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에 대해서 일자별로 상세히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으로, 전남사회운동협의회편, 전계서주(2) 참조.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수동적 저항과 공수부대의 잔인한 진압으로 피해만 당하던 수 세 국민이 공세로 전환되면서 이른바 ‘민중항쟁’이 시작되었다³⁸⁾.

항쟁 나흘째로 접어든 21일 아침 지난 새벽 광주역에서 사망한 시민 시체 2구를 시민들이 손수레 위에 싣고 대형 태극기로 덮어 시내로 나오자, 시민들은 맨손으로 싸우 다 많은 희생을 냈던 지난밤을 생각하고 무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오전 10시경 금남로를 메운 10여 만의 인파 속에서 쇠파이프나 몽둥이, 아세아자동차의 차량 징발 등으로 원시적인 무장을 하기 시작하였다³⁹⁾.

21일 오후 1시 정각, 도청 건물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일제히 시작된 공수부대원들의 무차별 집단발포⁴⁰⁾로 인한 엄청난 시민들의 희생을 계기로 시민들은 본격적인 전투를 위한 무장을 시작하고, 전투조직을 편성하여 조직적인 전투를 시작하였다. 무장한 시민군들의 조직적인 압박에 의해 이날 오후 5시 30분 계엄군이 도청으로부터 총퇴각하기로 결정되었다. 열악한 무기로 무장한 시민군이 최 신식 무기로 무장한 공수부대와 맞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계엄군이 퇴각한 뒤 광주시내는 시민군들에 의해 질서와 평화를 되찾았으며, 비조직적인 시민군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조직화하여 결사항쟁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27일 오전 새벽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들에 의해 시민군의 본거지인 도청이 점령됨으로써, 수백 수 천의 사상자를 남긴 채 정권찬탈을 노린 신군부와 맞서 처절하게 싸운 10일간의 항쟁 은 일단 시민군의 패배로 끝나게 된다⁴¹⁾.

이로써 12·12군사반란에 의해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으면서도, 이승만 독재정권 과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소외받아 온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 을 우려해 권력의 배후에서 권력의 정면에 나설 명분과 시기를 모색하고 있던 신군부 세력은 5·18을 계기로 권력의 정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즉 권력의 배후에서 예기치 않 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신군부세력은 5·17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통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연금·연행하고, 계엄군 병력의 국회점거와 국회의원의 등원 저지 등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신군부의 권력찬탈 기도에 정면으로 맞선 민중들의 항 쟁⁴²⁾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이들의 항거를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날조하면서 군이

38) 학생들의 초기단계의 산발적 시위에 대한 공수부대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안행은 잠재된 민중의 투쟁역량을 폭 력적인 방향으로 대응, 분출케 하는 자극적인 기폭제로 작용하였고, 공포는 사라지고 치열한 연대감과 증오만이 남 게 만들었다. 민중은 자신의 실연에 들어 있는 생존에 대한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뢰에 의해 등장하는 자 신들의 근원적 폭력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은 곧 공세적 국민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전남사회운동협의 회편, 전개서주(2), 61면. 안중철,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 334면.

39) 전남사회운동협의회편, 전개서주(2), 106~107면; 안중철, 전개주(24), 338면.

40) 군의 발표와 1988년 이후 피해자 신고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곳에서 최소한 54명 이상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충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중철, 전개주(24), 339면.

41) 신군부는 5·18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성공으로 인해 패배하게 되 고 5·18민중항쟁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6월항쟁과 5공청문회, 5·18재판투쟁을 통해 신군부의 중심인 물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5·18민중항쟁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정대화, “광주항쟁과 1990년대 민주화 운동”, 5·18기념재단편,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2007년, 30~31면 참조.

42) 1997년 5·18민중항쟁 재판투쟁에서 대법원은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을

정치의 정면에 나서는 명분과 계기로 삼았다⁴³⁾.

2. 5·18민중항쟁에서 6월항쟁으로

12·12군사반란과 5·17국헌문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광주외의 만행과 실상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귀와 눈과 입을 막으려 하였으며, 학생·노동자·농민의 시위와 조직결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하였다. 즉 국민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불법적인 구금·연행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폭압통치를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신군부의 철저한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5·18이 끝난 직후부터 학생·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광주에서의 공수특전부대의 잔혹한 살상만행과, 항쟁기간 동안의 미국의 신군부에 대한 묵인과 개입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기 시작하였다⁴⁴⁾.

5·18민중항쟁 이후 80년대 반미반독재 투쟁은 1980년 5월 30일 서강대생 김의기 열사의 투신자살, 6월 9일 노동자 김종태 열사의 분신자살, 서울대생 김태훈 열사의 투신자살 등을 계기로 신군부의 광주에서의 잔혹한 만행과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학가에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0년 12월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 1982년 3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동년 “미국을 적이라 규정”하는 전남대 오월투쟁위원회의 반미투쟁선언 등을 통해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및 묵인을 항의하고 자주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반미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광주항쟁을 애도하고 항쟁정신의 계승을 호소하는 시위 및 자살투쟁의 행렬은 5·18민중항쟁 이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⁴⁵⁾.

80년대 학생·빈민·노동자·농민들의 반미반독재 투쟁으로 계승된 5·18민중항쟁은 5월 27일 신군부의 시민군 진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80년 5월 이후의 한국사회에 “민족자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족통일의 열망을 확산시켰으며, 80년대 내내 5공정권의

을 명백히 하였다. 즉 대법원은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감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감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참조.

43) 김준에 의하면, 12·12군사반란에 의해 권력의 배후에서 실세를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권력의 정면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신군부 세력이 주로 배후의 실세로서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순응적인 민간정치인을 앞세워 그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길이었으며, 그 길은 이후 이원집정부제 구상으로 표면화되었다. 두 번째 방안은, 어떤 명분(가령 국가적 위기 등과 같은)을 만들어 내어 그것을 계기로 자신들이 표면에 등장하여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장악하는 길이었으며, 그 길은 5·18민중항쟁 이후 제5공화국의 탄생에 이르는 길에서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준, 진계주(18), 24~25면 참조.

44) 5·18민중항쟁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과 미국의 묵시적 승인 및 개입에 대한 고찰로는 박만규,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기념재단, 2007년, 419~448면; 이삼성, “광주민중투쟁과 미국의 역할”,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기념재단, 2007년, 464~481면 참조.

45) 나간채,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본 5·18항쟁”,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 317면 참조.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5공청산의 당위성을 제공하였으며, 결국에는 87년 6월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기쁨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다⁴⁶⁾. 즉 5·18민중항쟁은 80년대 한국사회의 운동이 60·70년대 자유주의적 반독재민주화운동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반독재 반외세 투쟁을 향한 '혁명적 민주주의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와 원동력이 된 것이다⁴⁷⁾.

위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민족민주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5·18민중항쟁의 운동사적 의미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해보면, 첫째, 5·18민중항쟁은 그것이 실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군부집단의 소위 5공을 비정통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확고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5공수립을 위한 군부의 반동적 시도에 저항함으로써, 역사에서 민족민주적 세력은 소위 5공의 비정통성을 규정하고 역사 앞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⁴⁸⁾. 둘째, 5·18민중항쟁은 조직화되지 못한 민중역량의 한계로 인해 신군부의 권력찬탈 막지 못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5·18민중항쟁 이후에는 민중들의 변혁역량을 이끌 전위의 형성과 그러한 전위와 대중을 굳건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연대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지배권력의 폭력성과 억압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동의 주체세력인 학생·노동자·농민·빈민들의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직화된 운동은 민주세력간의 연대투쟁을 통해 반미반독재 투쟁을 위한 민족민주운동을 확산·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⁴⁹⁾. 셋째, 군부독재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중요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가져 왔다는 점이다. 즉 신군부의 5·18민중항쟁 진압에 대한 미국의 묵시적 승인과 개입 때문에 70년대 사회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에 대한 소시민적 환상'이 깨어짐으로써, 민족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중의식과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해내는 것이 80년대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다⁵⁰⁾.

위와 같은 5·18민중항쟁의 좌절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반성 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무자비한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반미반독재 투쟁으로 조직·확산되었으며, 그 세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강해져 민주세력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86년 6월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10월의 민주·통일국민회의 발족으로 시작된 연대투쟁은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를 계기로 촉발된 6월항쟁 과정에서 전국적 조직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로 전환되어,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항쟁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의 7년간의 폭압정치를 종식시키는

46) 명노근, "광주항쟁 10주년을 맞으며", 현대사자료연구, 1990년, 4면.

47) 조희연, "5·18과 80년대 사회운동",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편, 5·18민중항쟁사, 2001년, 564면 참조.

48) 박헌채, "80년대 민족민주운동에서 5·18민중항쟁의 의의와 역할",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 5·18기념재단, 2007년, 56~57면.

49) 박헌채, 전개주(34), 56~57면 참조.

50) 조희연, 전개주(33), 565~566면 참조.

계기를 마련하였다⁵¹⁾).

결국 87년 6월항쟁의 촉발과 승리는 신군부세력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앞세운 공수부대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처절하게 끝까지 맞서 싸운 5·18민중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추동력이 된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압 하에서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 부정과 반미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의 조직화와 전 국민적 연대투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87년 미국으로 하여금 전두환 정권의 재쿠데타 움직임에 제동을 걸게 함으로써 민족민주세력의 종국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3. 87년 개헌의 경위와 한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군사반란과 5·18민중항쟁의 진압으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광주시민학살과 정통성 부재로 인한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권초기부터 자의적이고 전단적인 권력행사를 통한 폭압통치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정신을 계승한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은 군사정권의 폭압정치에도 굴하지 않고, 전두환 정권의 퇴진과 5·18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투쟁은 오히려 확산되었으며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더 높아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 1985년 2월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건 3개 야당이 득표율 58.10%를 획득하여 여당인 민정당의 득표율 35.25%를 앞섬으로써 민정당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야당이 적극적인 개헌공세를 펼치자 전두환은 88년까지 현행 헌법을 유지할 것과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의한 건의를 주문하였다. 즉 전두환과 여당이 88년 올림피아를 마친 후에 개헌을 실시하자는 주장은 제5공화국 헌법(제39조~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신군부의 핵심인물로 하여금 그 뒤를 계승하게 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국민과 야당이 강력하게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고 직선제 쟁취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두환도 여야합의에 의해 개헌안을 제안하면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로써 여야간에 개헌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여당인 민정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인 신민당은 대통령직선제를 고수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각제협상검토용의를 표명한 '이민우 구상'이 나오면서 두 김씨의 반대로 신민당이 분열되어 개헌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빌미로 전두환 정권은 합의개헌의 실패의 책임을 통일민주당을 창당한

51) 정대화에 따르면, "87년 6월 민주항쟁은 80년 광주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80년대 사회운동의 전국적 조직이자 최대연합으로서 6월 민주항쟁을 지도했던 국민운동본부는 80년 광주의 고립을 목적의식적으로 극복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대화, 전개주(27), 42~43면 참조.

김영삼·김대중씨에게 돌리고, 88올림픽 준비와 촉박한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1987년 4월 13일에 개헌논의 연기를 위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른바 4·13호헌조치는 그 무렵 1월 14일 고문으로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군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사실이 폭로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정부 민주화투쟁과 맞물리게 되었다. 야당 정치권과 민족민주세력이 하나가 되어 4·13호헌조치 철폐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전국적으로 대국민 가두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서 반정부 민주화투쟁을 하던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주화투쟁은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정당은 6월 10일 전당대회를 열어 신군부의 핵심인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한 민주화시위는 더욱 더 거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른바 4·13호헌조치를 통한 정권 연장 계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자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1987년 이른바 '6·29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 수용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기에 이른다⁵²⁾. 그 뒤 전두환 대통령은 7월 1일 담화를 통해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선언한 민주화조치의 내용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대통령직선제를 주요 골자로 한 개헌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⁵³⁾. 여야 각 4인의 대표로 구성된 '8인정치회담'⁵⁴⁾은 7월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헌협상을 시작하였는데, 두 정당은 개헌안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한다는 데에는 합의하였으나, 약 1백여개 항목에 걸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으로써 첨예하게 대립하였다⁵⁵⁾.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쟁점 중에서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의 반성의 토대 위에 「5·18」이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4·19」와 같은 맥락이고 더구나 일부 군의 정치개입에 항거한 것으로 역사적인 재평가와 함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넣어야 국민적 화해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민정당측은 전문에 모든 역사적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곤란하며,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확립되지 않은 일부의 주장을 전 국민의 합의가 담긴 전문에 넣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52)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발표한 6·29선언의 내용은 ①여야합의 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 ②정치범의 전면적 사면복권조치, ③언론의 자유의 참달을 위한 제도개선, ④대학의 자율화와 지방 및 교육의 자치실현 등 8개항이다.

53) 1987년 7월 24일 여야 4자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5개항에 합의한다. ①민정·민주 양당정치회담은 양당의 총재가 지명하는 각 4인으로 구성된다. ②양당 정치회담에서는 헌법개정과 관련된 모든 법안을 협의한다. ③차회담은 내주 중 양당 사무총장이 연락하여 개최한다. ④헌법개정안은 양당 합의후 각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성안한다. ⑤미석방자 석방 등 인권에 관한 문제는 국민대화합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양당 인권관계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속 협의, 노력한다. <동아일보 87. 7. 26> 참조.

54) 양당은 단일안 작성을 추진하기 위해 민정당에서는 권익현(협상대표), 윤길중, 최영철, 이한동 의원이 참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종재(협상대표, 동교동계), 이용희(동교동계), 박용만(상도동계), 김동영(상도동계) 의원이 참여한 8인정치회담을 구성하였다.

55) 여야간 구체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수, 한국헌법사(수정증보판), 학문사, 2000년, 687~692면 참조.

저항권에 대해서도 민정당측은 저항권은 초헌법적 자연법으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합리화시키고 권리행사의 적법성 판단이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저항권을 가장한 불법집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반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당한 권력의 인권유린과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을 예방하는 국민의 최종적 자구적 측면에서 저항이 정당성을 갖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행사방법은 불복종 운동 등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민정당측은 군의 정치개입 금지 는 현재의 규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군인이 현역을 면해야 한다는 조항)이 바로 문민화의 정신을 담고 있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전문과 총장 2개 부문에 규정, 문민정치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이처럼 △5·18광주의거, △군의 정치개입 반대, △국민 저항권의 헌법명문화를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었지만, 그 뒤 민주당은 미합의 부분 중에서 △군의 정치중립을 총강에 넣으면 전문중 「광주의거」 부분은 삭제가능하다고 양보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동아일보 1987.8.18). 이리하여 민정 민주 양당은 8월 26일 하오에 개최된 가진 8인정치회담에서 헌법전문과 관련하여 5·18광주문제를 넣지 않기로 하는 대신 저항권·군의 정치개입금지 내용은 총강 등에 적절히 삽입키로 양해를 보아 타결될 것이라 밝혔다(중앙일보 1987.8.27).

결국 87년 7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거듭된 8인정치회담에서 △5·18광주의거, △국민 저항권은 삭제되고,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과, 제5조 제2항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 조항이 추가된 형태로 여야간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합의된 개헌안은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이 기초되어 9월 18일에 여야공동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9월 21일 개헌안의 공고철차를 거쳐 10월 1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 뒤 10월 27일에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의 타협과 국민적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이라 할 수 있지만, 전두환이 권좌에 앉은 상태에서 전두환의 전위정당인 민정당과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야당인 민주당과의 야합에 의해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개헌이라 할 수는 없다.

4. 87년 개헌의 헌정사적 의미와 한계

5·18민중항쟁을 계승한 6월항쟁의 성과로 이루어진 87년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색으로는 ①대통령직선제를 16년 만에 부활시킴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 임기를 5년으로 단축시킨 점, ②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확고하게 한 점, ③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56) <중앙일보 1987. 7. 21>, <동아일보 1987. 8. 5> 참조.

사명을 명시한 점, ④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감사권의 부활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점, ⑤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하여 대통령제적 요소를 강화한 점, ⑥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한 점, ⑦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점, ⑧기본적 인권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헌법개정 내용은 총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민주적 정통성의 부재와 폭압통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산물로써, 그러한 정신이 미흡하지만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헌의 배경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무려 18년간이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압통치를 해온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자, 그동안 속박과 탄압 속에 소외되어 왔던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확고하게 자각하여, 정부의 수반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주체로서 나설 것을 열망하게 된 데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다시 군이 정권찬탈을 위한 군사반란과 국헌문란의 만행을 저지르자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결사 항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5·18민중항쟁이 있었기에 전두환 정권의 부당성과 정통성 부재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그것이 80년 민주화투쟁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어 직선제 생취투쟁으로 진 국민적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6월항쟁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직선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직접적으로는 6월항쟁의 성과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80년 유신체제 붕괴이후 폭력적으로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찬탈하려고 한 신군부세력에 맞서 싸운 5·18민중항쟁의 위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비록 진압되어 패배하였지만, 불의에 맞서 주권적 권리를 찾으려는 정당한 저항정신은 전두환 정권의 집권기간 내내 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폭력성을 알리는 투쟁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전 국민적 연대를 이루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 이것은 근대시 민혁명기에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 속박되어 온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라는 자각이 싹트면서 근대시민혁명의 동력이 되었듯이,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의식이 점차 성숙되어 온 국민들이 5·18민중항쟁을 통해 확고부동하게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갖게 됨으로써, 6월항쟁이라는 '시민혁명'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87년 개헌은 4·19혁명에 의한 제3차 개헌과 그 헌정사적 의미를 달리 한다 할 수 있다. 4·19혁명⁵⁷⁾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12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거부감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 하에서, 3·15부정선거⁵⁸⁾가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학생들과 중산 계층이 비폭력적 방법으로 항거한 '시민

57) 4월혁명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에 대한 저항으로 폭발하였지만 민중여당을 동원하고 조직할 지도부가 없어 그 성과는 지배세력 안에서 정권을 바꾸는 데 그쳤으며, 이승만 정권의 비민주성과 부패에 저항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김만길, "근대 민족운동의 전통과 광주",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2001년, 77면.

58) 3·15부정선거란 자유당이 1956년 선거에서 부통령을 민주당(장면)에게 내주었던 충격을 재현하지 않으려는 의도

적 불복종⁵⁹⁾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뽑힌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⁰⁾. 이에 반해 5·18민중항쟁과 6월항쟁은 신군부에게 강제적이고 폭압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빼앗긴 성숙하고 자각적인 주권의식을 가진 민중이 주체가 되어 저항권을 행사하여 주권적 권리를 회복한 '주권혁명'이라 할 수 있다⁶¹⁾. 다시 말해, 87년 개헌의 헌정사적 의미는 근대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국가에서 비록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적 해방을 이루었지만,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지 못한 채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억압과 소외를 받아온 민중들이 자각적으로 주권의식을 확립하면서 이룩한 '주권혁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의식을 확고하게 자각하게 된 주권자의 '주권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87년 개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을 가져온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현되었지만, 개헌논의 과정에서 항쟁의 주체인 민중들이 배제됨으로써 국가폭력에 대한 그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저항정신이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시대에 소외되어 온 기층 민중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규범을 담아내지는 못하였다⁶²⁾. 이러한 원인과 배경은 4·19혁명 때의 개헌⁶³⁾과는 달리 전두환이 그대로 권좌에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위정당인 민정당과 민의보다는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민주당이 대등한 비율로 구성된 '8인정치회담'이 주체가 되어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논의 초기에 민주당의 개헌안으로 5·18민중항쟁과 저항권의 헌법규범화가 보였지만, 협상과정에서 정략적 타협에

하에 1959년 6월 29일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을 정·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경찰을 비롯한 말단 공무원 조직까지 총동원하여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공개투표, 개표조작 등의 온갖 부정을 통해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킨 것을 말한다. 김영수, 전계서주(41), 448면.

- 59) 시민적 불복종은 헌법적 질서가 무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히 정의에 반하는 내용의 개별법령(법제도)이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비폭력적 방법을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항권은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가 근본적으로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다. 권영성, 전계서주(14), 2007년, 78면.
- 60)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헌법에 의해 국회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된 뒤, 의회에서 당선이 어렵게 되자 1952년 이른바 발해개헌을 통해 국민직접선거로 대통령 선출방식을 바꾼 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1954년에는 이른바 4·15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3선 제한을 철폐하고 1966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대통령제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에 염증이 난 국민들은 아달인 민주당이 제헌 이래 주장해 온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민주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8년, 112~113면 참조.
- 61) 5·18민중항쟁은 "유신체제의 적자였던 신군부세력의 등장 이전의 유신체제에 의하여 이미 유린된 법치국가적 민주질서를 쟁취하기 위하여 당시의 계엄령에 위반하여 대규모 시위와 무장투쟁의 형태로 기존 질서의 변혁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혁명적 성격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태호,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2006년, 64면.
- 62) 박영자에 따르면, 87년 개헌은 민중의 직접적 참여가 고려되지 않은 채 '절치권에 위임한 상태로 진행'된, 즉 민주화 운동 주체와 그를 실현하겠다는 정치 주체가 분리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제도 역시 '입기 5년 대통령단임제' 등 어이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략적으로 합의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영자,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아래로부터의 역동성' 쇠퇴 배경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2007년, 138~139면 참조.
- 63) 1960년 4·19혁명을 의한 헌법개정론은 이승만의 하야로 허정 과도내각이 구성된 뒤, 의회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보다도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헌법개정논의를 주도하였고, 개헌 후 이루어진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대패(민의원 2석, 집의원 4석)하여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렇지만, 개헌을 실시한 뒤에 총선을 실시한다는 이른바 '先決後選論'에 의해 총선 전에 먼저 개헌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틀 속에서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수, 전계서주(41), 456~459면 참조.

의해 삭제되고 말았다. 물론 87년 12월 대선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 일정 관계로 개헌안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사정에 있었지만, 양보해서는 안 될 중요한 헌법적 사항마저도 양보하고 만 것이다. 즉 87년 개헌은 개헌을 가능케 한 주체들의 항쟁정신과 그들의 삶이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만 것이다⁶⁴).

IV. 5·18민중항쟁과 미완의 헌법개정

1. 5·18민중항쟁의 헌정사적 의미

국가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의 조직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르네상스 운동이나 지리상의 발견, 근대계몽주의 사상 등의 영향으로 중세신분제 사회 속에서 특권계급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개인'에 대한 자각의식이 싹트면서 근대시민혁명으로 이어져 중세신분제 사회가 타파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획득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시민혁명 즉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에 의해 특정신분으로부터 개인은 해방되었고, 신분의 특권이 아닌 국가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 영역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근대시민혁명에 의해 탄생된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간섭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이와 같은 사적 영역을 존중하며 확보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존재 이유가 있으며, 국가의 활동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만 한정되게 된다.

다시 말해, 근대시민혁명은 그 시대의 권력보유자에 대해서 피지배자가 자기의 이익을 자각하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권력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형성된 국가구조는 시민의 자유의 영역(사적 영역)의 존재를 확보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가치평가를 부여하며, 이러한 사적 영역의 확보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근대시민혁명 이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력의 구성과 행사방법을 정식적인 문서, 즉 성문헌법에 의해 확인한다는 근대입헌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위와 같이 근대시민혁명에 의해 탄생된 입헌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권력에는 항상 남용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이 남용되면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국가의 기본법 내지 근본법이 필요하게 되어 성문경성헌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헌법의 기

64) 87년 개헌은 민주세력의 분열로 '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아권 및 재야 정치권과 민족통일 운동진영은 6·29선언으로 타협을 주도한 군부권력의 대통령 직선제 제안을 수용하며, 민주화의 흐름이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 실질화 되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박영자, 전개서주(48), 139면.

본적인 관념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인간이 자기보존(생명, 자유, 재산), 즉 자연 상태에서 가진 자연권을 완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 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권력에게 위임을 보류했던 자연권인 저항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제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민중의 주권자로서의 자각의식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제정과정에서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헌헌법의 제정으로 비록 봉건적 신분제 질서는 타파되었지만, 서구와 같은 시민혁명에 기초한 헌법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의식은 그렇게 성숙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뒤 6·25전쟁과 이승만 장기독재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학생들과 중산 계층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는 종식된다. 이러한 4·19혁명의 헌정사적 의미는 학생들과 중산 계층의 '시민적 불복종'에 의해 폭력적이고 부정부패한 국가권력을 종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의식과 민주주의가 일천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대두를 방어하지도 대항하지도 못했으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걷게 된다. 기나 긴 민주화투쟁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점차 무르익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결정체라 할 수 있는 1980년 5·18민중항쟁은 산업화 시대에 소외되어 온 기층 민중들이 사회적·정치적 주체로서 저항권을 행사하여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회복·유지하기 위한 '주권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시민혁명의 원동력이 된 '개인'의 자각은 동학농민전쟁 때에 반제·반봉건 혁명으로 나타났고⁶⁵⁾, 비록 그것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그 이념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형성·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뒤 일제의 식민지 해방은 우리의 독립을 위한 자주적인 투쟁의 성과라기보다는 연합국에 의한 패배라는 수동적인 형태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상해임시정부의 헌법 이후에 헌법을 제정하여 근대국가를 확립하고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근대시민혁명에 바탕을

65) 박구용에 따르면, 반제·반봉건 혁명인 동학농민전쟁은 "만민평등의 이념에 따른 개인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으로 발전했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위해 먼저 공동체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즉 이러한 동학농민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의 타자'로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농민은 이제 민중이 되고 민족이 되었으며, 타율적 노예였던 나는 너를 노예로 취급하는 주인이 아니라 너와 같이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율적인 서로 주체로 발전했으며, 서로 주체로서 나와 너는 <우리 밖의 타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우리, 즉 민중이면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박구용, "서로 주체의 형성사로서 동학농민전쟁과 5·18광주민중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2007년, 20-21면 참조.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권의식이 희박하고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성립되지 못한 채로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자의적이고 전 단적인 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겪게 된다.

근대시민혁명이 봉건제 하에서 '개인'의 자각이라는 계몽에 의해 혁명적 의식을 성숙시킴으로써 봉건제를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수동적 형태의 개인의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욕망은 장기간의 권위주의 체제를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축적·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판이 80년 5·18민중항쟁이라 할 수 있다⁶⁶⁾. 이런 의미에서 확고하게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5·18민중항쟁은 근대시민혁명의 보완적 의미로서의 '주권 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근대시민혁명을 겪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기층 민중을 변혁의 주체로 등장시킨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확고하게 입헌주의적 의식을 뿌리내리게 한 근대적 시민혁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2. 5·18민중항쟁정신의 헌법적 의미

그동안 5·18민중항쟁이 갖는 역사적 현재적 의의 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물론 앞으로도 5·18민중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우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음미되고 되새김질 될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5·18민중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바탕으로 5·18민중항쟁정신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헌정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연 역사적 사건인 5·18민중항쟁의 헌법적 의미는 첫째,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변혁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즉 4·19혁명이 이승만의 장기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학생들과 중산계층이 중심이 된 시민적 불복운동이라면, 5·18민중항쟁은 비록 그것이 광주전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졌지만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찬탈 기도에 주권자로서의 주체의식이 명확히 짙은 산업화 시대의 소외계층인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 저항권을 발동하여 결사 항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저항권의 행사를 들 수 있다.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이며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인 미국 헌법에 그 사상적 영향을 미친 존 로크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으며, 자연상태에서 개개인은 어떠한 권력적 구속도 받지 않는

66) 광주의 보편적 의의의 근거는 "시민들의 행위가 단지 그들의 고향 도시에 대한 애함심이나 단순한 반항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억압과 왜곡된 선진조차도 결코 지워버릴 수 없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열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스요르그 잔트펠러, "인간의 존엄성과 근대국가의 정당화,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의 보편적 의의",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1, 5·18기념재단, 2007년, 398면.

67) 최장집에 따르면, 1980년 5·18민중항쟁은 민주적 가치와 이상을 담지하고, 그 실현을 통해 시민권의 획득쟁취를 지향하면서 민주화투쟁에 참여하는 사회집단을 대변하는 '민중'이 주체인 반면, 1960년 4·19는 민주화운동의 주역인 대학생과 도시의 교육받은 중산층이 주체이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한다. 따라서 5·18민중항쟁에서 프랑스혁명에서 정치무대에 등장한 제3신분으로서의 인민 내지는 시민에 비견되는 사회집단인 '민중'의 등장은 한국사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안연구』 제50권 2호, 2007년, 150면.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서 인간이 가진 자연권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인간은 상호간에 사회계약을 맺고 정부에 권력의 행사를 위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인민의 국가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⁶⁸⁾. 80년 당시 제5공화국 헌법전문에 비록 저항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⁶⁹⁾, 5·18민중항쟁은 쿠데타를 통하여 국가권력찬탈을 기도한 불법세력인 전두환 휘하의 신군부세력에 대하여 광주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적 민주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집단적 형태로 저항권을 행사한 것⁷⁰⁾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헌법의 이념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공수부대와 맞서서 목숨을 건 싸움에 참가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그 뿌리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짓밟는 공수부대의 야수적인 만행에 시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⁷¹⁾. 이러한 공수부대의 만행은 시민들의 연대감을 형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인의 의식에는 각자가 그 동안 살면서 겪었던 각종 서러움과 한(限)이 잠재의식으로부터 분출되면서 분노가 더욱 타올랐을 것이며, 그 결과 단기간 내에 전 시민의 참여를 수직적으로 상승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⁷²⁾. 즉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가 공권력에 의해 근본적으로 짓밟히자 시민들이 인간으로서의 핵심적 가치인 인격적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건 치절한 투쟁을 전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18민중항쟁은 산업화 시대에 정치적·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억압과 소외 속에 살아 온 민중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과정 속에서 변혁의 주체로 전개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⁷³⁾. 즉 19세기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사회적 폐해의 증대에 대한 반성과 사회국가사상의 진전으로 인하여 바이마르헌법 하에서 사회권이 처음으로 승인되었듯이, 우리 헌법 속에 존재하고 있던 생존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민중들이 펼쳐

68) 존 로크(김정인, 문지영 옮김), 통치론, 까치, 1996년, 119~123면 참조, 저항권은 존 로크의 이론화를 거쳐 프랑스 1798년 인권선언 제2조, 1793년 인권선언 제35조, 1776년 버지니아 독립선언 등에서 자연권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그러나 존 로크의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지, 결코 반란을 장려한 것은 아니다. 즉 저항이나 혁명에 의해서 정부를 바꾸는 것은 결코 사회 그 자체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이나 기존의 국체에 대한 정부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69) 박은정에 의하면, “저항권은 헌법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정치 세력이 출현하여,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인권 및 이를 인정하는 민주적 헌법 자체가 중대한 침해를 받고 그 존재가 부인되기에 이를 경우 실정화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박은정, “법·힘·저항-5·18,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2006년, 99~100면.

70) 정태호, 전개서주(47), 64면.

71)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279면. 나간채, 전개서주(31), 324면.

72) 최정운, 전개서주(57), 279면. 나간채, 전개서주(31), 324면.

73) 5·18민중항쟁은 1900년 5월 어느 특정지역에서 돌출한 사건이 아니라 좁게는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던 노동자 생존권 투쟁, 부마항쟁, 그리고 80년 봄의 사복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와 시민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 생존권적 요구에 바탕을 둔 투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김상근, “정치사회운동으로서 5월운동의 평가와 계승”,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년, 209~210면.

일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5·18민중항쟁은 직접적으로는 그 반민주성과 민중배제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유신체제와 국가자본주의 축적체제에 대한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⁴⁾.

3. 5·18민중항쟁과 제10차 개헌

2007년 1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 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⁷⁵⁾.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은 그동안 한국헌법학회나 한국공법학회가 연구해 온 보고서나 연구회에서 학계의 다수가 지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⁶⁾. 학계의 다수의견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지한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 제9차 헌법개정 때 도입된 이래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를 막는 방과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온 면이 있지만, 그동안 몇 차례의 시행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권력누수의 발생이나,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배제하여 책임정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나,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의 어려운 점 등 때문에 국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비록 대통령 임기 말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실제 개헌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87년 6월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당시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불완전하게 탄생하였다는 점과, 그 중에서도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체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10차 개헌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정부 형태에 관한 개헌뿐만 아니라, 헌법에 관한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5·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을 헌법전문화하거나 저항권을 본문에 명문화하지는 주장

74) 김삼곤, 전개주(59), 208면.

75)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제안의 특징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쉼포인트 개헌이라는 점과, 20년 만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거의 일치된 금년이 개헌을 추진할 가장 좋은 기회이라는 점일 것이다. 즉 87년 체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는 한국적 정당구조의 특질상 야당의 협력을 얻어서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여 여소야대의 정국발생을 방지하고, 임기 말에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할 수 있다.

76) 한국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헌법개정안 연구보고서, 2006년 12월 1일.

은 하지 않고 있다. 87년 개헌 때 5·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은 헌법전문에 규범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삭제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제10차 개헌에서는 5·18민중항쟁이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전문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헌법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전문에는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 등이 기술되어 있다⁷⁷⁾. 전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의 기본원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의 모두에 두고 있지만, 헌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명문상 인정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

우리 헌법의 경우는 전문이 본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전문은 헌법의 이상이나 원칙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고, 전문의 내용은 대부분 본문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본문의 구체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긍정설(통설)은 본문에도 추상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 이념·원칙이 모두 본문에 구체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문의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확립,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의 지향 등 헌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전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문의 법적 효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⁷⁸⁾.

헌법재판소도 통설의 주장에 근거해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문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⁷⁹⁾라고 하여, 헌법전문을 법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으로부터 새로운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내는 것은 부인하고 있다⁸⁰⁾.

이처럼 학계와 관례에서 법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전문이 우리 헌정사에서 개정된 경우는 제헌 후 1962년 제5차 개헌 때 처음으로 시행된 후 몇 차례에 걸쳐 존재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차개정헌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77) 권영성, 전개서주(14), 129면 참조.

78)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9개정판), 박영사, 2007년, 135면; 권영성, 전개서주(14), 129~130면 등 참조.

79) 헌재 1989.09.08, 88헌가6, 판례집 제1권, 205면.

80) 헌재 2001.3.21, 99헌마139 등(병합), 판례집 제13권 1집, 693면.

□제7차 개정헌법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제8차 개정헌법 [전문개정 1980.10.27 헌법 제9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
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
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
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
고히 하여…….

위의 헌법전문문의 변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전문문의 특징은 헌법이 제정된 이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여 대한제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부속도서(대법원 1980. 5. 20. 80도306판결)에 대한 지배권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유신헌법 이래 사라졌던 4·19 이념을 재생하고 있다. 여기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이란 4·19가 저항권의 행사였다는 점에 국민적 합의가 있고, 개헌안작성자들의 의도가 그 문구를 저항권에 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점에 양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항권의 근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⁸¹⁾, 실제로 대법원(대법원 1980. 5. 20. 80도306판결)이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재판규범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저항권의 실정화의 의미, 즉 실정헌법을 통한 구체화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⁸²⁾. 다만 이 전문규정에서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실정법적 근거에 두어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전문규정의 추가부활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권위주의체제의 잔재 타파를 위한 국민의 정치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할 수 있다⁸³⁾.

그러나 이처럼 현행 헌법전문은 권위주의체제 하의 헌법전문과 비교하여 훨씬 나아

81) 권영성, 전거서주(14), 83-84면 참조.

82)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2년, 554면.

83)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년, 522면.

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5·18민중항쟁의 정신 계승이 누락됨으로써, 현행 헌법의 근대성과 주권자의 근본적 결단의 의지가 명확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즉 4·19민주이념이 되새겨지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문언이 저항권을 의미하는지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⁸⁴⁾, 4·19과 5·18이 갖는 저항적 의미와 민주화 운동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5·18민중항쟁이 갖는 다양한 헌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에 의해 수차례에 걸친 헌정파탄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헌정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5·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이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전문 개정의 예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신군부의 정권찬탈에 항거한 5·18민중항쟁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V. 결론

1980년 12·12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권력의 배후에서 정면에 나설 명분과 계기를 모색하던 신군부세력이 정권찬탈을 위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자 이에 굳건히 맞서 목숨을 걸고 항거한 5·18민중항쟁은 해방 이후 계속된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억압과 속박의 굴레 속에서 살아 온 주권자인 민중들이 자각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한 질서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 정의로운 저항권의 발동이었다. 이러한 주권 의식을 확립한 주권자가 주권을 박탈하려고 한 신군부세력에 맞서 싸운 5·18민중항쟁은 궁극적으로 6월항쟁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헌정사에서 군부독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였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가져온 역사적인 '주권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항쟁의 성과에 의해 이루어진 87년 개헌에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5·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이 누락됨으로써 5·18민중항쟁이 갖는 헌정사적 의미와 다양한 헌법적 의미를 담보해 내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인과 배경은 전두환이 그대로 권좌에 앉아 있는 채, 그의 전위정당인 민정당과 정략적 이익을

84)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의 객관적 문언은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즉 1987년 개헌안작성자들이 저항권에 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점에 양해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항권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개헌안작성자들이 '헌법수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을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4·19혁명도 저항권의 발동에 의한 헌법질서가 복구된 것이 아니라, 제2공화국이 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헌법수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의 행사가 아니라 철학적 의미의 저항권, 즉 '인권으로서의 저항권'의 행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홍성방, "헌법과 저항권-저항권실정화에 대한 변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2007년 9월, 123면 참조.

앞세운 야당이 개헌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개헌협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로 인해 대통령직선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 획기적인 내용의 헌법개정을 하게 되지만, 87년 개헌의 근본적 동력이라 할 수 있는 5·18민중항쟁과 저항권은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정략적 타협에 의해 삭제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위와 같은 87년 개헌에 의해 탄생한 현행 헌법은 최근의 개헌논의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독재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간 타협에 의해 탄생한 '미완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헌법의 전면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볼 때 조만간 제10차 개헌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루어질 제10차 헌법개정 때는 5·18민중항쟁정신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한 87년의 '미완의 개헌'이 성숙하고 완성된 형태의 개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전반에 걸쳐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공론화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87년 개헌 때 누락된 5·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법 규범화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권자의 저항을 통해 군부통치를 종식시킨 5·18민중항쟁이 갖는 헌정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헌법상 저항권을 직접 인정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헌법전문 중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의 해석만을 가지고는 저항권의 근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법 규범화를 통해서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명백히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5·18민중항쟁을 통해 '주권혁명'을 이룬 주권자의 위대한 헌법정신을 헌법에 담아냄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주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긍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길, “5·18광주민중항쟁의 민족사적 성격”, 5·18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족민주운동, 광주, 1989년
- 강만길, “근대 민족운동의 전통과 광주”,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년
- 강만길·송기숙, “광주민중항쟁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9년 5월호
- 강정구, “한반도 속의 미국, 5·18에서 금창리 핵 위기까지”, 5·18은 끝났는가, 학술단체협의 회편, 푸른숲, 1999년
- 강현아, “5·18항쟁의 성격, 주체-연구사적 측면에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 기념재단, 2007년
- 권영성, “개정헌법안의 성격과 특징”, 『월간고시』 1987년 11월
- 김동춘, “5·18, 6월항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년
- 김동춘, 6월항쟁과 한국사회 10년, 당대, 1997년
- 김동욱,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1990년
-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34집 4호, 2006년
- 김상곤, “정치사회운동으로서 5월운동의 평가와 계승”,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년
- 김세균·김홍명, “광주5월민중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기념재단, 2007년
-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
- 김영수, 한국헌법사(수정증보), 학문사, 2000년
- 김용철, “광주항쟁과 한국 정치의 민주화”, 『민주주의와 인권』 1권 1호, 2001년
- 김진균, “국민형성의 관점에서 본 5·18”,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기념재단, 2007년
- 김진균 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한길사, 1990년
- 김진균·정근식, “광주5월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기념재단, 2007년
- 김철수편, 입법자료교제 헌법(증보판), 박영사, 1985년
- 나간채,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본 5·18항쟁”,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
- 박구용, 서로주체의 형성사로서 동학농민전쟁과 5·18광주민중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2007년
- 박만규,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기념재단, 2007년
- 박명서, “5·18민중항쟁의 법철학적 고찰”,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엮음, 5·18기

- 기념재단, 2006년
- 박미경, “광주민중항쟁과 미국의 개입구조”, 광주민중항쟁 연구, 사계절, 1999년
- 박영자,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아래로부터의 역동성’ 쇠퇴 배경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2007년
- 박은정·한인섭 편, 5·18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년
- 박홍규, “인권과 법의 시각에서 본 5·18민중항쟁”,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엮음, 5·18기념재단, 2006년
- 박태균, “5·18과 미국에 대한 성찰”,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기념재단, 2007년
- 박현채, “80년대 민족민중운동에서 5·18민중항쟁의 의의와 역할”,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1, 5·18기념재단, 2007년
- 신일섭,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2006년
- 안종철,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
- 윤선자, “5·18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5권 2호, 2005년
- 이삼성, “광주민중봉기와 미국의 역할”,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5·18기념재단, 2007년
- 이수인·전원하, “광주5월민중항쟁 전후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현대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1990년
-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법학(학술논문집2), 도서출판 심미안, 2006년
- 장영수, “헌법총장에 대한 헌법개정”, 『공법연구』 34집 4호, 2006년
- 장을병, “광주5월민중항쟁에서의 무장투쟁”,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년
- 정대화, “광주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5·18기념재단, 2007년
- 정태호,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엮음, 5·18기념재단, 2006년
- 조지카치아피카스, “역사 속의 광주항쟁”,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년
- 조희연, “5·18과 80년대 사회운동,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쟁사, 2001년
- 조희연, “광주민중항쟁과 80년대 사회운동”,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5·18기념재단, 2007년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안연구』 제50권 2호, 2007년
- 최장집 외,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의미”, 『역사비평』 1989년

- 최장집,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5·18기념재단, 2007년
-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기념재단, 2007년
- 표명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2007년 8월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1990년
- 한상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기념재단, 2007년
- 한스요르그 잔트켈러, “인간의 존엄성과 근대국가의 정당화,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의 보편적 의의”,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1, 5·18기념재단, 2007년
-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년
- 현대사자료연구소 편, 5·18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족민주운동, 광주, 1989년
- 한국정치학회, 광주민중항쟁의 영향과 그 변화, 5·18학술심포지움자료집, 1997년
-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 1998년
- 한상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나남, 1998년
- 홍성방, “헌법과 저항권-저항권실정화에 대한 변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2007년 9월

광주시민미술학교의 개설과 5·18항쟁의 대항기억형성

배종민(동신대학교 강사)

I. 머리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견인한 시대정신이 있었다. 그것은 ‘광주를 잊지 말자’는 다짐이었다. 이는 ‘5월운동’¹⁾으로 전국적인 구심력을 형성해가면서, 1987년 6월항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6월항쟁을 분수령으로 5·18항쟁을 패배가 아닌 승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²⁾ 1987년 이후 5·18항쟁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는 이유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5·18항쟁에 대한 인상은 6월항쟁의 세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80년대 전반을 휘돌던 인내와 질곡으로서 5·18항쟁에 대한 인상은 알게 모르게 퇴색해갔다.

본 연구는 80년대 전반의 광주에 주목한다. 특히 정권의 억압과 왜곡에 당시 미술인과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대항했는지 상기하고자 한다. 전문작가의 창작 집단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광주시민미술학교’(1983~1992, 이하 시민미술학교)에 주목한 이유이다. 시민미술학교는 광주의 청년작가에 의해 개설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운영 및 창작의 주체는 다름 아닌 수강한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주변의 일상을 소재로 수 백점의 관화작품을 남겼다. 5·18항쟁에 대한 트라우마로부터, 지계문, 행상인, 노인, 노동, 농촌, 교육, 가족, 민담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편집을 거치지 않고 당시 시민의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창작된 작품은 마치 80년대 광주의 풍경화이자 자화상과 같았다.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사 연구에서 시민미술학교는 약방의 감초 격이다. 민중의 미

1) ‘오월운동’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나간채 편(1997),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 나간채·정근식·김창일 외 공저(2004),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정근식·나간채·박찬식 외 공저(2006),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술적 표현력과 소통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사건³⁾, 민중미술의 역사적·도덕적 당위성을 미술실천활동을 통해 입증한 사례⁴⁾, 민중의 시각적 잠재성과 주제의식을 확 인하게 하는 놀라운 성과⁵⁾ 등의 찬사가 줄을 이었다. 민중에 의한 민중역량의 확산을 가져온 민중미술운동⁶⁾의 典範이라는 평가이다. 작품의 주제의식과 표현방식의 측면에서 파악한 견해도 있다. 시민미술학교의 작품이 전문작가의 것보다 더 명확하게 현실을 포착하였으며⁷⁾, 민중주체의 미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전문작가를 개조하는데 작용했다는 것이다.⁸⁾ 그밖에 미술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도 있다. 정직하고 튼튼한 대중교육으로서의 관화작업⁹⁾, 민중미술교육활동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첫 사례¹⁰⁾, 우리 시대 대중미술교육의 새로운 창조적 성과물¹¹⁾ 등의 평가가 그것이다. 이처럼 기 왕의 연구들은 시민미술학교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미술학 교에 천착한 연구는 미술 교육적 관점에서 고찰한 기세홍의 논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연구자는 당시 시민미술학교의 교육활동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찾고 싶다. 특히 80년대 전반기(1983~1986)의 교육활동에 주목한다. 그때 광주를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권의 억압과 감시, 언론의 왜곡과 고립, 시민의 좌절과 부채의식이 광주를 짓눌렀다.¹²⁾ 정권은 5·18항쟁에 대한 왜곡된 공식기억을 강요하고 전파했다. '폭도들의 불온한 광주사태'라는 공식기억이 횡행했다. 사회의 유기적 연대는 약화되고 경직되어 갔다.¹³⁾ 침묵하는 한 5·18항쟁은 역사에서 불멸의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당한 공식기억의 강요는 곧 대항기억이 형성되는 자양분이기도 했다. 이때 문화적 재현방식이 유력해진다.¹⁴⁾ 상대적으로 정권의 억압이 느슨한 때문이다. 5월문화운동¹⁵⁾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광주의 청년작가들은 시민미술학교를 세우고 시민에게 다가섰다.¹⁶⁾ 이 학교는 시민과 더불어 억압된 5·18항쟁을 상기하고, 절대공동체¹⁷⁾의 경험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3) 정치창(1994), 「민중미술운동과 관화달력」, 『현실과 발언』, 열화당, 165~166쪽.

4) 이영철(1989), 「80년대 민중 미술의 전개와 현실주의」, 『가나아트』 11·12 통권10호, 가나아트, 85쪽.

5) 원동석(1984),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오늘의 책』 4, 한길사, 230~231쪽.

6) 홍희담·윤정모 엮음(1990), 『오월에서 통일로』, 창년사, 214쪽.

7) 최열(1994),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6쪽.

8) 최열, 같은 책, 196쪽.

9) 홍성담(1983), 「시민미술학교보고서」, 『일과 놀이』 1, 도서출판 일과 놀이, 121쪽(이하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 홍성담(1986), 「시민미술학교보고서」, 『나누어진 빵』,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32쪽.(이하 「나누어진 빵」))

10) 기세홍(2003),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에서 미술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 광주시민미술학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4쪽.

11) 이태호(1991), 「갈 끝에 실어낸 '전투적 신명', 『우리시대 우리미술』, 풀빛, 274쪽.

12) 송정민(2002), 「5·18 항쟁에 대한 언론의 왜곡 보도」, 『5·18 항쟁의 이해』, 광주광역시, 129~130쪽.

13) 1980년 5월은 잔인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무런 말 한마디 내뱉을 수도 없었다. ...나는 자꾸만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떠나 외진 곳으로만 돌아왔다... 나는 아예 시 쓰기를 단념하고... 몇 년동안 시를 생각할 수도 없었고, 쓰지도 않았고, 다른 시인의 시를 읽지도 않았다. (이성부(2006), 「산 위에 나 있는 시의 글,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 우리교육, 232쪽.)

14) 권귀숙(2006),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23쪽.

15) 문화운동이란 대항기억을 문화나 예술을 통해 표상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말한다.(권귀숙, 같은 책, 24쪽.)

16)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2쪽.

자양분을 흡수하고자 했다. 따라서 시민미술학교에 참여해서 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집에서 홀로 판화를 새기는 것과 전혀 달랐다. 시민미술학교에서 미술인들이 작가 중심의 창작관과 결별하고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며 창작을 고취하자 곧 서로에게 상승작용이 일어났다. 작가들은 민중의 주체성을 확인했다고 믿었고, 시민들은 창작행위가 자신의 껍질을 벗는 과정이며 삶과 별개가 아님을 깨달아간 것이다.¹⁸⁾ 그것은 시민주체의 문화적 재현을 통해 한동안 멈추었던 5·18항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작동되었음을 의미했다. 바야흐로 대항기억이 형성되어 갔다.¹⁹⁾ 시민미술학교의 창작활동에 대한 검토는 곧 5·18항쟁에 대한 대항기억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 1980년대 전반 광주시민이 시민미술학교를 통해 어떻게 5·18항쟁의 대항기억을 형성해갔는지 드러나길 바란다. 더불어서 역사적 증언으로서 문화운동의 역할도 확인되길 기대한다.

II. '광주자유미술인협회'의 시민미술학교 개설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 미술계에는 비판적 리얼리즘과 함께 소집단 운동이라는 새로운 경향이 모색되었다.²⁰⁾ 30대 초·중반의 젊은 작가들 사이에 '그림쟁이'가 아닌 시대의식을 갖춘 작가에 대한 열망이 퍼져나갔다.²¹⁾ 삶과 관계없는 미술, 세상과 소통 못하는 화랑풍토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오윤, 신학철, 홍성담, 노원희, 임옥상 등이 그러했다. 이들은 농촌과 도시변두리, 노동자와 서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아갔다. 작품을 통해 유신체제의 억압과 소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재야의 평론가들도 활발한 비평 활동으로 미술계의 활로를 모색했다. 우리 근대미술이 식민지시대 미술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며 '민족미술론'을 제기하였다.²²⁾ 또한 민족의 실체는 민중이며, 문화의 주체자도 민중이며, 미술이 민중의 현실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미술론'도 정립되었다.²³⁾ '민중민중미술론'이라는 현실주의 미술운동론이 대두한 것이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차원의 자각을 넘어선 민중미술운동조직이 전국각처에 속속 결성되었다. '현실과 발언', '임술년'을 비롯한 수많은 미술소집단이 결성되어 민중미술운동을 전개해갔다. 광주에서는 '광주자유미술인협회'(이하 광자협)가 그러했다.

광자협(1980~1983)은 1980년 7월에 창립된, 지방 최초의 민중미술운동단체였다. 광자협은 창립에 앞서 1년 정도 공동학습과 합평회, 노동현장 답사 등의 자체학습을 할

17) 최정운(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63쪽.

18)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31쪽.

19) 문화운동이란 대항기억을 문화나 예술을 통해 표상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말한다.(권귀숙, 앞의 책, 23쪽.)

20) 최열, 앞의 책, 164쪽.

21) 현실과 발언(1994), 『현실과 발언-1980년대의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열화당, 183쪽.

22) 김용수(1988), 『한국 근대미술-그 비판적 서설』,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도서출판 훈겨레, 31-34쪽.

23) 원동식(1985),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22-24쪽.

정도로 의식수준과 단결력이 남달랐다. 그들은 “작가란 시대 모순의 발견자이자 양심이어야 하고, 작품은 인간사회 비리의 증언이자 도전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시의 뒷골목, 달동네, 공장과 탄광, 서민의 빈곤한 삶을 사실적이면서 때론 격렬하게 작품에 담기 시작했다.²⁴⁾ 1980년 5월에 예정했던 창립전이 5·18항쟁으로 무산되자, 그들은 항쟁의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²⁵⁾

A. 우선 시위대들이 외치는 구호를 받아냈다. 우리는 그것을 들고 학원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산수동 오거리에서 시위차량을 세우고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 우리는 2개조로 나누어 한 조는 시내 곳곳에 스프레이 작업을 했고, 다른 한 조는 시장에서 광목 20필을 구해 플래카드 제작을 맡았다. 스프레이 작업은 인도의 보도블럭 위에 그리고 전봇대 등, 조그만 여백이 있는 곳은 모조리 긁어냈다. 그리고 플래카드는 산수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집결되어 있는 시민군 산수동 부대와 시민군 지원동 부대에 전달되었다.

(최열(1994),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들베개, 174쪽)

그들은 시위대들의 구호를 유인물로 제작해서 배포하였다. 스프레이로 시내 곳곳에 선전 문구를 쓰고, 시민군 부대에 전달할 플래카드를 제작하였다. 광목과 물감 등 가진 재료가 모두 바닥나면, 광주 시내를 이 잡듯 뒤져서 재료를 모았다.²⁶⁾ 회원들의 5·18 항쟁체험은 향후 광자협의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작가의 존재이유가 예술적 재능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데 있다는 자각이 사무쳤다.²⁷⁾ ‘대중이 창조하고 더불어 나누어 가지는 건강한 미술문화건설’²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서울지역의 ‘현실과 발언’보다 한층 치열한 태도로 광자협이 민중미술운동에 매진한 이유였다.²⁹⁾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은 고난의 시절이었다. 정권의 억압과 통제는 상상을 불허했다. 광주의 진실은 왜곡되고 고립되었다. 억압과 감시, 분노와 좌절, 침묵과 소외가 80년대 전반기 광주의 하늘과 대지를 대신했다. 현실을 발언하면 즉각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작가는 암시적으로 광주를 이야기하던지 혹은 침묵해야 했다.

24) 최열, 앞의 책, 168쪽.

25) 당시 광주광역시 산수동에 있던 홍성담의 화실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다. 모임을 준비하던 중 발생한 10·26사건은 회원들을 고무시켰고, 이듬해 5월에 창립전을 갖기로 했는데, 1980년 5·18항쟁의 발발로 창립전은 7월 5·18영령을 위한 야외곳으로 대체되었다. 이하 설명은(시각매체연구소(1990),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의조직사-상편』, 『미술운동』 제6호; 최열, 앞의 책, 167~170쪽에서 재인용.)

26) 홍성담 · 윤정모 역음(1990), 『5월에서 통일로』, 창년사, 122쪽.

27) 최열, 앞의 책, 174~175쪽.

28)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2쪽.

29) 항쟁이 진압된 7월, 전남 나주시 남평면의 드들 강변에서 뒤늦은 광자협의 창립전이 열렸다. 주제는 5·18 영령을 위한 진혼극 형식의 야외전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현실과 발언’(1979.12.6)이 결성되었다. 원동석, 손장섭, 오윤 등이 결성주역이었다. 미술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재미가 없고, 힘도 없고, 사람 사이의 소통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현실과 발언(1994), 『현실과 발언 1980년대의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열화당, 181쪽.) 미술과 현실의 삶을 일치시키겠다는 작가정신, 삶의 다양한 국면을 작품에 반영하겠다는 현실참여의지가 현실과 발언의 결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B-①. 저 푸르게 잉크러진 봄도, 햇빛도
 끝내 우리의 것은 아니었네
 오, 저기 싸늘하게 날 선 칼날들
 우리의 젊음에 파수 서고

삶은 죽음보다 기나긴 어둠
 참음으로도 다할 수 없었네
 그대의 입술에 맺힌 핏방울
 끝내 남은 말은 명올져
 가슴마다 터지는 피의 開花

(김진경(1981), 「鎮魂」, 『5月詩 同人誌』 제1집)

B-②. 어둠이여 스스로 무너져 내려라
 바람은 흔들리면서 인사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 헤어져 날아가리라
 아무도 관계하지 않는 나라로
 서글픈 갈대의 눈들이 흐느끼고
 나의 서러움이 스스로 죽는다
 살아 있는 것들은 스스로 죽어라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박주관(1981), 「비가」, 『5月詩 同人誌』 제1집)

B-①②는 『5월시동인지』 제1집(1981)에 실린 시이다. ‘5월시동인’은 5·18항쟁 직후인 1981년에 결성되었다. 이들은 ‘5월시 동인’활동을 통해서 5·18항쟁을 비극에서 우리 현대사의 민족분단과 반외세투쟁의 지평으로 승화하고자 했다.³⁰⁾ 1983년에는 광주 미술인과 함께 오월관화시집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으리』를 출판하기도 하였다.³¹⁾ B-①에서 김진경(53년생, 당시 우신고등학교 국어교사)은 “푸른 하늘도 봄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삶은 죽음보다 기나긴 어둠”이라고 5·18항쟁 직후의 암울한 시대상을 노래했다. B-②에서 광주출신 박주관(54년생, 당시 상명여자중학교 국어교사)은 “아무도 관계하지 않는 나라,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5·18항쟁이후 지식인의 절망감을 토로했다. 마치 김준태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에서 “하느님도 새때도 떠나가 버린 광주여”를 연상케 하는 정서이다.

시민들의 정서도 오월시동인과 다르지 않았다. 작가처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도 했다. 정권의 재갈물림에 의해 침묵했던지 혹은 방법을 몰라서 말하지 못했던 간에 모두 상처 입은 가슴이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무엇

30) 박주관(1981), 「비가」, 『5月詩 同人誌』 제1집, 62쪽.

31) 관화시집에 동참한 미술인들은 시민미술학교를 주도한 홍성담과 광주의 목관화운동을 이끈 동지들이었다.

인가가 절실했다.³²⁾

C-① 밤이 옵니다. 지독히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초승달은 우리의 심장을 절렀고, 오랫동안 우리는 초승달의 아픈 모서리를 안고서 살아야만 했던가?³³⁾

(김명희(1986), 「혹심」, 「나누어진 빵」, 42쪽)

C-②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을테니 내가 한 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으로 되어가지고 나타나 보라고 했더니, 악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냈다.³⁴⁾

(이희숙(1986), 「누가 구원할 것인가」, 같은 책, 42쪽)

C-①②는 제1기 시민미술학교에 참여한 시민의 창작후기이다. C-①에서 시민은 5·18항쟁 이후 “광주는 지독히도 어두운 밤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고 고백했다. C-②에서 수강생은 파우스트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5·18항쟁으로 드러난 인간의 악마성을 폭로했다. 80년대 전반기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던 시절이었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증오하던 시절이었다. 5·18항쟁은 작가나 시민 모두에게 심대한 정신적 내상을 입혔지만, 그 누구도 가슴을 열고 광주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1985년 이전에 사람들은 망월동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도 없었다.³⁵⁾ 유족들의 추모 의식은 금지되었고, 망월묘역에 참배하려면 감시의 눈을 피해 밤늦게 산을 넘어야 했다. 5·18항쟁 당시 집안에서 총격을 입은 어머니는 폭도 및 간첩으로 오인될까봐 총상흔적이 확연한 얼굴과 몸을 감추느라 한여름에도 수건을 써야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³⁶⁾

민중미술작가에 대한 권력의 감시도 삼엄 그 자체였다. 작가의 작품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³⁷⁾ 사정은 5·18항쟁의 중심에 있던 광자협외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활동은 중지되고 긴장이 조성되었다. 활로는 절실했으나, 타개는 쉽지 않았다. 정세는 암울했다. 시인과 화가만이 아니라, 5·18항쟁으로 상처받은 모두에게 상호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부상하였다. 작가와 시민들이 5·18항쟁을 원형질로 서로의 체험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었다. 광자협외 조직형태는 대학을 졸업한 선배그룹이

32) 광주항쟁이후 시민들이 기댈 곳이 없었다. 항쟁의 현장이던 금남로 열 가톨릭센터에서 (시민미술학교)강좌가 있다. 나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전시회 때에는 줄을 서서 관람할 정도였다. 그 열기에 우리(작가)도 놀랐다.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33) 김명희(1986), 「혹심」, 「나누어진 빵」, 42쪽.

34) 이희숙(1986), 「누가 구원할 것인가」, 같은 책, 42쪽.

35) 린다 루이스 Linda S. Lewis(2000), 「5·18피해자집단의 재회생현상」,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200~202쪽.

36) 변주나(2000), 「15년 후 심신충격」, 같은 책, 127쪽.

37) 1980년 10월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은 당국의 압력으로 문예진흥원미술회관에서 통산방으로 전시장소를 옮겨야 했다.(현실과 발언2 편집위원회(1990), 「민중미술을 향하여」, 과학과 사상, 594쪽.) 1982년부터 문공부에서는 '미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른바 불온작가 - 임옥상, 신경호, 홍성달 등-에 대한 협박과 회유, 작품압류와 전시취소 등의 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했다.(홍선웅(1989), 「팝백의 굴레 속에 성장한 민족-민주-통일외식-80년대 미술탄압사례를 중심으로」, 『가나아트』11·12호, 가나아트, 102~109쪽.)

재학생인 후배그룹을 지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대학 내에 새로운 근거지를 구축해서 정국을 타개하기로 했다. 1981년 광자협(광자협)의 후배그룹인 홍성민, 박광수³⁸⁾의 주도로 전남대학교에 민화반이 만들어졌다. 1983년에 전남대학교 미술과 '토말'이 결성되었다. 이듬해 조선대에 민화반이 조직되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민화반을 지원하면서, 광자협은 조직을 전환했다. 광자협을 해체하고 소극장 '일과 놀이'에 미술분과³⁹⁾로 참가하였다(1983년). 민중미술운동의 외연확대 및 미술의 대중화에 진력하기 위해서였다.⁴⁰⁾ 이후 광자협은 '일과 놀이'의 미술분과로서, 각종 시각매체와 민중미술학습문건을 전달하였다.⁴¹⁾

답답한 정국의 실마리는 판화에서 풀렸다. 판화를 매개로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⁴²⁾ 주지하듯 판화는 유화나 수묵화보다 초보자가 배우기 쉬운 재료이다. 흑백의 간결한 색감과 다량복제가 가능하다는 대중성도 갖추었다.⁴³⁾ 군사독재와 억압에 맞선 민중의 거센 감성을 표현하는데 못보다 판화의 날선 칼 맛이 안성맞춤이기도 하였다.⁴⁴⁾ 당시 민중미술운동진영에서 판화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 상황이었다. 1980년대 판화의 유행은 선풍적이었다. 대학신문, 팜플릿, 교지, 선전깃발, 달력, 옷, 기념품, 목판글씨체 등 판화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판화는 80년대 문화 아이콘처럼 보였다.⁴⁵⁾ 여기에는 민중미술에 헌신한 젊은 작가들 - 오윤, 이상국, 김봉준, 홍선웅, 이철수, 홍성담, 김경주 등 -의 목판화 작업의 역할이 컸다.⁴⁶⁾

1982년 광자협은 홍성담의 판화를 엮은 『판화달력 열두마당』(한마당)을 출간했다.⁴⁷⁾ 그리고 판화를 매개로 대중미술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준비단계로 민중미술에 관한 회원학습이 이루어졌다. (1)전통사회에서 민중미술의 생산과 유통, 창작 주체의 문제 (2)과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에 관한 학습과 야학활동가의 강의 (3)판화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학습되었다. 이듬해 3월, 광자협은 판화운동을 위한 임시협의회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판화강좌에 관한 세부실행방안이 마련되었다. 광주가톨릭센터가 교육장소로 결정되었다. 여기에는 김양래(당시 가톨릭광주대교구 인성회 간사)의 도움이 컸다.⁴⁸⁾ 당시 광자협은 교육장소를 놓고 망설였다. 광주 YMCA나 광주가톨릭센터나 결정이 쉽지 않았다. 논의과정에서 광자협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확인된 종교단체의 역할을 상기하였다. 불 보듯 뻔한 정권의 탄압을 막는데, YMCA

38) 둘 다 당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재학 중이었다.

39) 일과 놀이는 광주민중문화연구회(1984년 12월 결성)의 진신이다.(최열, 앞의 책, 197쪽.)

40) 1984년 12월 '일과 놀이'는 광주민중문화연구회로 개편되었다.

41) 이때 소재자로 제작된 문건으로는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비판적 미술운동의 한계와 극복」, 「민중미술의 방법적 모색」 등이 있다. (최열, 앞의 책, 197쪽.)

42) 이태호, 앞의 책, 90쪽.

43) 이태호, 앞의 책, 90쪽.

44) 1980년대 판화작업이 민족형식과 민중투쟁의 도구로서 각광받은 한 이유이다.

45) 이태호, 앞의 책, 90~91쪽.

46) 이태호, 앞의 책, 90쪽.

47) 최열, 앞의 책, 194쪽.

48)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보다 종교기관인 광주가톨릭센터가 유력해진 것이다. 게다가 광주가톨릭센터의 위치가 5·18항쟁의 현장인 금남로에 있다는 점에서 금상첨화의 장소가 아닐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5월 16일 민주화대성회 때 대학 풍물패를 이끈바 있는 김양래 간사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⁴⁹⁾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도 시민미술학교 개설과 운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평은 1976년 5월에 설립되었다. 1980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정평은 남동성당(수습대책위)에서 5·18항쟁구속자석방,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특별시국미사를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였고, 지속적으로 5·18항쟁 사형선고자 및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였다. 또한 5·18항쟁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다.⁵⁰⁾ 1982년부터 1990년까지 5·18관련해직교수들과 재야인사를 초청하여 '시민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이후 강좌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⁵¹⁾ 1983년의 경우, 정평은 5월에 '어린이미술학교', '시민민속교실'을 개설하였다. 정평은 광자협의 '시민미술학교'를 수용할 태세가 마련되어 있었다. 광자협의 제안을 받은 정평은 '시민미술학교' 업무를 가톨릭센터 사회교육부로 이관하도록 조치하였다. 1983년 8월 8일, 마침내 5·18항쟁의 현장인 금남로 옆 광주가톨릭센터에서 광자협의 최대성파로 평가받는⁵²⁾ 시민미술학교가 개설되었다.

시민미술학교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개설되었다.⁵³⁾ 매년 여름-겨울방학기간에 하루 3시간씩 1주일동안 진행되었다. 교육 장소는 광주 가톨릭센터 1층 강당이였다. 광자협의 선배그룹인 홍성담, 최열, 백은일 등이 전채운영을 조율했고, 실무 강사로서 후배 그룹인 홍성민, 박광수 등이 결합했다. 수강생 모집은 순조로웠다. 모집정원 60명에 평균 40여명이 수강했다. 수강료는 재료비 정도의 실비 수준이었다. 수강자격은 미술전공자를 제외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이었다. 제1기 수강생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 현직교사, 회사원, 주부의 순이다. 총 62명이 수료했는데, 15세미만(2명), 15~19세(5

49) 김양래는 1980년 5월16일 민주화대성회 때 전남대학교 농악패를 이끌고 대학풍물패의 선두에 서서 시위열기를 고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1983년 당시 그는 인성회의 간사로 재직 중이었다. 인성회는 1975년 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 출발한 조직(총재 지학순 주교)으로 김금구호, 자선활동, 복지사업, 개발활동, 기타 사회운동과 관련된 의식개발 등의 대 사회활동을 전담한 기구였다.

50) 『광주의거자료집』 발간(1985.5), 민족미술협회의회의 <보고문전> 감연희 개최, <5·18사진전>(1987.5), 5·18 당시 사진자료집, 비디오자료집 『오월 그날이 오면』 제작(1987.5) 등

51) 『민중을 위한 제언』(1984.10), 『해방신학의 이해』(1984.11), 『다산의 생애와 사상』(1986.12)

52) 이영철, 앞의 논문, 85쪽.

53) 참고 1. 시민미술학교 연혁(1983-1986 / 본 연구에서는 1983~1985년까지를 다룬다.)

연번	기간	수강생(명)	강좌내용	전시기간	장소
제1기	1983.8.8-12	62	판화	8.13-14	가톨릭센터
제2기	1983.12.16-23	27	판화	1984.3.3-11	교두메전시실
제3기	1984.7.9-16	34	판화	7.18-22	교두메전시실
제4기	1985.1.16-21	26	장작탈만들기	-	교두메전시실
제5기	1985.7.22-30	44	판화	8.16-20	가톨릭미술관
제6기	1986.1.15-23	44	판화	1.24-27	가톨릭미술관
	계	237			

명), 20~24세(34명), 25~29세(12명), 30세 이상(7명)으로 20대가 가장 많은 46명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19명, 여자가 41명이었다.⁵⁴⁾ 제1기 수강생의 설문에 따르면, 전체 60명 가운데 42명이 강좌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관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대단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종강 후, 이틀에서 길면 일주일까지 수강생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장 밖까지 줄을 서서 관람할 만큼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고 한다.⁵⁵⁾

광자협은 시민미술학교에서 '민중과 연대적 공감대'⁵⁶⁾를 확인하고 '민중주체의 새로운 미술운동'을 실현하고자했다.

D. 사람은 누구나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자아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확대를 통하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한 집단의 풍부하고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 그런 의미로 이제는 시인만이 시를 쓰고 화가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바람직한 예술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공유하는 자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부터 예술은 기능이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총체적 삶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희담·윤정모 엮음(1990), 『오월에서 통일로』, 청년사, 300~301쪽)

D는 제1기 시민미술학교 개강 취지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2)자기 표현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가 건강해진다. (3)예술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4)예술은 기능이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총체적 삶의 표현이다. 예술창작의 가능성이 작가와 대중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한 시대의 총체적 삶을 표현한 것이 예술이라는 지적이다. 광자협은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자신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한 시대를 표현하고 진단하는 튼튼한 놀이프로그램'으로 시민미술학교를 만들고자했다.⁵⁷⁾ 그리고 "지금은 시인만이 시를 쓰고 화가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순수한 체험⁵⁸⁾이 꼭 필요한 시대이며, 그리할 때 정직하고 튼튼한 민중미술⁵⁹⁾이 형성된다"는 신념을 견지하였다.

54)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5쪽.

55)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감사, 2007.9.11. 인터뷰)

56) 최열, 앞의 책, 198쪽.

57)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1쪽.

58)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3쪽.

59) 시민미술학교에서 시민미술이라는 명칭은 민중미술의 별칭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며 일반적 설득력을 위한 개념이다.(원동석(1986),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시대상황과 미술의 논리』, 흔겨레, 230쪽.)

Ⅲ. 공동토론과 공동창작을 통한 대항기억의 형성

초기 시민미술학교의 교육내용은 교양강좌와 단순한 판화실기 위주였다. 그러다가 차츰 교양강좌 부분이 축소되고 현장답사와 좌담회, 토론, 촌극 형태의 민중극의 체험 과정이 강화되었다.⁶⁰⁾ 제1기와 제6기의 일정표는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제1기 시민미술학교 일정표(1983.8.8~8.14)

시간 월일	10:00~11:00	11:00~13:00
8/8(월)	예술에 나타난 민중의 모습	판화실기
8/9(화)	삶으로서의 예술	
8/10(수)	민화란 무엇인가?	
8/11(목)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8/12(금)	판화실기 및 토론회	
8/13(토)~8/14(일)	전시회(오전 9:00~오후 6:00)	

<표 2> 제6기 시민미술학교 일정표(1986.1.15~1.27)

월일 시간	내용
1/15(수)오전10시~1시	오리엔테이션 / 조편성
1/16(목)오전10시~1시	현장답사
1/17(금)오전10시~1시	답사보고 및 좌담
1/18(토)오전10시~1시	얼굴그리기와 종이탈 만들기/민중극놀이
1/19(일)오후2시~5시	판화제작
1/20(월)오전10시~1시	
1/21(화)오전10시~1시	
1/22(수)오전10시~1시	
1/23(목)오전10시~1시	전시회준비 및 포스터 제작
1/24(금)~1/27(월)	전시회

제1기 시민미술학교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예술에 나타난 민중', '삶으로서의 예술', '민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다.⁶¹⁾ 강사로 원동석(목포대 교수), 황석

60) 『나누어진 빵』, 46쪽.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연혁은 아쉽게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61) 수강생에게 제시한 판화의 소재목록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인다. 판화그림이 될 만한 소재 1)구전 민담, 속담, 민요 2)사·소설 3)실제 체험 4)자신의 삶을 밀도있게 표현할 수 있는 생활풍경 5)시사물 6)소망사항(홍성담, 1983, 125쪽.)

영(소설가), 문병란·김준태(시인), 김봉준(화가), 홍선웅(판화가), 최열(화가), 가톨릭 신부 등이 나섰다. 반면에 제6기 시민미술학교에서는 강좌보다 현장 답사 및 토론이 대폭 강화되었다. 현장답사는 소외지역 - 불구폐질환 수용소, 음성나환자촌, 양로원, 탄광, 시장터, 농촌현장, 노동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사 후에는 서로 의견을 교류하며 작품구상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의도가 있었다. (1)예술창작을 통한 실천적 인식능력의 함양⁶²⁾ (2)시민의 정치적 각성⁶³⁾ (3)현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의식교육⁶⁴⁾ 등이다.

시민미술학교는 작품구상부터 토론, 완성 및 전시에 이르기까지 수강생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지도강사들은 보조적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주지되었다.⁶⁵⁾ 이처럼 1980년대 지식인들은 스스로 '지식인'임을 부인하려고 했다.⁶⁶⁾ 오히려 그들은 농민·노동자의 일원이기를 원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학력을 감추고 이른바 '현장'에 위장 취업하여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에 헌신하였다. 사정은 시민미술학교를 비롯한 민중민중미술운동에 복무한 작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민중주도의 교육방침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80년대 비판적 지식인 운동과 동일한 지평에서 있었다. 대중보다 높은 곳에 군림하는 예술가를 거부하고자 했으며, 그 대신에 민중의 일터와 삶터에서 더불어 함께하기를 희망했다. 작가와 시민, 작품과 현실이 별개의 무엇이 아니길 추구했다. 현실 속에 작품이 있었고, 작품 속에 현실이 보였다.

그러나 시민들이 교육활동에 처음부터 능동적이지는 않았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판화를 교육매체로 수강생에게 제시했지만, 예술이란 낯설고 어렵다는 인상을 선뜻 불식하진 못했다. 수강생들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는 일부터 조각도를 사용하는 법, 막상 완성된 작품이 애초 의도와 전혀 달라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⁶⁷⁾ 강사들은 그들의 서툰 기량은 전혀 흠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작가들의 상투성이 문제라고 수강생들을 독려했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수강생들은 조별 소그룹 단위로 토론과 좌담에 의해서 자기가 그려야 할 판화소재를 발견하는 교육과정을 거쳤다.⁶⁸⁾ 이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62) 『나누어진 빵』, 32쪽.

63) 최열, 앞의 책, 194쪽

64) 홍희담·윤정모 역음, 앞의 책, 211쪽.

65) 『나누어진 빵』(1986), 32쪽. 이것이 시민미술학교가 민중미술운동의 모범으로 평가된 이유였다. 민중미술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태호(1991), 『우리시대 우리미술』, 풀빛 : 최열(1991),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 민족미술협의회 편(1988),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도서출판 훈거레 : 손창삼·김정현 역음(1986), 『시대상황과 미술의 논리』, 훈거레 : 현실과 발언2 편집위원회(1990), 『민중미술을 향하여』, 과학과 사상 : 원동석(1985),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 최민·심원경 편(1982), 『시각과 언어 1』, 열화당 : 시대정신기획위원회 편(1984), 『시대정신 1』, 일과 놀이 : 민중미술편집위원회 편(1985), 『민중미술』, 공동체 : 유홍준(1987),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들』, 열화당 : 민화와 시대 동인 편(1987), 『안화와 시대』, 공동체 : 시각매체연구소 편(1988), 『미술운동』1, 공동체. 배종민(2005), 『5월 미술과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5-18연구소)

66)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했다.(고병권(2007),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의 죽음을 예감하다』, 『문학들』, 8, 34-36쪽.)

67) 이 점은 본문에서 언급한 탈놀이 공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한 농촌 총각을 만 들면서 고심하며 이마는 튀어나오고, 눈 주위는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는 좀 들쭉시키고, 입은 처지게, 눈과 눈 사이에 잔주름을 넣어 실의에 잠긴, 그러나 순박한 모습을 내고 싶었다. 그런데 노총각이 너무 과장되었는지 할머니 처럼 보아 무척 속이 상한다."(『공방보고서』, 142쪽.)

68) 『나누어진 빵』, 32쪽.

초청강사가 발제를 한다. 강사로는 원동석, 황석영, 김준태, 김봉준, 홍선웅, 가톨릭 신부 등이 나섰다. 민중미술이론가, 소설가, 시인, 화가, 종교인 들이다. 강좌의 단골 주제는 민중의 삶과 노동에 관한 이야기였다. 강연이 끝나면 수강생들은 강사의 발제를 話頭삼아 상호토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발제에 '서사'가 생기기 시작한다. 강사는 이 토론과정을 유심히 살핀 후, 유사한 서사를 갖는 수강생끼리 분임조를 편성하여, 작품제작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러한 시민미술학교의 교육방식- 발제, 상호토론, 분임조 창작-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역동적 시각에서 사회적 현실을 파악하고, 작품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사회적 관계와의 접합을 이루며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⁶⁹⁾ 수강생들은 상호토론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활기를 띠었다.⁷⁰⁾ 실제 공동토론과정을 살펴보자.

E. 얼굴그리기진행요령... 예)복부인 ①똥똥하다 ②중년부인이다 ③이마나 입술이 두툼하고 번질번질하다 ④파마머리다 ⑤귀걸이나 화려한 목걸이를 시위용으로 착용한다 ⑥턱에 점이 있다 ⑦항상 큰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치고 위압감을 준다 ⑧적당히 여유 있는 미소를 짓는다.71)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3~124쪽)

F. (다른 조에서는 얼굴탈로) 목사님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입은 십자가 모양을 코는 봉투를 만든 것이다. 입으로는 끊임 없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봉투를 원하는 목사의 모습이라 생각하니 교회를 다니는 나로서는 새로운 충격을 받고 신앙생활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탈놀이 공방보고서』, 142~143쪽)

E는 제1기 시민미술학교의 <얼굴그리기>사례이다. 토론과정은 이리했다.⁷²⁾ (1)6명씩 그룹을 편성해서 상호소개 및 분위기를 조성한다. (2)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얼굴을 선정하여 그 얼굴의 성격이나 신분 같은 것을 토의하여 그 얼굴이 갖는 특징을 극대화한다. (3)각 그룹별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설명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생각이 다른 점을 토론한다. E 에 제시된 복부인의 얼굴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인상이다. 개인의 복부인에 대한 파편적인 인상이 상호토론과정을 거쳐 서사를 형성하고 당대 복부인의 전형으로 합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리, 술집아가씨, 사장님, 지게꾼, 어머니, 농부 등의 소재도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다루어졌다. 교육성과는 강사도 놀랄 만

69) 『나누어진 빵』, 32쪽.

70)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들은 여럿이 모여서 무엇을 그릴 것인가도 공동으로 토론도 하고 모자라는 점은 같이 보완해서 그려주기도 하고...그래서 문화작업은 공동 작업이 되어야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는 작업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36-137쪽.)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린 얼굴을 보고 지적하고 수정한 탓인지 '정말 그림구나'할 만큼 잘 표현된 것 같다."(『공방보고서』, 141쪽.)

71)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3-124쪽.

72)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3-124쪽.

큼 성공적이었다.⁷³⁾ F는 '탈 만들기 공방'에 참여한 수강생의 소회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4년 1월 8일부터 6일 동안 광주에서 진행된 대중미술교육이었다. 참가자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각 3조로 묶어 활동했다. 광주라는 공간, 시기, 참여자, 교육 일정 및 방법에서 시민미술학교와 다를 바 없다. 무슨 탈을 만들 것인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교회에 다니는 한 참가자는, 다른 조에서 위선과 탐욕의 상징으로 목사의 얼굴을 구상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앞서 살핀 E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처럼 시민들은 상호토론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고통이고 충격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⁷⁴⁾

E와 F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무엇이 기억할 만한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기억되는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무엇이 기억할 만한 것'인지 서로 공유하는 까닭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⁵⁾ 특히 집단기억의 형성에서, "미술, 조각 등 이미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며 진실처럼 보임으로 전수에 효과적이며, 스토리와 결부될 때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미지는 집단에서 의미가 있어야하므로 단순명료할 때 사회적으로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⁷⁶⁾ 그런 맥락에서, 시민미술학교의 얼굴그리기-복부인의 초상, 탐욕스런 목사의 탈 등은 개인적 상상의 산물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에게 내면화된 이미지이고, 공동체에 의해 공유되고 전수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시대의 초상이었다.

한편, 시민미술학교에서는 수강생에게 창작활동에서 '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정직성'의 개념은 '대중의 순수한 체험'⁷⁷⁾, '삶의 진솔한 표현'⁷⁸⁾, '생활현장의 사실성'⁷⁹⁾ 등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즉, 작품의 완성도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고 단순하게 자기 목소리를 냄'으로써⁸⁰⁾ '날카로운 리얼리티와 강렬한 주제의식'⁸¹⁾을 드러내라는 수강생에 대한 주체 측의 격려였다. 이러한 시민미술학교의 태도는 '새로운 미술'⁸²⁾, '산 그림'⁸³⁾, '삶의 미술'⁸⁴⁾로 표현되던 민중미술운동론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막상 수강생들은 '정직성'을 요구받고 무척 힘들어했다.

73) '우리도 놀랄 만큼 리얼한 이야기가 뚝뚝 나오고, 이미지도 명료했어요.'(홍성민 (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74)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한 일 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실, 농민의 고민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곳에 애정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공방보고서', 153쪽)

75) 알박스의 견해이다. 권귀숙, 앞의 책, 35쪽.

76) 신문화사가 Peter Burke의 견해이다. (권귀숙, 앞의 책, 114쪽.)

77)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3쪽.

78) 홍희담·윤정모 엮음, 앞의 책, 211~212쪽.

79) 유홍준(1989), 「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의 이념과 핵심」,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훈겨레, 214~215쪽.

80) 정지창, 앞의 논문, 165쪽.

81) 원동석(1996),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시대상황과 미술의 논리』, 훈겨레, 230~231쪽.

82) 홍희담·윤정모 엮음, 앞의 책, 210쪽.

83) 홍희담·윤정모 엮음, 앞의 책, 216쪽.

84) 유홍준, 앞의 논문, 204~205쪽.

G. 저는 판화작업을 처음 해봤는데, 주최 측에서 '정직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전 댄 첫날부터 무참히 깨진 기분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정직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 내 나름대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남는 것은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실제 내 손으로 (판화를) 그려보고 깎아보고 또 그것을 바라볼 때 훨씬 절실하게 나의 껍질을 벗는 것 같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날이 거듭해 감에 따라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고통만은 아니고 기쁨도 또한 컸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31쪽)

H. 확실히 우리들의 표현욕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해야 할 이야기들은 마음속에 가득 가득히 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서로 침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연비어가 난립하는 세상이 됐는지.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37~138쪽)

G는 제1기 시민미술학교 수강생의 종강소감이다. 주최 측으로부터 '정직성'을 요구 받고 '자신이 무참히 깨진 느낌'을 받았으며, 판화제작과정이 '훨씬 절실하게 자신의 껍질을 벗는 것 같아 굉장히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주최 측에서 의도한 '정직성'이란, (1) 작품의 완성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표현하라. (2) 작품주제는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생활현장에서 찾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수강생은 완성도나 주제의 문제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자아성찰의 과정으로 '정직성'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합리화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고백을 하였다. 그에겐 판화작업이 고백이자 재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H에서 시민은 "해야 할 이야기들은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서로 침묵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시민은 '여러 사정'으로 침묵했다. 그래서 '유연비어'가 난무한 세상이 되었다. 난무하는 '유연비어'는 시민의 마음속에 가득 담긴 이야기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시민의 침묵은 강요된 침묵이다. 시민은 판화작업을 통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말하고 싶었던가를 새삼 깨달아갔다. 이것은 G의 시민이 말한, '고통스러우면서 동시에 즐거운 일'과 상통한다. '자기합리화'와 '유연비어가 난무한 세상' 역시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의 침묵은 '판화창작'이라는 '문화적 재현'방식으로 활로를 찾아갔다.⁸⁵⁾ 정치적 억압상태가 여전했기 때 문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 80년대 전반의 정치적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군부 정권은 5·18항쟁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거부했다.⁸⁶⁾ 5·18항쟁에 관하여 일체의 침묵이 강

85) 문화적 재현물은 한편으로는 비극적으로 좌절된 항쟁에 대한 애도와 추모,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억압된 진실의 폭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나간체(2004), 『시창:문화운동 연구를 위하여』,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19쪽.)

요되었다. 강제된 침묵의 장벽은 높고도 삼엄했다. 피해자들은 권력에 위협을 느껴 증언행위를 망설이기도 하였다. 억압과 동시에 회유도 있었다. 예컨대 1983년 정부는 유족에게 1,000만원의 이장비용을 제시하며 망월묘역의 이장을 획책하였다.⁸⁷⁾ 5·18항쟁에 대한 '기억의 거소'로서 망월묘역이 자리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정권의 행위는, 5·18항쟁이 기억되는 한, 자신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초조와 두려움에서 연유한 것이다.⁸⁸⁾ 그러나 자의이든 타의이든 억압된 기억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⁸⁹⁾ 특히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과 같은 공동체의 비극은 끊임없이 재 경험된다. 따라서 정치적 억압에 맞선 기억투쟁은 단지 과거의 사실에 국한되거나 현재의 시간에 머물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억압이 내적통제로 전환될 때 미래의 상상력이 말살되고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미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여기에 대한 저항은 미래를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을 5·18항쟁에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I. 아까 낮에 전시장(광주가톨릭센터 전시실)에 아저씨 두 분이 오셔서 구경 하시길래 제(수강생)가 안내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 분들이 전시장을 한 바퀴 쪽 둘러보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그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마디로 내가 알 수 있겠다면” 그러세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시사적이고 의식적인 그림들을 보고 감탄하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림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며 뭔가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35쪽)

J. 동학년의 의분에 떨었던 우리의 조상이래도 좋고 후백제의 유민으로 굽혀지지 않는 허리를 가졌던 선조나 아니면 노비의 손에 들린 무덤 낮이래도 좋다. 그 것도 아니라면 1960년에 진달래처럼 피어오른 의기에 피맺힌 힘일 것이고 80년 봄날 쓰러지는 몸뚱이를 일으켜 세운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잊혀진 얼굴을 다시 재현하기엔 숨씨가 모자랐다. 우리들의 얼굴을 그리기엔 자신이 너무 나약했다.

(『나누어진 땀』, 37쪽)

I는 제1기 시민미술학교 전시회 풍경이다. 당시 전시에 출품된 수강생의 작품은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전시장 밖에까지 줄을 설

86) 나간채(2006), '5·18항쟁의 기억과 증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15쪽.

87) 린다 루이스, 앞의 논문, 201쪽.

88) 민중미술운동에 대한 정권의 폭압적 탄압-현실과 발언 창립전(1980), '1985년, 20대의 힘전'(1985) 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89) 권귀숙, 앞의 책, 20쪽. 특히 대량학살처럼 국가가 침묵을 강요한 사건일 경우 국가가 표방한 공식 역사 이외에는 말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으므로 기억한다는 자체가 공포가 된다. 이 경우 자발적인 망각현상이 병행되면서 기억의 왜곡은 더욱 심해지고, 고통스러운 과거는 사적인 기억으로 채워진다고 한다. (권귀숙, 앞의 책, 21쪽.)

정도였다고 한다.⁹⁰⁾ 수강생의 작품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마디로 알 수 있는’ 그림이었다. 전시장에서 광주시민은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고 공감했다. “아! 그림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며 자신을 환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작품의 완성도가 아닌 주제의식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관람행위는 가치중립적인 경험이 아니었다. 잊었거나 지우고 싶던 기억을 되새기고 동참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J에서 수강생은 5·18항쟁을 동학농민전쟁, 4·19혁명의 역사적 지평에서 바라보고 있다. 결코 극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서는 민중의 힘으로 5·18항쟁을 이해하였다. 이와 같이 수강생과 시민은 판화작품을 통해 5·18항쟁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상기했다. 1980년대 전반에 5·18항쟁에 대한 정권의 공식기억은 ‘폭도들이 일으킨 불온한 광주사태’였다. 억압과 회유, 고립과 왜곡이 횡행했다. 희생자 가족에게는 ‘산다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한’⁹¹⁾ 시절이었다. 따라서 5·18항쟁에 대한 공식기억의 강요는 곧 광주를 재 희생하는 일이었으며, 그 고통은 처음 희생되었을 때보다 더 큰 아픔을 광주시민에게 안겨주었다.⁹²⁾ 이것이 바로 앞선 H에서 가슴에 가득히 맺혔지만 억압 때문에 말할 수 없던 이야기였으며, ‘그 날 새벽’에 살아남은 광주시민의 좌절감과 부채의식이었다. 항쟁의 현장 금남로 가톨릭센터 전시실에서 시민들은 수강생의 판화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고 공감하였다.⁹³⁾

시민은 혼자일 때, 그는 ‘익명의 개인’⁹⁴⁾에 불과하다. 혼자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5·18항쟁의 트라우마가 시민을 할퀴는 시절이었다. 시민이 나약할 때, 5·18항쟁에 대한 공식기억은 횡행한다. 항쟁의 기억은 시민의 심층의식으로 가라앉고 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다가올 미래가 광주와 멀어지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과 진정성을 품고 있었다. 그들에게 미래는 광주와 동일시되어야 할 그 무엇이었다. 이때 필요한 것은 5·18항쟁의 심층기억을 공유하고 환기하며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익명의 개인’에서 다시 시민으로 자신을 소환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아래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자.

K. (시민미술학교에 참여한) 일주일 동안 시간표대로 수업이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 점심시간도 거른 채 모두 작업대 위에서 열심히 목판을 새기는 것들을 볼 때 “참! 이렇게들 자신들의 표현욕구가 강한가 보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표현의 통로가 이젠 그림이 그 기능의 한 부분을 맡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어요.

90)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91) 김종원(2000), 『5·18부상자의 정신질환 진료실때』, 『치유되지 않은 5월』, 디해, 192~193쪽.

92) 변주나, 앞의 논문, 138쪽. 5·18항쟁이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트라우마)에 관해서는 변주나의 같은 논문을 참고하라.

93) 배종민(2007), 『시민판화집에 투영된 1980년대 광주시민의 정서』, (미발표논문)

94) ‘순수한 체험은 오늘날 같은 일그러지고 찢겨진 수많은 ‘익명의 개인들’의 시대에 꼭 필요한 체험이다(홍성담 (1983), 123쪽.)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37~138쪽)

L. 저는 탈놀이 공방 나오면서 처음에는 탈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느낀 문제를 같이 생각하며 대사를 쓰고 놀면서 얻는 일체감, 연대감, 또 집단적 신명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놀이 발표가 좀 두려웠지만 끝까지 나온 거지요.

(『공방보고서』, 152쪽)

K는 제1기 시민미술학교 수강생의 좌담회 발언이다. 관화교실을 통해 자신에게도 새삼 표현욕구가 강하고 그림을 통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수강생은 공동실기 작업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모자라는 점은 같이 보완할 때 관화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⁹⁵⁾ 이것은 ‘민중의 잠재적인 상상력과 표현력을 풀어낸 획기적 사건’,⁹⁶⁾ ‘민중미술의 지향성을 미술실천활동을 통해 입증해보인 것’⁹⁷⁾ 등의 기왕의 시민미술학교에 대한 연구 성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위의 자료를 통해 시민미술학교의 조별교육방식의 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L은 앞서 살핀 ‘탈 놀이공방’ 수강생의 소감이다. 그는, 공동학습이 친밀감과 연대감, 집단적 신명을 북돋았고 여기에 고무되어 끝까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수강생은 공동 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⁹⁸⁾ 모두 시민미술학교 수강생들이 “공동실기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 의외로 굉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평가⁹⁹⁾와 부합한다.

결국 시민미술학교는 ‘침묵하는 익명의 개인’에서 ‘말하는 시민’으로 전환되는 장이었다. “목말랐던 시민과 흔들리던 작가들이 만나서 끊임없이 교감을 나누던”¹⁰⁰⁾ 역사적 공간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곳에서 관화를 새기는 일은, 단지 침묵을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고백함으로써 서로를 치유하고, 이웃과의 일체감과 집단적 신명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작가들은 시민의 손을 통해 발언할 수 있게 되었고¹⁰¹⁾, 시민들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되었다.¹⁰²⁾ 시민미술학교는 ‘기존 미술에서 볼 수 없는 날카로운 리얼리티와 강렬한 주제 의식’,¹⁰³⁾ “자본주의의 상업적 논리가 만들어낸 ‘방법’과 ‘형식’에 흠뻑 취해 타성화 되어버린 전문적 작가·전문적 작가

95)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36~137쪽.

96) 정지창, 앞의 논문, 165쪽.

97) 이영철, 앞의 논문, 85쪽.

98) 『공방보고서』, 153쪽.

99)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31쪽. 여기에는 작가들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강생의 작품제작에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쳤지만, 토론과정에는 대등하게 참여했기 때문이다.

100)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101) 이번 미술학교에서 그런 농부들의 얼굴이라든가 공장근로자들의 얼굴들이 기존 화가들의 리얼리티를 훨씬 뛰어 넘고 있습니다. ... 우리 스스로가 이렇듯 생활주변의 것들을 밀도 있게 표현해서 나누어 가지면 대부분 꿈속에 있어있는 화가들에게도 경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홍성민(1983), 132~138쪽.)

102) 그런 의미에서 시민미술학교 최고의 수혜자는 시민이기보다 작가일 수도 있다.

103) 원동식, 앞의 논문, 230~231쪽.

의 작품보다 훨씬 신선하고 진솔한 표현”¹⁰⁴)으로 5·18항쟁의 기억을 생생한 이미지로 구체화하였다.¹⁰⁵ 과거는 사실 전체가 그대로 보존되거나 되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토대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5·18항쟁은 더 이상 지나간 과거가 아닌,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현재이자 미래로 바뀌기 시작했다.¹⁰⁶

시민미술학교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83년 10월에 결성된 미술공동체(1983~1984)는 시민미술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¹⁰⁷ 미술공동체에는 광주협과 두령, 땅 동인 및 홍성담, 김봉준, 장진영, 송만규, 문영태, 홍선웅, 최민화, 최열, 옥봉환 등 9명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하였다.¹⁰⁸ 여기에서 관화운동의 확대가 결의되었다. 1983년 목포, 전주, 이리를 거쳐, 이듬해에는 서울명동성당 청년미술학교, 연세대학교시민관화교실, 성남YMCA시민관화학교, 애오개민속미술학교¹⁰⁹ 등 종교계, 대학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노동투쟁의 현장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형태의 미술학교가 개설되었다. 또한 시민미술학교 수강생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유사한 관화교실을 개설하고 스스로 강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것은 시민미술학교라는 문화적 공동체협을 통해 5·18항쟁에 대한 대항기억이 전국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였다.

IV. 맺음말

연구자는 5·18항쟁의 대항기억의 형성공간으로서 1980년대 전반기 광주시민미술학교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전반의 삼엄한 정국은 작가에게 여하한 형태의 민중미술운동 및 개인 창작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권은 작가를 진실로부터 추방하고자 했다. 부당하게 왜곡된 5·18항쟁에 대한 정부의 공식기억이 시민들에게 강요되고, 진실은 억압되었다. 광주는 재갈 물렸고, 사회는 귀를 막았다. 사회적 연대는 분절되고, 공동체는 고립되었다. 항쟁은 끝났지만, 그 고통은 끊임없이 재 경험되었다. 고립되고 침묵하는 한 광주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마저 상실할지 몰랐다. 작가와 광주시민들은 좌절했고 부체의

104) 홍희담·윤정모 엮음, 앞의 책, 211~212쪽.

105) 기억은 과거사의 자동적인 재생물이 아니라, 마치 방어쇠와도 같은 구실을 하는 외적 자극에 의해 되살려지는 것이다.(김영범(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3호,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573쪽)

106) 알박스에 의하면 집합기억이란, "본질적으로 과거사의 이미지를 현재의 신념과 정신적 요구에 투영시킨 바의 과거의 재구성"이라고 규정되었다.(김영범, 앞의 논문, 587쪽.)

107) 최열, 앞의 책, 195쪽.

108) 최열, 앞의 책, 208쪽. 이하 미술공동체에 대한 설명은 최열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109) '두령'의 '애오개민속미술학교'는 '개방적인 공동작업과 민중과의 합동적 관계'를 대안으로 제기하고 관화, 민화, 물화의 전통민족미술에서 서구미술을 극복하고 민중적 사실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두령, 앞의 논문; 최열, 앞의 책 202쪽에서 재인용.)

식에 시달렸다.

광주시민미술학교는 1983년 광자협에 의해 개설되어 1992년까지 운영된 대중미술교육강좌이다. 광자협은 5·18항쟁의 현장에서 선전활동을 체험한 청년작가들이 중심이 된 민중미술운동단체였다. 그들은 시민미술학교에서 시민들이 민중의 현실에 마주서게 하고 싶었다. 시민들이 어둡고 소외된 삶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처 입은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시민미술학교의 교육과정은 판화실습을 중심으로 현장답사와 상호토론, 분임조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강생의 상호토론과 공동창작의 교육과정은 서로를 수용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시민들은 민중의 현실에 마주서고자 했다. 농민, 노동자, 도시서민, 절인, 광인, 불구자, 노인 등 민중의 삶을 새겨나갔다. 그것은 시대의 어두운 이면과 접속하는 행위였다. 공동체의 빈한하고 고립된 삶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은 서로를 수용할 수 있었다. 완성된 판화작품은 일반시민들에게 전시되었다. 금남로의 전시장을 찾은 광주시민들은, 판화에 새겨진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 저변에 스민 5·18항쟁의 상흔을 되새겼다. 그러므로 시민미술학교는 5·18항쟁이후 말하지 못한 진실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5·18항쟁의 좌절감을 치유하고 부채의식을 갚는 자기화해의 장이었다. 5·18항쟁에 대한 정권의 왜곡되고 부당한 공식기억이 횡행하던 80년대 전반에서 그것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광주시민미술학교의 사례는 곧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목포부터 서울까지, 노동현장에서 종교, 시민단체, 대학가까지 수많은 시민미술학교가 개설되었다. 공식기억에 맞서 5·18항쟁의 대항기억이 형성되고,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문화적 제현을 통해 구체적인 이미지로 광주가 부활하는 순간, 5·18항쟁은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일수가 없었다. 광주시민미술학교는 5·18항쟁의 대항기억이 형성되는 문화적 자양분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권귀숙(2006),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공저(2004),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나간채 강현아 편(2002), 『5·18 항쟁의 이해』, 광주광역시
- 나간채 편(1997),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연구총서1), 도서출판 금호문화.
- 만화와 시대 동인 편(1987), 『만화와 시대』, 공동체
- 민족미술협의회 편(1988),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도서출판 흔겨레
- 민중미술편집위원회 편(1985), 『민중미술』, 공동체
- 손장삼·김정현 위음(1986), 『시대상황과 미술의 논리』, 흔겨레
- 시각매체연구소 편(1988), 『미술운동』1, 공동체
- 시대정신기획위원회 편(1984), 『시대정신 1』, 일과 놀이
- 『5月詩 同人誌』 제1집(1981)
- 유홍준(1987),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들』, 열화당
- 원동석(1985),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 이태호(1991), 『우리시대 우리미술』, 풀빛
- 『일과 놀이』1 (1983), 도서출판 일과 놀이
- 정근식·나간채·박찬식 외 공저(2006),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편(1986), 『시민미술학교 시민판화집-나누어진 빵』
- 최민·성완경 편(1982), 『시각과 언어 1』, 열화당
- 최열(1994),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 현실과 발언(1994), 『현실과 발언 1980년대의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열화당
- 현실과 발언2 편집위원회(1990), 『민중미술을 향하여』, 과학과 사상
- 홍희담·윤정모 위음(1990), 『오월에서 통일로』, 청년사
- 기세홍(2003),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에서 미술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 광주시민미술학교를 중심으로』,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범(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제6집 제3호,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윤수(1988), 『한국 근대미술-그 비판적 서설』,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도서출판 흔겨레
- 김중원(2000), 『5·18부상자의 정신질환 진료실태』,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 배종민(2005), 『5월 미술과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5·18 연구소,
- 시각매체연구소(1990),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조직사-상편』, 『미술운동』제6호
- 유홍준(1988), 『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의 이념과 형식』,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흔겨레
- 원동석(1986),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시대상황과 미술의 논리』, 흔겨레
- 원동석(1984),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오늘의 책』4, 한길사, 1984.

이성부(2005), 「산 위에 나 있는 시의 글」,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2, 우리교육
이영철(1989), 「80년대 민족·민중미술의 전개와 현실주의」, 『가나아트』11·12 통권10호
정지창(1994), 「민중미술운동과 판화달력」, 『현실과 발언』, 열화당,
홍선웅(1989), 「팝박의 굴레 속에 성장한 민족·민주·통일의식-80년대 미술탄압사례를 중심으로」, 『가나아트』11·12호